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I

신아시아 외교 추진을 통한 새로운 평화의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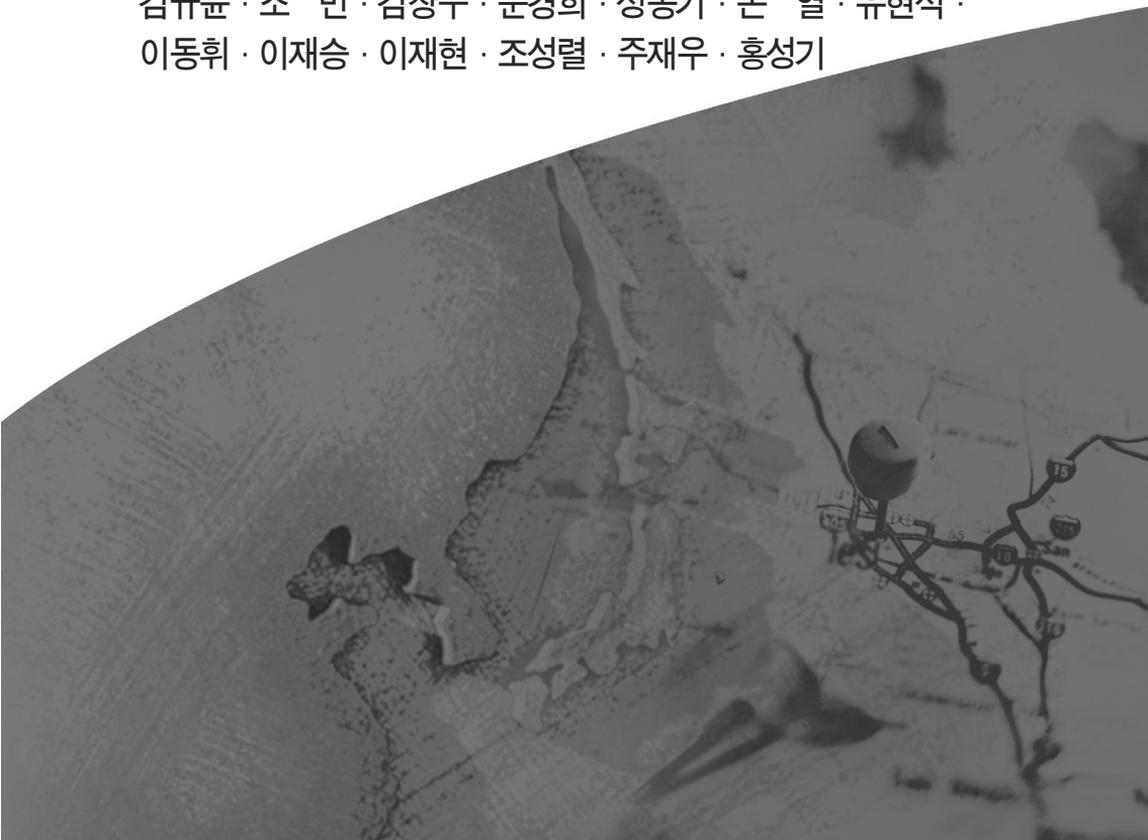
김규륜 · 조 민 · 김창수 · 문경희 · 성동기 · 손 열 · 유현석 ·
이동휘 · 이재승 · 이재현 · 조성렬 · 주재우 · 홍성기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I

신아시아 외교 추진을 통한 새로운 평화의 모색

김규륜 · 조 민 · 김창수 · 문경희 · 성동기 · 손 열 · 유현석 ·
이동휘 · 이재승 · 이재현 · 조성렬 · 주재우 · 홍성기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I

인 쇄 2010년 12월

발 행 2010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남북협력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4 (팩시밀리) 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에원기획 (02-745-8090)

인 쇄 처 (주)에원기획

ISBN 978-89-8479-586-0 93340

978-89-8479-587-7(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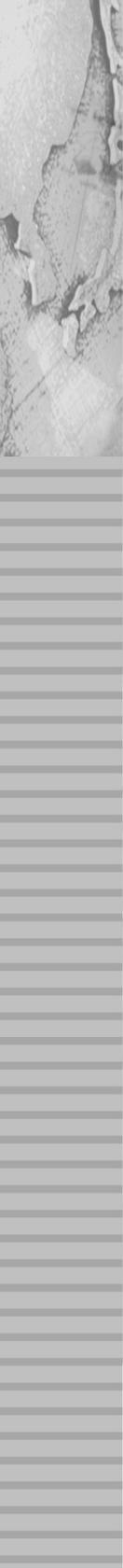
가 격 13,000원

© 통일연구원, 2010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Ⅱ

신아시아 외교 추진을 통한 새로운 평화의 모색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제2부: 신아시아 외교 추진을 통한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아시아 평화를 위한 새로운 토대	1
1. 아시아 주요국의 평화구상	3
2. 아시아 국가들의 평화관	19
3. 아시아 평화관의 두 토대	55
II. 아시아 평화의 새로운 틀	71
1. 아시아 평화의 새로운 방향	73
2. 아시아 평화의 새로운 협력구조	125
3. 아시아 평화의 새로운 추진수단	146
III. 신아시아 외교와 아시아의 평화 증진방안	175
1. 분야별 추진방안	177
2. 지역별 추진방안	194
IV. 신아시아 외교와 한반도 평화 증진방안	225
1. 분야별 추진방안	227
2. 지역별 추진방안	239
V. 결론 및 정책적 고려사항	261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I
: 신아시아 외교 추진을 통한 새로운 평화의 모색

참고문헌 271

최근 발간자료 안내 287

표 목 차

<표 II-1>	인간안보의 요소	78
<표 II-2>	인간안보 개념에 관한 동서양의 관념 비교	79
<표 II-3>	H1N1, AI, SARS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 (2007년 기준)	91
<표 II-4>	HIV/AIDS 감염자 수, 성·유아별, 성별, 사망자 수 및 고아 수(2007년 기준)	95
<표 II-5>	개인 소득 수준, 1일 생활 빈곤층률, 실업률, 소득 수준, 외채(년도)	101
<표 II-6>	여성 권한 척도	107
<표 II-7>	새로운 아시아 평화 협력구조의 요소별 특징	146
<표 III-1>	3강(미국, 중국, 러시아)의 충돌요인	208

그림 목 차

KINU 연구총서 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I
: 신아시아 외교 추진을 통한 새로운 평화의 모색

<그림 I-1>	중국 국제현대화 ‘평화 비둘기’ 구상의 개념구조 … 5
<그림 I-2>	중국 국제현대화 ‘평화 비둘기’ 구상의 지역구조 설명도 …………… 6
<그림 I-3>	스리랑카 내 정부군 지배 지역과 타밀 지배 지역 … 45
<그림 II-1>	새로운 아시아 평화 협력구조의 요소 …………… 141
<그림 IV-1>	한국의 대ASEAN 신아시아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구조 …………… 244
<그림 V-1>	신아시아 외교를 통한 한반도와 아시아 평화 증진 선순환 구조 …………… 267

〈제1부: 신아시아 외교의 내용분석과 추진방안〉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 신아시아 외교의 내용
3. 신아시아 외교 추진경과

II. 신아시아 외교의 분야별 추진방안

1. 경제협력 분야
2. 에너지 및 기후 분야
3. 사회·문화 교류 분야

III. 신아시아 외교 대상 지역의 입장 및 협력방안

1. 동남아시아
2. 중앙아시아
3. 서남아시아
4. 오세아니아

참고문헌

최근 발간자료 안내

제2부 신아시아 외교 추진을 통한 새로운 평화의 모색

신아시아 외교를 통해서 한국의 외교 지평을 확충하고 국익을 증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앞에서 상세히 논의한 바 있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이 일방적으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아시아의 국가들이 공감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앞에서는 신아시아 외교의 세부적 실천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대상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정책을 살펴 본 바탕 위에서 한국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신아시아 외교를 통해서 새로운 평화를 모색한다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아시아 주요국의 평화에 대한 생각을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서 제1장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평화구상과 평화관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새로운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기본적 토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중요한 것은 새로운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전반적인 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제2장에서는 평화 모색의 방향과 구조 및 수단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이론적 작업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 국가들이 공감하는,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용인되는 인류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한다는 평화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도출된 새로운 평화 모색의 토대와 틀을 바탕으로 제3장에서는 분야별 및 지역별로 아시아의 평화를 증진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분야별 및 지역별로 신아시아 외교의 추진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추출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러한 방안들을 실천함에 있어 유념해야 할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I. 아시아 평화를 위한 새로운 토대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I
: 신아시아 외교 추진을 통한 새로운 평화의 모색

1. 아시아 주요국의 평화구상

가. 중국

(1) 조화세계[和諧世界]론

중국은 새로운 세계 질서 구상으로 ‘조화세계론(harmonious World Theory)’을 내놓았다. 조화세계론은 2003년 12월 10일 원자바오 총리가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전통문화 중 조화(和諧)사상을 설명한 것이 처음이며, 2004년 10월 14일 중국과 러시아가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이 조화(和諧)로운 세계의 건설에 노력한다고 밝히면서 처음 국제정치 영역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 뒤 2005년 4월 22일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상이한 문명의 우호적 공존과 평등한 대화, 발전과 번영을 추동하여 조화세계를 구축하자”라고 밝혀 비교적 완성된 형태의 조화세계이론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조화세계론은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중국의 구상임과 동시에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중국의 구상이기도 하다. 조화세계론은 중국적 가치와 문화를 중심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를 건설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중화질서론과 유사하다. 그러나 조화세계론이 추구하는 세계질서는 위계적인 주종관계를 기초로 한 중화질서와 달리 주권국가로 구성된 근대화된 국제질서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세계질서와 동아시아 질서의 구축을 의도하고 있다.¹

¹ 이정남, “조화세계(和諧世界)론을 통해서 본 중국의 동아시아 질서구상: 중화질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0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0),

I
II
III
IV
V

조화세계를 추진하는 중국의 아시아전략 목표를 조화아주(和諧亞洲)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복린(福隣), 목린(睦隣), 안린(安隣)의 세 가지로 구성되며 세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²

첫째, 복린(福隣)전략은 경제협력을 뜻하는 것으로, 주변의 아시아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은 2010년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출범시킬 예정이며, 호주, 인도, 한국과는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중·일 FTA, ASEAN+3 FTA 창설을 제의해 놓고 있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정치경제질서를 수립하고자 하고 있다.

둘째, 목린(睦隣)전략은 주요 국가들과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강대국과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으나, 2000년대 들어 인도, 한국 등 지역 거점국가들과도 전략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

셋째, 안린(安隣)전략은 다자주의적 국제협력을 통해 세계 평화와 안보를 공동으로 지키는 것을 강조한다. 다자적 집단안보 메커니즘의 건설, 지역 공동체의 건설 등을 통하여 상호협력, 공동번영의 실현, 포용정신의 견지를 통해 조화세계를 실현해 나간다.

(2) ‘평화의 비둘기[和平鴿]’ 구상

(가) ‘평화 비둘기’ 구상의 기본구도

최근 중국과학원이 아시아국가연합의 결성 등을 통해 중국의 국제화·현대화를 실현하려는 ‘평화 비둘기’ 구상을 제시하였다. 중국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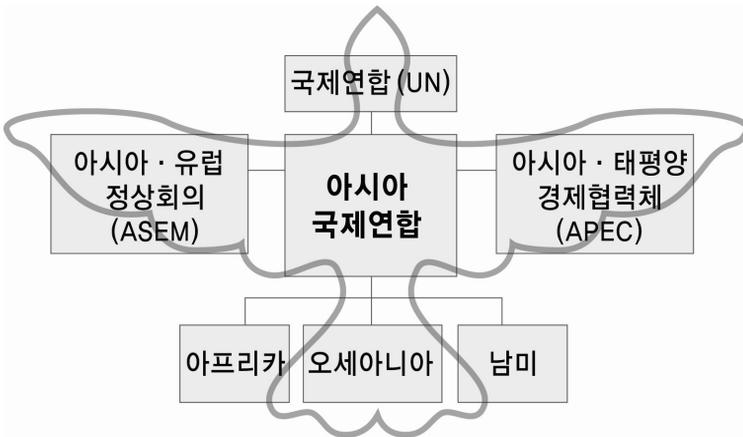
pp. 37~56.

²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편, 『동북아 전략균형 2009』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9), pp. 158~159.

원이 『중국 현대화보고 2008』을 통해 밝힌 ‘평화 비둘기’ 구상은 우선 유엔(UN)이 비둘기의 머리가 되고, 중국 하이난(海南)성에 개최되는 보아오(博鳌)포럼과 범아시아 협의체인 아시아 협력대화(ACD)를 기본 조직으로 건립될 가칭 아시아국가연합이 비둘기의 몸통 상부가 된다는 것으로 사실상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국가연합의 창설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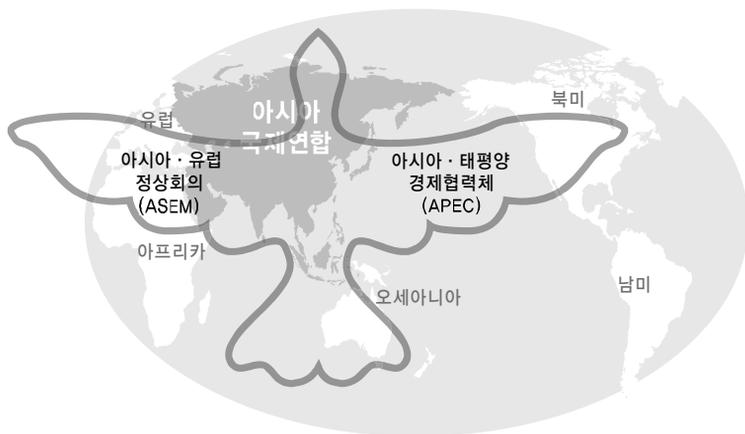
이어 비둘기의 오른쪽 날개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가, 왼쪽 날개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를 확대 개편할 가칭 아시아·유럽 경제협력체가, 몸통 하부는 대양주·남미·아프리카로 구성한다는 구상이다. 이것은 동서(동서양)와 남북(선·후진국)이 연결된 평화 비둘기를 통해 아시아 협력의 기본조건을 만들고 전 지구적인 지역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공리공생과 협동 발전, 구동존이(求同存異: 같은 것을 추구하되 차이를 인정한다)를 도모하겠다는 야심 찬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1 중국 국제현대화 ‘평화 비둘기’ 구상의 개념구조



I
II
III
IV
V

●그림 1-2 중국 국제현대화 ‘평화 비둘기’ 구상의 지역구조 설명도



(나) ‘평화 비둘기’ 구상의 기본사고

‘평화 비둘기’ 구상은 현장을 준수하고 평화를 촉진하고, 아시아에 근거해 세계로 향하고, 동서 날개를 나란히 하고 남북이 협력하며, 공리공생하며 협력 발전을 한다는 것을 기본 사고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UN의 현장을 준수하고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며,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기초로 하여 전 세계적인 다국적 경제협력을 촉진한다.

그리고 APEC과 ASEM의 역할을 동시에 발휘하고, 유럽과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아프리카, 태평양, 그리고 남미 국가들이 포함된 남쪽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협력에 참여한 국가들은 평등하게 서로 이득을 보며, 평화 공존하며, 같은 것은 취하되 다른 것은 잠시 보류하며, 협동 발전한다.

국제체계의 하위단위 측면에서, ‘평화 비둘기’ 구상은 상당한 유연성과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평화 비둘기’의 국제 전략은 8개의 큰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시아 지역의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 환경을 개선한다. 아시아국가연합의 작용을 촉진, 발휘하고 아시아 문명의 발전을 촉진한다. 동시에 ASEAN,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SAARC),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동국가와의 협력 등을 강화한다.

둘째, 주변 국제 환경을 개선하고 중국, 일본, 인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며 북핵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 등을 촉진한다.

셋째, G8 국가들과의 대화와 같은 대국제계의 대화를 강화한다.

넷째, 중국은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점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OECD에 가입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섯째, ASEM의 작용을 촉진 및 발휘하며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와의 협력을 포함한 “서쪽 날개”와의 협력을 촉진한다.

여섯째, APEC의 작용을 발휘하고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과의 협력 등을 포함한 “동쪽 날개”와의 협력을 촉진한다.

일곱째, 남미, 아프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와의 협력을 포함한 남쪽 국가와의 시장협력을 강화한다.

여덟째, 아랍국가연맹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아랍국가 사이의 협력포럼을 결성한다.

이와 같은 중국의 평화 비둘기 구상은 중국의 주도로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기존의 각종 국제기구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중국식의 해석을 통해 관리해 나가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일본

(1) 중앙아 및 서남아 구상

일본은 1991년 소련의 붕괴 뒤에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대

상으로 한 외교 전략을 수립했다. 일본의 중앙아시아 외교는 하시모토(橋本) 총리가 ‘신실크로드 외교’를 내걸었으며, 9·11 테러 사태 이후 ‘신실크로드 외교’에서 ‘중앙아시아+일본’ 외교로 정책의 중심을 옮겨왔다.

2004년 8월 26일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외상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세계 경제외교대학에서 행한 정책연설 ‘새로운 차원에: 중앙아시아+일본(Adding a New Dimension: Central Asia Plus Japan)’에서 ‘중앙아시아+일본’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외교구상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인도주의 원조 가운데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도 2,000만 달러 이상의 긴급원조를 제공하고 있다.³

그 뒤 아소(麻生) 외상(2006년 당시)은 ‘자유와 번영의 호(弧)’ 전략을 발표하여 중앙아시아의 독립 국가들에 대한 접근 전략을 제시하였다. 고이즈미 총리의 중앙아시아 순방(2006.8.28~30)에 이어, 2006년 11월 일본은 미국 부시 행정부가 사용했던 ‘불안정한 활꼴(The Arc of Instability)’이라는 개념에 대응하는 ‘자유와 번영의 호(The Arc of Freedom and Prosperity)’라는 구상을 아소 외무장관이 공표하였다.

아소 타로 정권은 ‘자유와 번영의 호’ 구축이라는 외교 정책의 슬로건을 제시하고 새로운 외교 지평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오시마 쇼타로(大島正太郎) 주한 일본대사(당시)는 지금까지 일본이 안보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처해 왔으며 이에 따라 소극적 평화주의에

3. 河東哲夫, “對中央アジア政策の推移: シルクロード外交から『中央アジア+日本』へ,” 宇山智彦, 廣瀬徹也, クリストファーレン, 河東哲夫, 湯淺剛, ティムール・ダダバエル, 岩下明裕, エリカ・マラト, 嶋尾孔仁子, ニクラス・スワンストローム, 須田將, 『日本の中央アジア外交—試される地域戦略』(北海道大學図書刊行會, 2009).

머물렀고, 미국의 안보 우산에 의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⁴

하지만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1호 시험발사 이후 일본국민의 안보의식이 변화하게 되어, 1992년 평화유지군활동(PKO) 법안, 9·11 이후의 대테러 법안, 이라크 지원 법안 등을 통해 국제적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본의 외교 전략은 수동적 안보 관에서 점차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론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2009년 6월 30일 아소 총리는 국제문제연구소에서 ‘안전과 번영을 확보하는 일본외교’라는 제목으로 중앙아시아를 기점으로 아시아의 광역개발에 일본이 공적 개발 원조(ODA)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대판 실크로드를 축으로, 신흥국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한다는 신외교구상을 재차 확인하였다.

일본의 민주당 정권이 수립되면서 이와 같은 일본의 외교 정책도 일정 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권의 집권이 국제평화협력 활동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면, 미·일동맹의 기초 위에 일본을 넘어선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립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민주당 정권은 대아시아 외교의 일부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 대한 재정, 기술, 인도주의적 지원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과도한 대미 의존에서 탈피하여 일본의 독자적 판단 하에 국가 전략, 방위 전략, 국제평화협력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인도와 일본의 특별한 관계와 급속한 친밀관계는 중국 견제와 중국 시장에서 인도 시장으로의 전환이라는 공통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⁵

4. 오시마 쇼타로(大島正太郎) 주한 일본대사 초청 포럼(2007.6.27)에서의 발언.

5. 麻生太郎, 『自由と繁榮の弧』, 幻冬舎, 2007年 6月.

(2) 동아시아 구상

일본 하토야마 전 총리는 2009년 8월 27일 뉴욕타임즈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동아시아 공동체(East Asia Community: 이하 EAC)’ 구상을 밝혔다.⁶ 그가 제창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원형은 구덴호브 칼레르기(Coudenhov-Kalergi)의 범유럽구상(Pan Europe)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토야마의 ‘동아시아 공동체론’은 전후 만년 여당이었던 자민당 정권의 대미추종 일변도 외교와 아시아 경시 태도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 동시에 오늘날 일본이 처한 국제정치적 현실의 산물 또는 시대정신의 표출이라고도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거대국으로 급속하게 대두하고 있는 중국의 존재와 세계 경제의 기관차 구실을 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일본 외교의 궤도 수정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즉, 하토야마의 동아시아 공동체론은 미국과의 동맹을 일본 외교의 중심축에 놓으면서도 새롭게 부상하는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겠다는 현실 주의적 외교에 다름 아닌 것이다.

앞으로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미국과 중국의 양강 구도(G2)로 이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전후 냉전체제 하 미국과 소련의 대결구도 속에서 서유럽 지역을 평화와 번영의 유럽연합(EU) 공동체로 창출해낸 주역이 다름 아닌 독일과 프랑스였다. 과거 전쟁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화해를 통해 증오와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유럽공동체 수립의 주역을 담당 한 독·불 관계에서 21세기 한·일관계의 미래를 유추해 볼 수 있다.⁷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일본의 기존 시각은 무역이나 투자, 금융을

6. Yukio Hatoyama, "A New Path for Japan," *New York Times*, August 27, 2009.

7. 이원덕, "하토야마의 동아시아 공동체," 『서울신문』, 2009년 11월 15일.

비롯해 에너지, 환경보존 및 대테러대책과 같은 분야에서의 기능적 협력을 축으로 기능 공동체를 지향하다가, 자유 시장을 중심 가치로 삼는 가치 공동체로 나아가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당연히 이것을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미국의 정식 가맹 통로를 열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의심해 왔다.

특히, 중국은 2001년 ASEAN+3 정상회의(ASEAN+3 Summit)에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번영·발전’을 추구하는 동아시아 공동체론에 대해서도 참가국의 범위 등을 둘러싸고 일본 및 미국과의 견해 차이를 밝힌 바 있다. 중국의 전통적인 세계관인 중화사상 또는 중화패권주의에 근거해 볼 때, 일본과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 공동체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중국이 일본이 내세우는 동아시아 공동체론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왜냐하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스스로 아시아를 버리고 서양이 되어야 한다는 탈아론(脫亞論)에 입각해 서방세계의 제국주의 논리에 따라 침략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은 탈아론에 입각한 제국주의 추구 전략에도 불구하고 서방에서 이를 인정받지 못하자 아시아의 맹주 행세를 하며 아시아를 서방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는 명목을 내세워 ‘대동아공영권’을 정당화하고 이를 기초로 주변국들을 침략하고 합병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동아공영권의 논리는 10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일본의 우파세력과 자민당정권에 이어졌으며, 이들이 줄곧 들먹이곤 하는 논리로 외교적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논리는 현재 한·일 간에 갈등으로 제기되고 있는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등에 일본 여론을 움직이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서 작동되고 있다.⁸

I
II
III
IV
V

다. 인도

인도는 오랫동안 고립 정책을 펼쳤지만 1991년부터 개혁 개방 정책인 ‘Look East Policy’, 이른바 ‘동방정책’을 통해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가들과 무역, 경제 관계를 돈독히 하기 시작했다. 인도의 ‘동방정책’은 라오(P.V. Narasimha Rao, 1991~1996) 총리 재임 시 수립되어 바지파이(Atal Behari Vajpayee, 1998~2004), 싱(Manmohan Singh) 총리로 이어지면서 계속되고 있다. 인도는 한때 어느 국가와도 동맹 관계를 맺지 않는 비동맹, 자주외교 정책을 취해 왔다. 하지만, 중국이 미얀마 군사정권을 지지하고 인도의 경쟁국인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를 지원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도정부는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인도는 중국의 팽창주의를 우려하는 국가들과 긴밀한 경제적, 군사적 협력을 확대하고자 ‘동방정책’을 채택한 것이다.

그리하여 인도가 처음에 ‘동방정책’을 추진할 때는 미국과의 경제 및 군사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정책의 초기 단계에서 인도는 강대국, 특히 미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왔다. 2003년 아탈 비하리 바지파이 총리(당시)는 인도를 강대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20년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며, 이 계획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⁹ 미국도 중동과 동아시아 사이의 해상 교통로를 끼고 있고 아시아의 중앙에 있는 인도의 전략적 위치에 각별한 매력을 느끼고 있다. 그리하

⁸ 김미경, “하토야마의 동아시아 공동체론과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http://blog.naver.com/jinmei121?Redirect=Log&logNo=60107455041>>.

⁹ The Research Unit for Political Economy, “Why the United States Promotes India’s Great-Power Ambitions,” *Monthly Review*, (March 2006), <<http://monthlyreview.org/0306rupe2.htm>>.

여 미국은 인도 내에 군사기지와 군사적 인프라를 이용할 권한을 갖고 싶어 한다. 미국 국방부가 인도 내 군사기지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받게 되면,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통적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단절될 경우에 인도는 아시아에서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인도의 ‘동방정책’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었다. 그리하여 인도 정부는 여타 국가들과의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 시작했다. 새로운 잠재강대국으로서 인도의 등장은 중국이 했던 것처럼 중앙아시아, 이란, 중동 등 주변국들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전략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대서방 지렛대의 확보 차원에서도 인도는 지역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위협적인 부상에 대해 동남아 국가들 가운데 일부는 중국에 대한 ‘지정학적 평형추(geopolitical counterpoise to China in the region)’로 인도가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인도는 중국처럼 고도성장을 지속함으로써 역내에서 정치군사적 역할을 확대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¹⁰ 인도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잠재력을 새롭게 평가하면서 이들 국가와 FTA를 형성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중국과의 무역이 급증하자 경쟁국이던 중국과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게 되었다.¹¹ 이처럼 인도가 소극적 방어 차원에서 벗어나 적극적 방어를 위해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추구함으로써 동방정책의 성격을 크게 바꾸어놓았다.

인도의 ‘동방정책’은 처음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의 팽창에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미국과 주변국들을 상대로 하여 시작되었다. 그

¹⁰- *Ibid.*

¹¹- David Shambaugh, *Power Shift: China and Asia's New Dynamic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6), p. 218.

I
II
III
IV
V

리하여 인도는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점점 더 커다란 의존 관계를 맺게 되어 인도의 교역액 중 45% 정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인도·중국 간의 경제협력이 점차 강화되면서 양국 간의 협력도 한층 강화되었고, 애당초 내세웠던 동방정책의 내용도 변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도의 ‘동방정책’은 비록 미얀마와 같은 인권유린 및 민주주의 억압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어서 국내외의 비판을 불러일으켰으나, 결과적으로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싱 총리의 말처럼 ‘동방정책’은 단지 대외 경제정책일 뿐만 아니라 인도의 세계 비전과 진화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 인도의 위상을 전략적으로 변화시켰다.

라. 호주

호주는 전임 존 하워드(John Howard) 총리가 ‘미국의 부관(deputy sheriff)’이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 일변도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07년 총선에서 승리한 호주 노동당의 케빈 러드(Hon Kevin Rudd)가 미국 주도의 정책에 반발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APC) 구상을 제시하였다.

2008년 6월 4일 호주 아시아센터 아시아협회에서 가진 연설에서 러드 전 총리는 2020년이면 아시아·태평양시대가 될 것이며 호주에게 중요한 기회이며 도전이 될 것이라며 APC 구상을 제안했다. 러드 총리는 제안 당시 APC가 아직 구상 단계에 있다고 밝혔고, 이후 구체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¹² 이후 러드 총리는 APEC의

¹² 김기석, “신 공동체 구상과 신아시아 외교,” 『JPI 정책포럼』, 제33권 (제주평화연구원, 2010.5), pp. 4~5.

창설에 기여했던 리처드 울코트(Richard Woolcott)를 특사로 임명해 지역 내 주요국의 리더들을 만나서 아시아·태평양 구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¹³

현 21세기에는 태평양, 구체적으로 아시아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적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아시아에서 이미 강국이 된 일본, 한국과 함께 신성장 국가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ASIA 5’의 영향력이 가장 커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앞으로 원유, 가스, 식량, 물 등 글로벌 자원 경쟁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측하고, 이들의 경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적절한 지역단위의 상위기구, 즉 APC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¹⁴

러드 전 총리가 APC를 제안한 데는 기존의 동아시아 협력과정에 대한 호주의 불만이 담겨 있다. 러드 전 총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현존하는 기구들이 존재하지만, 역내 기존 기구들(ASEAN, APEC, ASEAN+3, EAS, ARF 등)은 호주의 러드 전 총리가 구상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APC와 같은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호주의 제안은 지리적으로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호주의 지정학적 위치와 중진국으로서 가지는 대외적 영향력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유럽과 북미에 초점을 맞춘 대외 관계로부터 아시아 지역으로 관심을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지역 내 질서의 형성에 호주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소외될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¹³- Richard Woolcott, “An Asia Pacific Community: an idea whose time is coming,” *East Asia Forum*, (October 18, 2009), <<http://www.eastasiaforum.org/2009/10/18/an-asia-pacific-community-an-idea-whose-time-is-coming/>>.

¹⁴- 문경희, “호주와 우리의 신아시아 외교,” 미발표 논문 참조.

I
II
III
IV
V

이러한 인식 때문에 과거 1980년대 후반에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질서 확립과 유지를 위해 APEC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캄보디아 평화 정착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고, ASEAN 지역 포럼 신설에 기여하기도 했다. 호주는 지역 문제 해결에서 미국, 중국, 일본과 같은 강국들보다 호주나 말레이시아와 같은 중견국이 의견을 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만약 강대국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면, 약소국들은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 추구를 위해 숨은 의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호주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국가로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러시아, 인도네시아를 꼽는다. APC의 주요 목표는 이들 6개 국가 정상들과 지역 내 다른 국가들이 함께 지역의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APEC에는 인도가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주요 관심사가 경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EAS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또한, ARF에는 구성원이 27개국으로 너무 많고, 정상회의가 아니다. 그러므로 러드 전 총리는 미래에 정치적, 안보 이슈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더욱 효과적인 기구 창설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러드는 초기 구상에서는 새로운 지역기구의 창설을 추구하기도 했으나,¹⁵ 울코트의 보고서가 새로운 기구의 창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이후 더 이상 새로운 기구의 창설을 말하지 않고 있다. 그 대신 기존의 APEC, EAS, ARF 등 기존 기구들을 통해 APC를 건설해 나가자며 기존 기구의 재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¹⁶

¹⁵- Kevin Rudd, "It's time to Build an Asia Pacific Community," in Address to the Society Austral Asia Center, Sydney, June 4, 2008.

¹⁶- Kevin Rudd, Address to the Asia Pacific Community Conference, Sydney,

마. 아세안(ASEAN)

1976년 2월 인도네시아의 발리 섬에서 열린 ASEAN 정상회의에서 베트남 전쟁 이후 동남아 지역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지역 협력을 위한 조약 제정의 필요성이 제창되었다. 그리하여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 등 ASEAN 회원국 5개국이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이하 TAC)’을 작성하여 1976년 6월에 5개국의 비준을 얻어 발효시켰다.¹⁷ 그 뒤 1984년에 브루나이가 가입하였다. 1987년 12월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개최된 제3차 ASEAN 정상회의에서 동남아 지역 이외 국가들의 가입도 가능케 하는 내용의 ‘제1의정서’가 작성되었다. 제1의정서에 기초한 TAC의 개정은 1988년 7월 당시 TAC의 모든 계약국(5개국+브루나이)이 동 의정서를 비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했다.

그 뒤 새롭게 ASEAN에 가입한 베트남, 라오스(1992년), 캄보디아, 미얀마(1995년)도 TAC에 가입을 마쳤다. 그리하여 1998년 7월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열린 제31차 ASEAN 외상회의에서 TAC를 동남아 이외 나라들의 가입 규정을 기술적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제2의정서’를 작성하였다. ‘제2의정서’에 기초한 조약의 개정은 2000년 11월에 당시 ASEAN의 10개 회원국과 파푸아뉴기니 등 11개국이 모두 동 의정서에 대한 비준을 완료함으로써 발효되었다. 동남아시아 이외의 나라로는 역내 국가 모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가 있다. 그리하여 파푸아뉴기니(1989년)를 필두로, 중국과 인도(2003년), 한국, 일본, 파키스탄,

December 2008.

¹⁷ 日本外務省, 『東南アジアにおける友好協力條約の説明書』, 平成十六年三月.

러시아(2004년), 뉴질랜드, 호주, 몽골(2005년), 동티모르, 프랑스, 방글라데시, 스리랑카(2007년), 북한(2008년), 미국, 유럽연합(2009년)이 가입하여 2010년 9월 말 현재 2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TAC는 동남아 국가들에게는 평화전략으로서의 의의를 갖고 있다. 조약의 제1조에도 나와 있듯이 TAC는 UN 헌장의 제 원칙, 반동회의의 평화 10원칙, ASEAN 설립선언 등의 재확인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하여 회원국끼리의 평화와 우호 및 협력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경제와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일반적인 협력의 원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역외 국가들이 ASEAN 국가들(파푸아뉴기니 포함)과 협력관계를 맺기 위해 이 조약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조약의 제2조에서는 △모든 국가의 독립, 주권, 평등, 영토보전 및 주체성의 상호 존중, △모든 나라가 외부로부터 간섭 받거나 전복 혹은 강제되지 않고, 국가로서 존재하고 있는 권리, △상호 국내 문제에 대한 불간섭, △의견의 상위 혹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행사의 방지, 계약국 사이의 효과적인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중국과 미국의 태도이다.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ASEAN 국가들과 남사군도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ASEAN 국가들은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 △추가적 영토취득의 삼가 및 공동개발원칙 합의를 담은 ‘남중국해에 대한 ASEAN 선언(1992.7.22)’을 채택했지만 중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¹⁸ 그런데 중국은 △무력의 행사 금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조항을 담고 있는 TAC에 가입함으로써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그리하여 2003년 중국은 역외국가로서는 파푸아뉴기니를 제외

¹⁸ 변창구, “동남아시아 안보공동체로서의 ASEAN 전략과 과제,” 『정치·정보연구』, 제12권 1호 (한국정치·정보학회, 2009), p. 186.

하고 가장 먼저 TAC에 가입하였다. 중국의 TAC 가입은 일본을 비롯해 러시아, 미국 등의 가입을 촉발시켰다.

미국도 2009년에 오바마 행정부가 취임한 이후 동남아 정책에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ASEAN의 TAC에 서명한 것이다. 전임 부시 행정부는 TAC의 ‘내정불간섭’ 조항을 준수할 경우 미얀마 문제에 간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동 조약의 서명을 거부해왔다. 하지만 2009년 11월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ASEAN 정상회의에 참석했으며, 미얀마에 대한 정책을 ‘제재 일변도’에서 ‘제재와 대화 병행’으로 정책을 변경시켰다. 이에 앞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009년 7월 ARF에 참석하여 “America is back in Asia”를 선언하고 TAC에 서명하였다.¹⁹

2. 아시아 국가들의 평화관

가. ‘평화’의 다양한 의미

톨스토이의 장편소설 『전쟁과 평화』는 ‘전쟁의 부재’로서 ‘평화’란 개념의 일상적 의미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평화 연구자들은 전쟁의 부재로서 평화란 ‘평화가 무엇이 아닌지’를 보여주는지 하여도 ‘평화가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가정의 평화’나 ‘평화스러운 분위기’, ‘마음의 평화’와 같은 일상적 용법에서 평화의 의미는 ‘전쟁의 부재’라는 부정적 정의와는 전혀 합치하고 있지 않다. 다른 한편 평화에 대한 긍정적 정의는 시대

¹⁹ 이선진, “동남아에 대한 중국 전략: 현황과 대응,” 『JPI 정책포럼』, 제27권 (제주평화연구원, 2010.3), p. 12.

와 문화권에 따라 다르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헤브루어의 ‘shalom’과 이슬람 문명권의 ‘salaam’은 같은 어원으로서 신적 힘에 의한 정의의 실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평화의 여신’을 의미하는 그리스의 ‘eirene’, 로마의 ‘pax’ 그리고 중국의 ‘화평(和平)’이란 개념에는 ‘법과 질서에 의한 번영’이라는 뜻이 들어 있으며, 비폭력에 의한 평화의 획득과 관련하여 인도의 ‘ahimsa’란 살생을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²⁰

여기서 분명해진 것은 ‘평화’에 대한 다양한 의미는, 평화가 존재한다고 상정되는 다양한 상황, 장(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외적으로 평화가 지배하는 크고 작은 사회에서도 한 개인의 내적 평화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또 외적 평화가 반드시 내적 평화의 전제조건도 아니다. 이럴 때 내적 평화란 대개 ‘내적 갈등의 부재’로 설명되거나 후자가 전자의 필요조건으로 간주된다. 다른 한편 국가 간의 평화를 ‘전쟁의 부재’라고 보는 것은 전쟁의 부재가 국가 간 평화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갈등의 부재라는 필요조건을 넘어서서 무엇이 평화를 가져오는 충분조건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 사회의 구성원 개인이 획득해야 할 주관적 조건과 사회가 보장해야 할 객관적 조건을 구별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 아니다.

²⁰- “Recommendation for Promoting Research on Peace Studies,” National Committee for Peace Research, November 26, 2002, <<http://www.scj.go.jp/ja/info/kohyo/pdf/kohyo-18-t985-4.pdf>>.

나. 평화의 ‘소극적 해석’과 ‘적극적 해석’

인도 출신의 평화 연구가 수가타 다스굽타(S. Dasgupta)가 그의 논문 『비평화, 나쁜 개발(Peacelessness and Maldevelopment)』²¹에서 ‘전쟁이 없음에도 평화가 없는 상태’를 ‘비(非)평화(peacelessness)’로 규정한 이래, 현재의 평화학(peace studies)에서 평화의 개념을 직접적 폭력이나 전쟁의 부재상태보다는, 비평화를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의 지속상태’로 보는 것이 대세가 되었다. 즉, 교육, 직업, 의료 및 복지가 갖추어진 선진국에서는 전쟁의 부재가 평화의 일종이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저개발국가에서는 단순히 전쟁의 부재만으로는 평화스러운 삶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바꿔 말해 평화의 사회적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다. 다스굽타의 비평화 개념의 도입을 노르웨이 출신의 평화 운동가인 요한 갈통(J. Galtung)이 그의 논문 『폭력, 평화, 평화 연구』²²에서 받아들여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직접 폭력(direct violence)’에 대비하여 가난, 사회 불안, 불안전, 부정의, 불평등, 정치적 탄압, 기아와 질병의 반복을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즉, 전쟁과 평화라는 전통적인 이분법과는 달리, ‘전쟁도 없고 평화도 없는 상태(no war plus no peace)’가 이 세계의 많은 현실에 더 가까울 수 있다고 갈통은 보고 있다. 이처럼 갈통은 ‘단지 전쟁이 없다는 의미의 평화’를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로, ‘간접적 혹은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로 정의하면서, 그의 제안은 대부분의 평화 연구가들에 의해 받아들여졌다.²³

²¹- Sugata Dasgupta, "Peacelessness and Maldevelopment," IPRA Studies in Peace Research, Proceedings of the IPRA Second Conference, Vol. II (1968).

²²- J. Galtung,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VI, No. 3 (1969).

그러나 평화의 소극적, 적극적 해석에 앞서 평화의 추구에서 논리적으로 우선하는 것은 ‘평화가 전쟁이나 여러 갈등상태보다 더 바람직하다’라는 전제이다. 이 전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첫째, 평화가 ‘자연스러운 상태이며, 전쟁이나 비평화는 부자연스러운 상태’라는 인간 본성에 깃든 평화지향성을 정당화해야 하고,²⁴ 둘째, ‘평화가 전쟁이나 폭력보다 지향할만하다’는 윤리적 우월성을 확보해야 한다. 평화지향성은 상식적으로 매우 강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지만, 현실세계에서는 결코 항상 지켜야할 보편적 규범으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평화란 일반적으로 두 존재 간의 관계(relation)이며²⁵ 개인, 단체 혹은 국가의 일방적 속성(property)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어느 존재가 매우 평화스럽거나 혹은 평화 지향적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해도, 약육강식(弱肉強食)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속성이 오히려 폭력을 유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이처럼 평화지향성과 평화의 유지가 일치하지 않았던 가장 적절한 예로는 냉전 체제를 들 수 있다. 미국과 소련은 수천 발의 핵무기로 상대방을 위협하면서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강대국의 평화지향성이 아니라 상호 공멸에 대한 이성적 대처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23. “요한 갈통의 평화 개념,” 『평화만들기』, 2005년 8월 27일, <<http://www.peacemaking.co.kr/news/news/view.php?papercode=PEACE&newsno=1604&pubno=116>>; “Peace and conflict studies,”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Peace_and_conflict_studies>; “Johan Galtung,”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Johan_Galtung>.

24. 악마와 같은 인간들이 나타나서 전쟁이 야기된다는 ‘악마이론(devil theory of war)’이 대표적이다.

25. Ekkehart Krippendorff, “The State as a Focus of Peace Research,” *Peace Research Society*, Vol. XVI (The Rome Conference, 1970). 여기서 저자는 현대 평화학의 기원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http://wbk.in-berlin.de/wp/wp-content/uploads/2006/07/State_as_Focus_of_Peace_Research-1971.pdf>.

이처럼 평화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화지향성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지만, 공멸의 공포감에 의해 유지되는 소극적 평화는 그 자체가 구조적 폭력, 즉 비평화의 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냉전 시에 평화 운동가들은 미소의 핵 전쟁에 의한 인류 멸망 가능성에 대한 공포가 인류의 정신건강에 매우 파괴적임을 강조하였다. 실제로 소련의 해체와 함께 붕괴된 냉전체제 후, 미국과 소련은 인류를 수십 번 전멸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감축하면서, 상호 공멸에의 공포에 의한 소극적 평화의 유지가 매우 비정상적 상황이었음을 실감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전쟁의 부재로서 소극적 평화는 적극적 평화로 가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평화의 구조적 실현이라는 적극적 평화의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우선 평화의 속성적 측면을 강조하는 운동가나 학자들이 평화운동의 출발을 종교에서 찾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세계 종교는 내면적 가치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고, 이런 내면적 가치에 평화 지향성을 찾아보는 것은 거의 필연적이기 때문이다.²⁶ 예를 들어 유교에서도 법만으로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없으며, 오로지 덕치(德治)를 통해서만 인간의 자발적 규범 준수가 가능하다고 보았다.²⁷

그러나 평화와 종교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 다른 측면을 갖고 있다.

26. “딱딱한 계시종교가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 제공-인도전통의 부드러운 종교, 비폭력 정신이 평화운동으로 부각돼,” 한국종교문화연구소의 심포지엄 “종교, 폭력, 평화” 보도기사, 『가톨릭 뉴스』, 2010년 6월 21일, <<http://www.nah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69>> (검색일: 2010.6.25). 그러나 인간이 사회를 구성할 때에는 적어도 이론적으로 상호 존중의 규범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점은 세계 종교의 계열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7. 『論語』, 「爲政」, “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첫째, 2001년 9·11 테러 이후 이슬람 원리주의자의 테러리즘에 대한 대처와 관련하여 이슬람 문화와 여타 문화와의 갈등이 내연(內燃)하고 있고, 바로 동아시아에 무슬림 다수가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와 평화와의 관계를 도외시킬 수 없다.

둘째, 동아시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고 또 종교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자신의 정체성(identity)의 이해와 관련하여 종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개인의 종교에 의한 정체성 확보가 집단의 민족주의와 결부될 때 ‘종족-종교-민족주의’로 휘발·확대되어 조그마한 갈등의 불씨도 대형 분쟁으로도 발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점은 역설적으로 종교가 중재를 통해 분쟁 해결 및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도 의미한다.

셋째, 그러나 분쟁과 폭력을 종식해야 할 종교가 역설적으로 바로 분쟁의 원인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즉, 평화지향적인 종교 간에 폭력분쟁이 일어나는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평화지향성이라는 내적 조건 이외에 평화 정착의 외적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다. 종교의 내면적 지향으로서 평화

아시아의 종교는 보통 이슬람, 불교, 힌두교, 가톨릭으로 대변되지만, 20세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종교 간의 교류와 신도의 변화 추세가 활발해졌다. 그 이유는 주로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기인한 것이겠지만, 인간이 주어진 종교적 도그마를 무조건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 특히 미국에서 불교 신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으며,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이슬람교도가 증가

하고 있다.²⁸ 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개신교 신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다른 한편 아직 종교 선택의 자유나 관용의 전통이 부족한 곳에서는 여러 종교 간의 마찰도 증가하고 있다. 여러 유럽 국가들이 다문화 사회를 인정하는 추세로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이주 무슬림과 유럽인과의 문화적 충돌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한 국가 내에서 뿐 아니라 국가 간에도 종교, 인종 간의 오래된 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접경지인 카슈미르는 수십 년간 이어진 종교전쟁으로 많은 희생자를 양산했으며,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와 아체지역 등에서 가톨릭교도들과 힌두교도들의 독립 요구로 분쟁을 겪고 있다. 비교적 종교적 동질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태국에서도 남부에 거주하는 이슬람교도들이 자치를 요구하며 무력 투쟁을 벌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국에서는 티베트 자치구와 신장 자치구에서는 불교와 힌두교를 믿는 원주민들이 중국 정부의 한인 이주정책으로 소수집단으로 밀려나감으로써 문화적 정체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 특히 티베트는 세계 문화유산의 중요한 근거지가 파괴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 두 지역의 분쟁은 안정된 국가 내에서도 종교, 인종, 문화, 경제, 정치 등 모든 영역이 관계하는 총체적 갈등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 이슬람의 평화관

현재 세계 무슬림 인구의 62%가 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으며 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를 선두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²⁸ 아프리카에서 이슬람 근본주의의 증가도 눈에 띄고 있다; <http://www.gigabon.com/bbs/board.php?bo_table=dd010&wr_id=44&page=1>.

I
II
III
IV
V

그리고 인도는 인구학적으로 세계 4대 무슬림 국가이다. 여기에 중앙 아시아를 포함하면, 단순히 그 인구 분포로만 보아도 무슬림을 제외하고 아시아의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 다른 한편 ‘이슬람(Islam)’이 평화를 의미한다고 잘못 알려졌지만, 그 본래의 뜻은 ‘신에 대한 복종(submission)’이다.²⁹ 따라서 신적 질서에 대한 철저한 복종의 의무가 평화질서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2차 대전 이후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의 전쟁과 분쟁이 계속되면서 끊이지 않고 있는 아랍인의 테러와 TV화면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팔레스타인 주민의 지하드(Jihad, 聖戰)³⁰의 모습은, 일단 피상적으로 이슬람 국가나 단체들이 매우 호전적이라는 인상을 다른 문화권에 심고 있다. 이슬람은 신정(神政)일체 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국가의 수장인 칼리프(Caliph)는 알라의 뜻을 구현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슬람의 궁극적 목표는 전 세계를 이슬람화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슬람은 다른 종교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교도를 개종시켜야 할 의무를 칼리프는 갖게 된다. 만일 이교도가 설득되지 않을 때에는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의미의 지하드를 수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슬람 문명 전체가 다른 문화권에 비해 더 호전적이었느냐는 질문은 주관적 인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검토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 문제다. 첫째,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중동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피를 더욱 좋아하는 것도 아니며, 더 잔인

²⁹- <http://en.wikipedia.org/wiki/Islam#Etymology_and_meaning>.

³⁰- 그러나 지하드는 ‘무엇을 하도록 한다’는 의미가 있는 용어로서 전쟁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하드의 수단으로써 마음(heart), 말(tongue), 손(hand), 칼(sword)의 4가지 방법이 있다.

하지도 않고 더 폭력적이지도 않다. 세상에서 발생한 수많은 전쟁에서 이슬람 문명이 차지하는 전쟁의 비율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적었다”라고 한다.³¹ 둘째, ‘지하드’의 개념 자체가 역사적으로 사회, 경제, 정치적 환경에 따라 변천하여 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호주의 프린더스 대학의 하산(Riaz Hassan) 교수에 의하면, 지하드는 7세기 이슬람교가 성립하던 초기에는 이슬람의 사회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되었고, 8~16세기에 이르는 제국 시절에는 이슬람 문명의 확장을 위한 것이었다. 이때 이슬람교도에게 세계는 이슬람의 지역(Darul-Islam)과 전쟁의 지역(Darul-Harb)으로 나뉘었다. 17~19세기는 유럽 제국들에 의해 이슬람 국가가 식민화되는 시기였고, ‘지하드’는 식민국가에 저항을 의미하였다. 식민지 통치가 철폐된 후에 이슬람 국가들은 독립을 회복하기는 하였으나, 정상적 국가 통치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이 시기에 이슬람의 과격화가 일어났고 지하드는 잘못된 국가 통치에 대한 저항으로 이해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슬람세계의 공적 기관들의 기능이 붕괴되면서, 지하드는 이슬람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으로 이해되어 점차 사적 단체의 행동이 되었다. 예를 들어 알카에다가 9·11 테러를 위해 전사를 모집하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다.³²

다른 한편, ‘한 손에는 꾸란 경전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든’ 이슬람의 전파 방식과 관련된 상투적 구호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여러 악형이 하나의 이미지로 결합되어 이슬람교 자체

³¹ 이춘근, “미국을 향한 테러 공격과 이슬람의 전쟁론,” 자유기업원 브리핑 페이지, No. 26, (2001.9.27), <<http://www.cfe.org/mboard/bbsDetail.asp?cid=mn20061223122511&pn=3&idx=574>>.

³² Institute of Defence and Strategic Studies, *Anatomy of Religious Conflict in South and Southeast Asia* (Singapore: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2005), pp. 9~10.

가 잔인하고 호전적이라는 인상을 비이슬람권에 각인시켰다. 그러나 꾸란의 ‘종교에는 강제가 없다(2:256)’라는 구절이 말하듯이,³³ 성전론은 호전성을 띄고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 이슬람은 투쟁만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또한, 이슬람은 비이슬람교도들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지하드만을 강조하지도 않는다. 협상, 설득, 조약 체결의 방법도 강구되었고 특히 종족 간의 전쟁은 잔인하고 신의 의지에 어긋나는 전쟁이라고 부정하였다.³⁴ 다른 한편 이슬람은 성스럽지 않은 전쟁, 즉 지하드 이외의 전쟁은 모두 그 정당성을 부정하였다. 따라서 지하드 역시 그 정당성을 확인한 후에야 선포할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정당한 선전포고와 형식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즉, 이슬람 국가와 무슬림에게 호전적 이미지를 부여한 요인은 긴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사실이 아니다.

이슬람교의 평화 개념에는 적극적 평화와 소극적 평화가 있다. 여기서 적극적 평화란 이슬람 공동체의 확장으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전쟁과 폭력은 인간의 도덕적 타락에 기인하며, 도덕적 타락의 원인은 알라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덕적 무정부상태를 극복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에 귀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무슬림은 주장한다.

압제가 없어지고 종교가 모두 알라께 귀속될 때까지 싸워라!³⁵

33. ‘종교에는 강제가 없다’라는 꾸란(2:256)은 무슬림이 비무슬림에게 종교를 강제할 적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많이 인용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 <<http://www.answering-islam.org/Hahn/mappe.html>>.

34. 이춘근, “미국을 향한 테러 공격과 이슬람의 전쟁론.”

35. 『꾸란』, 8:39.

다른 한편, 소극적 평화란 빈곤, 부정의, 차별과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을 의미한다. 즉, 폭력과 전쟁의 발발 요인을 제거하여 궁극적으로 인류를 전쟁 위협으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소극적 평화의 핵심이다.

악에 대한 보복은 악 그 자체와 같으니라. 적을 용서하고 평화를 구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상을 누릴지니라.³⁶

따라서 소극적 관점에서 이슬람은 평화주의를 지지하지만, 적극적 관점에서는 맹목적 평화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유지해야 하지만, 그것이 불의에 의해 불가능해지면 전쟁은 선택 가능한 정의 실현의 수단이 된다.

전쟁과 평화의 혼재 그리고 이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가 이슬람 평화 사상의 기본 축을 이루는 것이다.³⁷

(2) 힌두교의 평화관

기독교와 이슬람에 이어 제3대 종교인 힌두교(Hinduism)의 어원은 인더스 강의 산스크리트 이름인 ‘Sindhu’에서 나왔으며,³⁸ ‘Sindhu’는 페르시아가 히말라야의 북서부를 통과해 인도를 침략했을 때 붙인 이름이다. ‘Hindu’는 ‘Sindhu’가 변형된 것으로서, 그 의미는 결국 인더스 강 유역에 사는 사람들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³⁹ 힌두교는 여타 세계 종교와는 달리 창시자가 없으므로 종교 창건의 날짜가 있지도 않다.

36- 『꾸란』, 42:40.

37- 이원삼, “이슬람교의 평화관,” 『평화를 위한 이슬람과의 대화』 (한국 이슬람 중앙회와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주최 토론회 자료, 2003.11.29), pp. 5~30.

38- ‘India’의 어원도 역시 ‘Sindhu’에서 나왔다.

39- 현재 힌두교 신자는 10억 명이 넘는다고 추산되고 있고, 이 중 10억 명 정도가 인도에 살고 있다.

힌두교 교리의 원천은 여러 종류의 베다(Veda) 경전에 있으며, ‘véda’란 산스크리트어로 지식을 의미한다.⁴⁰ 타종교와 수많은 신(神)에 대한 개방과 관용은 힌두교를 좁은 의미의 종교로는 정의하기 어렵다.⁴¹ 따라서 힌두교는 체계화되어 통일된 신념 체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 베다 전통에 입각하였지만, 외부로부터 수많은 종교적 현상을 포용하여 거대한 종교적 복합체가 되었다. 따라서 특정한 교리에 의존한다기 보다는 신도들에게 힌두교는 차라리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힌두교에서 두 종류의 전통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인간과 우주 전체가 둘이 아니라는 일원론(Advaita/monism)의 전통이다. 즉, 인간의 진정한 자아를 의미하는 ‘ātman’은⁴² 궁극적으로 우주의 모든 변화, 존재, 에너지, 시공의 근저에 있는 무한한 실체로서 ‘Brahman’과 동일하다. 따라서 인간의 삶의 목표는 수행(Yoga)을 통해 자신의 ‘ātman’이 우주적 자아라고 할 수 있는 브라만과 일치함을 체험하는 것이며, 이때 인간은 윤회(samsāra)로부터 해방(moksha)될 수 있다. 힌두교 내의 이원론(Dvaita/dualism)적 전통에서 브라만은 궁극적 존재로서 인격신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종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명칭을 지닌 숭배의 대상이 된다(Vishnu, Brahma, Shiva, Shakti). 이 경우 ‘ātman’은 브라만에 의존하게 되고 해방(자유) 역시 브라만에 대한 사랑에 달려 있다. 이처럼 힌두교 내의 상이한 전통에 따라 개인과 브라만과의 관계를 이원론(Dvaita)에서는 ‘설탕을 맛보려

40- 『Rigveda』, 『Yajurveda』, 『Samaveda』, 그리고 『Atharvaveda』 네 종류가 있다.

41- 인디아의 부통령이었으며 종교 철학자인 라다크리쉬난(S. Radhakrishnan)은 힌두교를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이성과 직관의 혼용체로서 명시적 정의가 불가능한 체험으로만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42- ‘ātman’의 어원은 ‘et-men’으로서 ‘숨 쉬다’라는 뜻이다. 독일어의 동사 ‘atmen’과 어원과 의미가 같다.

고’ 하지만, 일원론(Advaita)에서는 ‘설탕이 되려고 한다’라고 말한다.

힌두교의 전통에는 데바(Deva)라고 불리는 일종의 천신(天神)들이 수많은 신화와 조각, 서사시에 등장하며, 이들 중에는 지상에 법(dharma)을 복원하고 인간을 자유(moksha)로 인도하기 위한 화신(化身, incarnation)들이 있다. 이들을 힌두교에서는 아비타(avatar)라고 부른다. 힌두교는 이런 점에서 일원론 혹은 이원론적 전통을 막론하고 매우 평화지향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 개인이 궁극적으로 우주의 모든 현상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베다에는 그와 같은 구절들이 수없이 많이 나온다.

나는 하나가 아니라 수백만이며, 나를 수백만의 존재 속에서 본다. 이 수백·수천만의 눈과 귀가 바로 나의 눈과 귀이며 나의 생명이다. 나는 나 자신을 지상의 무수히 많은 생명들에서 보며, 그들이 나이고 내가 그들이다.⁴³

하늘이여 평화로워라, 공기가 평화로워라, 땅이여 평화로워라, 물이여 평화로워라, 약초여 평화로워라, 초목이여 평화로워라, 모든 배운 사람들이여 평화로워라, 베다의 신이여 평화로워라, 모든 존재들이여 평화로워라, 평화 자체가 평화로워라. 바로 그런 평화가 나에게 오기를.⁴⁴

지상에서 평화를 지속시키는 결합력은 진실, 즉 결정적이고 움직일 수 없는 법칙이다. 인류에의 봉사, 단순하고 꾸밈없는 삶을 서원(誓願)하라. 믿음은 우주적이고 신적(神的)인 원력(願力)이며 자신의 이해를 타인의 복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무아(無我)를 의미한다. 역으로 허위와 무법, 이기주의와 방탕, 최상의 힘의 부정과 폭력은 이 땅을 파괴한다.⁴⁵

43. 『Atharvaveda』 19.5.1.

44. 『Yajurveda』 36.17.

45. 『Atharvaveda』 12.1.1.

즉, 힌두교에서 수행을 통한 자아와 우주와의 합일은 이기주의적 세계관을 버리게 하고 나아가 사물에 대한 집착이나 감각적 욕망을 절제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아의 해방에 이르면 그것이 곧 내적 평화이고 동시에 타인과 이 세상의 평화에 기여한다.

다른 한편 힌두교가 모든 종류의 무력 사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바가바드기타(Bhagavadgita)』 제1장에는 동족, 혈연과 싸울 것을 주저하는 주인공 아르주나(Arjuna)가 아바타인 크리슈나에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 크리슈나는 악과 싸울 것을 주저하는 아르주나에게 전쟁을 하는 것이 그의 의무라고 말한다. 아바타인 크리슈나 자신도 악과의 많은 싸움을 하였다.

(3) 불교의 평화관

불교는 인도에서 발원하였으나, 오래전에 이미 쇠퇴하여 힌두교에 흡수되었고,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캄보디아 등의 소승불교가 지속되고 있다. 북방으로 올라가면 티베트가 독특한 불교문화를 형성하여 왔다. 다른 한편 약 2억의 불교 신도를 갖고 있다고 추정되는 중국에는 대승불교, 소승불교, 티베트 불교가 현실주의와 결합하여 혼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선종(禪宗)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는 한국에서는 불교가 개신교, 가톨릭과 함께 ‘다종교 사회’를 이루고 있다. 일본은 불교와 신도(神道)가 각각 종교 인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 종교 생활에서는 혼합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모든 세계 종교가 그러하듯이 불교도 평화를 강조한다. 즉, 평화스러운 마음은 평화스러운 행동을 낳고, 평화스러운 행동이 공동체와 세계의 평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교의 평화관은 이런 점에서 다른 종교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여타 종교와는 달리 불교에 독

특한 무상제(無傷偈, ahimsa), 즉 생명체의 살생을 금하는 계율은 불교가 특별히 평화적 종교라는 인상을 남겼다. 이런 점에서 평화 연구가 갈등도 불교가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 평화관의 기반은 살생금지와 같은 비폭력의 강조와 함께, 그 핵심 교리라 할 수 있는 연기법(緣起法)의 구조적 이해에 있다. 석가는 그가 발견한 연기설이 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중생들의 세계를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법이며,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라고 하였다.⁴⁶

‘연기(pratitya-samutpada)’의 어원적 해석은 ‘어떤 것을 연(緣)하여(pratitya) 일어나는 것(samutpada)’, 즉 모든 존재는 존재의 조건이 있다는 것이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계의 어떠한 존재도 절대적 독자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항상 타 존재와의 관계망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석가가 득도 후 처음 행한 가르침의 내용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한다’⁴⁷는 말은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 관계를 이루고, 또 독자적이지 않은 어떤 존재도 지속적이지 않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눈에는 수많은 존재가 독자성을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인간 자아의 존재를 굳게 믿고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재하는 그 어떤 자아란 중생의 무지에서 나온 일종의 정신적 투사행위라고 보고 있다. 한마디로 존재하지 않는 ‘나’를 있다고

46. “若見緣起 便見法 若見法 便見緣起”; 『中阿含經』 30권, 象跡喻經.

47. “此有故彼有 此起故彼起 此無故彼無 此滅故彼滅”; 『雜阿含經』, p. 335.

가정한다는 점에서 데카르트의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cogito, ergo sum)’라는 나의 존재 증명을 뒤집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없는 나를 있다고 투사하게 되는 무지의 근원은 무엇일까? 불교는 그것을 인간의 욕심이라고 보고 있다. 바로 이 욕심이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이어주면서 시간과 공간에 걸쳐서(time-spatially prolonged) 존재하는 내가 있다고 믿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탐욕을 갖는 것뿐 아니라, 사실 탐욕이 인간존재를 만든다고 말할 수 있으며, 바로 이 탐욕을 내려놓은 상태를 깨달음, 혹은 무소유의 경지라고 본다.

따라서 실제 세계의 평화 유지와 관련해서 연기설이 기여하는 바는 두 가지다. 첫째, 공동체와 개체와의 관계는 서로 매우 다르지도 않고(不異), 그렇다고 동일하지도 않은(不一) 이중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공동체란 개체가 존재할 수 있는 존재조건이자, 개체의 행동을 제약하는 제약조건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가정이 있어야 가족 구성원의 존재가 유지될 수 있다면 가정은 가족 구성원의 존재조건이다. 동시에 가족 구성원이 누리는 행동의 자유는 가정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만 보장될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가정은 가족 구성원에게 제약조건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각자가 맡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역할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점이 바로 제약조건인 구체적 모습이다.

둘째, 탐욕이란 그 자체가 파괴적이기도 하지만, 불교의 연기설의 관점에서 보면 결코 지속적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탐욕은 욕심내는 자와 욕심의 대상이 모두 지속적이어야 하지만, 어느 존재도 지속적이지 않으므로 탐욕 자체도 마음의 투사에 불과한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지속적인 자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욕심의 만족인 ‘소유’보다는 그 순간의 생명유지를 위한 ‘필요의 충족’을 더 강조한다.⁴⁸

연기설이 공동체와 개체에 대해 갖는 두 측면을 종합하면, 어느 개체도 자신의 욕심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윤리적이기보다는 공동체의 파괴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존재 조건의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또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는 공동체의 다른 구성요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족하게 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연기설에 근거한 불교의 평화관은 개별 인간이 탐욕을 제어함으로써 평화 지향성을 회복하고, 개인과 사회, 개별 국가와 지역 공동체는 불일부이(不一不異)의 이중 관계에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개별 국가는 다른 국가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신의 번영을 장기적으로 지속시킬 수는 없다는 점에서 상호 공존 의식의 함양은 필연적이다(不異). 그렇다고 하여 국가 간의 관계의 독자성을 아주 부정해서도 안 된다는 점에서 개별 국가들의 자조 노력이 공동체 유지의 또 다른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不一).

(4) 기독교의 평화관

세계에서 신도 수가 가장 많은 기독교는⁴⁹ 아시아의 다른 종교에 비해 그 역사가 짧지만, 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점차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2,305만 명으로 젊은 층과 지식인, 전

⁴⁸- 달라이 라마가 ‘불교적 공산주의’를 지지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⁴⁹- 미국 해외선교연구센터(OMSC)가 발표한 ‘2010년 세계 종교 인구 및 세계 선교 연례 통계’에 의하면, 2010년 세계 기독교인은 22억 9,245만 명, 무슬림 15억 4,944만 명, 힌두교인 9억 4,850만 명, 무종교인 6억 3,985만 명, 중국 종교(도교) 4억 6,873만 명으로 집계됐다. 기독교는 가톨릭(11억 5,562만 명)과 독립교회(4억 1,931만 명)·개신교(7억 8,847만 명)·정교회(2억 7,444만 명)·성공회(8,678만 명)·기타 기독교(3,491만 명) 등으로 구분된다.

I
II
III
IV
V

문 직업 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증대 가능성이 크다.⁵⁰ 유일신 종교로서 기독교(基督教) 혹은 그리스도교는 잘 정리된 체계적 교리를 갖고 있다. ‘기독교’이란 표현은 그리스어 ‘Christos’의 중국어 음역이며, ‘그리스도교’는 라틴어 ‘Christianismus’를 음역·의역한 것이다. 종교 계보학적으로 볼 때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파생되었다. 또한, 7세기경에 성립한 이슬람교와 더불어 이 세 종교는 공통의 경전인 구약 성경을 갖고 있다. 구약 성경의 중심 인물이 아브라함이므로 이들을 ‘아브라함계 종교’라고 부른다.

기독교에는 여러 종파가 있지만,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신의⁵¹ 아들로 태어난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을 믿는 종교이다. 또한, 초대 교회나 성경에는 없지만, 성부·성자·성령의 삼위일체(Trinitas)는 기독교 신학의 중심 사상으로 알려져 있다. 성부(聖父), 성자(聖子), 성령(聖靈)은 삼위, 즉 세 인격체로 존재하지만, 본질(essence)은 하나의 신이라는 교리이다. 특히 나사렛 예수는 신의 육체적 현현(顯現, Epiphany)으로 믿어지고 있다.

신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동시에 인간은 육체의 죽음과는 상관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영혼은 인간이 범한 원죄(原罪)로 인해 신의 나라에 조건 없이 들어갈 수는 없다. ‘신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 부르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의 가르침, 즉 인류를 위한 대속(代贖)의 종교적 의미와 가치를 믿어야 한다. 즉, 이러한 구체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구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처럼 육체적 부활을 기대할 수 있다.

50. “중국내 기독교 인구, 2,300만 명,” 『연합뉴스』, 2010년 8월 12일.

51. 한국의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으로, 가톨릭, 성공회에서는 ‘하느님’으로 표현된다.

기독교의 평화관은 인류의 아버지로서 신의 존재와 신의 소리로서 인간의 양심을 전제로 상당히 논리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 우선 인간 간에, 혹은 집단 간에 혹은 국가 간에 평화는 서로 간의 선의(善意)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인간 간의 선의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양심의 소리를 따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들리는 양심의 소리는 바로 신의 목소리이고 동시에 가르침이다. 만일 이 양심의 소리가 동일하지 않다면, 인간 간의 선의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신은 인류의 공통의 아버지이며 인간 누구나 동일한 신의 목소리, 양심, 영혼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교리를 따르자면 신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만 지상의 평화가 가능하다. 역으로 지상 세계의 고통과 전쟁, 비평화는 신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경배와 찬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왜냐하면, 평화란 본질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의미하며, 마음의 평화란 오로지 신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만 가능하며, 마음의 평화가 깨질 때 외부 세계의 평화도 깨지기 때문이다. 이 점을 기독교에서는 ‘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로 요약된다. 즉, 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이 내적, 외적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쟁을 일으킵니까? 여러분의 지체(肢體)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욕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내다가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남을 시기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면 싸우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느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해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욕정을 채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⁵²

52. 『야곱』 4장 1~3, 『공동번역』.

I
II
III
IV
V

신에게 구하는 방법은 기도이다. 그러나 절실한 신앙심을 갖지 않고 기도를 할 때 신은 대답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 신학자들은 그렇게 많은 기독교 국가 간에, 혹은 기독교 국가에 의해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던 것에 대한 해명으로 진정한 기독교인, 기독교 국가는 매우 드물며 또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5) 유교의 평화관

중국 춘추시대 말에 활동한 공자의 사상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교(儒敎)는⁵³ 일반적인 의미에서 종교라고 부르는 어렵다. 왜냐하면, 공자의 관심은 크고 작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당시 중국에 평화와 국민의 복리를 가져다줄 수 있는 현실의 정치·윤리 체제에 있었지, 내세나 우주의 궁극적 실체와 같은 형이상학적 논의에는 일절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자는 괴이함과 힘으로 하는 일, 어지러운 일, 귀신에 관한 것을 말씀하지 않았다(子不語怪力亂神).⁵⁴
 삶도 아직 모르는데 죽음을 어찌 알랴(未知生 焉知死).⁵⁵

다른 한편 공자와 더불어 유교의 주요 사상가인 맹자는 전국시대의 제후들이 민생(民生)보다는 전쟁을 통한 국세를 늘리고 힘으로 백성을 다스리려는 패도(霸道)정치를 비판하고 성왕(聖王)의 덕에

⁵³- 유가(儒家)는 공자의 가르침을 계승한 학파(學派)를 의미하고, 유교(儒敎)는 공자의 핵심 사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도덕·정치 체계를 말한다. 유학(儒學)은 유교를 배우고 연구하는 후학들의 노력과 성과를 의미한다.

⁵⁴-『論語』, 『述而編』.

⁵⁵-『論語』, 『先進編』.

의한 왕도(王道)정치를 주장하였다. 공자와 맹자가 활동한 춘추전국 시대는 전쟁이 550년간 끊이지 않았던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교의 본질적 관심이 태평성대(太平聖代)에 있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유교의 평화관은 한마디로 현실에서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는 윤리체계와 정치체계를 확립하는 데에 있다. 여기에 윤리의 원천인 인간의 본성 탐구와 윤리의 현실적 발현인 예(禮)의 실천이라는 교육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유교는 교육, 도덕, 정치의 통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주자의 대학장구서(大學章句序)에 집약적으로 나타나 있다.

무릇 하늘이 생민(生民)을 내리신 이래 지체 없이 보내준 것이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본성이다. 그러나 그 기질(氣質)의 품(稟)이 가지런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모두가 그 본성(性)을 알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총명예지(聰明叡智)하여 능히 자신의 본성을 다하는(盡) 자가 나올 수 있다면 하늘(天)은 반드시 그에게 억조(億兆)의 군사(君師)가 될 것을 명하여, 그로 하여금 백성을 가르쳐 본성에 돌아오게 한다.

즉, 유교는 본성론에서는 평등을, 자질론에서는 차별을 주장하며, 이는 곧 교육제도에 반영된다. 일종의 의무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소학(小學)과는 달리 대학은 군자는 15세가 된 준수(俊秀)를 가려 가르친다. 이때 대학교육의 목적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이다. 맹자도 ‘군자가 지킬 것은 그 몸을 닦아 천하를 화평하게 만든다’라 하였다.⁵⁶ 이 점을 구체화한 것이 대학의 삼강령(三綱領)과 팔조목(八條目)이다.

56. 『孟子』, 「盡心下」.

I
II
III
IV
V

대학의 도는 명덕을 밝히는 데 있고, 백성과 친함에 있으며, 지극한 선에 머무름에 있다(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

옛날, 명덕을 천하에 밝히려고 한 자는 먼저 그 나라를 다스렸고,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한 자는 먼저 그 집안을 바로 잡고, 그 집안을 바로 잡으려 한 자는 먼저 그 몸을 닦았고, 그 몸을 닦으려고 한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했고, 그 마음을 바르게 하려고 한 자는 먼저 그 뜻을 성실하게 했고, 그 뜻을 성실하게 하려고 한 자는 먼저 그 앎을 투철히 했나니 앎을 투철히 함은 사물을 구명함에 있다(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 先治其國 欲治其國者 先齊其家 欲齊其家者 先修其身 欲修其身者 先正其心 欲正其心者 先誠其意 欲誠其意者 先致其知 致知在格物).

다른 한편 국가를 유지하는 근본은 사회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며, 이때 역할은 항상 관계로 표현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전한(前漢)의 유가 동중서(董仲舒)의 삼강오상설(三綱五常說)에서 유래된 삼강오륜(三綱五倫)이다.

삼강(三綱): 군위신강, 부위자강, 부위부강
(君爲臣綱, 父爲子綱, 夫爲婦綱)

오륜(五倫):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때로는 남존여비와 권위주의적 관계로 폄하되는 삼강오륜은 실제로는 기본적으로 인(仁)이라는 유교의 가장 중요한 덕성, 즉 인간 관계에 있다. 공자는 『논어(論語)』에서 ‘인(仁)’은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피하고 주로 ‘~한자 인에 가깝다’ 혹은 ‘~한자 중에 인한 자 드물다’라는 완곡한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것은 인이 날카롭게 규정

되면 상황에 따라 행위의 유연성을 잃을 수 있다는, 공자의 깊은 통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점은 인(仁)을 통해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화합할 수 있으며, 이때 인(仁)의 근본 정신은 충(忠)과 서(恕)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진심을 다해(盡己之心) 상대방을 배려하는 충(忠)과 언제나 역지사지(易地思之)하여 자신에게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己所不欲勿施於人)는 서(恕)⁵⁷를 말한다.

그러나 동양사회에서 유교적 관계론은 두 가지 이유로 쇠퇴하였다. 첫째, 서구 문화와 유입으로 개인주의적 세계관이 확산되어 사회 구성 요소의 서로 차별되는 역할을 규정한 관계론은 설득력을 많이 잃었다. 둘째, 유교 자체가 시대 변화에 맞추어 계속 새로운 관계론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仁)이나 충서(忠恕)는 관계론의 원리이지 구체적 표현이 아니므로, 새로운 시대 상황과 시대 정신에 맞추어 새로운 관계론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유교에는 사회나 국가 간의 화합에 필요한 기본 덕목이 존재함은 물론이다.

라. 아시아의 종교·인종 분쟁 및 해소 사례

(1) 동티모르(East Timor/Democratic Republic of Timor-Leste)

호주 북쪽 약 640km에 있는 면적 15,410km²의 티모르 섬은 16세기 포르투갈에 의해 식민지가 되었다. 그러나 유효한 식민 지배는 1769년 중반 이후로서 수도 델리(Deli)가 세워진 후였다. 19세기에 네덜란드가 티모르 섬의 서쪽 반(서티모르)을 차지하여 동서 간의 국경은 현재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사이의 국경이 되었다. 포르투갈의 통치 아래 원

57. 『論語』, 「衛靈公」.

주민들은 잔혹하게 착취를 당했다. 태평양 전쟁 시에 티모르 원주민들은 산악지대에서 게릴라전을 벌이면서 일본군에 저항하다 4만~7만 명이 전사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에 포르투갈의 식민통치가 재개되었으나, 포르투갈 내정의 혼란으로 말미암아 포르투갈은 1975년 11월 28일 일방적으로 동티모르의 독립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바로 9일 후 동티모르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전, 미국의 포드 대통령과 키신저 외무장관이 자카르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떠난 다음 날, 인도네시아군이 동티모르를 점령하였다.

동티모르는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아니었고, 종교·문화적으로 인도네시아와는 유대감이 없었다. 1975년 동티모르의 독립을 주장하는 동티모르독립혁명전선(Frente Revolucionaria Timor Lest Independente: 이하 FRETILIN)과 인도네시아를 지지하는 세력 사이에 짧은 내전이 있은 후, 인도네시아는 중국이 FRETILIN을 지지하였다는 이유로 이 정당의 지지자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았다. 베트남의 공산화로 동남아시아에서도 미노 효과를 염려하던 서방국가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동티모르 점령을 묵인하고 지지하였다. 티모르 해의 유전 개발, 무기 판매, 천연자원 부국 인도네시아와의 경제 관계 등이 이유였다. 심지어 호주는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합병을 1978년 공식적으로, 유일하게 승인하였다. 미국, 영국, 독일, 핀란드, 스웨덴, 벨기에, 네덜란드, 호주는 인도네시아에 첨단 무기를 판매하였다.

다른 한편 UN 안전보장이사회는 1975년 12월 22일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점령을 만장일치로 규탄하고 즉각 철수를 결의하였으나, 미국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 1976년 7월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의 27번째 주가 되었으나 UN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의 통치는 잔혹하여 20여 년의 지배 기간에 1만

8,600명이 독립 투쟁으로, 8만 4,200명이 기아와 질병에 방치되어 사망하였다.⁵⁸

1991년 11월 12일 산타 크루즈 묘지(Santz Cruz Cemetery)에서 일어난 인도네시아군의 동티모르 시위대 학살 사건(최소 250명 사망)이 미국과 영국의 언론인들에 의해 촬영되고 증언되어 외부 세계로 알려지자 세계 여론의 향방이 결정되었다. 미국과 영국에 동티모르 독립을 지지하는 시민단체가 결성되고, 포르투갈, 호주, 일본, 독일, 말레이시아, 아일랜드와 브라질에도 지지단체가 생겼다. 산타 크루즈 학살(딜리 학살) 비디오는 인도네시아로 유입되어 동티모르 문제만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정치와 역사에 대한 비판으로 확대되었다. 미국 의회는 인도네시아군의 훈련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으나 미국의 인도네시아군에 대한 무기 판매는 계속되었다. 1996년 동티모르 카를로스 벨로 주교(Bishop Carlos Belo)와 망명정객 오르타(José Ramos-Horta)에게 노벨평화상이 수여되었고, 1997년 남아프리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 시에 동티모르 지도자 구스마오(Gusmao)와 만났다. 1999년에 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모든 군사 관계를 단절하였다.

1999년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 자결권을 인정하자 UN 감시 하에 동티모르에서 주민투표가 시행되었다. 인도네시아 내에서 자치권 행사와 완전한 독립국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 주민 78.5%가 독립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동티모르에는 반 독립파 민병대가 등장하여 테러를 자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급진적인 이슬람교도들이며 인도네시아군의

⁵⁸- Benetech Human Rights Data Analysis Group(HRDAG), “The Profile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imor-Leste, 1974-1999,” (February 9, 2006), <http://www.hrdag.org/resources/timor_chapter_graphs/timor_chapter_page_02.shtml>.

지원을 받았다. UN은 동티모르의 안정과 독립을 추진하기 위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여, 서티모르로 도망간 민병대는 국제적인 압력에 의해 해체되었다. 2002년 5월 20일 21세기 최초의 독립국가가 된 동티모르는 같은 해 9월 27일 UN 회원국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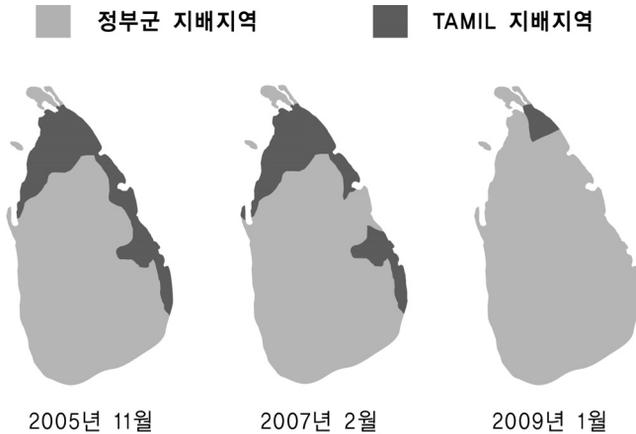
그러나 독립 후에도 동티모르의 정정은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다. 2006년 4월 군대와 경찰 사이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 40명이 사망하고 2만 명이 도피하였다. 5월에는 정부군과 동티모르 민족해방무력군(Forças Armadas da Libertação Nacional de Timor-Leste: 이하 Falintil)⁵⁹ 사이에 충돌이 있었으며, 2007년에는 대통령 오르타와 수상 구스마오는 쿠데타군에게 충격을 받아 대통령이 중상을 입었다. 인구 약 90만의 동티모르인의 97%는 로마 가톨릭을 신봉하지만, 토착 신앙도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동티모르 분쟁의 원인을 종교에서 찾을 수 없지만, 동티모르 사회에서 중요한 기관인 교회는 독립 투쟁에서도 큰 역할을 하여 이슬람의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의 차별화에 상징이 되었다. 헌법에 교회의 역할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티모르는 원칙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세속 국가이다.

(2) 스리랑카(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2009년 5월 19일 스리랑카 대통령은 타밀 일람 해방호랑이(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 이하 LTTE)의 분리주의 무력 투쟁의 종식을 선언하였다. 1983년에서 2009년까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내전이 끝난 것이다. 내전은 스리랑카의 다수 민족이며 불교를 믿는 싱할라(Sinhala)족과 힌두교를 믿는 소수의 타밀(Tamil)족 간의 종교·인종분쟁이다.

⁵⁹- Falintil은 동티모르독립혁명전선(FRETILIN)의 군사 조직이다.

●그림 1-3 스리랑카 내 정부군 지배 지역과 타밀 지배 지역



동남아시아의 분쟁은 식민시대의 유산과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듯, 스리랑카의 인종분쟁 역시 영국의 식민지 유산과 관련되어 있다. 1796년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실론 섬을 장악하고 1802년 식민지로 선포하였다. 주로 차, 시나몬, 고무, 사탕, 커피와 인디고 농장을 경영하던 영국은 상당수의 남인도 타밀족을 농장 노동자로 이주시켰다. 스리랑카에서 고대부터 살고 있던 타밀족을 ‘스리랑카 타밀’이라고 부르는 반면에, 이주 노동자들을 ‘인도 타밀’이라고 부르고, 이들을 합치면 대략 인구의 15%를 차지한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스리랑카의 원주민들은 식민 당국의 차별에 항의하여 독립운동을 시작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불교를 믿는 싱할라족이었다. 1948년 영연방 내에서 실론 자치령(Dominion of Ceylon)으로 독립을 하여 1972년 영연방 내에서 스리랑카 공화국이 되었다.

내전의 싹은 1956년 싱할라어(사용자 전체 국민의 70%)를 유일한 공용어로 확정하면서 뿌려졌다. 싱할라어를 할 줄 모르는 타밀족 공무원들은

I
II
III
IV
V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또 1972년 새로 제정된 공화국 헌법에 불교의 보호, 육성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면서 종교 차별을 피하고자 타밀족 분리주의자들은 독립국가(Tamil Eelan) 형성을 목표로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1983년 7월 타밀족 거주지역인 자프나(Jaffna)에서 정부군이 살해되자 전국에서 타밀족이 보복 살해되면서(약 1,000명) 내전이 시작되었다.

내전 기간에 양측 모두에 의해서 수많은 민간인이 피해를 보았다. 타밀 타이거의 지배 지역에 대한 무차별 폭격이 가해져 민간인의 대량 인명피해가 속출하였고, 타밀 타이거는 주요 인사, 민간인들에게 무차별 테러를 자행하여 유럽연합, 미국, 인도로부터는 테러조직으로 낙인 찍혔다. 동시에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소년병과 어린이들을 징발하는 등, 심각한 인권유린을 범하였다. 피난민 역시 대량으로 발생,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다반사가 되었다. 1993년에는 타밀 타이거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테러에 의해 대통령이 암살되기도 했다. 인도, 파키스탄, 중국이 정치적 계산으로 양측에 대량의 무기를 제공하여 내전이 장기간 지속되었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도 26년간 타밀 타이거에 기관총과 대포 등 막대한 양의 무기를 판매하였다.⁶⁰ 2002년 타밀 타이거와 정부군 사이의 휴전협정이 노르웨이의 중개로 성사되었으나 2005년 이후 무장 충돌이 재발하였다.

인권단체들은 타밀 타이거의 패배를 역사적 사건으로 환영하지만, 현 스리랑카 정부가 인종 분쟁의 뿌리를 제거하려는 각종 차별 폐지 노력과 화해 정책을 실행하지 않는 한 지속가능한 평화의 가능성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타밀족 주거 지역을 포함하여 좀 더 정의롭고 공평한 법치의 실현, 타밀족의 정당한 원한과 분노를 완

⁶⁰ “미국, 북한 외교대표부 이용한 불법 무기 판매 주목해야” 『미국의 소리』, 2010년 8월 17일.

화할 수 있는 정책, 열악한 난민캠프 상황 개선과 난민들의 귀향 조치, 국제적십자사 활동의 완전 보장 등이 시급하다고 국제사회는 보고 있다.⁶¹

다른 한편 스리랑카는 1990년대에 내전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5%의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으며, 국민소득은 2009년 1인당 1,972달러로 인도보다 높다. 또 내전의 종식으로 관광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뉴욕타임즈는 2010년의 관광지 31개 중 스리랑카를 최고로 평가하였다.⁶² 또 내전 기간에 사실상 고립되었던 북부지역 도시로의 교통망이 복구되고⁶³ 상업이 부활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조심스러운 낙관론도 나오고 있다.⁶⁴

(3) 인도의 이슬람-힌두 종교 분쟁

현재 세계에서 종교 간의 갈등이 최고의 정치적 갈등으로 확대된 경우는 인도 대륙의 두 핵보유 국가 인도와 파키스탄과의 분쟁이다. 종교 분쟁의 작은 영국의 식민시절인 1895년에 결성된 인도국민회의(Indian National Congress)가 20세기에 들어와 독립운동을 시작하면서 시작되었다. 국민회의에 참가한 이슬람 대표들은 힌두 민족주의자들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에 1906년 이슬람연맹(the Muslim League)을 결성하였다. 이때부터 인도의 무슬림은 힌두교도와는 별도로 영국 정부, 식민 당국과 협상을 벌이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전쟁 후 인도의 독립을 약속한 영국 정부는 1947년 8월 14일 인도 대륙의 서북부와 동쪽 끝을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으로, 나머지를 힌두교가 지배하는

61- "Sri Lanka: After the War," *International Crisis Group*, February 17, 2010.

62- "The 31 Places to Go in 2010," *New York Times*, January 10, 2010.

63- "Jaffna: A Year Since The End Of The War," *The Sunday Leader*, August 22, 2010.

64- "Business Returns to Sri Lanka's Former War Zone," *TIME*, August 15, 2010.

I
II
III
IV
V

인도로 다음날인 8월 15일 독립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이런 인위적인 분할은 수많은 힌두교가 무슬림의 지배하에, 또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시켜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이 양측에서 발호하게 하였다. 평화와 화해를 주장하던 마하트마 간디(Gandhi)가 힌두 극렬주의자에 의해 암살된 것에는 이런 시대 배경이 있었다. 독립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인도와 파키스탄은 카슈미르 지방에서 전쟁 상태에 돌입하였다.

다른 한편 1,600km 떨어진 두 개의 지역으로 구성된 파키스탄의 내정은 안정을 찾지 못하였다. 이들 간에 공통점이란 오로지 종교 이외에는 없었고, 동파키스탄은 서파키스탄보다 정치적, 경제적 차별로 낙후되었다. 1971년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동파키스탄은 3월 26일 독립을 선언하여 방글라데시가 되었고, 동·서파키스탄 사이에 내전은 그해 말까지 계속되었다. 인도는 방글라데시를 지원하였다. 종전 후 1972년 인도 총리 인디라 간디와 파키스탄 대통령 부토는 카슈미르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합의하였으나 1974년 인도가 핵실험을 하자, 양국은 다시 적대 관계로 돌아섰다. 1983년 파키스탄도 핵실험을 시작하여 전투기와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폭탄의 개발에 성공하였다.

다른 한편 인도 대륙 분할 이후 힌두교도와 인도 내의 무슬림 약 1억 6,000만 명(총인구의 13.4%) 간의 평화는 1992년 바브리(Babri) 이슬람 사원이 파괴되면서 같이 무너졌다. 1527년에 무굴제국의 첫 황제가 세운 바브리 사원을 힌두교 민족주의자들은 최고의 신 라마(Rama)의 출생지로 믿고 파괴하여 인도 전역에서 폭동이 일어나 약 2,000명이 사망하였다.⁶⁵ 이에 대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보복으로 1992년

⁶⁵- 2009년 바브리 폭동 17년 만에 정부의 조사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되었다. 인도국 민당(Bharatiya Janata Party: 이하 BJP)의 힌두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印 ‘바브리 폭동’ 보고서 유출 파문,” 『중앙일보』, 2009년 11월 24일.

12월과 1993년 1월 뭍바이 폭동이 일어나 무슬림과 힌두교도 900명이 사망하였다. 같은 해 3월에는 무슬림 극단주의자에 의한 폭탄 테러가 일어나 약 250명의 힌두교도들이 사망하였다. 2002년 바브리 사원이 있던 아요디아(Ayodhya)를 순례하고 돌아오는 힌두교도들이 탄 기차를 방화하여 59명이 사망하자, 이어 구자라 폭동(Gujarat riots)이 일어나 2,000명의 무슬림이 사망하였다. 2006년 7월에는 뭍바이 기차 폭탄 테러가 일어나 209명이 사망하고 700명이 부상을 당했다. 무슬림 극단주의자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다.

(4) 티베트-중국 주권 문제

2008년 3월 14일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라사에서는 1959년에 일어난 항거를 기념하기 위하여 승려들이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확산되어 티베트인들이 한족(漢族)과 이슬람교도인 회족(回族), 그리고 이들의 상점을 공격하였다. 중국 정부의 한족 이주 정책과 차별, 티베트 문화의 파괴 등으로 인한 분노가 폭력으로 이어져 한족 십 수 명이 사망하였다. 시위는 티베트 자치구를 넘어서 티베트족이 거주하는 중국의 다른 주로 번졌다. 중국은 외국 언론의 출입을 금하고 인민무장경찰 수천 명을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였다. 4월 18일 달라이 라마는 캐나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적어도 400명의 티베트인이 사망하였고 수천 명이 체포되었다고 밝혔다.

2008년 4월 27일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과정에서 서울 시청 앞에 모인 시민단체인 ‘티베트 평화연대’의 회원들이 다수의 중국 유학생들에 의해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 티베트를 지지하는 외국인 몇몇도 부상을 당했다. 정부는 주한중국대사에게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고 밝혔으나, 닝쿠푸이 주한중국대사는 “일부 중국 청년

들이 과격행동을 하여 한국 경찰과 기자 등이 부상한 것에 대한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하였으나 사고는 없었다. 2009년 10월, 4명의 티베트인이 지난해의 시위와 관련하여 처형당했으며, 10월 10일 미국 의회 보고서는 적어도 670명의 티베트인이 평화적 시위나 외부 세계로 티베트 상황을 전했다는 이유로 수감되어 있다고 밝혔다.

2010년 3월 5일에 주한중국대사관은 “민족단결, 티베트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화교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재한중국교민협회 이장작 부회장은 20여 년 전 티베트를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끝없이 펼쳐진 초원 위에 서서 멀리 만년설로 뒤덮인 높은 산을 바라보며 티베트족 동포들이 부르는 노래를 감격에 겨워 귀 기울여 들었다고 했습니다. “설산에 붉은 태양 떠오르고, 농노에서 해방된 기쁨에 노래 부르네. 행복에 겨워 모택동 주석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공산당에 하다(hada: 비단 스카프)를 바치리.” 이 부회장은 티베트 인민들의 현재 행복한 생활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평화적 해방이 없었다면 티베트의 행복을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이고, 티베트 각 민족 인민들의 노력과 전국 인민들의 후원이 없었다면 오늘의 조화롭고 편안하며 건강한 새로운 티베트가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⁶⁶

‘티베트의 주권 논쟁(Tibetan sovereignty debate)’으로 알려진 한족과 티베트족 간의 분쟁은 종교적 측면을 포함하여 본질적으로 티베트의 역사에 대한 논쟁이다. 그 핵심을 요약하면, 몽골이 세운 원나라가 티베트를 중국 영토로 편입한 이후 지금까지 700년간 티베트는 중국으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부분(inalienable/integral part)’이 되었다는 것

66. 『민족단결, 티베트의 어제와 오늘』 (주한중국대사관 화교 좌담회, 2010.3.5), <<http://www.chinaemb.or.kr/kor/sgxx/t663176.htm>> (검색일: 2010.8.22).

이 중국의 주장이고, 티베트는 긴 역사를 통해 독립국의 위치를 잃어버린 적이 없으며, 단지 강대국 중국과 ‘승려-후견인(priest-patron)’ 관계를 맺어 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어와 티베트어로 된 방대한 문헌을 검토한 중국·티베트 전문가 스펠링(Elliot Sperling)에 의하면 중국의 주장의 핵심, 즉 ‘분리할 수 없는(不可分割)’은 1950년 중화인민공화국이 티베트를 침공하여 점령한 이후에나 중국 학자들의 문헌에 나오는 것으로서 일종의 역사 조작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그는 티베트의 주장에서 전 역사를 통해 티베트가 중국에 정치적으로 복속되지 않고, 단지 중국과 관계가 종교적 도움에 정치적 후원을 교환하는 ‘승려-후견인(priest-patron)’에만 머물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 명나라는 현실적으로 티베트에 명목적인 의미 이외에는 없었으나 청나라는 티베트에 강한 정치적 지배력을 행사하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치적 지배 관계가 티베트의 주권(sovereignty)을 완전히 무력화할 정도는 아니며, 단지 정치적 종주권(suzerainty)의 확보에 머무르는 정도라고 보고 있다. 즉, 티베트는 네팔과 몽골이 그렇듯이 중국과는 다른 나라였다는 것이다.⁶⁷

(5) 종교와 분쟁 해소

대부분의 종교 갈등의 배경에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혹은 불만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단순히 종교 간의 대화만을 통해서 오래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또 대부분의 종교는 강한 내적 교리

⁶⁷- Elliot Sperling, “The Tibet-China Conflict: History and Polemics,” *Policy Studies* 7 (Washington, D.C.: East-West Center, 2004), <<http://www.eastwestcenter.org/fileadmin/stored/pdfs/PS007.pdf>> (검색일: 2010.8.22).

I
II
III
IV
V

(dogma)로 인해 타 종교와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크다. 또한, 종교 갈등이 오래 지속되면 상대방에 대한 적대적 이미지의 투사가 보편화되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평화적 분쟁 해결의 실마리마저 상실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런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왜곡된 배경을 안고 있는 갈등 상황의 경우 분쟁 당사자 간에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강한 평화지향성을 갖는 중재자가 필요하다. 종교가 평화적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주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평화와 관련된 종교계의 노력 대부분은 인간의 내적 평화지향성에 근거하여, 종교 간, 문화 간의, 종족 간의 대화를 강조하는 데에 있다.⁶⁸

단, 종교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중재자가 분쟁 당사자가 아니다. 둘째, 중재자에 대한 신뢰, 즉 중재자의 권위가 필요하다. 이 점은 한 사회 내에서 평화지향적 분쟁 해결 혹은 완화자로서 종교가 기능하려면 불필요한 분쟁이나 종교적 판단을 넘어서는 객관적 사실 확인의 문제에 종교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종교의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견해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회의 불의에 대하여 눈을 감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이 양자 간에 매우 조심스러운 균형을 찾지 못한다면 한 사회 내에서 정의의 실현자로서도 분쟁의 중재자로서도 기능할 수가 없다.⁶⁹ 셋째, 중재자는 타종교, 타문화, 타종족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한 마디로 종교가 분쟁

⁶⁸-Mohammed Abu-Nimer, "Conflict Resolution, Culture, and Religion: Toward a Training Model of Interreligious Peace-building,"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8, No. 6 (November 2001), pp. 685~704.

⁶⁹-2008년 5월에서 8월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가능성과 관련하여 일부 종교계 인사들이 보여준 편향적 태도는 사회의 무게 중심을 급격히 이동시켰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순간적으로 허위와 광기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으며 분쟁 해결의 중재자로서 종교는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한다는 말은 자신의 특정한 종교적 교리를 넘어서는, ‘특정한 신앙 내에서 그 신앙을 초월’하는 자세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바로 그 점이 종교인의 특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증재 사례: 필리핀 민다나오의 무슬림-기독교 갈등〉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남부의 민다나오 지역에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모로이슬람해방전선(Moro Islamic Liberation Front: 이하 MILF)이라는 무장 무슬림 분리주의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가까웠던 민다나오에 이슬람이 들어와 원시 토착 종교를 제치고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슬람은 민다나오의 술루 섬에(Sulu Island) 술탄 왕국을 수립하여 정치적으로도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16세기 중반 스페인이 필리핀 열도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정복자는 이 지역에 무슬림의 영향이 강성함에 실망하였다. 스페인은 필리핀의 무슬림을 ‘모로(Moros)’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스페인에서 무슬림을 칭하던 ‘무어(Moors)’가 잘못 전해진 것이다. 스페인은 빠른 속도로 필리핀 원주민을 개종시켜서 대부분 가톨릭을 믿게 되었지만, 민다나오에 정착된 이슬람교를 완전히 몰아낼 수 없었다.

이후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필리핀을 식민지로 넘겨받아 2차 대전을 거쳐서 필리핀은 독립하였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1970년대에 자원이 풍부한 민다나오 지역에서 원주민들의 의사와 권리를 무시하고 기독교인의 이주 정책을 추진하여 민다나오 지방의 다수가 되게 만드는 등, 이 지역의 이권의 상당 부분을 타인에게 넘김으로써, 토지 조약의 무효, 토지 소유권 반환, 자치권 보장 등을

I

II

III

IV

V

내세우며 MILF은 필리핀 정부군과 유혈 투쟁을 벌여오게 되었다. 이 조직은 민다나오의 분리·독립을 주장하고 있으며, 약 1만 2,000여 명의 조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7년부터 필리핀 정부와 협상을 하여 평화 협정을 조인하였으나, 2000년 에스트라다 대통령이 협정의 무효화를 선언한 이후 분쟁은 다시 시작되어 아로요 대통령에 의해 정전 협정이 체결되었으나 유혈 충돌과 보복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무슬림 분리 운동과 9·11 테러의 주범 오사마 빈라덴 간의 연계 관계가 의심되고, 2008년 필리핀 대법원은 필리핀 정부와 MILF 간의 ‘조상 영역협정각서(Memorandum of Agreement on Ancestral Domain: 이하 MOA-AD)’의 체결을 금지하여 상황은 복잡하게 되었다. 즉, 민다나오 분쟁의 역사적 배경에는 식민지 시대로부터 계속된 첨예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다른 한편, 민다나오의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회연대 네트워크는 1996년 필리핀정부와 MILF와의 정전 협상을 계기로, ‘비숍-울라마-회의(Bishop-Ulama-Conference: 이하 BUC)’를 조직하였다.⁷⁰ 현재 24명의 가톨릭 주교, 26명의 이슬람 울라마, 18명의 개신교 주교와 성직자로 구성되어 종교 간 대화를 바탕으로 민다나오 지방의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BUC는 민다나오 주민의 종교는 달라도 모두 신—God/Allah/Magbabaya—의 창조물이라는 공통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적 신앙의 힘을 모아 공공의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들은 평화 정착의 노력이 4개의 원칙에 따른다고 밝히고 있다.

⁷⁰- Bishops-Ulama Conference 홈페이지(http://www.buc.org.ph/main/aboutus/buc_history.html) 참조.

- ① 평화 정착을 위한 이유와 대화는 각자의 신앙 전통에 근거함을
알며,
- ② 평화 정착에 개인의 신앙이 갖는 변화 추동의 힘을 의식하며,
- ③ 대화와 토론을 촉진하며 평화에 대한 공통의 가치 및 경험을 공
유하며,
- ④ 평화단체와 평화 주도(peace initiatives)의 수렴과 통일을 지지
한다.

국내 7개 종단(개신교·불교·원불교·유교·천도교·천주교·민족종교)이 회원 종단으로 있는 한국 종교계의 공식적인 연대 협력기구인 한국 종교인평화회의(Korean Conference on Religion and Peace: 이하 KCRP)는⁷¹ 필리핀 민다나오 화해 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종교 문화 간 대화 평화센터(FCIIDP)’ 건립을 지원하여 2009년 11월 개원식에 참여한 바 있다.⁷²

3. 아시아 평화관의 두 토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동아시아의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기독교, 유교는 모두 교리 상으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방법론과 그 이론적

⁷¹ 1960년 미국, 인도, 일본 등에서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평화’에 대한 공동의 관심을 확인하고, 인류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자 1970년 조직한 세계 종교인평화회의(World Conference of Religion for Peace: 이하 WCRP) 하에 지역 회의로서 아시아 종교인평화회의(ACRP)가 있으며, 한국 종교인평화회의(KCRP)는 ACRP그룹에 속해 있다.

⁷² “Koreans fund peace center in Mindanao,” *Ucanews*, November 27, 2009, <<http://archive.ucanews.com/2009/11/27/koreans-fund-peace-center-in-mindanao/?key=buc>>.

배경이 존재하며, 무엇보다도 평화를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서는 장기간 지속되는 종교 분쟁이 적지 않다는 일종의 역설적 상황이 존재한다. 그러나 종교란 일반적으로 신도들에게 배타적 신념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는 원칙적으로 있다. 그러나 세계화를 통한 종교 간의 접촉 및 대화 강화와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종교의 자유는 종교 간에 순전히 배타적 신념체계로 인해 분쟁을 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 내에서 힌두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은 순수하게 종교적 이유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선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형적으로 이 폭동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힌두 민족주의자들이 예상되는 소수 무슬림의 범이슬람주의에 대항하여 동원이 된다. 그러면 사이비 종교 행사들이 힘의 과시를 위해서 조직되고, 매우 선동적인 행사들은 국가 차원에서 정치적이고 선거와 관련이 있는 폭동들의 방아쇠를 당긴다. (...) 종교적 폭동과 선거 일정과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예상할 수 있다.⁷³

즉, 종교 분쟁에서 종교는 ‘우리와는 섞일 수 없는 다른 집단’의 명칭일 뿐 그 내적 교리와는 대부분 무관하다. 따라서 종교 분쟁을 살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사회, 경제, 정치적 차별과 정치적으로 의도된 폭력의 유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역으로 종교 분쟁이 관계된 종교의 내적 교리만으로는 극복

⁷³- Institute of Defence and Strategic Studies, *Anatomy of Religious Conflict in South and Southeast Asia* (Singapore: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2005), p. 12.

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즉, 종교는 인간사회에서 삶의 의미를 부여하나 인간사회는 종교에 물질적 토대를 제공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종교가 이러한 물질 토대의 중요성보다는 삶의 정신적 가치를 주장하고, 나아가 자기 희생 혹은 개별적 자아의 초월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여기서 종교의 내적 모순이 드러나는 듯이 보인다. 종교는 한편으로는 신도들에게 물질적 소유와 폭력의 사용을 초월할 것을 요구하지만, 종교 자체의 물질적 토대가 위협받거나 외부로부터의 폭력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⁷⁴ 즉, 평화란 평화를 지향하는 내면적 평화주의와 함께, 그 토대가 되는 사회, 경제, 정치적 토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양자 중 어느 하나라도 무시될 경우 평화는 지속적이기 힘들다. 예를 들어 이점은 하나의 종교 공동체 내에서의 분쟁보다 타종교 간의 분쟁이 역사적으로 더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같은 종교와 다른 종교 간에 발생한 전쟁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는 예상과 상당히 다르다.

리처드슨(Lewis F. Richardson)이라는 학자는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정치 집단들의 관계는 다른 종교를 믿는 집단들과의 관계보다 훨씬 평화로울 것이란 가설을 증명하려 했다. 그러나 그가 밝혀낸 사실은 같은 종교를 믿는 집단(혹은 국가)이거나 종교를 달리하는 집단이거나 전쟁 발발 빈도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유교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전쟁의 빈도(頻度)가 낮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사실 유럽의 대부분 전쟁은 기독교 국가들끼리의 전쟁이었고 2차 대전 이후 중동 국가들은 같은 이슬람 종교를 공유하고 있었지만 거의 끊임없이 상호 갈등을 벌였다. 같은 종교라 할지라도 국가 간 혹은 집단 간의 전쟁 발발을 방지하

⁷⁴- Oscar E V Fernando, "Role of religion in Peace Building," *Asian Tribune*, January 27, 2008, <<http://www.asiantribune.com/?q=node/9310>>.

I
II
III
IV
V

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현대 국제정치학의 연구 결과이다.⁷⁵

평화를 지향하는 종교 내에서도 전쟁이 상대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즉, 속세적 비폭력주의에 근거하든 혹은 특정 종교의 영향을 받았든 간에 주관적 평화 지향성만으로는 평화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중요한 점은 당사자들 간에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평화의 사회, 경제, 정치적 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평화지향성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 세계화 시대에 종교가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대폭 증대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⁷⁶ 실제로 종교 간의 갈등이 종교의 배타적 성격으로 촉발될 수도 있지만, 모든 세계 종교는 사실상 내적 평화지향성이 존재의 이유라는 점에서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 동일한 평화지향성을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 뿐만 아니라 종교기관이 구호나 교육, 의료 등에 오랫동안 기여하여 왔다는 점 역시 종교가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갖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가. 물질 토대와 정신적 토대의 상호관계

동아시아 대부분 국가의 주민 다수는 종교가 자신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종교에 대한 이해와 존중은 동아시아 국가와의 지속적 평화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조

⁷⁵ 이춘근, “미국을 향한 테러 공격과 이슬람의 전쟁론.”

⁷⁶ R. Scott Appleby, “Globalization, Religious Change and the Common Good,” *Journal of Religion, Conflict and Peace*, Vol. 3, Issue. 1 (Spring 2010).

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타종교에 대한 이해나 종교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데에 한국이 기여하는 것은 그 자체가 동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하는 직접적인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특히 특정 종교의 내적 폭력성을 상정하거나, 종교지향적 인간이 그렇지 않은 인간에 비해 교육을 덜 받았거나 하위 계층에 속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경험적으로 밝혀졌다. 이런 점에서 대외정책의 수립과 결정에 해당 지역 종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국내 정치에서 종교가 차지하는 비중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점과 사실 하등 다를 바가 없다.⁷⁷ 왜냐하면, 동아시아의 종교는 대부분 종족 및 문화와 절충되어 주민의 정체성과 분리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화의 기본 공식인 ‘타자의 이해와 존중’이라는 점에서도 종교의 중요성은 십분 강조될 수 있다.

그러나 종교 분쟁 및 분쟁 해소 시도의 사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평화 정착의 주요 요소로서 종교의 중요성뿐 아니라, ‘평화의 조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점이 드러났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수많은 종교 분쟁이 종교 간의 교리 싸움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정치, 경제적 ‘물적 토대’와 밀접하거나 혹은 이러한 이해관계의 관철에 종교 간의 적대 관계가 이용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종교에 의한 분쟁 해소의 과정에서 오랜 분쟁 관계에서 적대 관계가 굳어진 분쟁 당사자들이 타자에 대한 이해와 대화를 시작하려면, 결코 평화의 물적 토대뿐 아니라, ‘정신적 토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국내적이든 국제적이든 평화의 조건은 ‘내적 평화지향성’과 ‘외적 평화구조’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가 ‘적대

⁷⁷-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USAID), *Religion, Conflict and Peacebuilding* (Washington, D.C.: USAID, September 2009), <http://www.usaid.gov/our_work/cross-cutting_programs/conflict/publications/docs/Religion_Conflict_and_Peacebuilding_Toolkit.pdf>.

I
II
III
IV
V

적 갈등(전쟁, 폭력분쟁)의 부재'로서 소극적 평화라 할 수 있는 비평화와 정치, 경제 및 문화의 영역에서 이른바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가능하게 해주는 사회 내적 구조가 존재할 경우의 적극적 평화를 구분한 것도 실은 평화의 조건이 갖는 두 측면을 이르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평화의 두 토대는 어떤 근거에서 출발할까? 그것은 인간 본성의 여러 측면과 관계된다. 모든 생물처럼 인간도 생명유지에 물질적 자원이 필요하며, 우리는 데카르트식의 심신 이원론자(mind-body-dualist)가 아니라면 정신적 삶의 전개에 반드시 의·식·주의 확보가 필요함을 인정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은 사회 내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제한된 물질적 자원의 확보에는 사회적 갈등이 거의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 이른바 생존 경쟁이 그것이다. 따라서 크건 작건 한 사회에서 평화의 유지는 본질적으로 생존 경쟁이 제도적, 규범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지 못할 때 전쟁과 같은 적대적 폭력이 동원되어 왔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인간은 생존경쟁을 통해서 존재의 물질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행복을 추구한다. 여기서 삶의 목표로 설정된 행복을 얻기 위해 '욕구의 만족'이라는 길과, '욕구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두 개의 길이 있었다. 전자가 일반인이 흔히 선택하는 길이라면 후자는 세계의 모든 종교가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고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행복의 정의가 무엇이든 행복이란 물질적 조건의 단순한 확보와 일치하지도, 물질적 조건의 많고 적음과 일치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하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면 열 개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종교의 내적 평화지향성은 기본적으로 물질적 토대에서 출발

하는 인간 존재가 결코 물질적 욕구 충족만으로는 행복을 획득할 수 없다는 평범한 인간 조건에서 나온 것이다. 왜냐하면, 만족하지 못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와 결코 평화스러운 상태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와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무제한적 욕구 충족에서 벗어나야 하며, 바로 이 점에서 사회 내의 다른 존재들과의 이해 충돌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것이 대부분의 세계 종교들이 강조하는 ‘진정한 평화’의 출발점이다.

인간 존재의 물질적 토대를 확보하기 위해 시작된 단순한 생존 경쟁에서 내적 행복 추구로, 욕구 충족의 막다른 골목에서 욕구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전회(轉回)를 통해 거꾸로 사회 내 이해관계의 초월로 종교의 내적 평화지향성은 돌아왔다. 여기서 평화지향성에 본질적으로 이중적인 측면이 있음이 분명해진다. 하나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물질적 토대의 확보이며 동시에 그 목표에서 물질적 이해관계의 초월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교가, 그리고 종교를 바라보는 사람 역시 종교의 물질적 토대를 과소평가하고 물질적 이해관계의 초월을 강조하는 것은 종교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 토대의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 물질적 자원의 획득을 의미하는 생존 경쟁이 공인된 제도와 규범에 의해 통제되지 않을 경우, 평화지향성의 부재는 쉽게 적대적 폭력의 임계점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 이 점은 개인이든 국가이든 다를 바가 없으며, 이때 개인의 이기주의 혹은 국가 이기주의가 평화지향성을 비현실적 이상(理想)이나 공상으로 배제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현실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고 또 인정한다 하더라도, 폭력적 분쟁은 생존 경쟁의 목표인 생존 자체를 무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자가당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즉, 평화공존의 비용 및 평화공존 하에

I
II
III
IV
V

서 생존의 확률과, 적대적 갈등의 비용 및 적대적 갈등 하에서 생존의 확률을 우리는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전쟁은 결코 남는 사업이 아니었다.

적대적 갈등을 인간이 선호한다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이성적 판단이 아님에도 인간은 전쟁과 무력 분쟁을 선택한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분쟁 상황에 빠져들뿐더러, 동시에 분쟁 상황을 계산적, 비 계산적으로도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무력을 통해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시도의 계산적 측면은 성공과 실패의 모든 경우의 기댓값을 계산하였을 때 이익이라는 것이지만, 이런 계산은 대부분 이 세계의 복잡성은 물론, 정의롭지 못한 폭력의 사용이 자국과 자국민 및 그 후손에 끼치는 정신적 황폐화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다. 다른 한편 분쟁을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의 뒤에는 개인 및 집단의 광기뿐 아니라, 평화의 지루함에 비해 분쟁 상황이 주는 흥분감, 도취감을 선호하는 인간의 근본 성향이 관계한다. 이런 점에서 전쟁과 무력 분쟁은 인간이 피하면서 원하고, 원하면서 피하려는 수많은 '도전' 중의 하나가 되었다. 따라서 평화지향성의 임무 중 하나는 바로 정상적 인간과 인간 집단이 요구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도전의 리스트에서 전쟁과 적대적 폭력을 가능하면 후순위로 밀어 넣고 다른 도전의 과제를 제시하는 일이다. 즉, 다스굽타나 갈통과 같은 평화 연구가가 주장하는 것처럼 적극적 평화의 구조에는 단순히 정치, 경제, 문화적 구조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평화 자체가 지루해지면 그것이 비평화 및 적대적 폭력의 원인으로 전개될 수 있으며, 여기에 평화지향성의 또 다른 중요성이 드러난다.

나. 탈식민주의로서 아시아 평화관

앞에서 동아시아의 종교·인종 분쟁의 사례를 통해 평화의 두 토대를 상당히 추상적인 관점에서 추출하였다. 다른 한편 우리는 바로 이 분쟁 사례들에서 대부분 식민시대의 유산이 그 어떤 형태로든 관계하였고 지금도 관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동티모르에서 스리랑카, 인도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일제 식민시대의 종식과 함께 시작된 한반도의 분단이 한국전쟁으로 이어지고 아직도 분단의 고통을 겪는 것은 물론, 친일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 제국주의는 20세기 중반까지 지속되었고,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 아시아 여러 나라는 불과 반세기 만에 식민지 시대의 청산과 동시에 근대화 나아가 세계화를 이뤄야 하는 숨 가쁜 도정을 가야했다. 이런 점에서 식민시대의 유산이 21세기 초엽까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은 순전히 시간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반갑지 않은 유산은 결코 ‘외상 후 스트레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점에서 현실의 문제이다.

한 국가를 식민지로 만든다는 것은 많은 상실을 의미한다. 첫째, 물리적 폭력을 통해 약한 국가를 점령, 주권을 강탈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평화지향성이라는 정신적 토대를 완전히 배척하는 행위이다. 둘째, 식민통치 하에서 살아야 하는 피식민지인에게 가능한 삶의 방식은 동화, 묵인, 저항의 세 가지일 뿐이다. 식민통치가 종식된 후이든 그 이전이든 심각한 후유증을 겪어야만 하며 이 세 부류 간의 갈등은 필연적이다. 동아시아의 많은 종교·인종분쟁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식민시대의 삶의 방식과 관련이 있다. 셋째, 식민 국가 내부에서도 식민통치는 정의와 진실의 왜곡이라는 정신적 황폐화가 일어나거나 대규모 역사 조작, 혹은 공동체의 역사적 책임을 부정하는 개인주의적

역사 도피가 불가피하다.⁷⁸ 만일 이런 내적 갈등이 없다면 그 국가는 언론이 열려 있는 정상 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식민통치는 결코 인류가 지향해서는 안 될 지배 방식이며, 식민주의적 평화란 위장된 억압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설사 식민통치국이 피식민국가에 근대적 제도 및 경제 개발의 가능성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다. 왜냐하면, 식민통치라는 것 자체가 목적으로 남아 있는 한, 식민통치가 가져다주는 모든 시혜는 본질적으로 식민통치의 수단으로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중반 이후 민족 자결주의에 따라 대부분의 식민통치가 사라졌지만, 현대에 와서는 새로운 형태의 패권주의가 노골적인 식민주의를 대체하고 있다. 그것은 역사의 왜곡이다. 우리는 이른바 티베트 문제가 역사 논쟁임을 확인하였으며, 지난 60년간 왜곡된 역사 교육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불가능하게 만들 만큼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고구려 역사의 조작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판 ‘내선일체(內鮮一體)’ 정책인 ‘동북아 공정’ 역시 평화지향성과는 거리가 먼 지적 패권주의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 일본 역시 과거의 부끄러운 역사의 청산에 소극적이었으며 그것은 지속적으로 일본 내의 극단적 정치 세력의 발호를 키워왔다.

한국은 20세기 식민통치의 경험으로부터 권위주의적 정권에 의한 경제개발, 민주화라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21세기에는 평화로운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식민통치에 시달렸던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와 동일한 경험이 있다. 이 경험은 공유될 수 있으며 또 아직도 식민통치

78. 마이클 샌델 지음, 이창신 옮김,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충직 딜레마,” 『정의란 무엇인가』 (서울: 김영사, 2010) 참조.

의 그늘이 남아 있는 크고 작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 동시에 한국은 식민지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분단 상황이 종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꾸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도움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 피식민통치의 경험이 있는 아시아의 국가들은 그 어떤 형태의 패권주의도 다시 21세기 아시아의 역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이 점은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에 특히 큰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

다. 아시아적 정체성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아시아의 모든 ‘너’와 ‘나’를 ‘우리’로 뭉쳐주는 ‘아시아적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직 아시아인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그 무엇이 도대체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 수많은 인종과 수많은 종교 및 수많은 언어 속에서 무엇이 아시아적이며 비아시아적인 것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ASEAN 국가의 국민이 ASEAN의 창립 이후 ASEAN의 정체성을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즉, 아시아적 정체성이란 일단 우리가 모두 ‘아시아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출발하며, 그 이상의 정체성이란 만들어내야 한다. 여기서 평화가 정체성 확보에 결정적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물론 이때 평화란 단순히 전쟁의 부재인 소극적 평화가 아니며, 아시아 역내에서 내외의 패권주의를 종식하고 적극적 평화 창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좋은 것에 동화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즉, 아시아는 동일한 종교적 배경과 근대국가 형성 과정의 유사함을 가진 유럽과는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좋게 말해

열린 정체성이며, 부정적으로 표현해 뒤죽박죽 상태로서 단지 명목적(名目的)으로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시아의 이런 독특한 정체성은 크게 보아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역사에서 나온 것이다. 아시아의 어느 국가에 가더라도 우리는 서구문명, 서구문화, 서구학문 및 서구어를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서양의 문화 전반이 아시아에 이식되어 왔다. 식민화와 이를 통한 서양문화의 유입은 동시에 서양문명을 배우기 위해 많은 동양인을 서양으로 보냈으며 —그곳에서 얼마간 동양문화를 전수해 주기도 하였으나— 20세기는 분명히 서양문화가 동양에 대거 진출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외래문화를 흡수하여 토착화한다는 과거 문화 흡수의 공식은 시장경제의 세계화로 말미암아 이제 별 의미가 없어졌다. 즉, 동양에서는 서양에서처럼 외래문화와 전통문화를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의미도 없다. 예를 들어 한국인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통 가옥보다는 현대화된 아파트 및 빌라 혹은 단독 주택에서 살아야 하며, 여기서 전통과 외래문화를 구별하는 것은 문화적 현실과 의무를 놓고 정체성의 분열만을 가져올 뿐이다.

주목할 점은 이런 아시아적 상황은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사실이라는 점이다. 유럽은 아직도 그들의 전통적 문화와 삶의 방식을 고수하며, 무엇보다도 이들은 근대 학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유럽인의 정체성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정체성 확보에 필요한 공간적, 시간적 장치가 사라졌으며, 다만 여러 문화, 여러 종교, 여러 세계관, 여러 학문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세계 문화-DNA의 풀(pool)이 형성되었다. 즉, 전통의 고수보다는 미래의 창조에 필요한 조건이 득세하고 있는 곳이 아시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세계 경제의 축이 아시아로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역내에 평가가 적극적으로 정착되면 정착될수록 아시아는 20세기에 전 세계로부터 강제로

또는 자진해서, 소극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이 문화의 DNA로부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나아가 새로운 학문의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 바로 이런 창조적 과정에서 아시아의 정체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열린 미래로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라. 전일론적(holistic) 평화관

일반적으로 전쟁과 평화는 정반대 상황을 의미하지만, 역설적으로 전쟁은 평화를 목적으로 한다. 즉, 분쟁의 대상을 무화(無化)시킴으로써 분쟁의 싹을 원천적으로 제거한다는 점에서는 ‘평화지향적’이다. 이 점은 결코 비유나 비꼬는 표현이 아니라 전쟁을 합리화하는 국가나 지도자들이 항상 내세우는 제1의 전쟁 정당화다. 그것은 한국전쟁을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정당화 논증과 구조적으로 같다. 그러나 전쟁을 통한 평화는 그것이 명백히 방어적이지 않을 경우 대부분 일방적이고 ‘죽은 평화’로서,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지 않고 분쟁의 당사자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현실세계의 ‘살아 있는 평화’와 비교된다. 살아 있는 평화에서는 분쟁과 분쟁의 싹들이 계속 존재한다는 점에서 역설적으로 ‘분쟁 - 용인적’이기도 하다. 이 점은 의견의 다양성을 허용하는 민주주의가 ‘갈등 - 용인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과 같다. 문제는 살아 있는 평화에서 분쟁이나, 작동하는 민주주의에서 갈등의 의미와 그 해결을 이해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견의 갈등은 정상적인 경우라면 그 어떤 주장을 하여도 신변의 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인의 ‘사상의 자유’의 존재를 함축한다. 동시에 서로 상이한 의견 갈등을 통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각자의 의견을 더 세련되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 즉, 민주

주의 국가에서 정상적인 의견 갈등은 매우 생산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 다만, 대중사회의 한 형태로서 민주주의가 항상 이처럼 이상적으로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대중 선동, 여론 조작, 이념 갈등에 의한 국론 분열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바로 이런 점을 예방하기 위해 민주주의 체제에는 의·식·주 등 인간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분야에서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권위 있는 기관’이 필요하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정상적인 국가 간의 분쟁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관찰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국가들은 주권국가로서 외교적이든 군사적이든 그 어떤 제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함축하며, 국가 간의 의견 갈등 역시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경우 상대방의 이해에 크게 기여한다. 반면에 국가 간의 분쟁을 국내 선동이나 군사력 시위처럼 UN과 같은 공적 기관의 결의 없이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경우, 평화의 규범적 확보는 불가능해지고 오로지 개별 국가의 각자 도생(圖生)만이 남는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규범에 의한 ‘평화의 유지’란 동시에 ‘정상적 분쟁의 유지’와 사실상 동치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분쟁의 부재는 평화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평화, 즉 분쟁의 해결이 분쟁의 영원한 종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분쟁 당사자 간에 훨씬 더 포괄적인 이해와 조정 능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분쟁도 분쟁의 당사자도 원천적으로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야만 하며, 때로는 ‘명백한 악도 단지 완화하거나 억제할 수 있을 뿐’이라는 말기 악성종양과 같은 상황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단순히 분쟁의 용인이 아니라 분쟁 해결의 목적, 즉 지속가능한

평화와 정의의 실현이라는 점을 머릿속에서 지워서도 안 된다. 한마디로 국가 간의 평화유지, 즉 분쟁의 해결에는 삶과 국가 유지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총체적 시야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총체적 시야, 관점을 ‘전일적(全一的)’이라고 부르기로 하며, 이러한 전일적 시야에 의해 분쟁이 조정되고 평화가 유지될 때, 그것을 ‘전일적 평화’라고 부르기로 한다. 아시아는 지금까지 부분적 시야, 부분적 규범, 부분적 정의(正義)와 질서를 지향하던 평화관과는 달리 전일적 평화관을 지향해야만 한다. 그만큼 아시아의 상황은 복잡다기(複雜多岐)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일적 평화관은 단순한 세력·이익균형에 의한 현상유지를 넘어서서 국제규범과 열린 정체성을 통한 역동적 평화질서의 창출을 시도해야 한다. 따라서 아시아의 모든 국가는 평화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패권주의, 자폐적 민족주의와 결별해야 한다. 바로 19세기적 국가관으로부터 이미 유럽공동체는 탈피하였으며, 아시아 역시 평화의 수혜자를 단순히 국가가 아니라 시민과 시민사회로 전이시켜야 한다. 완급 조절과 총체성을 조감하는 전일적 평화관이 기여할 수 있다.

여기서 요즈음 국가안보보다 더 궁극적 목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인간안보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임진왜란 시절, 선조가 한양을 뒤로하고 의주로 피난을 떠났을 때에 당시 조선의 상당수 노비들은 왜군에 저항하기보다는 노비 문서를 소각하는 것을 더 중요시 하였다. 국가안보보다 인간안보를 더 중요시한 것이다. 그것은 당시 노비들이 애국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애국심을 가질 동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국심의 동기에 자신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후손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속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인간안보란 궁극적으로 인간행위의 총체적 결실이자 목적이라는 점에서 어떤 점이 우선시 되어야 할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예를 들어 서구 자유주의적 전통에서는

I
II
III
IV
V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고 여러 아시아 국가들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우선 추구한다. 평화의 두 토대로서 물질 토대와 정신적 토대, 그리고 양자의 상호불가분성을 강조하는 전일적 평화관의 입장에서 이러한 논의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지금보다 더 개별 국가의 전체 상황을 고려할 것이다.

다른 한편 전일적 평화관은 개별 국가들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요구되는 군사적, 경제적 하드파워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개별 국가의 주권에 속하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물질 토대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하드파워 중심의 질서 유지, 즉 질서의 강요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분명하다.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질서를 내다보는 전일적 평화관에 비하면 하드파워의 역할은 부정의와 무질서의 억제라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외교에서 소프트파워의 등장은 물질 토대의 하드파워의 사용이 단기적이고 선형적인 계산만을 허용하는 반면, 이념, 문화, 종교, 상상력, 미래 예측과 같은 정신적 토대가 중요한 현실세계는 물질세계의 직선적 인과관계를 넘어서는 정신적 토대의 증장기적 되먹임(feedback) 구조를 지니고 있다. 주고받는 것이 물질적 차원에서 그칠 경우에는 그것으로 종료되나, 여기에 정신적 측면이 개입될 때에만 증장기적 되먹임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프트파워의 필요성은 시야가 넓고 긴 전일적 사고의 표현이다.

이제 전일적 평화관의 두 기둥으로서 정신적 토대와 물질 토대는 『논어(論語)』 『위정편(爲政篇)』의 ‘공부하되 생각하지 않으면 공허하고, 생각하되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게 된다(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라는 구절처럼 ‘현실적 이해관계만 보고 평화지향성을 무시하면 공허해지고, 평화를 지향하되 현실적 이해관계를 등한시하면 위태롭게 된다’라는 말로 바꿔 쓸 수도 있다.

II. 아시아 평화의 새로운 틀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I
: 신아시아 외교 추진을 통한 새로운 평화의 모색

1. 아시아 평화의 새로운 방향

아시아의 평화 증진 혹은 평화구조 창출에서 인간안보 이슈의 해결은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아시아의 평화 문제에서 전통적 의미의 안보 개념, 즉 국가 간 전쟁이나 물리적 충돌 같은 경우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타 지역과 달리 특히 탈냉전 시기 아시아에서 국지전이나 대리전이 발생하지 않았다. 대신 같은 기간 동안 세계화와 일련의 자연재해, 전염병, 빈부 격차, 기아, 빈곤 등으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안과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역내 지속적인 경제 발전으로 아시아의 안보 문제는 특히 비전통 영역과 인간안보적인 측면에서 더욱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⁷⁹ 아시아의 이 같은 안보 정세의 추이와 발전 방향을 고려하면 21세기 아시아 안보 문제는 인간안보의 해결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역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인간안보 문제의 해결은 목표가 아니다. 오히려 수단이다. 왜냐하면 인간안보의 확보와 해결을 통해 아시아가 지향해야 할 목적은 보편적 평화, 즉 앞 장에서 강조한 평화의 내적 지향성과 외적 구조 간에 존재하는 격차를 줄임으로써 아시아 인류와 국가가 지향하는 평화를 창출하는 것이다. 아시아가 지향하는 평화상

⁷⁹ 인간안보의 안보화 또는 그 진화 과정에 대해 Edward Newman, "Critical human security studie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6 (January 2010), pp. 77~94; Gary King and Christopher J. L. Murrar, "Rethinking Human Security,"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16, No. 4 (Winter 2001~2002), pp. 585~610; Roland Paris, "Human Security: Paradigm Shift or Hot Air?" *International Security*, Vol. 26, No. 2 (Fall 2001), pp. 87~102; Simon Dalby, "Geopolitical Change and Contemporary Security Studies: Contextualizing the Human Security Agenda,"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Working Paper*, No. 30 (April 2000) 등 참조.

과 이를 수반하는 구조는 모든 인류 사회와 국가의 평등성과 존엄성이 보장되는 가운데 이들 간의 갈등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고 이러한 평화 위해 요소들의 출현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 같은 평화상과 평화구조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이른바 ‘인간안보’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는 인간안보 개념에 내재한 인간안보 요소들의 해결을 통해 인류와 사회, 그리고 국가가 국가의 최종 목표인 생존을 위한 생존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를 위한 생존을 할 수 있는 객관적 환경과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즉, 인간안보의 해결이 평화를 위한 생존의 동기, 동력, 그리고 목적이 되는 것이다. 한 국가, 사회 및 그 구성원의 인간안보의 해결로 평화가 보장된다는 의미는 ‘인간안보’가 평화라는 인류의 최종 지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최고의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1세기 탈냉전시기의 아시아에서 인간안보가 지향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아시아는 근대화의 후발주자이다. 대부분 아시아 지역의 국가는 개발도상국(developing states)이고, 선진국의 수준까지는 상당 기간의 발전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경제발전 중심의 정책을 펼쳐오고 있으며, 경제에 편중된 정책과 정부의 통치 방향은 그 정부의 구성원의 일일생활이나 권리와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여유와 관심이 매우 부족하다. 이들 정부에게는 아직도 빠른 성장을 통해 발전한 국가상이 통치의 최고 목표이자 정권의 정당성을 자연스럽게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개발과정에서 개도국의 국민들은 인간안보가 중시하는 개인의 삶의 가치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제도적으로 보편적 인류 가치나 인권이 보장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 국가의 사회 불안 요인은 사회 내부적 갈등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표출될 때 사회와 국가, 심지어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인간안보의 해결만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인권과 삶의 질의 중심의 제도 마련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세계 질서의 변화가 한 원인이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 형성되면서 혹은 그 훨씬 이전부터 국가들의 가장 일차적인 관심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전통적인 안보 문제에 더욱 큰 비중을 두었다.⁸⁰ 지속되는 냉전은 이런 국가의 안전 보장이라는 전통적 안보 문제의 지배적 위치를 계속 보장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이런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개별 국가들의 안보에 대한 관점은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이때부터 안보라는 말은 경제안보, 문화안보 등으로 점차 넓어지면서 인간안보라는 개념까지 널리 회자되기 시작했다. 인간의 생존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의 조건의 보장이라는데 초점을 두는 인간안보의 개념은 오히려 안보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사실 국가안보라는 것도 그 국가에 속한 개개인의 안전과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그 핵심이었지만, 오랫동안 이런 안보의 본질적인 대상은 잊혀진 채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로 그 초점이 변질되고 그에 따라 정작 중요한 안보의 대상인 국민, 인간은 잊혀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셋째, 인간안보의 속성 때문이다. 인간안보는 국내적인 문제뿐 아니라 많은 문제가 세계화의 심화와 정보통신과 교통 운수의 발달 때문에

⁸⁰ 전통적인 안보 개념 속에서 ‘환경안보’가 홀대 받은 사례 연구에 관해 Geoffrey D. Dabelko and P. J. Simmons, “Environment and Security: Core Ideas and U.S. Government Initiative,” *SAIS Review*, Vol. 17, No. 1 (Winter/Spring 1997), pp. 127~146 참조.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로 변모하고 있다. 국내 차원에서 보면 인간안보가 안고 있는 문제는 개도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는 재정부터 인적 자원까지 모든 영역에서 부족한 개도국의 능력 때문이다. 대외적인 차원에서 월경적인 인간안보 요소들은 국가 간, 사회 간, 인류 간의 협력을 요구한다. 초국가적인 인간안보 문제가 역시 아시아 지역에 산적하고 있다. 이는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이나 전염병, 불법 이민자, 마약 밀거래, 무기 밀수, 에너지 자원의 확보와 유통 등 모든 문제를 포함한다. 인간안보의 문제가 국경을 넘는 초국가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관련 국가들 사이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가 간 협력의 강화를 통한 인간안보 문제에 대한 접근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인식 하에서 이 장에서는 인간안보의 개념과 함께 현재 아시아 전반적으로 어떤 인간안보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그에 관한 지역적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나아가 아시아에서 인간안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아시아적 특수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인간안보 문제 해결을 통한 아시아의 평화구조 창출에서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가. 아시아의 인간안보 현황과 발전 방향

(1) 인간안보의 보편 개념

인간안보 개념은 냉전 이후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지만 이미 1970년대부터 인간안보에서 다루는 유사한 분야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로마클럽(Club of Rome) 보고서에 이

미 모든 국가들의 인간을 위협하는 문제로 빈곤, 환경 문제, 일자리 문제 등이 언급되었다. 이후 1980년 빌리 브란트가 주도한 국제개발이슈에 관한 독립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Issues)가 내놓은 보고서(일명 Brandt 보고서)에서는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문제로 기근, 집단적 궁핍(mass misery), 그리고 빈부 격차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이후 무장 해제와 안보 이슈에 관한 독립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on Disarmament and Security Issues)의 보고서에서도 빈곤, 불평등, 상대적 박탈 등의 문제가, 1991년의 ‘세계 안보와 거버넌스에 대한 스톡홀름 이니셔티브(Stockholm Initiative on Global Security and Governance)’에서는 발전의 실패, 환경오염, 과도한 인구 등의 문제가 향후 인류를 위협할 문제로 언급되었고, 그에 이은 2차 ‘세계거버넌스위원회(Global Governance Commission)’의 보고서에서는 전통적 안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간의 안보(security of people)’와 ‘지구의 안보(security of the planet)’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다.

인간안보라는 개념을 최초로 주장한 것은 1994년에 나온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이하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이며 이 보고서 이후로 인간안보 개념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안보에 관한 주류 논의에 포함되었다.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안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좁은 시각(외부 침입으로부터 영토의 보호, 국가 이익의 보호, 핵 문제로부터 세계 사회를 보호)을 채용했다고 지적하고 이런 안보 개념은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보통 사람들의 정당한 관심(the legitimate concerns of ordinary people who sought security in their daily lives)”을 등한시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안보 개념을 보다 확장한 인간안보 개념을 제시하면서 인간안보의 요소로 다음과 같은 7개의 항목을 제시했다.

I
II
III
IV
V

● 표 II-1 인간안보의 요소

항목	내용
경제안보	일자리 부족, 고용 불안정
식량안보	식량의 부족, 영양 결핍
보건안보	보건(health care)에 대한 접근, 질병으로부터 보호
환경안보	환경오염으로부터 인간 보호, 고갈의 위협
개인안보	고문, 범죄, 가정 폭력, 마약 등 위협으로부터 개인 보호
공동체안보	소수민족의 전통문화, 소수민족에 대한 물리적 보호
정치적 안보	시민-정치적 자유, 정치적 박해로부터의 자유

지금까지 진행된 인간안보 정의에 관한 논의들은 ‘공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want)’로 나눌 수 있는데, 단일 정의에 관한 명확한 합의는 없으며 두 입장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의 입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캐나다와 노르웨이 등이 주도하는 인간안보 네트워크(Human Security Network)의 정의로 이들은 인간안보를 인간 생명과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좁혀 지뢰 문제, 국제 범죄법정 설립, 인권, 국제 인도적 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전시 여성과 아동의 보호, 소형무기 확산, 소년병, 미성년 노동, 북극 문제에 관한 협력 등 9개항으로 정리하고 있다.

반면에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하는 견해는 공포로부터의 자유의 입장이 지나치게 좁은 정의이고, 이런 정의가 개별 국가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며 개발(development), 빈곤퇴치 등의 문제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미타브 아차랴(Amitav Acharya)는 이런 인간안보 개념에 관한 대립을 다음과 같이 특징별로 분류하고 있다.

● 표 II-2 인간안보 개념에 관한 동서양의 관념 비교

공포로부터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서양	동양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결핍으로부터의 보호
서구 자유주의(western liberalism)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
캐나다 - 노르웨이 (인간안보 네트워크, Human Security Network)	일본, 아세안(ASEAN) 등
보편주의(universalism)	문화적 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

아시아 특히 동남아적인 맥락에서 초국가적인 문제의 부상은 더 특수한 맥락을 가진다. 동남아의 국가, 사회들이 본격적으로 초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기 시작한 시점은 대체로 경제 성장이 급속히 이뤄지던 시기와 일치한다. 또 이 경제 성장의 시기는 몇몇 국가에서는 민주화의 시기로 연결된다. 즉, 일차적으로 국가 건설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국가들이 성장을 바탕으로 시급한 국가 건설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빈곤했던 국가들이 성장 이후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더욱 삶의 질적 수준에 대해 관심을 들만한 여유가 생긴 시기에서부터 초국가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은 구체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2) 아시아의 인간안보 개념

아시아는 급속한 경제 성장의 시기에 이어 민주화의 시기, 혹은 민주화 이행의 시기를 겪게 되면서 급증하는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시민사회의 활성화라는 요인들이 이전에 개발 독재 국가 하에서 잊혀진 존재였던 사람의 생존 문제, 삶의 질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

기하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초국가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7년 동남아에서 일어났던 환경 문제인 연무(haze) 문제가 큰 지역적 이슈가 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9·11 테러 이후 동남아도 테러에 관해 자유로울 수 없는 지역이 되면서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 초국가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1997~1998년 경제위기 이후 동남아 지역에서 몇몇 인간안보 혹은 비전통적 안보에 관련된 일련의 위기들이 겹치면서 인간안보 문제가 크게 부상했다. 대표적으로 2002년 중국에서 시작된 사스(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이하 SARS)로 인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의 2003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1.5%, 1%, 0.2%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고 싱가포르의 경우 항공여객수와 국내 소매업 매출이 각각 절반으로 감소했다.⁸¹ 조류인플루엔자(Avian Flu: 이하 AI)의 경우 베트남에서 4,400만 마리의 가금류(전체 국내 가금류의 17.5%)가 도살 처분되고 GDP의 최대 1.8% 포인트 손실(약 1억 2,000만 달러)을 입은 것으로 추산되며 태국, 인도네시아 역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⁸² 또 2004년 말 쓰나미로 인도네시아에서 15만 명의 사망자와 50만 명의 간접 피해자, 그리고 태국에서도 8,000명의 사망자와 7만 명의 간접 피해자를 낳았다.⁸³ 이후 인도네시아 지진(2006년, 5,000여 명 사망 추

⁸¹- 2002년 중국에서 시작된 SARS로 인해 동남아 국가들도 직접 타격을 입어 위에 제시된 수치는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이하 ADB)의 추정치이다; Amitav Acharya, *Promoting Human Security: Ethnical, Normative and Educational Framework in South-East Asia* (Paris: UNESCO, 2007), p. 31.

⁸²- Anni McLeod, Nancy Morgan, Adam Prakash and Jan Hinrichs, "Economic and Social Impacts of Avian Influenza," *FAO Emergency Centre for Trans-boundary Animal Disease Operation(ECTAD) Report* (Rome: FAO, 2005).

⁸³- "At-a-glance: Tsunami Economic Impact," *BBC*, March 22, 2005, <<http://news.bbc.co.uk/go/pr/fr/-/2/hi/business/4154277.stm>>.

산; 2009년, 1,100명 사망 추산)과 미얀마를 강타한 나르기스(Nargis, 2008년, 10만 명 사망 추산) 등 심각한 자연재해 문제가 나타났다.

초국가적 범죄는 최근의 일은 아니며 지속적으로 동남아에서 문제가 되어 왔던 사항이다. 동남아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은 2002년까지 세계 최대의 아편 생산지였고, 2007년 중국 제외 동아시아의 마약 복용자는 290만 명으로 세계 15개 지역군 중 2위를 차지할 정도이다(UN Office on Drugs and Crime). 또한, 미국 국무부 통계에 의하면 연간 30여만 명의 여자와 어린이가 동남아 지역에서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동남아의 연무(haze)를 포함한 환경 문제도 심각한데, 특히 1997~1998년의 심각했던 연무 문제 때문에 그 진원지였던 인도네시아는 약 38억 달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그 인접 국가들은 약 6억 7,000만 달러의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후 거의 매년 연무로 피해가 되풀이 되고 있다. 한편, 1997~1998년 경제위기로 “최근 수 세기 동안 동아시아에서 빈곤 감소의 가장 심각한 후퇴(World Bank)”라고 평가될 정도로 빈곤 사정이 악화하였고 이는 다시 동남아의 인간안보 상황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

종합하면 1997~1998년 경제위기와 연무 사태를 시작으로 해서 자연재해, 광역 질병 등의 문제가 2000년대 이후 빈발하면서 인간안보 위기에 공동대처를 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이런 위기의식이 ASEAN으로 하여금 인간안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시아 지역에서 인간안보 문제에 관한 협력을 논할 때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인간안보 문제는 일국의 문제가 아니며 앞의 현황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경우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적 문제

I
II
III
IV
V

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에서 인간안보 문제 해결을 통한 평화구조의 창출은 국가 간의 협력을 필수적 요소로 한다.

아시아 지역에서 상기한 의식을 가지고 아시아적 인간안보 개념을 정의하고자 하는 노력의 대표 주자는 일본과 ASEAN 등 두 개 국가와 지역이다. 일본은 ASEAN보다 문제의식을 먼저 가졌으며,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캐나다와 같이 세계적인 인간안보 학파 국가로 알려져 있다. ASEAN이 인간안보에 대해 의식하기 시작한 것이 일본보다는 다소 늦으나 아시아 지역,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특색과 정세에 인간안보의 보편적 개념을 접목하여 지역 차원의 개념 정의를 처음 시도한 것도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두 학파의 개념을 살펴보고 아시아의 지정학, 인구학(demography), 환경과 현황에 부합하는 아시아적 인간안보 개념을 유출할 필요가 있다.

(가) 일본의 개념

우선 일본 학파의 인간안보에 대한 개념 정의와 소개는 동남아 학파보다 빠른 1995년, 즉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에 이루어졌다. 1995년 10월 UN 총회 50주년 기념 특별 회의에서 일본 수상인 무라야마 토미이치는 UN 인간안보의 새로운 전략으로 제시했다. “지금까지 개별 국가적 관점에서 광범위하게 이해되었던 안보의 개념을 각 개인의 권리와 안보를 더욱더 보호하는 방법으로 재정의 하도록 해주는 새로운 접근방법”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인간안보를 전 세계에 걸쳐 증가하는 국내 분쟁과 기아, 인종 청소와 같은 분쟁과 연결된 인명 희생을 다룰 수 있는 개념적 도구에서 출발한 인식이었다.⁸⁴ 이와 더불어 일본 외무성은

⁸⁴- “Permier’s UN speech out of focus,” *Daily Yomiuri*, October 24, 1995, p. 7.

“안보에 두 가지 중요한 영역,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지만 첫 번째 측면 및 소형 무기 통제와 전쟁포로 처형과 같은 관련된 의견 제출에만 “오로지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을 비난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안보는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다. 우리는 궁핍으로부터의 자유가 공포로부터의 자유보다 덜 중요하다고 믿지는 않는다. 그것의 목적이 인간으로서의 개인들의 생존과 존엄을 확보하는 것인 한, 분쟁 상황 속에서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서만 오로지 인간안보를 생각하는 것을 넘어설 필요가 있는 것이다.”⁸⁵

일본의 공식은 인간안보와 인권 증진, 인도적 개입 사이의 밀접한 결합에 의혹의 시선을 가지며, 불편해하는 아·태 지역 정부들에게 인간안보의 개념을 보다 덜 논쟁적인 것으로 변화시켰다.⁸⁶ 인간안보에 보다 근접한 개념은 포괄적 안보이고 일본에 의해 발전해왔기 때문에 아시아적 뿌리가 훨씬 강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⁸⁷ 일본의 포괄적 안보는 국제적인 에너지와 식량의 공급을 포함하여 경제적 문제에 관한 관심들을 반영하였다.⁸⁸ 일본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일본은 인간안보의 개념을 “자연 환경의 악화, 인권 침해, 국제 조직범죄, 불법 마약, 난민, 빈곤, 비인륜적 지뢰 매설, 에이즈 같은 질병 등과 같이 인간의 생존, 일상생활, 그리고 존엄성을 위협하거나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강화시키려는 방안

⁸⁵- 2000년 5월 8일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지구화된 세계에서의 인간안보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일본 외무상이 발표한 성명, <www.un-mongolia.mn/undp>.

⁸⁶- 아미타브 아차라, “인간안보: 동서양담론,” 『국제관계연구』, 제11권 2호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6), p. 44.

⁸⁷- 위의 글, p. 48.

⁸⁸- Yukio Satoh, “The Evolution of Japan’s Security Policy,” *Adelphi Paper*, No. 178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1982), p. 7.

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한다.⁸⁹

일본은 2001년 1월 전 UN 국제난민문제 고등판무관(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이하 UNHCR)을 역임했던 오가타(Sadako Ogata)와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고 케임브리지 소재 트리니티 대학 장 아마티야 센(Amartya Sen)교수를 공동의장으로 하여 인간안보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on Human Security)를 설립하는데 적극 지원했다.⁹⁰ 동 위원회는 2003년 4월 『인간안보의 현황(Human Security Now)』이라는 최종 보고서도 출간했다.

(나) 아세안(ASEAN)의 개념

ASEAN에서 인간안보 문제가 제기된 시점은 냉전의 위협이 끝나고 선발 ASEAN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발전한 시기인 1990년대 중반이다.⁹¹ 냉전 종식에 따라서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개별 국가의 공산주의 위협이 현저히 약화되고, 대륙부 동남아를 위협했던 베트남의 캄보디아 점령도 1980년대 말 끝났으며, 공산주의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개방되고, 1990년대 들어서는 베트남이 ASEAN에 가입하는

⁸⁹-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Diplomatic Bluebook 1999: Japan's Diplomacy with Leadership toward a New Century* (Tokyo: Urban Connections Inc., 1999).

⁹⁰- Akiko Fukushima, "From Whence do Ideas Come in Japanese Foreign Policy? The Case of Human Security,"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 Security In East Asia*,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Korea Press Center, Seoul, Korea (June 16~17, 2003), p. 146.

⁹¹- 이른바 "ASEAN Way"의 관념 속에서 인간안보 개념의 진화 및 적응 과정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Kasira Cheeppensook, "The ASEAN Way on Human Security,"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Mainstreaming Human Security: The Asian Contribution* held at Chulalongkorn University, Bangkok, Thailand, <<http://humansecurityconf.polsci.chula.ac.th/Documents/Presentations/Kasira.pdf>> (검색일: 2010.7.12).

등 지역 안보 상황에 중요한 변화가 찾아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ASEAN에서 공식적으로 인간안보 문제를 중요 의제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 ASEAN 사무총장인 수린 핏수완(Surin Pitsuwan)에 의해서 1998년에 처음 제기되었는데, 수린은 인간안보에 관한 확대 ASEAN 장관회의(ASEAN-PMC Caucus on human security)의 설치를 주장했으나 ASEAN 내부에서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다. 이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 경제위기를 맞으며 국내적으로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에 관한 논의와 관련 정책들이 등장했으며 경제위기가 역내 국가들의 포괄적 안보에 미친 영향으로 인해 ASEAN 차원에서도 ‘사회 안전망에 대한 ASEAN 태스크포스(ASEAN Task Force on Social Safety Nets)’가 설립되었다. 아울러 미얀마의 ASEAN 가입, 역내 국가에서 발생한 민주화 운동 등의 여파로 ASEAN 차원에서 내정불간섭-주권존중, 협의와 합의라는 ASEAN 방식(ASEAN Way)에 대한 의문이 지속 제기되었는 바,⁹² ASEAN 방식은 효과적인 지역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련의 새로운 변화 속에서 ASEAN은 1997년 ‘아세안 비전 2020(ASEAN Vision 2020)’을 통해 기근, 영양부족, 빈곤 등의 문제들

⁹² 인권 문제와 군사독재로 인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던 미얀마를 ASEAN에 가입 시키면서 ASEAN은 건설적 관여(constructive engagement)로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 시켰음. 그러나 이에 대해서 1997년 당시 말레이시아 부총리였던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은 미얀마 문제에 대한 ASEAN 회원국의 건설적 개입(constructive intervention)을 통한 해결을 주장했고, 1998년 당시 태국 외무장관이었던 수린 핏수완(Surin Pitsuwan)은 유연한 관여(flexible engagement)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ASEAN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원국 국내 문제를 ASEAN에서 다룰 것을 주장함. 이에 대해 ASEAN에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상호작용(enhanced interaction)이란 개념을 제시하면서 동 문제들을 역내 지도자들 사이의 이해와 양보를 통해 다룰 것을 제시함.



이 해결된 ‘사회적으로 화합하고 보살피는 아세안(socially cohesive and caring ASEAN)’을 목표로 제시했고, 이듬해 하노이 행동계획은 경제위기의 극복과 기본적인 생활수준의 확보는 물론이고 환경 문제, 인권 문제, 인간개발, 초국가적 범죄, 차별의 문제 등을 언급했다. ASEAN 차원의 인간안보협력은 이미 일부 1970년대에 시작되었으나 이 시기 협력은 미미했고, 1997년 경제위기를 지나고 2000년대 들어 주요 위기를 계기로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보건·건강 문제에 관한 협력은 2002~2003년 아시아 지역이 SARS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보면서 급속히 발전했고 자연재해에 관한 협력도 일찍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협력이 등장한 것은 2004년 ASEAN 지역을 덮친 쓰나미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연무 문제에 있어서도 1995년에 관련 태스크 포스를 설치하기는 했지만, 실질적 협력은 별로 없었고 1997년 연무 사태를 계기로 기존 태스크 포스의 활동이 강화되고, 이행계획이 작성되었으며, 2002년에는 연무 문제에 관한 협정까지 등장했다.

또한, ASEAN의 인간안보 관련 협력은 ‘공포로부터의 자유’보다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포로부터의 자유’ 관련 문제들은 ASEAN 지역에도 많은 바, 특히 미얀마의 인권 문제,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 미성년 노동, 소년병 문제, 그리고 인도차이나 반도의 지뢰 문제, 폴포트 정권에 대한 국제 범죄법정 설립과 재판 문제, 인권 문제, 그리고 필리핀, 태국 등 각국의 소수민족과의 소규모 국지전 혹은 무력 충돌 등 문제가 산재해있다. ASEAN은 ‘공포로부터의 자유’에서 언급하는 인간안보 내용들을 외면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를 인간안보의 위협으로 상정하는 동 접근방법에 불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ASEAN은 보살피는 사회(caring society)라는 구호 아래 빈곤, 영양결핍, 기근 문제의 해결, 나아가 기본적인

생활수준의 확보와 인간 개발이라는 개발·발전 문제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다.

동남아의 인간안보 문제는 특별히 최근에 와서 부각된 것은 아니며, 이미 많은 문제가 산재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와서야 주목을 받게 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들이 최근 주목을 받게 된 데에는 이전에 대부분의 ASEAN 국가들이 긴급한 국민 국가 건설의 문제, 경제 성장의 문제, 그리고 공산주의의 위협을 비롯한 안보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었는데, 냉전의 해체,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 등으로 인해 다른 문제로 관심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경제위기를 겪고, 이와 더불어 동남아 연무 문제 등 다양한 인간안보 문제가 산발적으로 불거지면서 더욱 ASEAN 국가들이 인간안보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느끼게 되었다. ASEAN 지역의 인간안보 문제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해양 지역의 연무 문제, 메콩 강 개발 등 자연자원 개발을 둘러싼 국가 간 협력 문제, 인도네시아 해역과 말라카 해협을 해적 문제, 인신매매, 마약 등 초국가적인 범죄 문제, 빈곤의 문제 등이 있다.

ASEAN 국가들의 인간안보 문제에 대한 관심은 많이 늘어난 반면 그 해결에 있어서는 아직 큰 진척이 보이지 못하고 있다. ASEAN 국가들은 주로 ASEAN이라는 지역협력기구에서 인간안보 문제들을 제기하여 해결하고 있으나, ASEAN이 전반적으로 제도화의 수준이 낮으며, 회원국들은 크게 강제하지 않는 ASEAN의 방식(ASEAN Way)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전체의 이익보다는 여전히 개별 국가의 국가 이익을 더욱 중시하는 상황에서 국가 이익의 일부 양보, 나아가서는 주권의 일부 포기까지 감당해야 하는 인간안보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인간안보 문제는 계속해서 정상회의 의제로

I
II
III
IV
V

다루어지고 있으며 ASEAN 차원에서 해당 장관회의, 각료회의 등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2009년 15차 ASEAN 정상회의만 보더라도 기후 변화, 식량·에너지 안보, 재난 관리, 광역 질병, 개발 격차의 축소에 관한 논의들이 정상회의에서 진행되었고, 특히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서 ASEAN 정상들은 ‘기후 변화에 관한 ASEAN 공동성명(ASEAN Joint Statement on Climate Change)’을 발표하고 이를 UN 기후 변화 협약에 제출한 바 있다. ASEAN 자체의 내적 질서 문제 때문에 다른 지역협력체에 비해서 인간안보 문제에 대한 대처와 문제 해결이 느린 편이기는 하지만, 점차 이에 대한 자각이 높아지고 있으며,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평가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1997년 경제위기 직후 불거진 동남아의 대표적 인간안보 문제들은 SARS, AI와 같은 광역 질병 문제,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을 강타한 2004년 쓰나미, 인도네시아의 빈발하는 지진(2006년, 5,000여 명 사망 추산; 2009년, 1,100명 사망 추산), 2008년 미얀마를 강타한 나르기스(Nargis, 2008년, 10만 명 사망 추산) 등 자연재해 문제 등이 있다. 또한, 자연재해와 환경 문제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동남아 연무 문제 역시 큰 도전이다. 특히 1997~1998년의 심각했던 연무 문제 때문에 그 진원지였던 인도네시아는 약 38억 달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그 인접 국가들은 약 6억 7,000만 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후 거의 매년 연무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⁹³ 이와는 별도로 동남아 지역에는 마약 문제, 인신매매

⁹³- Economy and Environment Program for Southeast Asia(EEPSEA) and the World Wide Fund for Nature(WWF), “The Indonesian Fires and Haze of 1997: The Economic Toll,” <<http://www.idrc.ca/uploads/user-S/10536124150ACF62.pdf>>.

문제 등 비단 최근의 일만이 아닌 인간안보 문제를 또한 안고 있다.⁹⁴ 이러한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ASEAN 차원의 협력은 수사적 장치일 뿐 인간안보 문제 해결에 관한 다양한 선언들이 선언을 넘어서 행동의 차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특히 이런 선언들은 의무 사항과 구체적인 조치 사항들을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 사업을 위한 자원 마련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⁹⁵

ASEAN의 인간안보 문제는 ASEAN 지역의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경제적 여건 그리고 개별 국가들의 의지 부족으로 이 문제를 ASEAN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한국이 ASEAN과 협력을 진행하는 데 있어 인간안보 분야의 협력은 매우 바람직하며 양쪽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협력 분야라고 할 수 있다. ASEAN과의 인간안보 문제 협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ASEAN이 가지고 있는 인간안보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주게 되면 그에 따라서 한국의 협력에 따른 효과도 높아지고 한국의 이미지 상승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인간안보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동남아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위협을 주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은 동남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도 큰 공헌을 할 수 있다.

94. 미얀마-캄보디아-태국 북부를 잇는 삼각지대(Golden Triangle)는 유엔마약통제 프로그램(UN Office on Drugs and Crime: 이하 UNODC)의 통계에 의하면 적어도 2002년까지 세계 최대의 아편 생산지였으며, 같은 통계에 의하면 2007년 동아시아의 아편 복용자 수는 최대 497만 명으로 추산되고 이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약 200만 추산)을 제외하더라도 290만 명으로 서남아를 제외하고 세계 15개 지역군 중 복용자 수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UN Office on Drugs and Crime(UNODC), *World Drug Report 2009*, p. 52 <http://www.unodc.org/documents/wdr/WDR_2009/WDR2009_eng_web.pdf>.

95. Ralf Emmers, "The Securitization of Transnational Crime in ASEAN," *Institute of Defense and Strategic Studies, Singapore Working Paper*, No. 39 (Singapore: IDSS, 2005), p. 16.

I
II
III
IV
V

(3) 아시아 인간안보의 이슈

(가) 전염병

전염병 문제는 협의의 인간안보 혹은 최소한의 인간안보 개념에 포함될 수 있는 중요한 국제사회의 의제라고 할 수 있다. 성격상 인간안보의 범주에 있는 전염병 문제가 국가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국가 간 분쟁, 나아가 전쟁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국제법상 공중보건에 관한 쟁점은 월경 질병의 확산 방지 및 국제적 차원에서 공중보건의 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19세기 이전까지 월경 질병의 확산 방지에 관하여 국가들은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 즉, 질병 확산의 방지는 국내적 방역 정책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인 방역 조치는 국제 교역의 증가로 인해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제한적인 방역 조치에 의한 국제 무역의 제한은 국가 차원의 경제적 이해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국가 간 통상 갈등을 가져왔다. 따라서 국제 교역의 감소를 유발하지 않는 적절한 수준의 월경 질병 확산의 방지에 대한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다.⁹⁶ 오늘날 전염병, 즉 보건 문제가 국제사회의 갈등 요인이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아시아에서 전염병을 안보 차원에서 의식하게 된 것은 2002년 11월 중국 광둥성에서 발발한 SARS의 확산에서 비롯되었다. SARS는 특히 감염된 사람들과 접촉한 여행자들에 의해 다른 지역 및 국가로 확산되었고, 그 결과 29개국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전염병을 안보 문제로 인식

⁹⁶ 김성원, “국제법상 인간안보개념의 전개에 관한 일고찰,” 『법학논총』, 제24집 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하는 것이 확대된 또 하나의 계기는 AI이다. 1997년 이래 AI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되는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더니 그 확산 속도는 여러 경로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어 갔다. 또한, 신종플루(H1N1), 또는 이른바 ‘돼지 독감’이 2009년 인간에게 전염되기 시작하기 하면서 또 하나의 안보문제로 급부상했다. 이후 슈퍼박테리아 등의 출몰은 원인 규명이 거의 불가능한 독감 바이러스로 최근 기승하면서 이에 대한 처방 개발은 확산 속도를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

●표 II-3 H1N1, AI, SARS 발생건수 및 사망자 수(2007년 기준)

지역별	국가	H1N1 건수	AI 건수	AI 사망 수	SARS 건수	SARS 사망자 수
동북아	한국	Yes	0	0	3	0
	중국	Yes	39	26	7,429	685
	일본	Yes	0	0	0	0
	몽골	Yes	0	0	9	0
동남아	캄보디아	Yes	10	8	0	0
	말레이시아	Yes	0	0	5	2
	인도네시아	Yes	168	139	0	0
	라오스	Yes	2	2	0	0
	미얀마	Yes	1	0	0	0
	필리핀	Yes	0	0	14	2
	싱가포르	Yes	0	0	238	33
	태국	Yes	25	17	9	2
베트남	Yes	119	59	63	5	
중앙아	카자흐스탄	Yes	0	0	0	0
	키르기스스탄	No	0	0	0	0
	타지키스탄	Yes	0	0	0	0
	투르크메니스탄	No	0	0	0	0
	우즈베키스탄	No	0	0	0	0

I
II
III
IV
V

지역별	국가	H1N1 건수	A1 건수	A1 사망 수	SARS 건수	SARS 사망자 수
서남아	인도	Yes	0	0	0	0
	파키스탄	Yes	3	1	0	0
	방글라데시	Yes	0	0	0	0
	스리랑카	Yes	0	0	0	0
중동 대표국	사우디아라비아	Yes	0	0	0	0
	카타르	Yes	0	0	0	0
	쿠웨이트	Yes	0	0	1	0
	터키	Yes	12	4	0	0
	아랍에미리트	Yes	0	0	0	0

자료: U.S. Global Health Policy, 2008, <<http://www.globalhealthfacts.org/>>.

1994년 UNDP 인간개발 보고서는 전염병을 의식하는 안보 인식이 암시되는 대목이 있다. 동 보고서는 이를 인간안보의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다. 첫째, 기아, 질병 억압과 같은 고질적인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를 포함하며, 둘째, 일상생활 패턴에서 갑작스러운 혹은 유해한 상황으로부터의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설명한다. 이후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상기한 전염병이 발발하면서 안보 차원에서의 위협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의 가장 큰 배경에는 이런 전염병들의 고질적인 위협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유형으로 유해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SARS의 경우 2002년 11월에 발발해서 2003년 7월까지 8,500명의 감염자가 생겼으며 그 중 900명 이상이 사망했다. 그러면서 2003년 7월 5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는 SARS를 세계적 발병이라고 선언했다. 2003년 3월과 5월 사이 SARS가 최고조를 이루었을 때 8,422건이 보고되었고 그 중 90%, 그리고 전체 사망자 916명 중 95%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했다. 중국에서만 729명이 사망했다.⁹⁷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 지역 경제 및 지역과 연내 국가의

사회적 심리와 정서에 미친 영향이 더욱 심각했다. 이 사태로 인해 홍콩, 싱가포르, 중국의 경제 활동은 갑작스러운 정지 또는 붕괴 사태를 초래했고, 이 지역의 여행 자체가 선포되어 이들 국가 및 지역의 관광 수지는 최악의 사태를 경험했다. 통계에 의하면 이들 국가 및 지역의 GDP 성장 예측은 0.5%에서 1%의 감소세가 전망되었고, WHO는 SARS로 인한 아시아 지역의 피해를 300억 달러로 추산했고 다른 기관의 분석들은 600억 달러까지 추정했다.⁹⁸

AI의 경우 1997년 인간이 처음 감염된 이후 2003년 말과 2004년 초 아시아 8개국(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한국, 태국, 베트남 등)의 가금류 사이에서 발생했다. 이후 2004년에 아시아 지역에서 재발하는 사태가 발생하다가 외부와의 교류가 제한적이고 거의 단절된 나라인 북한마저도 2005년 3월 말에 첫 AI 감염 사례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2005년 2월 캄보디아에서는 처음으로 인간이 가금류 바이러스인 H5N1 감염되는 첫 사례가 발표되었다. 이어 7월에 인도네시아에서도 감염이 발견되었고 이후 베트남(90명), 태국(17명), 캄보디아(4명), 인도네시아(1명) 등 총 112명이 감염되었고 이 중 57명이 사망했다.⁹⁹ 2003년 첫 발견 이후 2009년까지 지난 6년 동안 H5N1 사망자 수도 250명 이상을 기록 중이다.¹⁰⁰

⁹⁷- Mika Shimizu, *Managing Global Health Disaster Risks in Asia: Lessons from H1N1 Case in Japan*, <http://www.globalasia.org/V5N3_Fall_2010/Mika_Shimizu.html> (검색일: 2010.10.6).

⁹⁸- Mely Caballero-Anthony, "SARS in Asia: Crisis, Vulnerabilities, and Regional Responses," *Asian Survey*, Vol. 45, No. 3 (May/June, 2005), p. 482.

⁹⁹- 이상환, "전염병과 인간안보, 그리고 국가안보," 『국제지역연구』, 제12권 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2008), p. 237.

¹⁰⁰- Shimizu, *Managing Global Health Disaster Risks in Asia: Lessons from H1N1 Case in Japan*.

I
II
III
IV
V

이와 더불어 인간안보의 최대 위협 요소 중 하나는 HIV/AIDS이다. 이 병이 인류사회에게 위협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전통적인 전염병이 인류사회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사회구조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혹자에 의해서는 향후 20년 동안 국가(호주의) GDP의 3분의 1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¹⁰¹ 특히 AIDS는 전쟁뿐 아니라 평화 상태에서도 확산이 빠르기 때문에 국가와 세계적인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¹⁰² 아래 <표 II-4>에서 나타나듯이 HIV 감염자는 지역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어 있으며, 그 파괴력의 효과는 사망자 수뿐 아니라 여성의 감염으로 인한 후세대로의 전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구조적 파괴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들 여성의 감염은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아이들은 보균자로 태어나고 사회 노동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대부분 죽기 때문이다.¹⁰³

¹⁰¹- Mark Malloch Brown, *Statement at Security Council Meeting* (January 10, 2000).

¹⁰²- Dennis Altman, "HIV and Security,"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7, No. 4 (2003), pp. 417~427.

¹⁰³- *Ibid.*

●표 II-4 HIV/AIDS 감염자 수, 성·유아별, 성별, 사망자 수 및 고아 수(2007년 기준)

지역별	국가	HIV 감염자	성인 감염자	남성 (%)	여성 (%)	유아	AIDS 사망 수	AIDS 고아 수
동북아	한국	13,000	13,000	28	72	NA	<500	NA
	중국	700,000	690,000	29	71	NA	39,000	NA
	일본	9,600	9,600	24	76	NA	<100	NA
	몽골	<1,000	<1,000	NA	NA	NA	<100	NA
동남아	캄보디아	75,000	70,000	29	71	4,400	6,900	NA
	말레이시아	80,000	79,000	27	73	NA	3,100	NA
	라오스	5,500	5,400	24	76	NA	<100	NA
	인도네시아	270,000	270,000	20	80	NA	8,700	NA
	미얀마	240,000	240,000	42	58	NA	24,000	NA
	필리핀	8,300	8,200	27	73	NA	<200	NA
	싱가포르	4,200	4,100	29	71	NA	<200	NA
	태국	610,000	600,000	42	58	14,000	31,000	NA
베트남	290,000	280,000	27	73	NA	20,000	NA	
중앙아	카자흐스탄	12,000	12,000	28	72	NA	<500	NA
	키르기스스탄	4,200	4,200	26	74	NA	<100	NA
	타지키스탄	10,000	10,000	21	79	NA	<100	NA
	투르크메니스탄	<500	<500	NA	NA	NA	NA	NA
	우즈베키스탄	16,000	16,000	29	71	NA	<500	NA
서남아	인도	2,400,000	2,300,000	38	62	NA	NA	NA
	파키스탄	96,000	94,000	29	71	NA	5,000	NA
	스리랑카	3,800	3,700	38	62	NA	<500	NA
	방글라데시	12,000	12,000	83	17	-	500	-
중동 대표국	쿠웨이트	<1,000	NA	NA	NA	NA	NA	NA
	사우디아라비아	NA	NA	NA	NA	NA	NA	NA
	터키	<2,000	NA	NA	NA	NA	NA	NA
	아랍에미리트	NA	NA	NA	NA	NA	NA	NA

주: NA=Not available, 정보 없음의 의미.

자료: U.S. Global Health Policy, 2008, <<http://www.globalhealthfacts.org/>>.

그러나 HIV/AIDS의 급속한 확산과 다음 세대로의 이전을 막기 위해서는 초국가적 성격 때문에 국가 간, 지역 간의 협력이 전제된다. 이를 위해 국가 간, 정부 간 정보 공유는 물론 협력의 틀이 마련되어야 하겠으나 문화적, 종교적 이유 때문에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기가 어려워 보인다. 상기한 <표 II-4>의 자료에 근거하면 이슬람권 지역 및 국가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황적 근거만으로 우리는 이러한 양상을 성 문화와 성에 대한 보수적 의식과 편견이 팽배한 지역들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의사나 의지로 단편적이거나 유출해 해석해볼 수 있는 간접적 근거라고 할 수 있겠다.

(나) 식량안보

식량안보의 가장 보편적인 정의는 모든 사람이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해 충분한 식량에 접근하는 것이다.¹⁰⁴ 그리고 미국 국제개발국(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이하 USAID)은 식량안보를 “모든 사람이 생산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해 그들의 식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식량에 언제나 물리적이고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⁰⁵ 이러한 정의에 근거해서 보면, 식량안보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다음 세 가지와 같다. 첫째, 식량이 충분히 이용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유효 공급이다. 식량 공급은 기술적인 생산 가능성과 투입재 및 생산재의 상대가격에 따라 결정된다. 둘째, 충분한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유효

¹⁰⁴- FAO, “Food Security: Some Macroeconomic Dimensions,” *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Rome: FAO, 1996); 임송수, “식량안보에 관한 쟁점 검토,” 『농촌경제』, 제22권 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년 봄), p. 45에서 재인용.

¹⁰⁵- USAID, *Definition of Food Security Policy Determination PNAAV 468* (Washington, D.C.: USAID, 1992).

수요이다. 식량 수요는 자체 가격, 보완재와 대체재 가격, 소득, 인구와 관련된 요소들, 기호나 선호 등에 따라 결정된다. 가격과 소득은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한다. 셋째, 유효 공급과 유효 수요의 안정된 정도, 곧 그 신뢰도이다. 이와 같은 식량안보 개념은 식량 생산자와 소비자를 경제 주체로 인식한 일반적인 것이다. 이 밖에 거시적인 차원에서 농업 물리적, 사회 경제적, 생물학적 요인이 식량안보를 결정한다.¹⁰⁶

식량안보는 또한 식량의 유용성(food availability), 식량의 접근성(food access), 식량의 활용성(food utilization) 등 세 가지 요소로 설명되기도 한다.¹⁰⁷ 식량의 유용성은 식량 접근을 이룩하는데 충분조건이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다. 또한, 식량 접근은 식량 사용을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다.¹⁰⁸ 이 밖에 사회적인 접근성이나 지속가능성을 통해 식량안보의 개념을 확대 해석한 예도 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식량안보는 만성적인 것과 급성적인 것이 있으며, 전자는 식량 접근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이고, 후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이다.

식량안보에 대한 불안 요인으로 세계의 곡물 수급 사정, 생산량과 소비량의 성장률 차이, 수자원의 고갈, 기후 변화로 인한 곡물 공급의 불확실성 등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식량 수급 체계를 불안하게 해서 식량안보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의 대표

¹⁰⁶- J. von Braun, S. Kumar Bouris and R. Pandya-Lorch, *Improving Food Security of the Poor: Concept, Policy, and Program* (Washington, D.C.: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1992).

¹⁰⁷- K. Chung, J. Ramakrishna Haddad and F. Riely, *Identifying the Food Insecure: The Approaches in India* (Washington, D.C.: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1997).

¹⁰⁸- 임승수, “식량안보에 관한 쟁점 검토,” p. 46.

적인 결과는 국제 곡물 가격의 변화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변화는 수시로 변하는 특성이 있다. 왜냐하면 날씨와 기후의 변화, 상대적으로 낮은 수요와 공급의 탄성치, 정부 정책의 변화, 상대적으로 긴 생산 반응, 거시 경제의 요인 등이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¹⁰⁹

21세기에 들어와 유전공학을 이용한 혁신적인 신품종 개발로 세계 농업의 유례없는 혁명적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신품종의 발명은 21세기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오늘날 국제사회가 식량안보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식량의 증산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따라가지 못한 데 있다.¹¹⁰ 또한, 21세기 세계 식량의 수급 문제에서 식량안보를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는 식량 수급의 불균형이다. 오늘날 세계 인구의 12%인 약 8억 명의 인구가 영양 부족 상태를 겪고 있으며, 수많은 개도국의 식량 수입이 증가하면 식량 수급의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과는 불가피하다. 25억 이상의 인구가 생활하는 아시아의 인구구조와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이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보면 식량안보는 향후 아시아의 인간안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¹⁰⁹. 위의 글, pp. 46~55.

¹¹⁰. 최근 FAO의 전망에 따르면 2025년 세계 인구는 85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세계 식량 생산량이 현재보다 75%정도 증가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 권용대, “21세기 동북아 식량안보문제와 지역 간 협력방안,” 『농업과학연구』, 제27권 2호 (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2000), pp. 182~183 참조.

(다) 빈곤과 기아

UN은 2000년 9월 ‘새천년 정상회의(Millennium Summit)’에서 189개 UN 회원국 대표들이 만장일치로 새천년 선언문을 채택하고 이 선언문에 기초하여 인류사회의 공동 과제인 ‘밀레니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를 설정했다. 이를 통해 세계는 사상 처음으로 인류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빈곤과 기아가 없는 지구협력사회(Global Cooperative Society)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지구촌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¹¹¹ 그리고 이 목적을 오는 2015년까지 달성할 것으로 계획했다. 1995년 UN 사회개발 정상회의에서는 빈곤을 단순히 저소득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여러 복합적인 기준을 이용하여 다면적으로 해석하고 있다.¹¹²

이와 더불어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의 정의에 따르면, “빈곤은 복지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여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능력의 결여 상태, 건강, 교육, 영양섭취, 주거 환경 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 정치적으로 인권보장이 결여되어 있거나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 활동에서 소외되거나 차별을 받는 상태도 포함된다. 또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공동체의 가치 있는 구성원으로서 참여하지 못하고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

¹¹¹ 빈곤과 내전 간의 인과가 아닌 상관관계에 대한 담론으로 피터 윌렌스틴·비르거 헬트, “인간안보, 분쟁예방 그리고 평화,” 『국제관계연구』, 제11권 2호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6), pp. 69~71 참조.

¹¹² 강성호,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통한 동아시아 빈곤퇴치 전략과 지역 협력 가능성,” 『오토피아(UGHTOPIA)』, Vol. 21, No. 1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6).

I
II
III
IV
V

안정한 상태도 빈곤의 한 단면에 해당된다.¹¹³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정적인 파급 효과는 빈곤과 가난으로 빈곤민이나 빈곤층의 여성과 아이들이 높은 의료비와 약값 때문에 질병 치료를 받기 어려워 질병의 확산과 증가 방지를 어렵게 하는 것이다.

전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은 빈곤 문제가 아직 심각한 것도 사실이다. 일례로, 전 세계 영양실조 인구 비율 중 56%에 해당되며, 전 세계 유아사망률 중 43%가 아시아 지역에 해당된다. 그리고 세계 슬럼 거주자 54%가 역시 이 지역에 해당되며, 안전한 식수에 접하지 못하는 세계 인구의 58%가 아시아인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절대빈곤자는 1990년에서 2001년 동안 31%에서 20%로 감소했다. 그럼에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절대빈곤 속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2억 7,000만 명 이상에 달하며, 이 중 약 2억 명이 슬럼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다.¹¹⁴

<표 II-5>에서도 나타나듯이 비록 통계수치가 과거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동북아나 동남아 지역의 절대빈곤층이 상당히 큰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이들 지역 국가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모순을 보이고 있다. 이의 가장 큰 이유는 저임금에 노동력이 착취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¹¹³- UNESCAP, *A Future within Reach: Reshaping Institutions in a Region of Disparities to Meet the MDGs in Asia and the Pacific* (New York: UN, 2005)
참조; 강성호,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통한 동아시아 빈곤퇴치 전략과 지역 협력 가능성,” p. 110에서 재인용.

¹¹⁴- UNESCAP, *A Future within Reach: Reshaping Institutions in a Region of Disparities to Meet the MDGs in Asia and the Pacific*, pp. 11~14.

● 표 II-5 개인 소득 수준, 1일 생활 빈곤층률, 실업률, 소득 수준, 외채(년도)

지역별	국가	인당GDP (\$)	절대빈곤자 (%)	실업률 (%)	소득 수준	외채 (\$)
동북아	한국	26,000(08)	<2.0%(98)	3.2(08)	상	NA
	중국	6,000(08)	16.6(01)	NA	중하	373,635.4
	일본	34,200(08)	NA	4.2(08)	상	NA
	몽골	3,200(08)	27(98)	2.8(08)	중하	1,596.2
동남아	캄보디아	2,000(08)	34.1(97)	3.5(07)	하	3,760.9
	라오스	2,100(08)	27(02)	2.4(05)	하	3,337.1
	말레이시아	15,300(08)	<2.0%(97)	3.7(08)	중상	53,716.7
	인도네시아	3,900(08)	7.5(02)	8.4(08)	중하	140,782.6
	미얀마	1,200(08)	NA	9.4(08)	하	7,373
	필리핀	3,300(08)	15.5(00)	7.4(08)	중하	65,845.3
	태국	8,500(08)	<2.0%(02)	12(08)	중하	63,066.8
	베트남	2,800(08)	NA	4.9(08)	하	24,222.3
중앙아	카자흐스탄	11,500(08)	<2.0%(03)	6.9(08)	중상	96,133.4
	키르기스스탄	2,100(08)	<2.0%(04)	18(03)	하	2,401.1
	타지키스탄	2,100(08)	7.4(03)	2.3(08)	하	1,227.9
	투르크메니스탄	6,100(08)	NA	6.0(04)	중하	743.4
	우즈베키스탄	2,600(08)	NA	0.9(08)	하	3,875.5
서남아	방글라데시	1,500(08)	36(00)	2.5(08)	하	22,033.4
	인도	2,800(08)	34.7(00)	6.8(08)	중하	220,956.5
	파키스탄	2,600(08)	17(02)	7.4(08)	중하	40,679.8
	스리랑카	4,300(08)	5.6(02)	5.2(08)	중하	14,020.4
중동 대표국	쿠웨이트	57,400	NA	2.2(02)	상	NA
	카타르	103,500(08)	NA	6.0(08)	상	NA
	사우디아라비아	20,700(08)	NA	NA	상	NA
	터키	12,000(08)	3.4(03)	7.9(08)	중상	251,476.8
	아랍에미리트	40,000(08)	NA	2.4(01)	상	NA

자료: U.S. Global Health Policy, 2008, <<http://www.globalhealthfacts.org/>>.

I
II
III
IV
V

동아시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빈곤 문제 해결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표 II-5>에서 나타나듯이 절대빈곤층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른 자료들에 의하면, 1990년에 동아시아 인구의 33%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극빈자에 해당되었으나 2002년에 그 비율이 14.1%로 줄어들어 이미 수치상의 목표를 달성했다. 기아 인구는 1990~1992년 동아시아 전체 인구의 16%였지만 1995~1997년에는 12%로 감소되었다. 이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잠정적으로 기아인구는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¹¹⁵

이러한 상황에서 UNESCAP은 2005년 『아시아·태평양 MDGs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동 지역의 빈곤과 기아 퇴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실천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절대빈곤 및 기아 퇴치는 최소 영양섭취 인구의 수를 줄이는 동시 절대빈곤 인구와 기아 인구 비율을 최소화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그리고 이를 수반하기 위한 보편 교육의 달성 목표를 정하고, 이의 세부적인 목표를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을 실질적으로 상향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세 번째 세부적 목표로는 성 평등과 여성 능력의 고양으로 이는 여성과 남성 간의 문맹률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여성의 교육 수준의 향상이 그 사회의 경제발전과 변연에 기여함으로써 빈곤 상황을 극복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네 번째 세부 목표는 아동 사망률의 감소로, 전염병 확산 방지 및 위생 시설의 개선과 안전한 식수 공급 등 사회·경제적 요인의 개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신생아 사망의 예방을 위해 영양섭취 결핍과 치료 가능

¹¹⁵ 강성호,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통한 동아시아 빈곤퇴치 전략과 지역 협력 가능성,” p. 111.

한 질병을 위한 국가적, 사회적 노력을 요구한다. 다섯 번째 목표는 산모 사망률의 감소로 특히 국가 내에서의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를 축소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이의 주원인은 의료 시설의 미비와 의료 혜택의 부족에서 기인한다. 여섯 번째, HIV/AIDS, 말라리아 및 기타 질병 퇴치 목표다. 동아시아의 AIDS 감염자는 상승하는 추세이며 이의 확산을 막는 것이 주력하는 목표다. 마지막으로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로 이는 인간과 환경의 조화를 의미한다. 이를 위한 두 개의 세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환경자원 보존과 개발에 관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안전한 식수 공급과 위생적인 환경 조성을 이룩하는 것이다. 21세기에 이러한 목적의 중요성은 인구 증가에 따른 농업의 확장과 산업화의 확산에 따른 도시화의 확대에 의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의식한 데 있다.

(라) 여성안보

여성안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냉전이 종결된 이후 세계 각지의 전쟁이 국경을 초월한 국제전, 즉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보다는 국가 내에서 벌어지는 국지전이나 국내전이 대부분이고 추세이기 때문에 여성의 안보 위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¹¹⁶ 이러한 추세 때문에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자 수가 전체 희생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유례에 없는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일례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시민의 희생자 비중이 전체 희생자 수의 5%에 불과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66%, 21세기로 전환되면서는

¹¹⁶- Rosalind Boyd, "Gender and human security issues: building a programme of action-research," *Development in Practice*, Vol. 15, No. 1 (February 2005), p. 116.

80~90%를 차지하고 있다.¹¹⁷ 이 중 대부분의 희생자는 여성과 어린이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여성들은 생명의 위협은 물론 육체적, 정신적 위협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어 여성안보의 위협 상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여성의 안보 위협은 전쟁터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여성안보의 위협 요소는 질병, 인권, 난민, 납치, 인신매매, 처우(남녀차별)와 빈곤 등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일례로, 인신매매의 경우 매년 70만 명 이상의 어린이와 여성이 국제적으로 매매를 당하고 있다. 2002년에는 인신매매가 마약을 제치고 수십억 달러의 세계 최고 불법 거래 시장으로 부상했다.¹¹⁸ 여성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여성의회(World Conference for Women)를 계기로 집중 조명되었다. 이를 계기로 의회는 여성의 분쟁 예방(conflict prevention)과 분쟁 해소(conflict resolution)에 대한 여성의 참여(access)를 증대시키는 결의에 합의했고, 영구적인 안보와 신뢰를 구축하는데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국제 학계와 정책 입안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했다.¹¹⁹ 그리고 UN의 안전보장이사회는 2000년 무력 분쟁이 여성과 여아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분쟁 해소와 평화 구축에서 여성의 역할을 인지하는 내용을 담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Security Council Resolution (SCR) 1325)’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¹²⁰

¹¹⁷- Eric Hobsbawn, “War and peace in the 20th century,” *London Review of Books*, Vol. 24, No. 4 (February 2002), pp. 16~18.

¹¹⁸- Sakiko Fukuda-Parr, “Gender, Globalization and New Threats to Human Security,” *Peace Review*, Vol. 16, No. 1 (March 2004), p. 38.

¹¹⁹- Natalie Florea Hudson, “Securitizing 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 *Journal of Human Rights*, Vol. 8, No. 1 (January 2009), p. 58.

¹²⁰- *Ibid.*

아시아가 여성의 안보 불안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8년 10월 필리핀에서 개최된 여성에 관한 APEC 장관급회담 때부터였다. 동 회의에서 상정된 주요 안건은 인간안보 차원에서 여성의 안보 불안 문제를 의제화시키는 동시에 이를 젠더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동 회의에서 APEC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을 성명문을 통해 제기했다.

우리 지역의 경제금융위기를 고려할 때, 우리는 그 효과가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나타날 것을 우려한다. 아직 이번 위기의 사회적, 경제적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한 상태이나, 우리는 소녀와 여성, 특히 식량, 약품과 같은 필수품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급료 삭감을 당할 뿐 아니라 교육, 훈련, 건강관리, 사회봉사의 면에서 나날이 지출이 줄어만 가는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너무나 불균형한 부담이 가해졌다고 믿는다. 여성들은 성공적인 경제 회복을 위한 입안, 설계, 수행 등에 있어서 수익자뿐만 아니라 결정권자로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¹²¹

주지하듯이 동 성명문에서는 여성들의 역할이 아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여성들의 경제 참여가 국가 경제 개발에 기여하는 사실은 선진국이나 역내 선진국의 경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논리는 간단하다. 더 많은 양질의 노동력이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경제 발전은 물론 이의 지속성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 선진국에서는 여성의 개인 경제 참여율이 전체 노동력 비율의 증가 추이로 나타나고 있다.

¹²¹ 전재성, “인간안보와 여성안보: 동아시아에서의 여성안보논의,” 『국제관계연구』, 제11권 2호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6), p. 102에서 재인용.

I
II
III
IV
V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도 여성들의 인권, 임금, 대우 등의 면에서 남성들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는 사실이 여성안보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깨우친 것으로 평가된다. 선진국에서도 여성 인력의 권익과 권리, 그리고 대우가 차별을 받으면 미개국이나 개도국은 더욱 열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후진국은 여성 노동 인력에 대한 대우나 이들의 사회 진출 기회가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착취당하거나 유린당하고 더 많은 제약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의식한 뜻에서 1999년 젠더(gender)의 통합을 위한 특별자문단(AGGI)이 APEC에서 창설되었고, 제11차 APEC 장관급 회담에서 승인을 받아 명실상부한 아·태 지역의 여성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조직으로 태어났다. 이의 주된 목적은 APEC이 여성 통합을 위한 효과적인 시행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¹²² AGGI의 기능은 젠더 문제에 관한 자문 및 감정, SOM에 대한 자문, 과정과 조직 면에서 젠더 주류화에 대한 기타 APEC의 진출 관련 자문 등을 포함하고 이를 APEC으로부터 정식 위임받았다.¹²³ 이런 배경 속에서 APEC은 여성안보 이슈에 대한 공동의 주제(common themes)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자문단을 별도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APEC의 여성안보에 대한 의식은 확대되지 못했다. 대신 금융위기 이후 경제안보의 맥락에서 여성 노동력을 금융위기 극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¹²⁴

122. 전재성, “인간안보와 여성안보: 동아시아에서의 여성안보논의,” p. 102.

123. <<http://www.apecsec.org.sg/loadall.html>>; <<http://apecsec.org.sg/virtualib/v-aggi.html>>; <http://www.gender.go.j/english_contents/apec/frame_work/e.html>.

124. 전재성, “인간안보와 여성안보: 동아시아에서의 여성안보논의,” pp. 101~105.

●표 II-6 여성 권한 척도

지역별	국가별	2007					
		순위	여성권한 척도	여성의원 수(%)	여성행정 관리직(%)	여성전문 기술직(%)	남녀 소득비
동북아	한국	61	0.554	14.00	9	40	0.52
	중국	72	0.533	21.00	17	52	0.68
	일본	57	0.567	12.00	9	46	0.45
	몽골	94	0.410	4.00	48	54	0.87
동남아	캄보디아	91	0.427	16.00	14	41	0.68
	인도네시아	96	0.408	12.00	14	48	0.44
	말레이시아	68	0.542	15.00	23	41	0.42
	필리핀	59	0.560	20.00	57	63	0.58
	싱가포르	16	0.786	24.00	31	45	0.53
	태국	76	0.514	13.00	30	53	0.63
	베트남	62	0.554	26.00	22	51	0.69
	라오스			25.00			0.76
서남아	인도			9.00			0.32
	방글라데시	108	0.264	6.00	10	22	0.51
	스리랑카	98	0.389	6.00	24	46	0.56
	파키스탄	99	0.386	21.00	3	25	0.18
중앙아	카자흐스탄	73	0.532	12.00	38	67	0.68
	키르기스스탄	56	0.575	26.00	35	62	0.55
	타지키스탄			20.00			0.65
	투르크메니스탄			-			0.65
	우즈베키스탄			16.00			0.64
중동 대표국	쿠웨이트			3.00			0.36
	카타르	88	0.445	0.00	7	25	0.28
	사우디아라비아	106	0.299	0.00	10	29	0.16
	터키	101	0.379	9.00	8	33	0.26
	아랍에미리트	25	0.691	23.00	10	21	0.27

자료: UNDP, <<http://www.undp.org>>, (2010.8); 한국통계청 2010년.

I
II
III
IV
V

- 항목 > 여성의원 수 (%) :
 2005년 자료 : 2007.5.31 기준
 2006년 자료 : 2008.10.31 기준
 2007년 자료 : 2009.2.28 기준
- 항목 > 여성행정관리직 (%) :
 2005년 자료 : 1994~2005년 중 활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
 2006년 자료 : 1997~2006년 중 활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
 2007년 자료 : 1999~2007년 중 활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
- 항목 > 여성전문기술직 (%) :
 2005년 자료 : 1994~2005년 중 활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
 2006년 자료 : 1997~2006년 중 활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
 2007년 자료 : 1999~2007년 중 활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
- 항목 > 남녀소득비 :
 2005년 자료 : 1996~2005년 중 활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
 2006년 자료 : 1997~2006년 중 활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
 2007년 자료 : 1996~2007년 중 활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

현재 아시아에서는 전례에 없던 여성안보 개념이 역내 국가 및 지도자들에 의해 수용되고 발전 과정을 겪으면서 2001년 한국에서 개최된 제1회 동북아 고위급 여성 지도자 회의를 통해 젠더 주류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시키는 인식을 확대시켰고, 역내 국가들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리고 동 회의에서 채택된 서울 선언에서는 여성의 안보 불안 문제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 등 여러 면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에 회의는 전 지구적 개념을 수용하여 젠더 주류화의 개념을 도입했다.¹²⁵

(4) 아시아적 인간안보 발전 방향¹²⁶

ASEAN 인간안보협력에 비춰봤을 때 역내 국가 간의 협력을 유발하고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이슈별, 영역별 차이가 존

¹²⁵- 위의 글, p. 106.

제하고 있다. 일례로, 연무와 자연재해는 국가 간 협정에 기반을 둔 협력이 진행되어 비교적 제도화가 높은 수준이며, 초국가적 범죄와 일반 환경 문제는 제도화의 수준이 낮고, 광역 질병의 경우 제도화는 높지 않지만, 장관회의 등 관련 협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일어나는 편으로 각 이슈에 발전 정도의 차이가 있다. 비교적 제도화가 발달한 연무와 자연재해 관련한 협력은 ① 인적·경제적 피해가 크며, ② 큰 국제적 관심을 받았고, ③ 자연재해라는 성격을 공유하며, ④ 지역적으로 동남아에 한정되어 있고, ⑤ 연무는 문제의 진원지가 비교적 확실한 이슈들이다. 반면 ① 장기간에 걸쳐 작은 규모로 진행되며(초국가적 범죄, 일반 환경 문제), ② 동남아 지역을 초월한 글로벌 이슈이거나(광역 질병), ③ 주권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침해(초국가적 범죄), ④ 경제개발과 충돌(환경문제)하는 경우 협력이 약한 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시아에 적합한 인간안보 개념은 ‘공포로부터의 자유’보다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인권 문제,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 미성년 노동 문제, 지뢰 문제 등 ‘공포로부터의 자유’ 관련 문제들은 ASEAN 지역에 많은 문제가 산재

126. 아시아의 지정학적, 정치적, 전략적, 역사적, 철학적, 문화적 특징의 관점에서 아시아의 인간안보에 대한 개념 정의 시도와 현실에 대입하려는 시도는 많은 이들에 의해 진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참작하는 대신 본 연구의 구상과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아시아적 인간안보 개념 정리를 시도하고 있다. Sung Won Kim, "Human Security with an Asian Face?" *Indiana Journal of Global Legal Studies*, Vol. 17, Issue. 1 (February 2010), pp. 63~103; Yukiko Nishikawa, "Human Security in Southeast Asia: Viable Solution or Empty Slogan?" *Security Dialogue*, Vol. 40, No. 2 (April 2009), pp. 213~236; 폴 에반스, "인간안보와 동아시아: 그 시작에 즈음하여," 『국제관계연구』, 제11권 2호 (서울: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6), pp. 5~35; Stephanie Lawson, "Regional integration,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in the Asia-Pacific: implications for human security and responsibility," *Global Change, Peace & Security*, Vol. 17, No. 2 (2005), pp. 107~122 등 참조.

해있다. 그러나 이는 아시아 지역의 역내 국가들이 인권을 주권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하고 주권을 최고의 권리로 인지하고 있는 한 ‘공포로부터의 자유’에서 언급하는 인간안보 내용들을 홀시할 수밖에 없다. 특히 ASEAN은 국가를 인간안보의 위협으로 상정하는 접근 방법에 불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ASEAN이 주창한 보살피는 사회(caring society)라는 구호 아래 빈곤, 영양결핍, 기근 문제의 해결, 나아가 기본적인 생활수준의 확보와 인간 개발이라는 개발·발전 문제가 역내 국가들에게 더욱 용이하게 수용될 수 있어 아시아에 적합한 인간안보의 개념으로도 정립할 수 있겠다.

아시아에 적합한 안보 개념의 대상은 통상적 의미에서의 인간안보가 추구하는 안보의 대상인 인간, 즉 일반 국민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아시아적 인간안보 개념은 실제 안보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인간, 일반 국민 혹은 시민사회의 참여의 통로를 보장하면서 이들의 협조와 협력을 유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실제로 안보 대상의 목소리와 요구가 국가 간 인간안보 협력의 장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적 인간안보 관련 협력 범위는 국내적 안정과 레짐의 생존까지 포함한 포괄적 안보의 테두리를 탈피하여 전통적 국가안보의 범위가 경제, 사회·문화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아시아의 인간안보 문제의 심각성은 다양한 협의체와 회의 구성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으나 제도화의 측면에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 수준은 연성 협력(soft cooperation)에 그치고 있다. 일례로, 다양한 협의체와 회의에도 불구하고 ASEAN 회원국들을 움직일 수 있는 국가 간 협약이나 협정은 단지 다섯 개만 만들어졌을 뿐이며 그 중 평가해볼 만한 대상은 자연재해, 연무, 법적 지원에 관한 협약, 협정들인데, 이 협약들도 제도화의 수준에

서는 매우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¹²⁷ 이 협정들은 모두 국내의 법적, 행정적 조치들을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불이행 시 강제(enforcement)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분쟁 해결 메커니즘(Dispute settlement mechanism) 역시 모호해서 모든 협정에서 ‘협의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shall be settled amicably by consultation or negotiation)’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국가 간 협약 또는 협정이라는 성격 때문에 이 협약들은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연무에 관한 협약은 연무의 진원지인 인도네시아가 아직 비준을 하고 있지 않아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고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한계가 있다. 또한, 각 협약들은 협력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펀드를 설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모든 조약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도록 규정(make voluntary contributions to the Fund)’하고 있어 재원 마련의 실효성 역시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간안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역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문제 해결을 위해 주권에 대한 제약을 감수하는 제도화의 방향 개선이다. 이는 이른바 ‘ASEAN 방식(ASEAN Way)’ 개념의 개혁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 인간안보를 포함 현재 아시아가 직면한 ASEAN 방식을 넘어 보다 제도화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인간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역내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변수 극복이 요구된다. 이들 변수는 ① ASEAN 현장 등에서 보이는 ASEAN 통합에 대한 엘리트 수준의 정치적 의지와 행동, 그리고 ② 인간안보와 관련한 일련의 위기들의 재발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역내 국가 간 다양성 증가에 따른 성층화(stratification)는 제도화를 억제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역내 발

¹²⁷ 다섯 개의 협정, 협약 중 하나는 생물다양성 센터설립을 위한 협정이며, 제외된 다른 하나(Agreement on Information Exchange and Establishment of Communication Procedure, 2002)는 전체 회원국 대상이 아닌 3개국(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만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음.

전한 국가와 덜 발전한 국가 사이의 격차가 커질수록 자신감이 결여된 (less confident) 국가들은 아시아적 인간안보 개념에 기반을 둔 협력체의 제도화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시아적 인간안보 의식의 확산과 협력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인간안보 관련 협력 참여와 역내 정치적 자유의 증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다. 일반 국민과 시민사회, NGO 등은 인간안보의 직접 대상이고 이들의 요구와 필요가 인간안보 협력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많은 역내 국가들은 이들이 적절히 대표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¹²⁸ 이 문제는 아시아 지역의 역내 전반과 개별 국가들의 정치적 자유의 문제와 직결된다. 일례로, 다양한 인간안보 문제를 안고 있는 미얀마의 자유화와 민주화 문제는 인간안보 협력 발전의 중요한 변수로 아시아 지역에서 정치적 자유의 증가가 향후 인간안보 문제 협력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아시아 평화의 새로운 지향점

서구적 근대화는 오늘날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 개도국의 국가적 목표로 존재하고 있다.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근대국가와 민족주의의 논리는 갈등적인 양상을 종종 보여 왔으며, 이는 평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근대화 과정에서 대부분의 개도국은 근대화를 완전히 이루지 못한 채 근대화의 발전만 강조하고 있다. 즉, 근대화를 위한 제도적 개혁과 창출에만 전념한 나머지 대중이나 개인의 권리와 권익을 홀시하는 과정이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다. 대부분의 개도국에

¹²⁸-Otto von Feigenblatt, "ASEAN and Human Securit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Ritsumeikan Center for Asia Pacific Studies(RCAPS) Working Paper*, No. 2009-5 (July 2009).

서는 근대적 제도가 신속하게 도입되고 있으나 정작 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나 기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채 도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 도입이 근대화가 성숙하지 않은 정부와 관료들에 의해 운영되어 시행 착오와 운영 미숙이 만연하게 되었고 이의 대가는 고스란히 이들의 피통치자인 국민의 몫으로 전가되었다. 즉,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 희생은 국가와 사회 간의, 그리고 통치자와 피통치자 간의 갈등 요인이 되었고 이는 근대화 과정을 겪는 국가, 사회와 국민 모두에게 딜레마가 되었다.

이러한 국가적, 사회적, 국민적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통합이 요구되었고 국가 중심의 국가 운영 체계와 리더십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통치자는 억압을 통치 수단으로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억압은 피통치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권익도 모두 무시하고 경시하는 통치 체제를 탄생시키고 발전시켰다. 통치자와 피통치자 간의 격리는 곧 엘리트층 중심으로 사회 고위층을 탄생시켰고 이들은 국가 발전과 근대화의 이름 하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급기야 부패와 부정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발전 과정에서 의식을 깨우치기 시작한 피통치자는 민족주의 정서의 자극을 통해 이러한 부정부패에 대항하면서 자신들의 권리와 권익은 물론 부패하고 잘못 운영되어 온 근대적 제도 때문에 발생한 희생의 대가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국가와 사회의 불안을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근대화의 성과를 더욱 일찍 본 이른바 ‘신흥 개도국’ 또는 ‘동아시아 네 마리 용’들은 민주화를 추진했다. 민주화를 통해 부정하고 불공평한 제도의 개혁은 물론 정권의 대표성이 국민에 의해 대표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확립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들의 요구가 관철

I
II
III
IV
V

되면서 근대화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 정치의 민주화까지 완성하는 결과를 보게 되었다.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근대화 국가, 즉 네 마리 용의 근대화 과정은 오늘날 대부분의 아시아 개도국의 근대화 모델로 정착하게 되었다. 이의 가장 큰 이유는 이들 개도국의 근대화 목적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모든 국가, 사회 정책이 경제 성장의 가속화와 급속한 개발에 모두 초점이 맞춰졌다. 이들은 모두 ‘선 경제 근대화, 후 정치 근대화’의 모델을 표방하면서 우선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한 후 정치개혁과 민주화를 추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상기한 근대화 모델이 아시아 개도국들에 발전 모델이 되었다면, 경제 근대화를 이룩하고 현재 민주화를 추진하는 대부분의 개도국에 평화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아시아 개도국들은 1990년대, 특히 냉전 종결 이후 탈냉전과 세계화의 분위기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면서 정치 근대화도 어느 정도 발전시키는 양상을 보여 왔다. ASEAN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는 경제발전 속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민주주의가 도입, 정착되었다. 태국에서도 민주주의를 요구하면서 정치제도와 권력구조의 개혁 요구가 상당한 진척을 보인 가운데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의 결과가 상당히 가시화되었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신생 독립국가도 초보적인 단계지만 개혁·개방과 고유가로 인한 고속의 경제발전과정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배가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특히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타의 반, 자의 반으로 거버넌스 구조의 개혁은 물론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에 의해 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켰다.

탈냉전과 세계화, 그리고 아시아 금융위기를 통해 민주주의 의식이 한

층 더 제고된 아시아 개도국들은 세계화 속에서 근대화가 자국의 역량만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는 세계화의 심화로 국민의 의식 수준의 발달은 물론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보편적 인권과 가치의 의식이 확산되면서 사회구성원 간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요구가 더욱 커지게 된 데서 기인했다.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비로소 사회구성원 간, 사회계층 간의 갈등 요인이 대내외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부나 관료의 부족한 능력(대내 요인)이나 외부로부터의 영향(대외 요인)을 통해서 인식하기 시작했다. 대내적인 능력 부족 요인의 해결은 외부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대외적인 요인(예: 자연재해, 전염병과 금융위기 등)의 해결은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다.

그 결과 아시아에서는 우선 동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인간안보의 해결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지역 차원에서의 국가 간 협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특히 금융위기 사태를 계기로 이른바 ‘ASEAN+3’를 1998년에 발족시키면서 과거의 지역협력체(예: APEC)의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무색하게 했다. ASEAN+3의 발족으로 동아시아 지역은 지역 협력 차원에서 역내 국가의 국내외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노력을 같이하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하게 동 지역은 이후 더 많은 자연재해와 월경적인 전염병 사태, 그리고 9·11 테러 사태로 비전통안보 이익의 중요성 부각 등 일련의 역사적 인류 재앙을 겪으면서 이런 노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느꼈다. 그리고 지역의 안보와 평화는 이러한 인간안보의 해결에서 구하고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¹²⁹

¹²⁹ 거버넌스와 인간안보에 관한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은 Mark Duffield, “Human security: linking development and security in an age of terror,” Stephan

아시아의 평화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시대의 발전 추이에 부합해야 한다. 즉, 세계화에 부합해야 한다. 세계화는 오늘날 역사의 추세이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아시아의 안보 문제, 특히 인간안보 문제는 세계화의 영향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³⁰ 경제 의존도의 심화와 정보통신의 발달, 그리고 교통운송 수단의 발달 등으로 인해 지역 안보에 대한 의식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안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 더욱 깊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아시아의 평화도 이러한 틀 속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아시아의 평화 패러다임은 시민사회, 공공질서, 경제, 환경, 문화, 인권 등과 국가체제의 법적, 정치적 구조 간의 날로 증대하는 격차를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지금까지 국가안보의 핵심은 국가 중심의 전통적 안보문제와 위협에 대한 해결과 방어를 중시하는 것에 있었다. 오늘날의 세계화는 체제 조정의 어려움으로 불안을 일으키는 동시에, 이러한 불안감은 세계 경제가 환경 문제, 국내 정치의 자주성과 안정, 그리고 자주 국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불안감은 개개인의 행복과 안정의 불안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세계화 속의 안보 인식과 의식은 개인의 행복과 안정을 중시해야 한다.

셋째, 개인의 보호는 정치적 단위로서의 국가 방어에서뿐 아니라 개인의 복지와 삶의 질의 보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세계

Klingebliel (eds.), *New Interfaces between security and development: Changing concepts and approaches* (Bonn: Deutsches Institut für Entwicklungspolitik, 2006), pp. 11~38.

¹³⁰- D. J. Winslow, "Human Security," Alessandro Gobbi (eds.), *Globalization, Armed Conflicts and Security* (Rome: Centro Militare di Studi Strategici(CeMiSS), 2004), pp. 255~278.

화의 추세 속에서 국가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의 국민이 제대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탈냉전 초기에는 ‘공동(common)’, ‘협력(cooperative)’, ‘집단(collective)’과 ‘종합(comprehensive)’ 등의 의미에서 안보를 정의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이 오늘날 아시아의 경제발전 모델과 정치 모델로 인해 파생된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는 유효하지 못한 개념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환경파괴, 식량 부족, 난민 등의 출현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그리고 급속한 경제발전을 위해 유지된 독재 정권은 경제 격차, 사회 불평등, 생활수준의 비정상적 성장과 환경 위협 등의 결과만 가져왔다. 이런 근대화 과정에서 드러난 인간안보의 문제들은 인간 중심의 안보 의식의 제고와 발전에 대한 요구를 가중시켰고, 지역 차원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부상했다.

이런 맥락에서 아시아 평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을 갖춰야 할 것이다.

첫째,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이다. 이는 앞서 설명했듯이 ‘간접적 혹은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충족시키는 평화조건이다. 이는 가난, 사회불안, 불안전, 부정의, 불평등, 정치적 탄압, 기아와 질병의 반복이 만연하는 안보의 구조적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내적 노력도 필요하지만, 능력이 부족한 정권이 대부분인 아시아에서는 외부적인 지원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므로 안보의 구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는 물론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이 전제된다. 역내 국가 간의 협력은 세계화로 인해 촉진될 수 있다. 역내 국가의 내부적 불안과 위협 요인들은 세계화로 인해 역내 확산이 빠르고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극적 평

I
II
III
IV
V

화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 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지속가능한 평화(sustainable peace)이다. 21세기 화두는 단연코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이 개념과 평화와의 관계는 지속가능 발전의 구현을 통해 국가는 국가 차원에서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세계는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구현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아시아도 지역 차원이나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를 구현하는 것이 지상 최대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개념이 본격적으로 대두하기 시작한 것은 1974년 체코의 부카레스트에서 열린 UN 인간환경회의에서 인구, 자원, 환경, 그리고 경제개발 상호 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접근을 제안하면서부터이다. 이후 거듭된 논의를 통해 동 개념은 진화를 계속해왔고, 오늘날 지속가능 발전이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능력을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과 환산할 필요 없는 발전’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발전의 일차적 목적이 인간의 욕구충족인데, 인간의 욕구는 음식, 에너지, 주택, 물 공급, 위생과 건강 등을 포함하여 인간의 삶 자체이다. 그리고 인간의 욕구는 시간상으로는 세대를 초월하고, 공간적으로는 국가를 초월하여 생산 활동을 통해 충족된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평화 역시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객관적 환경과 안보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¹³¹

지속가능한 발전의 맥락에서 지속가능한 평화의 핵심요소도 정의할 수 있다. 이는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of economic growth), 사회발전(social development)과 환경보호(environment protection) 등

¹³¹- Hartmut Bossel, *Indicato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ory, Method, Applications: A Report to the Balaton Group* (Winnipeg, Canad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999).

이다. 이들 요소의 보장은 이들 요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이들을 직접 운영하는 인간으로부터 이루어진다.¹³² 그러므로 인간이 이들 요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속가능한 안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인간 자체의 능력 제고가 요구된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과 인간 간의 협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 간의 갈등과 분쟁이 축소되어야 하며 대신 상호 이해와 신뢰 속에서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평화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 환경의 발전을 강조하고 국가 간의 제로섬 경쟁이 아니라 윈-윈을 추구하는 탈국가적 발전양식을 상정한다. 아울러 사회중심적이고 시민참여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깊게 내포하고 있다.¹³³

셋째, 전일적 평화(holistic peace)이다. 오늘날 경제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경제성장이 수단이며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 중심이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경제성장 모델은 전일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이는 삶의 질과 생활수준의 제고를 추구하는 동시에 자연자원의 보호와 후세대의 기회 보장을 동반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전일적 평화 역시 같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일적 평화 역시 인간안보를 중요시하고 강조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보편적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안보가 인간 본성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활용될 때 그 효과를 발휘

¹³²- Tim Prenzler, "The Human Side of Security," *Security Journal*, Vol. 20, Issue. 1 (February 2007), pp. 35~39.

¹³³- James Medowcroft, "Planni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sights from the Literature of Political Science," *European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1 (June 1997), p. 450.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안보, 안정감, 또는 불안감으로부터의 자유는 삶의 질 개선과 생활의 안정에서부터 근원한다. 그러므로 인간안보를 통해 인류사회와 그 구성원이 불안으로부터 해방되고 평화를 느낄 수 있으면 그 평화는 지속적으로 전일적으로 유지,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질이나 생활수준의 개선은 경제 발전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치제도의 개혁이 수반되어야 하며, 민주화 역시 어느 정도 경제 발전과 세계화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발전해야 한다. 오늘날의 세계화 추세 속에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국제적 협력을 전제하고 있으며 국가 간의 협력은 국가 차원뿐 아니라 비정부 차원에서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수반할 수 있는 제도적, 구조적 장치의 마련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빈곤과 기아를 퇴치하며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비정부 조직과 기구가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제도적 장치를 보장해야 하며, 자유를 보장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객관적 환경이 존재해야 한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될 때 인간안보 문제의 해결이 가능해지며 전일적 평화가 실현될 것이다.

다. 아시아 인간안보 발전을 위한 고려사항

21세기 아시아 평화의 핵심은 인간안보의 해결 및 보장으로 축약할 수 있다. 이는 탈냉전 이후에서 입증되듯이 기타 지역 및 국가보다 아시아에서는 대량학살, 내전, 국지전, 지역전 등 무력 충돌이나 갈등이 비교적 드물게 발생한 사실에 근거한다. 아시아에도 민족적, 종교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런 갈등이 무력전이나 전쟁의 양상으로 나타난 경우가 상당히 드물다. 대신 아시아의 특징은 이러한 갈등 요인이

간헐적인 국지적 테러 형태로 표출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들 요인의 무력화나 전쟁으로의 확대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종교와 민족 갈등이 잠재한 아시아에서 이들의 무력 충돌이나 무력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인간안보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보장하는 것이다. 종교와 민족 갈등이 무력화되거나 무력전으로 승화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차별된다는 인식 속에서 물질적 충족을 갈망하는 욕망이거나 충당된 물질적 자원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이나 세력 확대를 위해 무력, 테러, 선전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데 있다. 이런 맥락에서 아시아 지역도 종교와 민족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이 아니다. 이러한 종교와 민족 갈등의 잠재적 소지의 현실화 및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의 인간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시아 지역에서 갈등의 소지가 다분한 민족은 대부분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들 종교의 종류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종교들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평화의 내적 지향성과 외적 구조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들은 인간의 안정과 평온함(평화)을 추구하는 평화관을 가지고 평화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공통된 목적이 있다. 이 같은 종교 철학의 맥락에서 보면 이들이 추구하는 평화 가치관이나 개념은 대부분 유사하고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외적 구조, 특히 물질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 및 선천적이나 불균형한 물질 자원의 분포 등의 요인에 갈등의 소지가 있다. 이 경우 종교 집단들은 종교의 이름 아래 평화의 외적 구조를 재확립하고 인간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자신이 추종하는 종교의 철학 가치관과 목적을 왜곡하여 이를 외적 구조 재정립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21세기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안보 차원에서 종교 간의 갈등 요인이 인간안보를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갈등 관계에 처한 종교집단 간의 대화를 촉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종교집단 간에 갈등 문제를 주제로 대화가 이루어진 적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정부나 국제기구가 종교집단 간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재 역할을 해서 기대성이나 효과를 본 적이 역시 거의 없다. 그럼에도 최소한 소극적 평가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적극적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종교집단 간의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인간안보의 확보 차원에서 이른바 ‘예방 조치(preventive measures)’의 일환으로 설득할 수 있는 것으로 내재적 지향성을 이끌어 내면서 모든 종교의 평화관을 보편적 가치관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또한, 내재적 지향성의 정립은 외적 구조에 대한 각 종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외적 구조의 평등하고 균등한 배분 및 공유를 구현시킬 수 있다.

둘째, 외적 구조의 실질적 균형을 위한 정보 공유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시아 지역 국가의 인간안보 방면의 정보 공유는 ASEAN, ASEAN+3, APEC, ADB, UNDP와 UNHCR 아시아사무소 등 지역 조직들의 다년간의 노력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조직 내에는 정보 수집에서부터 이를 수치화하고 발송하는 전담 기구들이 잘 구축되어 있다. 이들의 정보망도 잘 갖춰져 있어 실시간에 인간안보의 각 요소에 대한 각종 정보를 역내 국가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조직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일례로, 에너지의 경우 모든 조직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조직에 따라 분석 평가 내용도 차이가 있다. 대신 인간안보 영역에서 국가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요구하는 요소에 대한 정보는 관련 국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마약, 무기 등의 밀거래와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정보는 각국의 사법 당국에 정보를 의존하고 있다.¹³⁴ 이처럼 초국경 안보문제는 사법 당국 간의 한층 더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수치상으로 계산하기 쉬운 공개된 정보보다 음성적으로 생성되고 있는 인간안보 위협 요소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보 공유 시스템의 확립을 위한 각국의 관계 당국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역내 국가는 인간안보의 음성 요소에 대한 조사와 연구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관계 당국이 지역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론상에서나마 이러한 논의의 장을 갖춘 역내 협력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하이협력기구(SCO)라고 할 수 있다. 동 기구의 설립 취지와 목적 중 하나가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역내 국가 간의 협력 증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지역으로부터 발생하는 무기 및 마약 밀거래는 아직도 효과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또 하나의 예로 불법 이민자 문제가 비교적 심각한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역내 국가와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이들이 국내에 유입될 때는 정상적인 경로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 국적 국가에서도 이들의 동태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이른바 중개업소나 중개자들에 대한 사전 감독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와 공유하는 것도 사전 예방 차원에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존의 질서 구도 내에서 인간안보의 확보를 위한 협력 공동체를 마련하는 것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인간안보 문제는 하위 지역(sub-

¹³⁴ 조성권, “초국가적 위협: 테러, 마약, 범죄조직의 상호연계와 새로운 대응시각,”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8집 1호 (한국세계지역학회, 2010), pp. 317~340.

regional)차원에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역내 국가 간의 협력과 소통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안보 문제가 초국경적인 문제이고 이들 문제의 파급 효과도 하위 지역의 범위를 초월할 수 있는 것들로서 총체적인 지역 차원에서 이들 문제에 대한 정보 교환, 공유, 그리고 해결을 위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협력체는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경제협력체는 지역 금융위기나 경제위기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운영되고 있다. 인간안보의 의미에서 역내 기아, 빈곤, 소득격차, 그리고 이들 요인들로 인해 파생되는 인간안보의 위해 요소들(예: 교육, 젠더, 전염병 등)을 대비할 수 있는 지역 협력체가 부재한 것도 사실이다.

인간안보의 예방 차원에서의 협력 공동체는 역내 국가의 협력을 전제하고 있다. 인간안보의 사전 방지와 보장 강화를 위해 지역적 전담기구가 조직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인간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내 국가의 노력은 개별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일부 국가는 경제 역량을 이용해 이른바 ODA를 조성해서 인간안보의 위협을 받는 국가에 재정과 노하우 지원을 해왔다. 인간안보 피해국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지원 경로는 국제기구, 즉 UN 및 산하 기구와 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후자의 경우 세계적인 차원에서 자원의 분배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보다 상황이 더욱 열악한 지역이 우선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평화가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역내 국가 간의 협력에 기반을 둔 지원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아시아 평화의 새로운 협력구조

가. 아시아 평화 협력구조의 요소

(1) 세력균형

(가) 미국 주도 동아시아 질서의 동요

제2차 세계대전의 주전장이었던 유럽에서는 미·영·프·러 4강에 의한 점령으로 전쟁이 종료되었지만,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의 항복 이후 중국과 한국에서 내전이 잇달아 발발하였다. 1949년 중국 내전에서 국민당 장제스군이 대만으로 패퇴하여 본토에서는 사회주의 중국이 들어섰으며, 한반도에서는 남북한 지역에 단독정부가 들어선 이후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벌어져 마침내 정전 협정과 함께 적대적인 두 개의 체제가 수립되었다. 미국은 우세한 군사력과 일본, 한국과의 쌍무동맹관계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압도적인 세력 우위를 보이고 있다.

냉전기 동안 미국은 ‘미·일 안보조약(1952)’과 ‘한·미 상호방위조약(1953)’의 쌍무동맹관계(Hub and Spokes System)를 체결하여 미군을 전진배치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패권을 확립하였다. 하지만 역사적 갈등으로 인해 한·일동맹이 맺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서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이하 NATO)와 같은 한·미·일 집단 방어 동맹은 성립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중국·북한, 러시아·북한도 1961년에 각각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과 ‘조·소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였으나, 중·러 분쟁으로 동유럽의 바르샤바조약기구(Warszawa Treaty Organization: 이하 WTO)와 같이 러시아·중국·북한을 묶는 집단 방어 동맹은 형성되지 못하였다.

1970년대 들어 동·서유럽의 긴장 완화와 베트남 전쟁의 종식에 힘입어 동아시아 지역에도 긴장 완화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하였다. 냉전이 한창이던 1972년 중국과 일본이 먼저 관계를 정상화하였으며 미국과 중국은 연락사무소의 설치에 뒤이어 1979년에 수교하였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냉전 구조가 해체되기 시작한 것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가 시작된 1980년대 후반부터로 1990년에 한국이 러시아와 수교했고, 2년 뒤인 1992년에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북한은 일본과 수교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이은혜 사건’으로 중단됐고 미국과는 1994년의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 이후 연락사무소의 설치가 추진됐다가 중단되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반관·반민 차원의 동북아 안보대화가 시작되었으나, 역내 세력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미국은 무관심하였고, 세력 열위에 있었던 중국은 감히 세력 변경을 시도하지 않아 진전이 없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압도적 군사력을 갖고 있던 미국은 쌍무동맹관계에 치중한 채 안보 레짐의 형성에 무관심하였으며, 중국 역시 1990년대 중반까지는 동북아 안보 레짐의 구축에 나설 여력이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이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오르면서 새로운 주변 국제질서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전환했으며,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보를 위해 다자안보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세력 우위에 있는 미국은 새로운 다자안보 질서 형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한·미, 미·일 간 쌍무동맹에 기초한 위기 관리와 억제 기능을 유지·개선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¹³⁵

¹³⁵- Ralph A. Cossa, “U.S.-ROK-Japan: Strengthen the Ties that Band,” Tae-hyo Kim and Brad Glosserman (eds.), *The Future of U.S.-ROK-Japan Relations: Balancing Values and Interests* (Washington, D.C.: CSIS, 2004).

부시 1기 행정부에 들어와 미국은 중국의 적극적인 외교 자세를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중국을 전략적으로 포위하는 동아시아 전략을 구상하였다. 이는 미국이 아직 냉전 해체에 따른 안보 이익을 중국, 러시아 등과 공유하려는 의사나 행동이 부재했다는 것을 노정하는 것이다. 그 대신 미국은 한국, 일본과 기존 쌍무동맹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동맹 국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미·일 동맹 네트워크’의 강화를 시도하였다.

미국이 주도하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서의 테러와의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하면서 북핵 문제를 이들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자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 등 동아시아 질서 재편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남북관계의 급진전과 한·중 관계 심화, 일본과 한·중 양국의 갈등 양상을 지켜보면서, 미국은 1기 부시 행정부 정책으로는 역내 주도권의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동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질서를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부상하는 중국을 관리하기 위해 봉쇄 정책을 취하기보다는 적극적인 포용 정책을 통해 중국을 다자 간 안보레짐 속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힘을 얻기 시작하였다. 미국이 새롭게 구상한 동아시아 질서는 제2기 부시 행정부에 들어와 한·미, 미·일 쌍무동맹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중국과 협력하는 ‘동아시아 다자안보레짐’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나) 중국의 부상과 세력전이

199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의 부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도전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유럽의 경우와 달리, 동아

시아 지역의 중국과 극동 러시아의 군사력은 여전히 미국의 군사력에 필적할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 세력균형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중 간의 G2 대화는 완전한 세력균형의 결과라기보다는 경제적으로 급부상하는 중국을 맞이하여 ‘평화적인 세력전이’의 필요성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이 여전히 우세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전략적 타협을 시도한 것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고 있으나 과거 소련처럼 1급 위협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전략적 판단에 기인한다. 중국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력 부상을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몰락을 추구하기보다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구상은 부시 2기 행정부에 들어와 바뀌기 시작하였다. 부시 2기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은 북한 문제를 계기로 주변 강대국들을 하나로 묶어내어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외교적 전략에 따른 것이다.¹³⁶ 미국은 중국을 세계 시스템에서 ‘책임 있는 이해 상관자’로 인정하고, 중국과 장관급 경제전략 대화와 부장관급 고위 안보 대화에 착수하였다.¹³⁷ 중국도 역시 2001년 SCO 창설을 계기로 다자안보 협력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동아시아 다

¹³⁶- Philip Zelikow, “The Plan That Moved Pyongyang,” *The Washington Post*, February 20, 2007. 당시 라이스 미 국무부장관의 자문관이었던 필립 젤리코는 미국의 새로운 전략을 방어적 전략(defensive strategy)과 외교적 전략(diplomatic strategy)의 두 가지로 나누었다. 여기서 방어적 전략이란 대북 금융 제재나 유엔 제재 등을 통해 북한의 각종 불법 활동을 저지토록 하는 방안이다.

¹³⁷- Kerry Dumbaugh, “China-U.S. Relations: Current Issues and Implications for U.S. Policy,” *CRS Report for Congress* (CRS, July 14th, 2006), p. 8.

자안보협력에 적극성을 띠는 등 국가 전략이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 전략 변화는 군사력 증대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견제하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주변 환경을 안정시키는 데에 다자안보 대화를 활용하려는 의도이다.

6자회담 수석대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아주담당 부부장은 “중국도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검토해 왔으며, 현 국제상황이 이러한 접근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¹³⁸ 그리하여 미국과 중국 간에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논의할 전략 대화가 시작되었다. 2005년 8월 1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차 미·중 전략 대화에서는 중국 대표 외교부 다이빙기 상무부 부장이 먼저 동북아 안보체제의 필요성을 미국에게 먼저 제안하였고, 결국 2007년 6자회담 ‘2·13합의’에서 미국, 중국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6자회담 산하에 ‘동북아 안보 포럼’의 형성을 논의할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도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 이후 “정치적 결단이 가능한 중국의 정상급 인사와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하기 시작하였다.¹³⁹ 그리하여 오바마 정부는 정치, 경제, 안전 보장을 포함한 정상급의 전략 대화를 신설한다는 방침 아래 중국 측과 대략적 합의에 도달하였다. 미국 바이든 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참석하는 정상급 전략 대화가 이미 두 차례 개최되었다. 이러한 전략 대화가 ‘미·중 협조체제 (Concert of U.S.-China)’의 서막이 될지, 아니면 단순한 이해 조정 기구에 불과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138. Wu Dawei 외교부 아주담당 부부장(2006.6.13) 및 Ma Zhaoxu 외교부 정책연구국장(2006.11.7)과의 면담 내용.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자료(2007.3).

139. 『讀賣新聞』, 2009年 2月 2日.

(2) 이익균형

(가) 동아시아 안보 현안의 중층·복합구조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현안에는 근대 국가의 이행 과정에서 비롯된 현안과 전형적 근대 국제정치에서 나온 현안, 21세기의 새로운 현안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근대 국가의 이행과정에서 비롯된 현안으로는 해양 영토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 확정 문제, 양안 문제, 남북 분단 문제 등과 여기서 파생된 역사 교과서 갈등,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등이 있다. 그리고 근대 국제정치에서 나온 현안으로는 군비 경쟁, 무역 마찰 등이 있다. 최근에 21세기의 새로운 안보 현안인 해적 문제, 재해 공동 구제와 같은 인간안보 문제 등이 등장하였다.

서유럽 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침략에서 비롯된 동아시아 국가들의 근대국가 이행 과정은 불완전한 상태이다.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은 제국주의의 일원이 되는 데에 성공했으나, 한국과 중국 등은 식민지, 반식민지로 전락하였다. 그리고 태국을 제외한 나머지 동남아 국가들은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를 경험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영토 문제는 예외 없이 일본 제국주의와 관련이 있다.¹⁴⁰ 이에 비해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제 현안들은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옛 제국주의 세력들 간의 이해가 다양하게 얽혀 있다.

중국의 부상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근대 국제정치에서 나온 이익 갈등의 문제가 새롭게 부상했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력 신장과 군사력 증강은 동북아 및 동남아 지역 내의 세력균형을 크게 흔들고 새로운 이익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무역 마찰, 환율 변동과 같은

¹⁴⁰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싸고 중국, 대만, 필리핀과 분쟁, 북방 4개 도서를 둘러싸고 러시아와의 갈등, 독도를 둘러싸고 남북한과 대립하고 있다.

경제 현안들은 쌍무적인 대화를 통해 이익의 조정이 가능하지만, 영유권 분쟁 지역에 대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 배치와 그에 따른 해상 교통로 위협과 같이 여러 나라들의 이해가 걸린 안보 현안들은 역내 국가들 간의 이익의 조정과 균형이 필요하다.

21세기의 새로운 현안들도 다자 간 대화의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다. 황사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남북한과 중국, 몽골, 러시아, 일본의 협력이 필요하며, AI나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발생 시 공동 구조 작업과 같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인간안보의 문제들이 등장하였다. 그 밖에 9·11 테러 사태 이후 테러, 국제범죄, 해적,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는 일도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공동 보조가 필요한 안보 현안으로 부상하였다.

이처럼 동아시아 역내 안보 현안들은 근대 이행기, 근대, 21세기의 문제 등 역사적 배경이 서로 다르고 국가별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힌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동아시아 다자안보레짐을 구축하기 위해 참가국들이 복합적, 중층적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것은 유럽 국가들이 전형적인 근대 국제 정치의 문제만 안고 있어 이익의 조정과 이익균형의 달성이 비교적 쉽게 가능했던 것과 매우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나) 공동 위협과 이익균형의 추구

1) 동남아 지역: 재해공동구난 및 해상 교통로 안전 문제

동남아 지역과 관련된 공통의 안보 현안은 무엇보다 재난 관리 문제라고 볼 수 있다. ASEAN의 인간안보 문제는 ASEAN 지역의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경제적 여건 그리고 개별 국가들의 의지 부족으로 이 문제를 ASEAN 자체적으로 해결하

는데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어 동아시아 차원에서 협력이 요구된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2002년 중국에서 시작된 SARS로 인해 직접 타격을 입어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추산으로 6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AI는 2003~2004년까지 동남아 지역에 피해를 입혀, 베트남과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동남아의 지진, 해일과 연무도 역시 커다란 인간안보의 문제이다.

동남아 지역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로는 해상 교통로의 안전 문제가 있다.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일본 간의 영토 문제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2010년 9월 7일 센카쿠 열도 부근에서 일어난 일본 순시선과 중국 어선 간의 충돌 사고로 양국 관계는 극도로 긴장이 고조되어 있다. 또한, 남중국해에서는 남사군도나 서사군도의 영유권 및 석유·천연가스 개발을 둘러싸고 베트남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원유를 포함한 전략 물자의 99%를 해상을 통해 조달하고 있으며, 중국도 원유 수송의 95% 이상을 해상 수송에 의존하고 있다. 이처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두 해역은 동아시아 국가들 모두의 전략적 요충지이며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다. 따라서 어느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동아시아 해역을 장악하려 한다면 군사 충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동아시아 해역은 미국의 아시아 방위선과 중국의 해양 확대 전략이 마주치고 있는 곳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해군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영토분쟁 지역인 남사군도를 겨냥해 대함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본격적인 해양 능력 확장을 서두르고 있다. 결국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중국은 태평양의 미국 해군에 도전하게 될 것이다. 미·중 두 나라의 충돌하는 해상 방위선 안에 한반도, 대만,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남중국해 문제 등 모든 분쟁 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동아시아 해역에서 해상 교통로의 공동 관리 문제는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도 피해갈 수 없는 직접적인 문제이다. 만약 어느 특정 국가가 관계 당사국과의 대화와 협력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동아시아 해역에 대한 통제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려고 한다면, 미국은 물론 한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등 관련 당사국으로부터의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 동북아 지역: 북핵 문제, 대만 문제

이러한 동북아 지역의 여러 가지 안보 현안 가운데 민감성을 띠고 있는 문제로는 대만 독립, 한반도 평화체제 등이 있지만, 현 시기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서 공통의 이해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북핵 문제이다. 2001년 9·11 테러 사태 이후 핵무기의 비확산 문제가 반테러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북핵 문제가 반테러·반확산의 문제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역내 국가들의 공동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

6자회담의 목적은 다양한 역내 국가들 간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의제로 삼았던 것은 다른 안보 현안과 달리 공동 이해를 갖고 있어 상대적으로 국가들 간의 이익 조정이 쉬웠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의 해결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 동북아 핵 질서의 안정성 확보라는 동북아 국가들 공동의 가치와 규범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익균형점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6자회담 산하의 동북아 평화 안보 실무그룹이 동북아 다자안보 포럼의 구심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에 비해 대만 문제는 국가들 간의 이해 조정이 어려운 문제이다. 중국은 대만 문제가 내정 문제라며 국제사회의 개입을 극구 반대하고

있다. 역내 국가들인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역외국가인 미국도 ‘하나의 중국’ 원칙에는 원론적으로 지지하면서도 이 문제는 중국과 대만 사이의 당사자가 풀어야 할 문제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이해 조정에 나서고 있지 않다. 이처럼 대만 문제가 당면한 안보 현안으로 떠오르지 않는 것은 양안 위기의 발생 이후 중국과 미·일동맹 간의 세력균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이익균형을 모색할 상황이 아니라는 데에 가장 커다란 이유가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대만의 안전이 훼손당할 경우 전략물자의 99%를 의존하는 해상 교통로가 위협당할 위험성 때문에 급격한 통일과 같은 현상 변경보다는 기존의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데서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

(3) 국제규범

현재 동남아 지역은 ASEAN 참가국들이 동의한 국제규범을 갖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에서는 6자회담의 산하에 있는 ‘동북아 평화 안보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국제규범을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국제규범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동아시아(동남아, 동북아) 지역은 정치체제나 경제 개발의 수준, 사회·문화적인 규범 등에서 이질성과 다양성을 가진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보다 경제적 상호의존도 커지고 역내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럽의 경우와 달리 국경을 넘어선 사람과 기업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¹⁴¹ 그런 점에서 동북아 지역은 유럽과 달리 지역정체

¹⁴¹- Sheldon W. Simon, “Security, Economic Liberalism, and Democracy: Asian Elite Perceptions of Post Cold War Foreign Policy Values,” *NBR Analysis*, (Summer 1996), pp. 5~32.

성이 형성되지 않았다. 실제로 역내의 경제적 상호의존과 통합 움직임이 다자 간 안보레짐을 촉진하는 움직임은 1990년대 이후에야 처음 나타났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근대 이행 과정에서 제국주의 대 식민지의 구도 속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형편이었다. 태국을 제외한 ASEAN 9개 회원국 모두가 식민지 통치를 경험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권적 평등, 내정불간섭, 영토의 보전과 같은 근대적인 국제규범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 뒤에도 중국과 대만의 분단, 남북한의 분단이 계속되고 있으며, 일본도 헌법 제9조에 따라 정식 군대를 보유하지 못한 채 ‘보통’의 국민국가 형태를 취하지 못하는 등 근대 민족국가의 완성이라는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1960년대 후반 인도차이나 전쟁이 베트남 전쟁으로 전이되면서 이에 위기감을 느낀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이 ASEAN을 결성하였다. ARF는 1994년 ASEAN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동아시아 최초의 다자 간 안보 포럼이다. 이 포럼에는 동남아 및 이 지역 국가들이 아·태지역에서의 신뢰 구축 조치와 지역 평화유지센터를 포함한 평화유지 협력, 공개 가능한 군사 정보의 상호교환, 예방외교와 위기 방지, 포괄적 안보, UN의 재래식 무기등록제도 참가 등을 주요 의제로 다자 간 안보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직까지 별다른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해당 국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포괄적 협력과 협력안보를 향해 발전 중이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냉전이 해체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에서야 비로소 다자 간 안보협력 대화가 제기되었다. 1990년대 들어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이 모두 참가하는 민간 차원의 다자안보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1993년에 시작된 동북아협력대화(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이하 NEACD)에서는 역내 안보 정세의 평가와 공동 관심사 토의, 군사 정보의 교환이 시행되고 있다. NEACD에서는 협력안보와 예방외교의 관점에서 참가국들은 상호투명성의 증대와 보장, 위기에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협력이사회(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 이하 CSCAP)는 1992년에 설립된 비정부기구로서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EU 등 20개 국가 또는 지역 대표가 참가하고 있다. 이 기구에서는 이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 안보 문제를 다루고 있다.¹⁴²

하지만 이러한 다자 간 안보 대화들이 동아시아 안보레짐으로 발전하기에는 많은 장애요인과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NEACD와 CSCAP는 정부 간 대화체가 아니라 1.5트랙의 반관·반민(半官半民) 내지는 민간부문의 대화체라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동아시아 안보레짐의 토대는 되지 못한다. ARF는 정부 차원의 회의이지만 동남아 국가들이 중심이 되고 동북아의 한국, 중국, 일본 등이 보조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 유일의 패권국인 미국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다만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6자회담을 매개로 이러한 다자 간 안보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대화와 협력의 습관을 쌓아가며 국제규범을 만들어 가는 데에 일정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규범과 규칙을 내부화하는 과정을 통해 동북아 안보레짐의 형성과 발전에 필요한 지역정체성 형성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¹⁴³ 현재 진행 중인 NEACD

142. 동북아 지역과 관련된 안보 레짐의 현황과 경과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엄태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한국의 선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6), pp. 77~187.

143. ノエル・M・モラダ, “地域秩序の制度化—規範と勢力均衡の間で,” 恒川 潤 編,

와 CSCAP, ARF 등에서 합의된 각종 국제규범과 규칙들은 동북아 해당 국가의 일반 국민들까지 확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정치인들이나 지식인들 사이에서 지역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으로 기능을 하고 있다.

(4) 지역정체성

(가) 지역정체성의 개념

아시아 지역에서 각국은 서구에 비해 뒤쳐진 근대화를 강력한 내부 결집을 통해 만회하고자 경쟁적으로 민족주의 중심의 발전 전략을 채택해 왔다. 특히 이러한 경향이 강했던 동북아 지역에서는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족주의적 경향이 심할수록 탈민족국가적 전망에서 지역 통합과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정체성을 논의하는 작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아시아의 지역정체성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지리적 인접성을 바탕으로 한 접근법이고, 둘째는 보편적인 시민사회의 관점에서의 접근법이다. 전자는 동아시아 문화 혹은 아시아 문화의 공동성에 기반을 둔 것이며, 후자는 시민사회의 지향성에 기반한 것이다.¹⁴⁴

첫째는 지리적 인접성에 따른 접근법이다. 우리가 흔히 ‘유럽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유럽이라는 지리적 경계이다.

『東アジアにおける地域秩序-アセアン・日本からの展望-』(東京: 防衛省防衛研究所, 2008年 3月), p. 53.

¹⁴⁴ 한승완, “동북아 시민사회와 ‘동북아 정체성’의 형성,” 사회와 철학 연구회 편, 『사회와 철학』, 제11호 (서울: 이학사, 2006), pp. 242~244.



하지만 유럽의 정체성은 지리적 경계보다는 유럽이라는 공간에 존재하는 헬레니즘이나 히브리즘과 같은 문화적 공통성으로 설명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들은 유럽에서의 두 차례 세계대전과 유고에서의 대량 학살을 볼 때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아시아 지역의 초국적 시민사회의 형성을 통해 아시아정체성을 규정하려는 시도이다. 공론장과 시민사회가 주변국에게 개방되면 같은 아시아 주민의 관심사에 대해 공동으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전망을 갖게 된다. 국가를 뛰어넘는 지역적 시민사회의 형성은 유럽의 경험을 볼 때 어느 정도 윤곽을 그릴 수 있다. 유럽에서 초국적 시민사회의 형성은 ‘위로부터의’ 통합 과정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와 정당성에 대한 요구로 이해된다.

유럽 시민사회의 주체적 조건은 바로 유럽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아직 유럽 시민들의 의식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1999년 조사의 결과,¹⁴⁵ 유럽정체성에 대한 긍정의견이 룩셈부르크에서 가장 높은 72%를 차지한 데 이어, 이태리(71%), 스페인(63%), 프랑스(59%), 벨기에(57%), 네덜란드(55%), 오스트리아(50%), 독일(49%) 등의 순서로 높게 나왔다. 반면, “오직 국민정체성만 가지고 있다”는 비중이 높은 나라로는 영국 67%, 스웨덴과 핀란드 61%, 그리스 60% 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럽인들이 유럽정체성과 국민정체성에서 나라마다 다양한 편차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유럽인들은 한편으로 형성 과정에 있는 유럽정체성과 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지배적 형태로 유럽인의 생활을 규정하고 있는 민족정체성 혹은 국민정체성이 혼재하고 있다. 이것은 아

¹⁴⁵ EU, *Wie die Europäer sich selbst sehen, Aktuelle Themen im Spiegel der öffentlichen Meinung* (Luxemburg: EU, 2001), p. 11.

직 유럽인들이 ‘혼성(混成)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¹⁴⁶

(나) 아시아의 지역정체성

아시아 지역은 종교·문화적 차이, 경제 발전의 단계, 정치체제의 성격 등에서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시아의 정체성을 말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ASEAN의 경우, 1967년 창설 이래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ASEAN 정체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남아시아 지역 ASEAN 회원국의 경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2007.9~11)에서 “ASEAN의 시민으로 자각한다”는 반응은 평균 76.8%로서 그렇지 않은 경우 23.3%보다 3배 이상 높았다. 국가별로는 라오스(96.0%), 캄보디아(92.7%), 베트남(91.7%), 말레이시아(86.8%), 브루나이(82.2%)의 순으로 긍정적이었고, 싱가포르(50.7%), 미얀마(40.5%), 태국(33.0%), 필리핀(30.4%), 인도네시아(27.1%) 등이 비교적 부정적이었다.¹⁴⁷ ASEAN 국가들끼리의 경제적 유사성(39.7%), 정치적 유사성(34.9%)을 낮게 본 반면, 문화적 유사성(67.4%)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와 ASEAN에 대한 지역정체성이 비교적 높게 나온 이유는 주로 문화적 유사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⁸ 그 밖에 ASEAN 회원국이 된 것이 자기 조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평균 88.5%로

¹⁴⁶ 한승완, “동북아 시민사회와 ‘동북아 정체성’의 형성,” p. 245.

¹⁴⁷ Eric C. Thompson and Chulanee Thianthai, *Attitudes and Awareness toward ASEAN: Findings of a Ten Nation Survey* (ASEAN Foundation, 2008), p. 53 <<http://www.aseanfoundation.org/documents/Attitudes%20and%20Awareness%20Toward%20ASEAN.pdf>>.

¹⁴⁸ *Ibid.*, pp. 43~44.



높게 나와, ASEAN의 회원국이 됨으로써 매우 긍정적인 결과가 초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⁹

유럽과 동남아(ASEAN)의 지역정체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직 완전 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유럽과 ASEAN의 정체성 형성에서 중요한 시사점은 지역정체성에 기초하여 유럽연합(EU)이나 ASEAN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EU와 ASEAN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역정체성이 점차 확대·강화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아직 ‘아시아정체성’을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적어도 ASEAN에 이어 경제통합과 다자안보 기구의 논의가 진행 중인 동북아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지역정체성’의 형성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동북아정체성’은 한·중·일 3국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과는 달리, 3국 국민들은 아직 공동체 형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초국적 동북아 시민사회’의 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¹⁵⁰ 다만, 유럽과 동남아의 사례에서 보듯이, 경제적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나 공동의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법·제도 공동체를 먼저 만든 뒤 점차 지역정체성을 형성한 유럽(EU)과 동남아(ASEAN)의 사례는 동북아 지역정체성의 형성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¹⁴⁹- *Ibid.*, p. 45.

¹⁵⁰- 한승완, “동북아 시민사회와 ‘동북아 정체성’의 형성,” pp. 250~251.

나. 새로운 아시아 평화 협력구조의 모색

앞에서 새로운 아시아의 평화 협력구조(governance architecture)를 요소별로 살펴보았다. 기존 평화구조는 역내 국가들 간의 세력균형을 토대로 하면서 당면 현안들에 대한 이익균형을 취하는 것이었다면, 새로운 아시아 평화 협력구조는 중장기적으로 아시아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면서 당면한 현안에 대해 국제규범을 확립해 나가는 일련의 외교적 노력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아시아의 평화 협력구조는 냉전시대에 형성된 기존 질서에 대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며, 국가들 사이에 내재된 근본적인 모순들을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상을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 아래의 <그림 II-1>이다.

●그림 II-1 새로운 아시아 평화 협력구조의 요소



하지만 새로운 아시아 평화 협력구조는 기존의 세력균형과 이익균형을 배제하고 정체성과 국제규범만으로 달성될 수는 없다. 새로운 평화 협력구조는 역내의 국가들 간의 세력균형을 전제로 이익균형을 맞추거나, 혹은 세력전이를 통해 새로운(잠정적) 세력균형 관계에서 이룩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아시아 평화 협력구조도 역내의 국가

들 사이에 세력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실현 되더라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강대국을 중심으로 볼 때 현재 아시아 지역은 크게 동북아시아 지역, 동남아시아 지역, 서남아시아 지역 및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미국을 제외한 역내 세력균형을 따져보면, 중국을 한 축으로 하고 다른 나라들을 다른 축으로 하는 세력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지역별로 세력 관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동북아 지역: 중국(+북한) > 한국, 일본(+대만)

동남아 지역: 중국 >> ASEAN 10개국

서남아 지역: 중국(+파키스탄) > 인도

동아 태 지역: 중국(+북한, 파키스탄) ≍ 한국, 일본, 인도, 호주, ASEAN

위와 같은 세력 관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세력전이를 통해 새롭게 세력균형을 이루거나 혹은 기존의 세력 관계 위에서 이익균형을 모색해 왔다. 냉전시대의 평화구조는 바로 기존의 세력 관계 속에서 현상 유지를 위주로 역내 국가들 사이에서 공동 이익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세력균형이나 이익균형은 하드파워가 기초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세력균형이나 이익균형은 각국의 전략에 의해 끊임없이 도전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보다 항구적인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역내 시민들 사이의 정체성과 국제규범이 형성되어야만 한다. 즉, 기존 평화구조에서 강조되어 왔던 세력균형이나 이익균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지역 내 역학 관계의 변화와 위협 양상의 변화, 추구하는 가치와 평화상태의 변화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다자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아시아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해야만 보다 안정적인 평화 협력구조를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신아시아 외교가 추구하는 새로운 아시아의 평화가 단순한 구조의 창출이 아닌 평화의 ‘협력구조’를 이끌어내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

새로운 아시아의 평화 협력구조(governance architecture)는 기존의 세력균형 혹은 이익균형을 통한 소극적 평화의 창출 노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 지역에서의 국제규범과 정체성을 창출함으로써 보다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집합적 노력의 산물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아시아의 평화 협력구조의 특징은 크게 질서, 평화 상태, 권력, 주체의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질서의 측면이다. 기존의 평화구조가 냉전시대의 질서를 깨기 보다는 잘 관리해 나가는 현상 유지를 위주로 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아시아의 평화 협력구조는 냉전시대에 형성된 기존 질서에 대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것이다. 중국의 부상(浮上)으로 아시아 지역의 역학관계가 변화하고 있고, 세계화의 과정에서 각 국가들이 추구하는 가치나 권력(power), 평화 상태에 대한 인식들이 변화해 가면서 새로운 아시아의 평화구조 또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시대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의 통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를 넘어 아시아와 세계 질서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그 자체로 불안정한 질서이기 때문에 현재 동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질서의 불안정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은 질서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정성의 제거를 통한 새로운 아시아 질서 안정의 모색이기도 하다. 결국 새로운 아시아의 평화 협력구조는 한반도의 변화와 아

I
II
III
IV
V

시아의 변화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현상 변경적 질서를 반영한다. 그리고 이는 특정 강대국 혼자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역내 국가들의 협력과 지지를 통해서 창출된 질서이어야만 평화구조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둘째, 평화 상태의 측면이다. 기존의 평화구조가 세력균형을 중시하는 소극적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아시아의 평화구조는 세력균형이나 이익균형을 넘어 국가들 사이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모순들을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 평화를 추구한다. 기존의 평화구조는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위협이 없는 상태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해 나가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국가 생존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평화구조의 확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아시아 평화 협력구조는 소극적 평화 구축을 바탕으로 자연재해, 빈곤, 질병, 국제범죄, 테러 등 오늘날 아시아가 접하고 있는 인간안보의 위협에 대처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평화를 추구한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 만연해 있는 인간안보의 문제들은 특정 국가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역내외 국가들의 공동 대처가 필요한 만큼 다자협력을 통한 적극적 평화 상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이다.

셋째, 권력(power)의 측면이다. 기존의 평화구조에서는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hard power)가 국가들 간 역학 관계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평화 협력구조에서는 하드파워와 함께 그 나라의 학문적 지식이나 문화 전파력, 도덕적 우월성, 의제 설정(agenda setting) 능력과 같은 소프트파워(soft power)가 견비되고, 이를 영리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만이 지역 내의 역학 관계를 선도해 나아갈 수 있다. 즉,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국제규범과 지역 정체성을 형성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파워(smart power)를 갖추어야 한다. 참여국들의 지지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다자협력관계에서 과거와 같이 하드파워에만 의존해서는 역내 국가들의 지지와 협조를 얻어낼 수 없다. 새로운 평화 협력구조에서 도덕적 우월성이나 문화 전파력 등과 같은 무형의 힘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소프트파워 역시 하드파워가 밑받침이 되어야만 효과적인 힘이 될 수 있는 만큼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필요한 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힘의 영리한 사용 능력’이 국가 간 역학 관계의 중요한 권력(power)이 되는 것이다.

넷째, 주체의 측면이다. 기존 평화구조는 구조 형성의 근간이 하드파워에 있었던 만큼 국가에 의한 협상이 주된 것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평화 협력구조는 이를 뒷받침하는 힘(power)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협력구조를 형성하는 주체 또한 국가뿐만 아니라 각국의 시민사회와 이들과 연대한 국가 간 국제기구(IGO) 및 비국가 간 국제기구(INGO) 등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국가가 중심이 되는 국제기구를 만들고 협의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한 민간의 국제구조 및 봉사활동, 문화 교류 협력, 사회연대 활동 등은 아시아정체성을 형성해 나아가는데 중요한 동인이 된다. 또한,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연대, 국경을 초월한 국가 및 시민사회들 간의 연대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과 협의체가 새로운 평화 협력구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아시아 지역은 문화, 인종, 역사, 종교적인 다양성과 함께 지역적 차등성이 상존하는 곳이다. 따라서 각 국가나 지역이 처한 문제 또한 천차만별이다. 모든 병에 동일한 처방이 있을 수 없듯이, 처한 상황과 문제에 따라 해결 방법과 주체는 다양할수록 효과적이다. 새로운 아시아 평화 협력구조는 과거 국가 중심에서 벗어나 아시아의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



한 국제적 협력구조를 추구함으로써 공유하는 인식의 접점을 확대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아시아 지역의 정체성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표 11-7 새로운 아시아 평화 협력구조의 요소별 특징

세력균형, 이익균형	아시아 평화 협력구조	국제규범, 정체성
현상 유지	질서	현상 변경
소극적 평화	평화상태	적극적 평화
하드파워	권력	스마트파워
국 가	주체	시민사회 등

3. 아시아 평화의 새로운 추진수단

가. 스마트파워 외교의 필요성

이명박 정부는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란 구호와 함께 지구적 수준으로 외교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G20이나 핵 안보 정상회의와 같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그 일례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물리적 역량(군사력, 경제력)이 전 지구적 확장(global reach)을 감당할 정도는 되지 못한다. 또한,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쉽지 않으며 특히 역내 대국인 일본이나 중국과 경합하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런 점에서 비물질적 차원에서 역량을 동원, 물리력의 열세를 보완하는 외교가 중시되어야 한다. ‘신아시아 외교구상’이란 구체적인 외교 정책을 인도할 전략 개념(guiding concept)도 이런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소프트파워가 그 전략 개념 중 하나이다. 이는 군사력이나 경제력과

같은 물리적 자원을 동원하여 상대방을 강제하는 전통적 외교보다는 지식, 이념, 문화 등 비물질적 자원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선호를 바꾸어 동의를 이끌어내는 외교이다.¹⁵¹ 사실, 소프트파워는 국제정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성찰 속에서 제기되는 개념이다. 21세기 국제정치는 지구화와 민주화, 정보 혁명, 특히 인터넷의 확산으로 대변되는 삶의 물질·지적 조건의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권력의 장이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고 있다.

첫째, 국제정치의 근간이 되는 권력에 대한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기왕의 국가 간 경쟁이 기본적으로 군사력과 경제력의 획득을 위한 경쟁이었다면 21세기에는 지식과 기술이 국력의 기반적 요소로서 점차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은 사회와 국제질서 변화에 커다란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이른바 지식국가(knowledge state)가 강조되는 이유이다.

둘째, 근대국가로서 웨스트팔렌체제는 커다란 시련을 맞고 있다. 지구화와 민주화, 정보화를 겪으면서 비정부 행위자의 위상이 현격히 증대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국가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꾸준히 증대되고 있다. 또한, 초국적 네트워크를 짜면서 힘을 축적하는 비정부기구(NGO), 종교 조직, 강력한 개인(super-empowered individual) 등은 지구적 시민사회를 조직하여 국제사회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국가 간 거래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존의 국제정치 체제에 도전을 해오고 있다. 정보화는 이런 변화의 핵심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21세기 외교는 물리력이 아닌 정당성에 기반을 둔 규범과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한다.

¹⁵¹- Joseph Nye,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셋째, 국제정치에서 문화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여기서 문화란 예술과 관련된 문화 활동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 행동 양식, 경제 체제, 가치관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구화와 정보화를 매개로 다양한 정보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정부 간 외교를 넘어서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교류가 확산되고 이를 통해서 특정 국가의 문화가 전파되며 그 결과로 권력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 외교(public diplomacy)와 문화 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소프트파워에 근거한 외교가 요청된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하드파워 외교가 쇠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미국이 소프트파워를 내건 맥락은 강력한 하드파워를 보완한다는 데 있었다. 따라서 하드파워는 여전히 핵심적인 국력 결정 요소이다. 미국은 우월한 하드파워에 소프트파워를 적절히 가미하는 이른바 ‘스마트파워’를 논하고 있다. 양자의 배합을 상황적 맥락에 따라 똑똑하게(smart) 하자는 것이다.

동아시아는 여전히 하드파워적 경쟁이 지배하고 있다. 전통적 세력 배분 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안보 불안이 상존하는 근대적인 권력 정치의 장이 지속되고 있다.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를 흔들어 놓은 이래 미국의 상대적 쇠퇴가 가시화되고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의 부상이 현저한 속에서 국제제도는 후자의 목소리를 담은 방향으로 변화 중이다. 미국과 일본 등 현상 유지 강대국의 상대적 쇠퇴와 중국 등 신흥국의 부상 사이에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은 국제 체계 내에서 새로운 위상을 확보해야 하는 고민을 안게 되었다. 또한, 전근대적 요소, 즉 역사 문제, 영토 문제 등도 엄존하고 있다. 독도 문제나 센카쿠 문제와 같이 역사와 영토 문제가 결합하여 외교적 파장을

확대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나아가 한국은 분단과 핵 문제라는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하드파워적 경쟁 환경 아래에 있다. 이러한 지역의 현실 때문에 한국은 하드파워 외교에 경도되어 왔다.

향후 한국의 과제는 기존의 하드파워 외교를 기반으로 하되 어떻게 소프트파워적 요소를 키워 적절히 배합, 활용할 것인가에 있다. 사실 한국과 같은 중견국에게 소프트파워의 의미는 크다. 대다수 강대국들은 경제력이나 군사력과 같은 자원을 동원하는 하드파워 외교를 주로 하고 소프트파워를 보완하는 스마트파워 외교를 추구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하드파워가 부족한 한국과 같은 중견국은 소프트파워의 측면에 역량을 경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신아시아 외교의 일환으로서 역내 평화를 추진하려면 한국은 역내 강국인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드파워 자원이 부족하므로 소프트파워 자원을 적절히 동원한 외교술을 강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신아시아 외교를 구현함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국의 스마트파워 외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논의의 핵심은 소프트파워에 둘 것이다. 왜냐하면, 스마트파워는 분석 개념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드러나는 권력 현상을 표현하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를 적절히, 똑똑하게 배합하면 스마트파워가 되고 따라서 정책 언어의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소프트파워와 달리 스마트파워가 학문 영역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사실 당장 한국에 주어지는 과제는 소프트파워의 증진과 활용이다. 한국은 아직 소프트파워의 개념을 원용하여 외교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일차적으로 소프트파워의 활용에 연구의 초점을 둘 것이고, 하드파워와의 결합의 배분율 등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내용은 피상적으로 다룰 것이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I
II
III
IV
V

같다. 첫째, 아시아에서 강대국의 소프트파워와 스마트파워 외교를 검토, 비판적으로 평가한 다음, 둘째로 한국이 추구할 수 있는 소프트파워 개념을 설정한다. 이는 제국적, 지배적 개념으로서 소프트파워를 극복하는 시도이다. 셋째, 이 글은 대안으로서 한국이 수행할 소프트파워 외교로 위치적 권력(positional power), 규범적 권력(normative power), 사회적 권력(social power), 문화적 권력(cultural power)이라는 세 가지 권력의 추구를 제시한다. 끝으로, 이를 토대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결합하여 중견국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평화 외교의 방향과 접근방식으로서 중재 외교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 소프트파워와 스마트파워의 개념과 이론

(1) 미국의 소프트파워/스마트파워론

소프트파워와 스마트파워 외교는 미국에서 창안되었다. 따라서 소프트파워의 글로벌 담론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다. 소프트파워란 용어를 창안한 조지프 나이(Joseph S. Nye)는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실천적 문제의식이라는 편향 속에서 소프트파워 담론을 제시하고 있다. 하드파워의 기준에서 지구 초강대국인 미국이 자신의 패권을 재생산하기 위한 차원으로 소프트파워를 활용하는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미국은 압도적인 하드파워를 보완하는 기제로써 소프트파워 활용을 제기하면서 “미국만이 제공할 수 있는 공공재를 국제사회에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¹⁵²

¹⁵² Richard L. Armitage and Joseph S. Nye Jr., *CSIS Commission on Smart Power: A More Secure, Smarter America* (Washington, D.C.: CSIS, 2007).

사실, 권력은 실행적(performative) 측면을 갖고 있다.¹⁵³ 가령, 하드 파워적 측면을 강조하는 권력 개념을 채용한다면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이익을 더욱 강하게 밀고 일극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믿게 된다. 반면 소프트파워적 권력 개념을 강조하게 되면 미국의 상대적 쇠퇴를 고려한 보다 신중하고 정당성을 갖는 외교에 주력하게 될 것이다. 권력을 어떻게 개념화하는가에 따라 특정한 정치적 선택이 정당화된다. 따라서 권력의 개념화는 정치적 경합의 재현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21세기 작동하는 권력 현상을 개념화하는—소프트파워로 부르는—일은 앞서 미국의 국제적 지위 변화와 관련된 특정 현실을 정치의 영역으로 이끌어내는, 그리고 무엇이 소망스러운 것인지를 지시하는 전략적 행위를 의미한다. 나이(Nye)의 소프트파워는 나이가 인식하는 미국의 고민과 전망을 담은 전략적 개념이란 측면을 담고 있다.

나이의 권력 개념은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의 실천적 문제의식이라는 편향을 강하게 띠고 있다. 그의 소프트파워는 미국의 패권쇠퇴론에 대한 지적 반격이라는 현실적 관심에서 출현하였다. 1980년대 후반 일본과 독일의 부상 속에서 미국쇠퇴론이 회자하던 때 그는 소프트파워 개념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폴 케네디(Paul Kennedy)의 『강대국의 흥망(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등의 저작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새 강대국이 부상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속에서 그는 『주도국일 수밖에 없는 미국(Bound to Lead)』라는 책을 통해 오히려 미국의 패권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그 이유를 소프트

¹⁵³ Stefano Guzzini, "The Concept of Power: A Constructivist Analysis," Felix Berenskoetter and M. Williams (eds.), *Power in World Politics* (London: Routledge, 2008).

I
II
III
IV
V

파워에서 찾았다. 그러나 그 반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 당시(1990년대) 미국의 하드파워가 꾸준히 신장되었고 경쟁국인 일본과 독일이 경제 정체를 거듭하여 미국의 상대적 우위가 뚜렷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미국의 지배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확립하는 사건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1세기 접어들면서 나이의 소프트파워론은 미국 내에서 점차 지지층을 얻게 된다. 미국이 압도적인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곤경에 처한 현실을 소프트파워라는 개념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대안을 찾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나이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는 미국의 문화나 가치, 이념의 실추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드파워에 지나치게 경도된 외교 정책상 오류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소프트파워 외교를 강화하면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1960년대 베트남 전쟁은 미국의 소프트파워를 실추시키는 사건이었지만 정책 수정 이후 소프트파워를 회복했던 것처럼 현재 역시 이라크전에 따른 소프트파워 훼손의 문제 역시 정책의 수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소프트파워는 하드파워적 초강대국인 미국이 자신의 패권을 재생산하기 위한 전략적 개념이다. 이미 갖고 있는, 일시적으로 잊혀진, 소프트파워 자원을 재조명하여 하드파워를 ‘보완’하는 부차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스마트파워론은 여기서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김상배가 지적하듯이 나이의 논의에서는 소프트파워 자원이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피상적이다.¹⁵⁴ 앞서 언급하였듯이 생산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 부재한 까닭은 일면 여기에 있다.

김상배는 나아가 나이의 소프트파워 개념이 기존의 국제정치 권력

¹⁵⁴ 김상배, 『소프트파워와 21세기 권력론: 네트워크 권력론의 모색』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9).

개념과는 달리, 권력의 관계적 맥락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행위자 기반의 개념화’라는 특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소프트 파워의 개념은 행위자 간의 밀고(push) 당기는(attract) 작용과 반작용의 인과 관계를 염두에 둔 인식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구조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 관계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⁵⁵

나이의 소프트파워는 미국이 당면한 현실적 고려를 해결하려는 전략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콘텐츠 역시 미국적이다. 그는 소프트 파워의 관계적 성격을 강조하면서도 결국 보편성을 갖는 자원을 투사할 때 전방위적 청취자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유와 민주 등 보편적 가치와 문화의 보유, 그리고 이를 발신하는 능력이 21세기 새로운 세상에서 요구하는 권력의 내용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이 담론을 따르자면 보편적 가치나 문화를 갖지 않는 국가는 궁극적으로 소프트파워를 가지기 어렵다. 결국, 미국식의 길(=보편화)을 추구할 수밖에 없으므로 미국의 이해관계를 무의식적으로 따라가는—즉, 미국의 이익이 관철되는 세계를 원하게 되는—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비근한 예로 일본은 보편 가치를 기조로 하는 가치 외교를 내세운 바 있으나, 그 가치가 결국 미국의 가치이기에 존재론적 비판을 받고 소프트파워를 오히려 상실한 측면이 있다. 미국 담론을 좇다 보니 야기되는 정체성의 부조화 문제인 것이다.¹⁵⁶

나이의 담론을 따르자면 소프트파워 전략의 성공 열쇠는 자기의 체계적 발신이다. 자기가 매력적으로 보여야 상대방이 본받으려 끌려오는 것이다. 남에게 통하는 문화와 가치를 갖춰야 하고, 이에 대해 지속

155. 위의 책.

156. 손열, “소프트파워의 정치: 일본의 서로 다른 정체성,” 『일본연구논총』, 제29호 (현대일본학회, 2009), pp. 35~57.

성과 신뢰성을 대외적으로 투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내적으로 엘리트 간, 그리고 엘리트와 대중 간 자기 모델에 관한 통일성(unity)을 이루어야 한다. 소프트파워 전략은 기본적으로 국내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시간이 걸리는 장기적 프로젝트이다. 나이의 소프트파워는 “눈에 보이는 특정한 행위를 추동하는 것이 아니라 확산된 효과, 그리고 일반적인 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¹⁵⁷ 따라서 하드파워의 행사가 용이해지도록 환경을 정비해 주는 일종의 “환경적 목표(milieu goal)”를 달성시키는 수단이기도 하다.¹⁵⁸ 이런 점에서 보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족한 하드파워를 소프트파워로 만회하려는 중견국, 약소국에 나이의 소프트파워론은 생각보다 매력적인 전략은 아니다. 효과도 간접적이고 일반적이며,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이다.¹⁵⁹

요컨대, 나이의 권력론은 강자의 권력론, 제국의 권력론으로서 그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게 만드는 능력’으로 ‘부드러운’ 권력자의 이미지를 구성해 놓았으나 이는 결국 지배(domination)의 과정이다. 권력은 강자가 약자의 이익을 형성(shaping)하는 것으로 관념하는 것이다. 이렇다면 약소국 혹은 중견국 소프트파워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지배’의 담론에 충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념 정의가 정치적 행위임을 고려할 때 개념화와 행위에 대한 성찰이 대단히 중요하다. 권력 개념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이론화를 통해 비패권국, 중견국의 소프트파워론이 새롭게 모색되어야 한다.

¹⁵⁷- Nye,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p. 16.

¹⁵⁸- *Ibid.*, p. 17.

¹⁵⁹- 손열, “소프트파워를 다시 생각한다: 조지프 나이의와 대담,” 『미래전략』, Vol. 3 (서울: 미래재단, 2006), pp. 126~138.

(2) 아시아를 엮는 스마트파워 외교 경쟁

아시아 주요국들은 체계적으로 소프트파워 외교 전략을 만들어 실행에 옮기고 있다. 아시아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미국은 압도적인 하드파워를 보완하는 기제로써 소프트파워 활용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대동아시아 전략에서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적절히 배합한 신동맹 체제로 변환하여 미국이 원하는 지역 질서를 구축하려는 구상을 내어놓은 바 있다.¹⁶⁰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하드파워를 소프트파워로 만회하고, 균형을 이루려는 미국의 시도는 더욱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군사뿐만 아니라 금융, 기후 변화,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레짐 형성을 위한 양자적, 다자적 공헌을 외교정책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¹⁶¹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미국은 범정부적 공공기구 추진체계를 수립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국익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경제적 부상에 걸맞은 또 한 차례의 매력 공세(charm offensive)를 준비하고 있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시 위안화 절상

¹⁶⁰- Richard L. Armitage and Joseph S. Nye, *The U.S.-Japan Alliance: Getting Asia Right* (Washington, D.C.: CSIS, 2007).

¹⁶¹- Hillary Clinton, "Statement of Senator Hillary Clinton Nominee for Secretary of Stat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January 13, 2009, <<http://foreign.senate.gov/testimony/2009/ClintonTestimony090113a.pdf>> (검색일: 2009.4.27); Hillary Clinton, "U.S.-Asia Relations: Indispensable to Our Future," Remarks at the Asia Society, February 13, 2009, <<http://www.state.gov/secretary/rm/2009a/02/117333.htm>> (검색일: 2009.4.27); Hillary Clinto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Collaborating to Address Global Concerns," February 16, 2009, <<http://www.state.gov/secretary/rm/2009a/02/117349.htm>> (검색일: 2009.4.27); Richard L. Armitage and Joseph S. Nye, *CSIS Commission on Smart Power, A Smarter, More Secure America*; Robert Gates, "A Balanced Strategy: Reprogramming the Pentagon for a New Age," *Foreign Affairs*, Vol. 88, No. 1 (January/February 2009).

I
II
III
IV
V

압력을 포기함으로써 역내 경제 질서의 안정에 기여한 바 있는 중국은 책임 대국으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구해 왔다. ARF, ASEAN+3 등 지역 다자기구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북핵 위기를 처리하는 6자회담의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동북아 안보 질서의 안정자(stabilizer)란 공공재를 제공해 온 바 있다.¹⁶²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의 최대 수혜국으로서 중국은 G20, 기후변화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15th Conference of the Parties: 이하 Cop 15) 등에서는 개도국의 대변자로서, 주요 국제기구에서는 강대국으로서 조심스럽게 지분을 확대하는 등 책임 대국으로서 국제협력을 추동하는 소프트파워 외교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후진타오, 2010). 파격적인 원조정책 추진, PKO 확대, 공자 학원 등을 통한 문화 영향력 강화 시도 등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은 베이징 컨센서스, 대중화유가문화권 비전 등을 통해 중국 중심의 지역 질서를 꿈꾸고 있다.¹⁶³

끝으로 일본도 일찍이 소프트파워에 착안하여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면서 일본은 미국에 필적하는 경제력에 걸맞은 국제공헌을 하여야 한다는 담론이 제기되었다. 당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의 보통국가론, 후나바시 요이치(船橋洋一)의 글로벌 시빌리안 파워론이 대표적이다. 개발협력, 인간안보 분야 협력, PKO 협력 등의 소프트파워 외교를 체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와 함께 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을 중심으로 일본 문화 발신에도 힘을 기울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이 장기 불황에 신음하면서 경제적 하드파워

¹⁶² David Shambaugh, "China Engages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29, No. 3 (Winter 2004/2005).

¹⁶³ 조영남, "중국외교의 새로운 시도: 소프트파워전략," 김태호 외, 『중국외교의 새로운 영역』 (파주: 나남, 2008), 제4장 참조.

가 쇠퇴함에 따라 소프트파워를 체계적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는 간단없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2009년 자민당 장기 집권 체제를 종식시키고 화려하게 등장한 하토야마 정권은 ‘가교론’, ‘동아시아 공동체론’ 등을 통해 번영(개발과 경제연계), 환경(녹색 아시아), 재해 방지, 우애의 해(海) 등 분야에서 공공재 제공의 선도적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¹⁶⁴

요컨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은 지역 질서 및 지구 질서를 구축, 재구축하는 데 있어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소프트파워적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소프트파워적 국제정치 현상은 아시아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나아가 우위를 점하려면 문화 외교나 공공 외교의 차원을 넘어 보다 체계적으로 소프트파워 외교를 전개해 가야 한다. 그 기저에는 한국에 걸맞은 소프트파워론을 개발하는 작업이 있다. 신아시아 구상이란 외교 비전을 제대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념적, 이론적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중견국의 스마트파워 증진 전략

(1) 중견국 외교의 정의

한국은 중견국이다. 따라서 중견국에 어울리는 소프트파워를 모색하고 그에 적합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 중견국 외교를 분석하기 위한 일반적인 개념의 틀로서 중견국 외교론, 협상중재론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¹⁶⁵ 먼저, 중견국 외교론에서 중견국의 개념은 관계적, 상대적 개

¹⁶⁴ 鳩山由紀夫, “鳩山總理によるアジア政策講演: アジアへの新しいコミットメント-東アジア共同体構想の實現に向けて-,” <<http://www.kantei.go.jp/jp/hatoyama/meibo/daijin/index.html>> (검색일: 2010.5.1).

념이다.¹⁶⁶ 제국, 패권국, 강대국, 약소국 등이 나름대로의 절대적 권력 지표와 국제체제 속에서의 지위, 임무, 기능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중견국은 중간 개념으로서 명확한 절대적 개념을 가진다기보다는 상대적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즉,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개념으로서 체제 속에서의 위치 스펙트럼이 넓고, 체제 내의 지위가 중견국 외교의 임무와 운명을 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개념이다. 구조주의적 신현실주의의 측면에서 논한다면, 구조적 제약 요건이 제약의 의미를 가질 뿐, 외교 정책을 구성하는 부분이 가장 적은 사례가 중견국이라고 할 수 있다.¹⁶⁷

따라서 중견국 자체의 외교 임무 설정, 내부적 합의와 상황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더불어 중견국 외교력은 실제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과정적이며 특징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중견국의 외교는 틈새 외교(niche diplomacy)이며, 전략적 목적이 설정되어 있기보다는 전술적 과정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외교라고 하는 이유이다.

호주와 캐나다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중견국 외교는 애초에 만들어진 목적을 꾸준히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외교라기보다는, 국제 상황과 세력 배분구조의 변화, 9·11과 같은 지구적 사건의 변화에 적응해 나가는 사후적이고 상황적응적인 외교로 만들어지고, 진행되는 경우

165. 이하의 논의는 손열·김상배·이승주·전재성·최태욱,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소프트파워 외교 전략,” (근간)에 기초함.

166. 중견국 외교론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Fen Osler Hampson, “A New Role for Middle Powers in Regional Conflict Resolution?” Brian L. Job (eds.), *The Insecurity Dilemma, National Security of Third World States* (London: Lynne Rienner, 1992); Robert Chase, Emily Hill and Paul Kennedy, “Pivotal States and U.S. Strategy,” *Foreign Affairs*, Vol. 75, No. 1 (January/February 1996); Carsten Holbraad, *Middle Powers in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4).

167.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McGraw-Hill, 1979);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orton, 2001) 참조.

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각각의 국력의 크기, 특징적인 자원, 지리적 위치, 강대국과의 관계, 내부적 합의, 엘리트의 성격, 시민사회의 역할 등에 따라 이러한 적응 방법과 모습도 다양하게 나타나 일반화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론적으로 살펴보자면, 중견국 외교는 현실주의와 자유주의, 구성주의적 측면에서 일정한 변동을 보이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현실주의 관점에서 중견국 외교는 강대국과의 파트너십, 그 속에서의 제한된 비판을 특징으로 하고, 편승(bandwagoning)과 같은 단기적 이익을 더 중시하는 경향도 보인다. 반면 자유주의 관점에서 중견국 외교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모색, 국제제도와 국제기구의 중시, 법적·제도적 절차와 정책 자원 중시, 시민사회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 연성 균형(soft balancing)의 추구 등과 같은 장기적, 낙관적 전망을 중시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구성주의 관점에서 가치 외교,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 규범 설정(norm entrepreneurship) 등 규범 생산과 정체성 영향력을 중시한다고 분석할 수 있다.

중견국은 각자가 갖는 지리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호주와 캐나다처럼 국제체제 내 위치적 변수가 중견국이나 지리적으로는 고립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위치 변수는 덜 강력하나 지리적, 상황적 변수가 중요한 소위 ‘축이 되는 중견국(pivotal middle power)’도 존재한다. 축이 되는 국가란 일정 지역 내 지리적, 국력적 변수가 요충지인 소위 거점국가적 성격을 가진 국가이다. 따라서 지역 내 거점적 성격을 가진 중견국의 외교가 중요해짐을 알 수 있다.

호주와 캐나다 등 주요 중견국은 미국과 같은 패권국과의 현실주의적 양자 관계와 자유주의적 다자 중견국 외교 사이에서 고민하고, 스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중견국이 행사할 수

I
II
III
IV
V

있는 힘의 종류와 권력 자원에 대한 논의가 바뀌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21세기 소프트파워가 중요해지면서, 연성적 중견국론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중견국의 외교 내용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바, 냉전기 비동맹외교, 남북 갈등 중재 외교를 거쳐 지금은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혹은 다자주의(multilateralism)로 발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견국 외교에 어울리는 소프트파워는 무엇인가?

(2) 중견국의 소프트파워 자원

중견국 외교는 건강한 국제적 시민권(good international citizenship) 발신,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 노선 견지, 긍정적 유인의 제공(positive inducement), 현상유지 보조, 강대국 혹은 패권국의 질서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 연합 결성(coalition building), 중재(mediation), 지역 다자주의(regionalism) 추구, 가치 외교(value diplomacy), 국제기구·제도의 활용, 의제 설정력(agenda-setting power) 등의 영역을 생각할 수 있다. 이는 모두 하드파워보다는 소프트파워의 차원과 관련된 정책들이다.

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강대국적 소프트파워 개념을 버리는 일이다. 강대국의 소프트파워가 지배-복종관계의 생산, 재생산 과정이라는 전략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고, 그렇게 하여 이루어지는 힘의 행사는 자발적 동의를 확보하기보다는 거부감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소프트파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당성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길일 수 있다. 최근 유럽의 ‘규범 권력(normative power)’에 대한 논의와 연관되는 지점이다. 그러나 나이의

개념은 소프트파워의 효과성에 대해서 기울이는 관심에 비해서 그러한 소프트파워가 얼마나 정당한 권력이냐의 문제, 즉 진정으로 공유된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수용되고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실질적으로 ‘정당한 권력’에 대한 관심이 약하다. 아마도 소프트파워의 규범적 성격에 대한 나이의 침묵은 미국이 딛고 서 있는 제도의 정당성을 시비 걸고 싶지 않은 미국 학자의 속내를 감추는 문제로 연결되는 듯하다.

전략론을 넘는 권력 담론을 제시하려는 푸코(Foucault)는 기왕의 행위자 기반 권력론을 넘는 생산 권력(productive power), 훈육 권력(disciplinary power), 사목 권력(pastoral power)을 논하면서, 상대방의 이익을 형성한다기보다는 주체화의 기술을 통한 정체성의 구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나이가 말하는 소프트파워의 작동 방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코 역시 권력을 지배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권력은 정상적인 것(normality)의 구성에 의해 교묘하게 상대방의 반대의 근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력은 ‘상대방의 능력·주체성을 제한하거나 약화시키는 인과 과정으로서 권력’이란 개념을 넘어서 ‘상대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지배하는 권력(power over)’과 ‘하기 위한 권력(power to)’으로 구분된다. 전자가 관계적 차원에서 상대방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 즉 얻고 잃는 관계로서의 권력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능력(capacity, faculty, ability), 즉 결과(outcome)를 향상시키는, 가능성(potentiality)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관념한다. 여기서 권력의 갈등적 성격은 사상될 수 있다. 아렌트(Arendt)나 하버마스(Habermas)에게 권력은 자율(autonomy)과 연대(solidarity)에 입각한 인간 역량강화(human empowerment)로 간주된

I
II
III
IV
V

다. 권력이란 간주관적으로 형성된 일치된 행동(concerted action)이고 함께하는 것이다. 전자가 지배의 담론이라면 후자는 상호 강화의 담론이다. 중견국의 소프트파워 외교는 이러한 권력론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강대국이나 약소국과 함께 하는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 중견국의 중재외교

중견국이 국제무대에서 다자 안보 및 경제 문제에 접하여 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역할은 중재자로서의 역할이다.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압도적인 하드파워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지만, 중요한 유인을 제공하면서, 분쟁 당사국 혹은 주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중견국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재는 중견국의 안보 역할에 중요한 역할 축으로 대두하게 되는데, 중재는 분쟁 당사자가 아닌 제3의 행위자가 분쟁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교 양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문제는 중재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중재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중재의 성공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시하고 있다.¹⁶⁸ 첫째, 분쟁의 성격과 중재에 관한 것이다. 분쟁이 시작되어 어디

¹⁶⁸. 중재외교에 관한 연구들로는 다음을 참조. Jacob Bercovitch, “The Structure and Diversity of Media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Jacob Bercovitch and Jeffrey Z. Rubin (eds.), *Media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2), pp. 1~29; Derrick V. Frazier and William J. Dixon, “Third-Party Intermediaries and Negotiated Settlements, 1946~2000,”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32, No. 4 (December 2006), pp. 385~408; Andrew H. Kydd, “Which Side Are You on? Bias, Credibility and Medi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7, No. 4 (October 2003), pp. 579~611; Zeev Maoz, “Conflict Management and Conflict Resolution: A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ntroduction”; Zeev Maoz et al, *Multiple Paths to Knowledge in International Relations: Methodology in the Study of Conflict Management and Conflict*

까지 진행되었는가, 분쟁이 충분한 갈등 시간을 거쳐 당사국들의 입장이 충분히 알려지고 이제는 해결을 위한 시점에 접어들었는가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또한, 분쟁 강도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분쟁 이슈의 본질은 지속하는가 혹은 변화하는가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분쟁이 지속되면 흔히 분쟁의 강도가 높아졌다고 소진되어 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분쟁의 강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분쟁 이슈의 본질이 애초에 분쟁 발생 시기와는 다르게 변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분쟁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분쟁의 중재가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분쟁 당사자와 내부 상태가 중요한 요소이다. 내부 상태에 관련된 요소들로는 분쟁 당사자의 정체성, 내부적 통합성, 레짐 형태 등이 중요한 요소이다. 분쟁 당사국들의 레짐이 민주주의인가, 혹은 권위주의나 전체주의인가에 따라 중재 활동의 주요 목표가 당사국들의 정부인지, 혹은 시민사회인지 등의 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셋째, 중재자의 중재 의도 및 성격이 중요하다. 중재자들과 분쟁 당사자들이 기존에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는가, 분쟁 당사자들 간의 권력 배분 및 권력 차이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가 중요한 요소들로 설명되었다. 중재자들이 당사자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강할 때 중재가 성공하는가, 혹은 중재자들이 당사국들을 위협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약할 때 중재가 성공하는가의 논쟁이 있어 왔는데, 이는 분쟁의 다른

Resolution (Lanham: Lexington Books, 2004), pp. 1~32; Zeev Maoz and Lesley G. Terris, "Credibility and Strategy in International Mediation,"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32, No. 4 (December 2006), pp. 409~440; David Quinn, Jonathan Wilkenfeld, Kathleen Smarick and Victor Asal, "Power Play: Mediation in Symmetric and Asymmetric International Crises,"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32, No. 4 (December 2006), pp. 441~470.

요소들과 맞물려 복합적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재자의 성격과 관련하여 중재자의 중립성 및 초당파성, 중재자의 권력 자원, 중재자의 지위도 중요한 요소로 대두된다. 중재자가 분쟁에서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 중재에 유리한가, 혹은 어느 한 쪽에 기울어진 상황에서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한가는 중재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이다.

무엇보다도 중재자의 권력 자원이 하드파워인가, 혹은 소프트파워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단순히 하드파워만으로 중재가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는 소프트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드파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성공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자의 조합이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하드파워가 충분치 않은 중견국으로서 소프트파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띠게 마련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소프트파워를 추구해야 하는가?

중견국의 외교는 국제 협상의 네트워크 속에서 중견국이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에 따라 역할의 성격,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¹⁶⁹ 따라서 중재의 세부 개념으로서 중재(brokerage)를 제시할 수 있다. 중재(brokerage)로서 중견국 외교의 형태는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일레로 굴드(Gould)와 페르난데스(Fernandez)는 네트워크 이론에 기초하여 ① 조정자(coordinator), ② 중개인(itinerant broker), ③ 문지기(gatekeeper), ④ 대표자(representative), ⑤ 연결자(liaison) 등으로 형태 분류를 할 수 있다. 또한, 김상배에 따라 네트워크어(networker), 스위처(switcher), 프로그래머(programer) 등으로 구별할 수도 있다. 이에 따

¹⁶⁹ Miles Kahler, *Networked Politics: Agency, Power, and Governan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9).

르면 중재자는 분쟁 당사자들과의 네트워크 속에서 적절한 위치를 설정함으로써 중재의 역할을 좀 더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다. 분쟁 당사자들이 기본적으로 비슷한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하여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놓고 대립할 때, 중재자는 분쟁 네트워크 속에서 문지기와 중개인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반면 분쟁 당사국들이 서로 다른 레짐을 가지고, 다른 전략적 비전과 국제정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을 경우, 양자를 변환하고 중재하는 변환자와 해석자의 역할까지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중재자에 필요한 소프트파워는 다음과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1) 위치적 권력

이는 문자 그대로 자리(위치)가 주는 권력이다. 네트워크상에서 권력은 무조건 노드의 덩치가 크거나 네트워크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만은 아니다. 전체 네트워크상에서 또는 두 개 이상의 네트워크 사이에서 어느 특정 노드가 차지하는 위치나 기능 또는 링크의 형태와 숫자, 통칭하여 네트워크의 구조로부터도 권력은 비롯된다. 특정국(네트워크 속의 특정 노드)은 네트워크와 약하게 연결된 노드에 연결함으로써 이에 대해 자신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 또 특정국이 긴밀하게 연결된 서로 다른 두 네트워크 클러스터를 자신만이 연결하는 경우 일종의 브로커 혹은 가교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¹⁷⁰ 요컨대, 네트워크상에서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소통이 되지 않는 요충지를 차지하고 ‘통(通)’하는 과정을 통제하는 권력이다.

¹⁷⁰- *Ibid.*, pp. 562~563.

중재자의 위치적 권력(positional power)은 두 가지 조건에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파악할 능력이 있을 때 주어진다. 변화하는 네트워크 환경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적절히 파악할 때 권력이 발생하며 그렇지 못할 때 보유 자원 이하의 낭패를 보기도 한다. 동북아 지형에서 브로커의 위치에 가까운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하려 할 때 받는 역풍이 그 일례이다. 둘째, 자리에 걸맞은 속성과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¹⁷¹ 중재자가 단순히 물질적 자원만으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대립적인 두 집단 사이에서 중재의 성공은 브로커가 의식적으로 하드파워를 추구하지 않을 때 주어진다. 연구 결과처럼 주어진 조건에서 어떤 자원을 숨겨 있게 조합하느냐가 관건이다.

(2) 규범적 권력

중견국의 소프트파워는 규범적 기반이 마련될 때 힘을 얻는 경우가 많다. 울리히 벡(Ulrich Beck)이 논하는 유럽의 규범 권력(normative power), 동양의 덕치(德治)에서 보듯이 정당한 권력의 추구가 소프트파워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정당성은 계몽적 공공 이익(enlightened public interest)을 정의하고 추구하는 데에서 찾아진다. 특히 의제 설정이나 표준 제정에서 규범적 입장을 견지하는 일은 중견국의 권력 자원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지구적 보편성 혹은 지역적 보편성을 정의하고 이를 일관되게 실천하고자 할 때 중견국 소프트파워의 핵심 자원이 될 것이다.

¹⁷¹ 전재성, “북핵외교와 동아시아공동체를 위한 한국의 기여,” 손열 편,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을 위한 소프트파워 전략』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

(3) 사회적 권력

이는 ‘군(群)’ 또는 ‘집(集)’을 통해서 ‘세(勢, force)’를 얻는 권력이 다.¹⁷² 한 국가의 사회적 권력(social power)은 그 국가가 네트워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연결(link)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의해 주어진다. 한 국가의 연결성(connectedness)은 다른 노드의 자원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그 국가는 여타 노드 간의 정보를 통제하고 상대적 능력, 공통이익, 규범을 특정하게 이해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의제 설정, 논의의 구상(framing) 등의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결을 많이 한, 혹은 네트워크에 능하고 사회성이 강한 행위자(국가)가 얻는 권력을 사회적 권력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싱가포르는 범방위적으로 FTA 연결을 통해 자신만의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이 네트워크가 싱가포르에 가져다주는 사회적 권력은 그 국가의 객관적 하드파워를 넘는다고 평가된다.¹⁷³ 역으로, 연결 능력은 그 국가의 자율성을 해치기도 한다. 동맹의 경우가 예시하듯이 원치 않는 분쟁에 개입될 수 있고 FTA가 특정국에 원치 않게 경제적 제재로 활용되는 경우도 야기될 수 있다. 독일의 경우가 시사적이다. 독일의 경제 정책은 EU라는 국제제도에 내장되어 영향력 행사의 원천으로 작동하는 반면, 안보 정책은 이 제도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다. 네트워크 활용 능력에 따라 사회적 권력이 좌우된다.

중재자로서 사회적 권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중재자가 이해 당사자 사이에서 중재하고자 할 때 그 이외 세력과 연계가 많을수록 중재력은

172. 김상배 편, 『소프트파워와 21세기 권력론』.

173. Emilie M. Hafner-Burton and Alexander H. Montgomery, “Globalization and the Social Power Politics of International Economic Networks,” Miles Kahler, *Networked Politics: Agency, Power, and Governance*, pp. 23~42.

증대된다. 이는 폭력과 돈과 같은 전통적인 자원을 기반으로 할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지식과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하여 노드들을 많이 끌어 모으는 그 자체만의 내재적 매력에 의존한다. 비물질적 자원에 의지하여 ‘끌어당기는 매력’이 노드들을 불러 모아서 네트워크의 세를 불리게 되면 그 자체로 소프트파워가 상승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하는 외교적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다.

(4) 문화적 권력

문화적 매력은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원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력을 보유할 때 중재자의 가치는 향상될 수 있다. 다만, 중재의 당사자들에게 공히 매력적으로 비추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문화적 권력은 ‘다르지만 배우고 싶은 모습’을 창출하는 능력과 관련된다. 나이도 지적하고 있듯이 이는 대중문화처럼 어느 나라의 특수한 삶의 모습을 담거나 혹은 보편적 요소를 담아내는 것으로서 미국의 할리우드, 일본의 쿨 재팬(Cool Japan), 한국의 한류 등이 주요 사례이다. 그렇지만 문화의 발신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져다줄 수는 있지만 이것이 필연적으로 국제정치상 상대국의 선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할리우드 문화에 익숙해 있어도 반미를 외치고,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만가에 심취해 있어도 친일을 하지는 않는다. 한류에 심취한 일본인이 양국 간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 한국의 정책을 선호하지는 않는다. 대중문화의 확산은 다만 선호 변화의 환경적 조건을 조성해 줄 뿐이다.

문화가 인과적 요인(causal force)으로 작동하는 경우는 문화가 단순히 흥미로운 혹은 신비로운 차별성의 의미를 넘어서 좀 더 냉정한 선택과 배제의 메커니즘을 담을 때이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문화 그 자체라

기보다는 ‘문화에 대해서 말하는 것’, 즉 문화의 담론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다.¹⁷⁴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른바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으로 개념화되는 문화이다. 특정 집단·계층의 문화적 규범과 관행은 경제적으로 계급적 위상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별짓기(distinction)’를 행사하는 권력 자원이 된다.¹⁷⁵ 특히 문화자본에 대한 담론은 구체적 상징의 생산을 통해서 특정 계급의 문화가 우월하다는 이미지를 정당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자의 삶을 구성하는 문화적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또 그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단순한 안목의 수준을 넘어서는 정교한 지식 체계가 있어야 하는 경우, 문화자본을 바탕으로 선택과 배제를 하는 권력은 더욱 강화되어 나타날 수 있다.¹⁷⁶

비근한 예로 유교적 문화 가치는 사회 상류 계급의 문화로서 고도의 지식습득(유학)을 전제로 해서 향유되는 것이었다. 중국에서 비롯된 이 문화가 동아시아 지역에 전파되면서 이 문화는 ‘당연시되는 코드(taken-for-granted codes)’가 되어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규율하는 제도적 위상을 획득하게 되었다. 문화는 권력을 획득한 것이다. 만일 현재 중국이 지역적으로 신(新)유가문화권을 형성하여 당연시되는 코드를 획득할 경우 이는 중국의 문화적 권력이 발동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한류의 미래 전략은 한국의 매력을 발산하고, 이와 병행하여 동아시아의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21세기 문화

174- 최정운, “매력의 세계정치,” 김상배 외, 『매력국가 만들기: 소프트파워의 미래전략』 (서울: 동아일보 21세기평화재단·평화연구소, 2005).

175- 삐에르 부르디외의 지음,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서울: 새물결, 2005).

176- 한준, “문화자본과 소프트파워,” 김상배 편, 『소프트파워와 21세기 권력론』.

세계 정치에서 한국이 ‘코리안 스탠다드’를 ‘동아시아 스탠다드’로 승화시키는 동시에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호환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이루어질 때 국제적 중재자로서 한국의 위상은 보장될 것이다.

마. 스마트파워 외교 추진방향

이제까지 한국 외교는 한반도에 갇혀 있었다.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고, 문제의 험난함을 고려할 때 이 추세는 계속될 수 있다. 지역 외교에 관심을 기울인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역시 지역적 사고에 기반을 둔 외교라기보다는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한 측면이 강하다. 그런 만큼 대외적 호소력이 반감된 것도 사실이다. 김대중 정부는 ASEAN+3에서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과 동아시아 스터디그룹(EASG)을 이끌면서 지역 구상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구상에 그쳤고,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구상 역시 자기중심적 발상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접국의 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이상의 외교적 노력에 결여된 바는 장기적 국익 계산법에 의한 외교 전략 추진이다. 지역 구상이 한국의 단기적 이익과 결부될 때, 혹은 지고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일 때, 국내적 지지와 대외적 지지는 공히 축소되었다. 따라서 현 정부의 신아시아 구상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권력을 추구하는 발상법이 필요하다. 지역의 이익(regional interest)을 정의, 도모하고 여기서 얻은 힘을 한반도로 끌어오는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전략이 그것이다.

이런 시각을 바탕으로 한국은 향후 독자적인 외교 패러다임으로 타국에 모범이 되는 스마트파워 외교를 수립해야 한다. 물론, 앞에서 살펴본 호주의 경우에서와 같이, 사건의 변화를 따라가면서, 정책 엘리트

의 생각이 변화하고, 시민사회와 여론이 형성되면서 한국의 외교 스타일과 한국이 채울 수 있는 틈새 외교(niche diplomacy)가 만들어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전략 개념을 가지고 외교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외교 전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북핵 외교 등 아시아 평화를 달성하는 데에서 한국의 역할 설정은 이러한 과정의 일부분이다. 국제적 갈등의 해결 과정에서 한국이 중재외교를 할 경우, 분쟁 이슈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장 선진적인 해결책을 구상하여야 하고, 중재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시기를 택하여 협상의 판을 이끌어야 하고, 문제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중재의 대상이 되는 정책 결정자에 접근해야 하고, 한국이 과연 중립적 중재자로 활동할 것인지 혹은 미국에 편향된 중재자로 활동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중재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을 고려하여 중립성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중재 당사국 간의 세력균형을 고려하여 필요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중립성이 약한 경우,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야 한다.

더불어 한국이 중견국 외교를 할 때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① 여전히 미국과의 양자 동맹 관계가 핵심이익을 구성하므로, 양자적 동맹외교와 중견국적 국제주의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② 한국 내 전통이 약한 국제주의 혹은 지구주의(globalism)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③ 동북아를 넘어서서 초지역적인 거점국가 간의 연계를 추진할 수는 없는가, 이와 관련하여 신아시아란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④ 국제제도 및 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는가, ⑤ 동북아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국제규범에 맞는 국가로 순응시킬 것인가, ⑥ 동북아 국제정치의 연성 변환에 필요한 이슈, 어젠다 개발과 한국이 중심이 되는 네트워크의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I
II
III
IV
V

고민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기존의 중견국 외교 모델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한 새로운 중견국 스마트파워 외교 모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한국은 기존의 중견국 외교론 및 중재 외교론을 넘어서 동북아의 세력구조를 세력균형·세력전이의 현실주의적 상황에서 다자주의·지역 협력 및 통합으로 이행시켜야 생존과 번영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소프트파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제정치 조직구조를 바꿀 수 있는 연성 변환자(soft transformer)의 지위를 지향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¹⁷⁷ 특히 6자회담 과정에서 도출된 2·13 합의는 6자회담이라는 다자 협상과 협력의 기제를 거치면서 서서히 다자안보 제도의 창출을 이끈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그 속에서의 한국의 역할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그간 동북아에서 현실적이고 유력한 집합적 안보 제도가 매우 저발전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의미가 크다고 보여 진다. 기존의 ARF, APEC, NEACD, CSCAP 등이 존재하지만, NEACD를 제외하고는 동북아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며, 동아시아 전체를 포괄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또한, NEACD는 정부 간 공식 대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를 발휘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6자회담 틀 속의 동북아 평화, 안보체제 실무그룹은 동북아 국가들만의 정부 간 다자안보 대화체라는 점에서 그 성격상 실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북아 평화, 안보체제 실무그룹은 단순한 국가 간 이익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다자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동북아 핵 질서의 안정성 확보라는 동북아 국가 간의 공동의 가치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177. 전재성, “북핵 외교와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한 한국의 기여.”

산물이라는 점에서 다자제도의 한계를 넘어 다자주의 제도로 향하는 출발점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이 과연 향후 동북아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하나의 외교 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한국이 행한 외교적 역할을 소프트파워 자원으로 삼아, 동북아 안보 문제 해결의 지역주의적 패러다임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I

II

III

IV

V

Ⅲ. 신아시아 외교와 아시아의 평화 증진방안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I
: 신아시아 외교 추진을 통한 새로운 평화의 모색

신아시아 외교는 한국의 증강된 국제적 역량을 바탕으로 외교적 지평을 넓히는 동시에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간주하였던 군사·안보 및 경제라는 외교 영역에 지구화된 국제사회에서 다변화된 분야에 대한 외교를 부가함으로써 새로운 아시아 시대를 전개하는데 앞장서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신아시아 외교의 구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신아시아 외교의 궁극적 목표의 하나로서 아시아 평화의 새로운 지향점으로서의 인간안보 구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아시아적 정체성 형성과 규범의 확립을 통한 협력구조 및 추진 수단으로서의 스마트파워 외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신아시아 외교의 분야로 선정된 경제협력과 에너지·기후 분야 협력 및 사회·문화 교류를 통해서 아시아의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과 신아시아 외교의 대상 지역 간의 분야별 협력을 통해서 아시아의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은 본 연구의 주안점이라 할 수 있는 신아시아 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평화 증진방안 도출을 위한 전초적인 성격을 가진다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 인류보편적인 개념에 의한 평화의 개념을 아시아 국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다.

1. 분야별 추진방안

가. 경제협력과 아시아 평화 증진방안

(1) 개발협력과 평화

개발협력을 위한 대외 원조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갖는다. 국제사회에서 원조의 역사를 살펴보면 시기에 따라 대외 원조의 주목적이 달라졌

음을 알 수 있다. 크게 원조의 목적은 외교적 목적과 개발이라는 목적으로 대별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외교적 목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원조의 목적은 다양한 대외 원조의 목적들을 포괄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인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목적으로 원조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자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에게 독립 후 원조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하나의 목적은 평화이다. 원조를 통해서 갈등의 원인이 되는 빈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평화를 확보할 수 있다. 또는 원조를 통해 수여국의 사회를 안정시키고 경제적으로 강화시킴으로써 세력균형을 통한 평화를 얻을 수도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제공한 대규모 원조 계획인 마샬플랜은 이러한 목적의 원조 중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원조의 목적은 점차 개발을 강조하였다. 각종 원조 기구들의 등장, NGO의 원조 참여 등이 본격화되면서 개발을 위한 원조들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오면서 원조를 통한 평화 조성의 움직임이 다시 등장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국제 원조의 목적에는 정치적 체제 전환, 국제 문제 해결, 지역적 분쟁 완화, 민주정치 증진이라는 네 가지 목적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¹⁷⁸ 특히 1990년대 말 미국과 세계은행(World Bank), UNDP, 스칸디나비아 등의 여러 구호 기관들은 발칸 반도와 과테말라, 아이티, 앙골라, 모잠비크,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전후 원조 활동을 벌였는데 이것은 지역 분쟁 완화를 위한 원조들이었다. 그리고 1997년 DAC 가입국들은 분쟁, 평화, 개발협력 정책 합의서에 서명했다.¹⁷⁹ 2001년 9·11 테러 이후 평화

178. 케일 랭커스터, 유지훈 옮김, 『왜 세계는 가난한 나라를 돕는가?』 (서울: 시공사, 2007), p. 70.

179. 위의 책, p. 71.

목적에 위한 대외 원조가 다시 강조되기 시작했다. 9·11 이후 빈곤과 불평등을 테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해석하는 견해들이 나타났고 아프리카, 중동 국가들에 대한 대외 원조가 이러한 차원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신아시아 외교는 단순히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아시아의 번영과 평화를 비전으로 하는 외교 전략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ODA 전략 역시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시아 ODA 정책의 핵심은 지나치게 경제적 차원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보인다. 특히 자원 확보와 대외 원조를 연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외 원조 정책은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으며 아시아의 평화구조를 형성하는 외교적 목표를 위해서는 원조 정책에서 외교적 고려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의 경우 현재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이 주요한 원조 대상국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나라 이외에도 절대적 빈곤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아시아 빈국들에 대한 대외 원조를 증액하거나 다자적 원조 프로젝트 등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중점 지원국에 대해서는 이 중에서도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와 같은 국내 분쟁이 있는 지역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원조 제공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명확히 해야 할 것은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원조의 제공 같은 미국 등 선진국이 해왔던 원조 방식은 한국이 담당하기는 어려운 형태의 원조이므로 이러한 직접적인 외교 목적의 원조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개발협력을 통한 아시아 평화의 증진방안은 개발협력을 통해 이룬 동아시아 빈국들의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상호의존과 상호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틀은 포괄적인 경제 파트너십이 될 수도 있고 경제공동체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개발협력을 통해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이들의 경제적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게 되면 공유하는 이익이 장기적으로 존재하게 되며, 또 계속하여 확대되기 때문에 평화를 증진하려는 동기가 커지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은 신아시아 외교를 통해 DAC 권고 수준의 개발 원조와 한국형 원조모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원조 모델의 장기적 목표는 단순한 돈의 제공이 아닌 안정된 사회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거버넌스의 전수가 될 것이다.

(2) 자유무역협정과 평화

현실주의적 학자들은 지역주의를 국가 간 권력 정치의 반영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많은 경우 지역주의는 국가들의 권력 추구 혹은 영향력의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조셉 그리코(Joseph Grieco)는 지난 50년 동안 지역적 협력체의 제도화 정도는 국가 간의 권력 관계에 의해 영향받아 왔다고 주장한다.¹⁸⁰ 멘스필드와 밀너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들이 전간기처럼 정치·군사적 목적으로 지역주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지만, 아직도 국가들은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균형의 수단으로 지역주의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¹⁸¹ 지역협력의 한 형태인 FTA 역시 경제 영역의 사안이지만 그 파장은 경제적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¹⁸⁰- Joseph M. Grieco, "Systemic Source of Variation in Regional Institutionalization in Western Europe, East Asia and the Americas," Edward D. Mansfield and Helen V. Milner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¹⁸¹- Edward D. Mansfield and Helen V. Milner, "The New Wave of Reg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3, No. 3 (Summer 1999), p. 612.

따라서 FTA의 추진 동기에는 국제정치적 고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유럽 통합의 시발점이 된 유럽 석탄철강공동체의 경우를 보면 공동체의 출범은 석탄과 철을 둘러싼 독일과 프랑스의 갈등을 사전적으로 관리하려는 프랑스, 영국, 그리고 미국의 의도가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많은 FTA 협상들(예를 들어 중국-ASEAN)도 단순한 경제적 동기 이외에 국제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라는 동기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미 FTA도 그동안 미국의 FTA 전략, 한·미 간의 안보 관계, 그리고 최근의 동아시아의 국제정치적 다이내믹스 등을 고려해 볼 때 국제정치적 동기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FTA를 통한 경제적 연계의 강화는 중요한 안보적 함의를 갖는다. 국제정치경제 연구 주제 중 하나인 국가 간 경제 관계와 동맹 관계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보면 동맹국 간에는 무역과 같은 경제 협력 관계가 더 쉽게 이루어진다는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무역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안보 외부 효과가 동맹국 사이에서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는 국가 간의 다른 관계들 역시 강화시키며 궁극적으로 정치적 관계에서까지 협력적 경향을 강화시키게 된다. 상호의존론자들 그리고 통상적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 간의 무역이 활발해지면 그 때문에 이득을 보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이들은 전쟁이 생기면 바로 경제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이들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세력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교역을 증대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한·중·일이나 동아시아 국가 간의 FTA로 인해 국가들 간의 경제적 관계가 심화되게 되면 상대국가의 안정과 평화와 자국의 경제적 이득과의 연관성도 강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각 국가들의 이 지역의 평화에 대한 헌신(commitment)



역시 커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필요한 방안은 한·일, 한·중 FTA 협상을 재개 그리고 개시하는 것이다. 한·중·일 삼국의 자유무역을 통한 상호의존은 아시아 평화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통상적 자유주의자들의 견해를 수용한다면 동북아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는 이들 지역 국가들 사이의 긴밀한 통상 관계가 발전할수록 달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중·일 FTA 그리고 동아시아 FTA 등은 아시아의 평화를 증진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아시아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자유무역 분야의 실천 방안은 중·일 간 혹은 한·중·일 간의 FTA를 완성하는 것이다. 현재 동북아의 가장 큰 긴장 요인은 중·일 간의 경쟁이다. 중국과 일본은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 중이며 영토 분쟁, 역사적 유산, 지역 패권, 미국 중심의 대중국 협력 체제 등을 놓고 갈등의 정도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센카쿠 열도 부근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한 사건으로 중·일 간의 외교전이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에 존재하는 휘발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일 간의 경제적 의존, 특히 교역상의 의존은 두 나라 간의 관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의 2008년 보고서 『Global Trends 2025』도 중국의 경제적 성장이 계속되어 일본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두 나라 간의 FTA가 2025년보다 훨씬 이전에 체결될 것이고 두 국가는 우호적 관계를 맺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¹⁸²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중·일을 포괄한 한·중·일 FTA는 그 경

¹⁸².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지음, 『Global Trends 2025』 (서울: 예문, 2009), p. 105.

제적 효과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지역 질서의 안정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아시아 외교를 통해 한·중·일 FTA 추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기적으로 볼 때 한·중·일 자유무역지대는 ASEAN과의 자유무역협상을 통해 동아시아 FTA를 체결하는 것이 아시아의 평화 증진에 있어 핵심적 과제이다. 동아시아 FTA는 한·중·일과 ASEAN은 물론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인도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범위도 가능하다. 이러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는 미주 자유무역지대(FTAA)와의 협상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로 발전할 수 있다. 동아시아와 미주의 자유무역협상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는 단순히 무역 증진을 위한 구상이 아니다. 세계 평화의 관건은 평화로운 미·중 관계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과의 평화로운 관계에 달려있다. 따라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의 협상은 세계 평화라는 보다 큰 대의를 위한 것임을 신아시아 외교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에 설득해야 하며 아시아와 미주의 이익을 매개하고 중계하는 역할을 신아시아 외교를 통해 수행해야 할 것이다.

(3) 금융협력과 평화

금융 및 통화 분야는 평화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금융위기와 통화위기는 한 사회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러한 위기의 부작용으로서 평화를 위협하는 다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안보적 영향을 연구한 연구들은 경제위기가 안보 확보를 위한 국방 예산에 대한 영향을 통해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또 경제위기는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경제위기로 발생한 국내적 불안을 감소하기 위해 외

I
II
III
IV
V

부로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금융협력은 한 국가 그리고 나아가서 지역 차원의 안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동아시아에서의 금융협력은 매우 중요하다. 동아시아는 이미 금융 및 통화위기를 겪었고 아직도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취약한 금융 및 통화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동아시아 금융 및 통화협력은 국가들의 협력 부재로 매우 느린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한국의 신아시아 외교가 금융 및 통화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통화 갈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의 갈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G20의 개최국으로서 이미 금융 및 통화협력에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아시아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환율을 둘러싼 중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갈등이다. 특히 중국과 일본과의 갈등은 이 지역의 라이벌인 두 나라의 관계를 악화시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면을 고려해 볼 때 금융 및 통화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신아시아 외교의 주목표는 동아시아에 금융협력 메커니즘을 격상시키는 것이다. 금융협력은 금융 안전망의 수립, 통화협력, 지역 통화 기금의 설립 등 다양한 의제들을 가지고 있다. 금융협력이 그 자체로서 아시아 평화구조 수립에 직접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 안전망의 확보는 이 지역의 경제적 안정도에 기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정치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볼 때 신아시아 외교가 이 지역에서의 금융 안전망 수립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동아시아 차원에서 금융 안전망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신아시아 외교를 통해 금융 안전망 수립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지역 차

원의 금융제도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금융협력 분야의 중기적 목표는 동아시아의 통화기금을 설립하는 것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통화기금(East Asian Monetary Fund: 이하 EAMF)은 동아시아의 금융 및 통화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구 선진국 중심의 금융제도인 IMF 중심의 거버넌스에 의존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이 지역 차원의 통화기금 설립에 반대 입장을 보여 왔지만, 서구 선진국 그리고 IMF만으로 크게 성장한 글로벌 통화 및 금융을 적절히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차원의 금융협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리한 환경을 잘 활용하여 동아시아에서 통화 기금을 설립하는데 신아시아 외교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2010년 G20 정상회의의 주최국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때 습득한 노하우와 금융 외교적 역량을 활용하여 2013년 이후에도 동아시아 차원에서 금융 외교에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금융협력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공동 통화의 이용이기 때문에 공동 통화 지역이 만들어지게 되면, 통화에 관하여 운명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적대적 행위라든지 갈등을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동아시아 금융협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전략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과 일본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의 통화가 공동 통화가 되는 것은 상당한 난관을 통과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통화로 가는 과정에서 공동 통화 단위를 만들고 또 각국의 거시 경제 정책, 환율 정책 등을 조정하기 위한 협력을 하게 되므로 국가 간의 협력과 타협의 문화를 습득하고 협력의 습관이 정착되는 효과를 거두게 되고 이것은 결국 아시아 국가 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에너지 및 기후 분야 협력과 아시아 평화 증진방안

아시아 에너지 협력의 진전에서 선순환 구조가 쉽게 정착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우선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에너지 협력에서 경제적 이해관계의 상충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에너지 문제에서 공동 구매, 개발 및 비축 등의 협력적 기제보다는 주요 수요국들이 공동으로 처한 에너지 공급의 안정적 확보라는 과제 하에서 경쟁적, 갈등적 기제가 작용할 가능성도 많다. 이처럼 공동의 이해관계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아시아의 에너지 협력은 대단히 느슨한 상태의 대화체 및 협력체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해당 이슈에 따라 제한적인 진전과 퇴보를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아시아 에너지 협력의 추진력(momentum)은 점차 상실되어 궁극적으로는 대화 기구(talk shop) 형태의 협력체로 남아있게 되며 사안별로 협력과 갈등의 구도가 지속된다.

이와 관련, 아시아 평화의 증진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협력의 수준을 높이는 사고가 필요하다. 첫째 단계는 아시아 지역에서 에너지 및 기후 분야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즉, 에너지 및 기후 변화를 통한 아시아 평화 구축은 일차적으로 본격적인 역내 에너지 및 기후 변화 협력의 기반 조성 및 공감대 확산을 단기 목표로 한다. 현재의 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및 기후 변화 관계가 본격적인 평화 관계로 이행해 가기 위해서는 일차적인 신뢰 구축 조치(confidence building measures)가 수반되어야 한다.

에너지 수급과 관련해서 아시아 국가들의 상호 연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공급국이 소수로 한정된 상태에서 역내 국가들의 급격한 수요 증대는 수급을 둘러싼 갈등 구조의 심화를 필연적으로 동반해 왔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의 동북아 3개국은 거대 소

미국으로서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에서의 독자적인 수급 노력을 강화해 왔다. 이러한 차원에서 아시아 에너지 협력의 진전에서 에너지 상호의존이 협력의 관계로 이행하는 선순환 구조가 쉽게 정착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도 아시아 역내 국가 간의 입장은 현재 상이한 상태이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의무를 우선으로 지게 될 일본 및 자발적 감축 목표를 공표한 한국 등 일부 선진 산업국들과 중국, 인도와 같은 거대 개발도상국, 그리고 다수의 아시아권 개발도상국들의 기후 변화 관련 입장은 상이한 상황이다.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의 전망이 아직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역내 평화구조가 단시일 내에 정착되기에는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에너지 및 기후 변화에 대한 원론적인 논의를 넘어선 현실적인 제약 요인들을 극복해 내는 것이 단기적인 평화 구축의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한다. 공동연구개발, 다양한 형태의 대화 기구 등은 역내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경쟁 관계를 피하며 공동의 이해관계를 증폭시킬 수 있는 공공재의 창출 여부에 대한 관심과 합의를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ASEAN+3, APEC 등 기존 다자기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및 기후 변화 논의는 이들 이슈와 관련된 평화 구축의 일차적인 장을 제공해 준다.

둘째, 단기적인 공감대 확산 및 기반 구축에 뒤이어 중기적 방안으로는 실질적인 협력 사업의 증대 및 성공 사례 구축을 통한 신뢰 구축 조치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이 시기에서도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아시아 에너지 및 기후 변화 문제에 있어서 협력적 기제보다는 주요 수요국들이 공동으로 처한 에너지 공급의 안정적 확보 및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과제 하에서 경쟁적, 갈등적 기제가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처럼 공동의 이해관계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아시아의 에너지 및 기후

I
II
III
IV
V

변화 협력은 대단히 느슨한 상태의 대화체 및 협력체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중장기적인 추진동력의 상실을 가져와 궁극적인 평화 구조에 기여하기가 어렵게 된다. 기후 변화와 관계되어서는 2012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개략적인 방향 제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은 계속 논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에너지 및 기후 변화 관련한 중기 방안에서는 실질적인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를 구축하는 것이 이들 이슈를 통한 평화 구축에의 주요한 성과가 된다. 이 단계에서는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연성 의제(soft agenda)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역내 교역의 원활화 조치, 수송로 안보,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보급, 에너지 효율화 및 절감 프로젝트 등이 중기 단계의 프로젝트로 실행이 가능하고,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는 역내 청정개발체제 사업 강화 및 관련 기술의 보급을 중점적으로 실행할 필요성이 있다. 에너지 및 기후 변화와 관련한 상호의존도의 증가는 궁극적으로 역내 평화 형성의 기초가 되며, 신뢰 구축 조치를 강화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신뢰 구축 조치의 강화는 APEC, ASEAN+3, EAS 등의 다자협력 기구 및 ARF를 비롯한 지역안보협력기구와도 연계되며, 이러한 다차원적인 틀에서 에너지 및 기후 변화 논의들이 구체화되고 추진되는 것이 역내 평화 정착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기존 지역협력기구들의 유용성과 더불어, 에너지 및 기후 변화 관련 이슈별로 클러스터가 형성되면서 보다 심화된 제도적 틀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장기 방안에서 다루어질 포괄적 에너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역내 평화 증진과 맥을 같이 한다.

셋째,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아시아 에너지 및 기후 변화 협력을 통한 평화 정착은 여러 실질적 협력 프로젝트들이 성공을 거두면서 보다 심화된 형태의 제도화를 거쳐 에너지 및 기후 변화 공동체 형태로 이행되는 발전 단계를 상정한다. 중기 과정에서 논의한 다양한 형태의 협력 의제들이 참여국 간 공동의 이해관계를 도출하게 되면서 이슈별 지역협의체는 확산(spill-over)의 과정을 거쳐 포괄적인 에너지 및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고 이를 통해 아시아 평화 구축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다. 이는 유럽이 석탄철강공동체로부터 유럽 경제공동체 그리고 유럽연합으로 발전한 바와 같이, 에너지 및 기후 변화 협력을 중심으로 한 확대와 연계를 통해 아시아 역내 국가 간 평화 정착과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포괄적 아시아 에너지 네트워크는 나아가 역내 초국경적 에너지 교역을 원활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에너지 네트워크의 주요 지향점으로는 ① 무역 원활화를 통한 에너지 교역의 증진, ② 아시아 역내 에너지 합의서 체결, ③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에너지 협력의 제고, ④ 회원국 및 다자에너지기구를 포괄하는 범아시아 에너지 협력 기구 형성 등을 들 수 있다. 글로벌 차원의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아시아 지역적 차원의 협력체제를 마련한다는 범아시아 에너지 네트워크의 목표는 중장기적으로 아시아 전반적으로 생산 및 수요가 증대되고 있고, 역내 에너지 교역 확대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 증진이 긴요하게 되며 동시에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기여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아시아 지역 내 다수의 개발도상국들에 있어서 경제개발, 성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도 에너지협력이 주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에서, 범아시아 에너지 공동체



형성은 장기적인 아시아 에너지 평화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기후 변화 네트워크는 범지역적 차원의 기후 변화 대응 역량 강화 및 온난화 방지를 위한 청정에너지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환경적인 평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지역 환경 공공재의 창출이라는 점에서 개별 국가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공동의 환경정체성을 창출시키게 되며, 이를 통해 인간안보적인 차원에서의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다. 사회·문화 교류와 아시아 평화 증진방안

신아시아 외교의 사회·문화 교류 및 인적 교류를 통해 아시아의 평화를 창출하는 데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문화, 인적 교류는 1~2년의 사업으로 그 효과를 보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사회·문화 교류가 추구하는 바는 단순한 문화의 혼종이 아니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공감대의 형성, 공통 인식의 형성을 통한 인식 공동체 형성 또는 지역적 정체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는 교육 관련 협력이다. 아시아의 평화 증진에 있어서 문화, 인적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의 증진은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자세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이런 전제조건의 형성은 상대방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교육 수준이 필요하다. 나아가 교육을 통한 전반적인 교육 수준의 증대는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소득 수준의 증대를 의미하고 경제적인 빈곤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경제적 빈곤이나 소득 수준의 향상은 다시 사회적 안정으로 이어지고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는 평화 문제와

직결된다. 따라서 교육을 매개로 한 교류, 개발도상국의 교육 문제에 대한 다양한 지원은 중기, 장기적 관점에서 아시아의 평화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을 놓는 작업이 된다.

또한, 중기 차원에서 또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은 이주 노동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는 매년 약 200만 명의 국경을 넘는 이주 노동이 발생하고 있다. 이주 노동과 관련하여 이주 노동자의 인권과 그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보장하는 지역적 협력의 문제는 아시아 평화에 공헌할 수 있는 바가 있다. 많은 나라에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개인적 차원의 큰 고통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국가 간의 대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아시아 차원의 인권 보장을 위한 메커니즘이 마련된다면 이는 잠재적으로 이를 매개로 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 충돌이나 대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많은 경우의 이주노동이 본국에서의 경제적 곤란함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주 노동자의 인권과 정당한 대우가 보장되는 이주 노동의 촉진은 빈곤 문제의 해결과도 연결되는 사안이다.

같은 논리에서 결혼 이주민에 대한 인권 문제를 위한 지역적 메커니즘의 마련 역시 아시아 평화에 이바지하는 길이 된다. 결혼 이민자 역시 인적 교류를 통한 사회·문화적 교류의 한 축을 구성하는데, 결혼 이민의 경우 단기간의 이주 노동에 비해서 더욱 복잡한 문제를 노정한다. 이주자 개인의 인권뿐만 아니라 결혼 이주자 사이에서 출생하는 2세들의 문제 역시 여기에 관련된다. 많은 사회에서 결혼 이주자의 2세들은 본류 사회에 진입하지 못하는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런 2세들은 개별 사회에서 저소득층, 하층, 취약한 계층, 이류 시민으로 편입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전략한 결혼 이민자들의 2세는 잠재적으로

I
II
III
IV
V

사회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들의 인권 문제와 호스트 국가로의 진입은 2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쥐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개별 국가의 국내적 안전과 평화 문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보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결혼 이민자는 물론이고 그 2세들은 현재의 호스트 국가와 자신들의 출신 국가 사이를 문화적으로, 인적으로 이어주는 훌륭한 가교의 역할을 하여 상호 간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이주 노동자, 결혼 이민자의 개인적 차원에서 인권 문제, 정당한 대우는 궁극적으로는 빈곤 문제의 해결, 개인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인간안보 문제의 해결이라는 함의를 가지므로 아시아 지역의 평화 구도 창출과 연결된다.

한편, 문화가 국경을 넘는 현상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순화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중요하다. 문화 제국주의의 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류가 일본, 중국, 동남아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그 부작용으로 한류에 대한 경계, 혐한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 국가의 대중문화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인기를 얻는 것은 문화 교류의 긍정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상호 이해가 증진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한류 혹은 다른 대중문화의 강조로 인해 다른 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발생하는 것은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해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따라서 대중문화의 해외 진출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현상이 순기능을 하여 상호 간의 이해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평화를 창출해낼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사회·문화적 교류는 경제적 연계나 정치·군사적인 방법으로 인한 연계에 비해서 보다 굳건하고 오래가는 평화의 기반을 창출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사회·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기반이 형성되는 것은 10~20년의 노력으로 결실을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또한, 이런 기반의 형성이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므로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평화구조 창출이 매우 추상적인 목표일 수 있고 따라서 단기적 시각에 의해서 희생당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런 점은 매우 경계해야 할 것이다.

보다 기술적 차원에서 사회·문화의 교류는 점차로 다른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제고시킬 것이고, 다른 국가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수록 특정 사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나 인간안보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런 관심은 해당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국경을 넘어선 인간안보에 관한 연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사회적 연대를 통해 인간안보의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은 아시아 지역 평화구조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시아 지역의 사회·문화, 인적교류는 서로 다른 종교, 언어, 문화권의 사람들 간에 이해를 도모하게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물론 이런 교류에 따른 부작용 혹은 반작용의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 교류는 상호 이해를 낳는다. 이런 상호 이해는 더 나아가 같은 아시아인이라는 상호 연대 의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 공통의 문화 혹은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공통의 요소를 발견하고 이를 공유하면서 유사한 세계관 내지는 인식을 서로 다른 국가, 문화 사이에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문화적 연계가 만들어지고 더 나아가 유사한 인식, 세계관을 공유하게 되는 것은 서로 다른 사회와 문화 간에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지름길이 되고 여기에서부터 하나의 공동체로서 정체성이 생겨나 지역공동체 건설에 공헌할 수 있고 이런 공동체 건설은 아시아 지역 전체의 평화를 보장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2. 지역별 추진방안

가. 동남아시아

신아시아 외교를 통한 아시아 평화 증진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은 몇 가지 점에서 한국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동남아시아 지역은 신아시아 외교의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대상이다. 또한, 동남아시아 지역은 한국과 비교적 지리적 거리가 가까운 관계로 동남아시아의 평화 증진과 평화 정착은 한국의 국가 이해관계와 더욱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동남아의 지역 분쟁 가능성이 큰 남중국해만 보아도 남중국해에서 안정적인 항행권의 확보는 한국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된다. 또 동남아에서 인신매매나 마약 밀매, 해상 안전 문제의 해결은 한국에 직접적인 함의를 가질 수 있다.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신아시아 외교는 단기, 중기, 장기의 세 단계로 나누어, 각각 협력 기반의 구축, 지역 불안정성의 해결, 그리고 포괄적인 인간안보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한다.

〈단기적 과제: 협력 기반의 구축〉

단기적인 시각에서 동남아시아와의 신아시아 외교는 주로 경제협력 및 개발협력을 통한 협력 기반의 구축 및 동남아 입장에서는 소득 증대와 시급한 국가적 현안 해결이란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다른 국가나 지역에 비해서 동남아시아와의 관련성은 매우 많았지만, 그간 한반도 문제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주변 4강 외교에 한국의 외교적 역량이 집중되어 왔다. 따라서 우리와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ASEAN, 동남

아시아와의 관계 증진이 다소 소홀히 되어 왔다. 주변의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 동남아와의 협력 관계 및 기존 협력의 실적을 볼 때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

따라서 초기 한국의 대동남아 신아시아 외교는 우선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협력 기반의 구축과 한국이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적 관계를 강력히 원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자세는 경제협력과 개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몇몇 중·상위권 소득을 보이는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발전도상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등의 국가들은 특히 한국의 개발협력을 많이 원하는 국가들이다. 이런 국가들 외에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일부 개발협력에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보다는 나아가 상호 도움이 되는 대등한 경제협력에 큰 관심이 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앞서 말한 보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들은 한국과의 개발협력에 큰 관심을 보인다. 이 개발협력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직접적으로 해당 국가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ODA의 증대가 중요하다. ODA의 증대를 통해서 이들 국가에서 시급히 필요로 하는 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ODA 증진은 단순히 지원 액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ODA 효과성의 문제까지 함께 고민하며 이루어져야 한다. 또 ODA를 통한 개발협력에서도 수혜 국가가 농업 국가와 산업화를 추진하는 국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방향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추진했던 발전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경제 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는 능력



과 지식 기반을 해당 국가에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협력에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국가마다 가지고 있는 경제의 수준, 역사적 경험, 사회적 특수성을 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는 기계적 발전 경험의 대입은 지원의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 국가와의 개발협력에서 해당 국가들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국민 소득의 증대라는 성과이다. 농업 개발이든 산업 개발이든 이를 통해서 국민 소득이 전체적으로 증대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1~2년 내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지만 국민 소득의 증가를 통해서 경제적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경제적 빈곤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 불안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사회적 불안정이 해결되는 것은 개별 국가의 국내 정치 안정은 물론이고 보다 장기적인 발전의 기반이 된다. 국내 사회와 정치의 안정은 동남아 지역 전체로도 개별 국가의 안정을 바탕으로 한 평화 혹은 갈등의 제거라는 측면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더욱 발전한 국가들과의 협력방안에서는 역시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협력방안의 발굴이 중요하다. 이들 국가는 기존 산업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경험했고, 한국과 유사하게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찾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태국 등과 녹색기술협력 등은 상호 간에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매우 유망한 협력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단기 협력 사업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동남아에서의 효과는 내적 안정을 바탕으로 한 개별 국가들의 정치적 안정과 시급한 국가적 현안의 해결이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이 동남아 평화구조 정착에 모든 것이 될 수는 없지만, 이런 문제들이 선결되지 않고는 개별 국가는 물론이고 국가 간, 지역 내 평화구조의 창출이라는 더 큰 과제는 달성하

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단기간에는 개별 국가의 소득 증대와 차세대 발전 전략 문제에서 한국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중기적 과제: 협력의 고도화〉

중기, 즉 향후 5년 내외의 협력에서 더욱 중요한 부분은 단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협력의 기반을 더욱 고도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문제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장 가시적인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상호 신뢰를 도모하고 개별 국가의 가장 긴급한 과제를 해결한 후에는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지역 안보, 지역협력 구도 형성 등에서 협력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고, 이 단계에서 지역 불안정성의 요소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솔직하게 논의하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는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중기에서 한국과 동남아의 신아시아 외교를 통한 협력은 경제협력에서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한 정치·안보협력으로 옮겨가는 단계가 될 것이다.

현재 동남아의 지역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들은 몇 가지로 나뉜다. 우선 동남아 지역, 더 넓게는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강대국 간의 경쟁이 가장 큰 불안 요소이다. 동남아 지역 내의 국가들 간에는 ASEAN이라는 지역 기구를 통한 어느 정도의 신뢰가 구축된 상황이나 이런 신뢰가 주변 강대국과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동아시아와 동남아 지역은 세계적인 강대국들이 만나는 지역이 된다.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싸고 있으며, 여기에 호주, 인도 등이 존재한다. 이런 지역 강대국들의 각축 그리고 나아가 서로 다른 이익에 기반을 둔 충돌 가능성은 동



남아 국가들에 매우 중요한 안보 위협이 되며, 따라서 동남아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ASEAN이라는 지역 기구는 동남아를 둘러싼 이런 안보 환경, 강대국 간의 각축 관계에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분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특정 강대국이 동남아에 대해서 큰 영향력 내지는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강대국 간의 세력균형을 통한 전략이 지역 안정성을 보장해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세력균형은 단기적인 방편일 뿐이고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지역에서 강대국의 이해관계 충돌을 줄이고, 강대국들의 각축을 종식하는 방법이 항구적 평화를 가져오는데 바람직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유인(crowd-in)’의 방법을, 보다 항구적 평화 모색을 위해서는 ‘구축(crowd-out)’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대동남아 외교 정책을 경제협력을 통해 형성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동남아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한, 그리고 강대국 경쟁 문제에 대한 공통의 인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끊임없는 전략적 대화를 통해서 동남아 국가들과 한국 간의 지역 안보 문제에 대해서 유사한 이해관계와 전망, 그리고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한국과 ASEAN이 공통의 지향을 가지고 강대국과의 관계를 관리해나가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런 강대국에 의한 지역 불안정성 문제 중 가장 큰 부분이 중국의 잠재적 위협이라고 판단된다. 중국은 경제적 자원을 이용하여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환영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커진 중국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 일본과 중국의 센카쿠를 둘러싼 갈등 양상을 보면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잠재적 영유권 분쟁의 소지를 가진 동남아 국가들은 지역 안정과 안보 문제에 대해서 크게

두려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동남아 국가들은 지역 안보 문제에 이해관계를 가진 강대국을 참여시킴으로써 중국으로부터 유래하는 잠재적 안보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ASEAN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역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crowd-in’이 아닌 ‘crowd-out’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따라서 중국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강대국들의 경쟁 및 대결을 통한 세력균형보다는 강대국의 이해관계 충돌을 줄이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다자제도를 통한 안보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국이라는 국가를 지역 안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자관계 속에 넣고, 다자적인 틀의 제도와 규칙을 통해서 중국을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한국은 ASEAN 국가들과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경제적 관계와 협력으로 형성해 놓은 신뢰 관계는 이러한 정치안보적 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강대국의 제어를 통한 지역 안정성 확보는 다른 한편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잠재적 군비 경쟁의 해소를 통한 지역 안정 및 평화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등이 앞장서고 있는 동남아 지역의 군비 확충은 개별 국가의 경제적 자원을 막대하게 동원하는 것이므로 개별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남중국해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불안 요소를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5개국 방위조약이나 냉전시기 미국의 지원 아래 국방 문제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동남아 국가들이 국방력을 정상화시킨다는 시각도 있지만, 동남아 지역의 잠재적 불안 요소를 보면



이런 정상화의 범위를 벗어나 출혈적 경쟁, 그리고 군사적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남중국해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의 지역 갈등 구조를 없애고 강대국 간의 경쟁 구도를 완화하는 것은 동남아 지역의 군비 확충 경쟁을 완화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의 평화구조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장기적 과제: 평화구조의 정착〉

경제 성장과 소득 증대라는 단기의 문제, 그리고 지역 불안정성 제거라는 중기의 과제를 완성하게 되는 시점은 2018년으로 설정된 장기 과제의 시점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간상으로 동남아시아의 평화구조 창출에 있어서 장기 과제로 설정될 수 있는 것은 인간안보 문제의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안보 문제의 해결은 앞서 언급했던 단기, 중기 평화구조의 창출에 기반을 두고 있다.

경제 성장을 통해서 개별 국가들을 안정시키고 더 나아가 빈곤의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동남아 인간안보 문제의 출발점이다. 많은 인간안보의 문제가 빈곤 문제를 그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을 증대하는 것은 인간안보의 출발점이다. 더 나아가 개별 국가들은 사회 안정을 바탕으로 국가 재정에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고 이러한 자원, 그리고 사회 전반의 발전은 개별 국가의 거버넌스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 개별 국가의 강력한 거버넌스 제도와 체제의 수립은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인간안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아울러 지역 안보 불안정성을 해소하게 되면 군비 확충 등에 쓰이던 자원들이 인간안보의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역 국가들 사이에 현재 상호 불신 혹은 신뢰의 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초국가적 인간안보 문제에 대해서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눈앞의 이익에 급급하지 않는 보다 여유로운 자세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자세가 형성되는 것은 지역에서 인간안보 문제에 대한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발전에 병행하여 인간안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술적 협력, 혹은 국가 간에 이견을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조정자의 역할을 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의 인간안보 문제 해결에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경제협력과 개발협력을 통한 개별 국가의 안정, 그리고 중기에 지역적 불안정성과 안보 문제의 어느 정도 해결에 덧붙여 장기적으로 인간안보 문제의 해결이나 전향적 방향성 모색이 따라온다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평화를 위협하는 주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해결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런 노력의 지속을 통해서 동남아 지역에 평화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나. 중앙아시아

신아시아 외교를 통해 아시아의 평화를 증진시킨다는 우리의 기여를 세계에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앙아시아는 미래의 에너지 자원 공급처로 주목을 받으면서 세계의 열강이 모여들고 있는 지역이며, 한편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전개되고 있는 지역이다. 전자의 경우도 이해 당사국들이 에너지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경제적 목적을 넘어서 사실상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에너지 안보

I
II
III
IV
V

문제, 송유관과 파이프라인을 통한 신질서의 형성 등이 그것이다. 후자도 단순히 전쟁뿐만 아니라 인간안보 문제, 마약 루트의 확산 등과 같은 부차적인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이처럼 21세기 ‘신 거대 게임’의 중심지인 중앙아시아는 전체적으로 우호적인 협력보다는 이해관계의 충돌이 우선되는 세계의 화약고로 부상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 평화를 증진하고 정착하는 작업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된다. 만약에 특정 국가가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면,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중앙아시아 5개국의 독립 초기부터 경제 교류를 통해 경제적으로 상생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특히 우리의 전략은 해당국의 경제발전에 밑바탕이 되는 2차 산업을 중심으로 전개하여 왔기 때문에 세계 열강들이 에너지 자원에 치중한 것과 차별성을 보였다. 이러한 과정은 중앙아시아 전체가 자본주의를 학습하고 체제 전환기를 연착륙시키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하였다. 특히 우리는 중앙아시아에 참여하는 국가 중에서 정치, 종교 측면에서 자유로운 유일한 국가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 3강과 기존의 외교적 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슬람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점을 지닌 우리가 중앙아시아의 평화 증진과 정착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우리는 중앙아시아에서 중견세력(middle power)으로서 인정을 받아 이 지역의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 중심의 다자간 협력 기구를 구상하여 충돌 요인들을 제거하는데 집중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기, 중기, 장기의 단계별 전략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단기적 과제: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체 형성〉

중앙아시아에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단기 전략은 이 지역의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당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제안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경제발전, 수자원 문제, 기후 변화 및 환경 문제 등 3가지이다. 현재 5개국이 정기적으로 회담을 개최하여 경제통합, 수자원 공유, 환경 문제 공유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서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5개국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위의 문제 중에서 경제통합은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수자원 문제와 기후 변화 및 환경 문제는 결국 기술과 재정 문제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선진 열강과 국제기구에 전달할 수 있는 중견세력이 필요한 것이다.

가칭 ‘중앙아시아 5개국+1(Central Asian 5 States+1)’을 제안하여 위의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는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들 국가에 제공하고 있는 ODA의 현실화 문제, 기후 변화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우리의 노하우 전수 등을 제안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된다. 무엇보다 이러한 기구를 제안하는 것은 중앙아시아 5개국과 우리가 상생하는데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첫째, 경제발전 부문에서 한국은 다음과 같은 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점차 2차 산업 중심의 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여전히 필요로 한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한국·중앙아시아 외교 포럼’을 보다 확대, 발전시

I
II
III
IV
V

켜 해당국의 경제발전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실물 경제에 필요한 전문가를 우리가 파견하여 자본주의 시장에 필요한 증권거래소, 무역 협회, 무역진흥공사 등과 같은 기구들을 표준화시키는 작업은 5개국 모두에게 필요한 작업이다. 이것은 현재 기구별로 간헐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례화 시키는 작업을 추가시키면 된다. 특히 중국의 물량 공세로 우리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성향의 지원은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의 자본주의 시장을 국제 표준에 맞추어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달성되면 우리 기업체들의 진출이 더욱 증가할 것이며, 반대로 현지 기업들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수자원 문제의 관리와 관련 우리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은 강의 상류에 존재하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강의 하류에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자원을 둘러싼 충돌이 발생한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상수도의 현대화에 있다. 예를 들면, 우즈베키스탄은 물을 절약하자는 범국민적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의 인식은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 이것을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한국의 역할이다. IT 기술을 접목시킨 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낭비되는 물의 양을 줄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에 필요한 재정 문제는 한국의 ODA를 통해 먼저 해결하고 이후 국제기구나 선진 열강들의 지원을 끌어들이어 해결할 수 있다. 이 전략 역시 상생하는 것이다. 수자원 문제와 관련된 우리의 기업체들이 진출할 수 있는 문호가 더욱 넓어지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한강 개발과 더불어 최근에 논의되는 4대강 사업까지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자원 문제를 해결

한다면 중앙아시아 5개국은 충분히 우리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기후 변화 및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랄 해 고갈에 따른 환경 문제는 이미 국제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사국인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내고 해외봉사과 같은 인적 지원을 자체적으로 병행할 수 있다. 문제는 녹색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태양열, 풍력과 같이 자연을 활용하는 것은 해당국과 우리 모두 충분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재정 확보를 위한 공동 대처방안의 강구 및 2차 산업에 필요한 친환경적 기술 지원 등을 이 기구에 제안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앙아시아 5개국이 적합하다는 점이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농산물 수출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대체하는 농산물 공급처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미 규모는 작지만 중국산보다 품질은 좋으면서 가격대가 비슷한 작물들이 수입되고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1’을 통해 위의 세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면 우리의 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제안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중기적 과제: 중앙아시아 지역안보를 위한 협력〉

단기 전략이 중앙아시아 5개국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면 중기는 이 지역의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국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참여하는 전략이다. 그 대상은 아프가니스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아직 아프가니스탄 전

I
II
III
IV
V

쟁의 승자와 패자가 누가 될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미국을 지지해야 하는 기존의 외교 노선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미국을 지지해야 한다. 만약에 탈레반이 승리를 거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 위 3국에 이 전쟁의 승패는 자국의 안보 전략과 대외 노선을 수정할 만큼 큰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누가 승리하느냐와 상관없이 아프가니스탄의 미래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서 이 지역의 안보 문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는 이러한 조건을 고려하여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앙아시아 3국에게 지역의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한 다자 간 협력 기구인 가칭 '3개국+1'을 제안할 수 있다. 협의 내용은 다음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첫째, 미국이 승리하면 가장 먼저 아프가니스탄 재건 문제가 대두할 것이다. 해당국의 질서에 필요한 치안, 교육, 마약 퇴치 등이 사회문제로 우선 거론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독으로 역할을 하기보다는 3국과 함께 기능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에는 3국의 디아스포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통의 역할을 찾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군사적인 지원보다는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우리의 OD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3국과 공동으로 지원해야 한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은 영세중립국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대외 노선에 큰 변화를 두지 않겠지만,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대미외교 전략에 수정을 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극성을 가질 것이다. 미국을 이 기구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3국의 독재정치 체제에 대해 미국 의회가 지금까지 간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에 탈레반이 승리한다면 이 지역의 안보는 심각해진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3국은 안보를 강화시켜야 한다. 우리가 3국의 안보를 위해 군대를 파견할 수는 없다. 이 경우에는 인간안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난민들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의료 부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다. 3국 역시 자국의 디아스포라가 재이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지만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결과적으로 ‘3개국+1’은 우리가 이 지역의 안보 문제를 군사적으로 직접 지원한다는 개념보다는 인도적 차원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정치적 계산이 있다. 미국이 승리하면 미국이 하지 못하는 기능을 우리가 대신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일 수 있으며, 탈레반이 승리하면 이 세력의 복상을 막으려는 중국, 러시아 등과 같은 수준에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앙아시아 3국은 중국군의 주둔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타지키스탄에 주둔해 있는 러시아군이 주력군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러시아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위상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 과제: 중앙아시아 평화 증진을 위한 중재 역할〉

장기 전략은 중앙아시아 3강을 상대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중앙아시아의 평화 증진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역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아시아의 중견 세력’으로서 주요국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신아시아 외교는 주변 4강과의 관계가 공고히

I
II
III
IV
V

된 위에서 외교의 지평을 아시아 국가들로 확대하고 실질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에 참가하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와 우리가 상충하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 3강이 이 지역에서 충돌하고 있는 세 가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III-1 3강(미국, 중국, 러시아)의 충돌요인

미국	중국·러시아(공조체제)
◦ 카자흐스탄에 석유개발 선점	◦ 후발 주자이지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석유·가스 개발에 우위
◦ 기존의 러시아 독점의 송유관·가스파이프라인에서 탈피하는 신라인 건설 추진	◦ 중국은 독자적 송유관·가스 파이프라인 확보 ◦ 러시아는 여전히 송유관·가스 파이프라인에 우위를 점하고 있음
◦ GUAM을 통한 친미동맹 확보 ◦ NATO의 동진 추진	◦ SCO를 통한 미국 세력 견제 ◦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석유개발, 송유관과 가스 파이프라인, 이 지역에 구축된 GUAM, SCO와 같은 다자 간 협력 기구 어디에도 연관성이 없다. 비록 우리가 석유를 개발하고는 있지만, 그 규모는 3강을 위협하는 수준이 못된다. 따라서 세 가지 충돌 요인을 가지는 3강이 모두 참여하여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제안하는 것이 장기 전략이라고 여겨진다. 가칭 ‘Central Asian+4(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는 양대 경쟁 구도를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구이자 중앙아시아에서 정치적으로 우리가 중간세력으로서 역할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데 적합한 다자 간 협력 기구라고 판단된다.

물론 여기서 고려해야 하는 변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다. 미국이 승리하면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체제는 더욱 강해질 것이며, 반대로 미국이 패배하여 중앙아시아에서 철수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체제는 깨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9·11 테러 이후 이 지역에 미군이 주둔하기 때문에 양국의 공조체제가 구축된 것인데, 미국이 철수하면 이러한 공조의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양국의 관계는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미국 역시 철수를 한다고 해도 중앙아시아에서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친미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시키는 전략을 수립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앙아시아의 국제질서는 복잡해지고 악화될 가능성이 더 크다. 결과적으로 3강이 가지는 세 가지 충돌 요인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예상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3강의 상위 국가 간 소통 문제, 3강과 하위 국가인 중앙아시아 5개국의 소통 문제, 그리고 8개 국가와 EU, 일본, 중동, 터키, 인도 등과의 소통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이다. 이들은 모두 정치, 경제, 종교 등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자유로운 국가의 중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은 우리만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다. 서남아시아

인도의 아시아 평화에 대한 의견 및 정책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즉, 인도의 대미정책과 관련한 역사적 변화를 살펴보면, 과거 냉전시대 인도는 반미주의라기보다는 미국의 아시아 내 주둔이 자국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판단 하에서

반대하였다. 그래서 인도는 미국의 아시아 내 주둔에 반대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전혀 고려하려 하지 않았으며, 미국과 영국의 세력에 균형을 가하기 위하여 소련과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특히 파키스탄을 자국의 영향권 안에 두면서 우방으로 오랫동안 지원하였던 미국의 정책은 인도로 하여금 미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하는 비동맹주의의 배경이 되었다.

그렇지만 냉전이 종결된 이후, 특히 9·11 테러 이후 인도의 국가안보 전략은 큰 변화를 겪었다. 그러한 인도가 근년에 들어와서 21세기 중반까지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제3의 경제대국이 되겠다는 비전을 확정하고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가안보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비동맹주의와 자주외교로 특징지어졌던 인도의 전통적인 대강대국 외교에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먼저, 인도의 국가안보 전략의 기초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영토와 주권의 보전이다. 중앙아시아로부터 지속되는 정치적 불안정, 역내 이슬람화의 확산에 대한 우려는 인도로 하여금 주변국들로부터 영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하게 하였다. 특히 인도는 1998년 성공적으로 핵 실험을 마친 이후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한 안보 전략 교리를 확립하였고, 이를 통해 인도의 국가안보전략에서 가장 큰 안보적 위협과 도전을 불안정하고 숙적인 이슬람 국가 파키스탄과 경제대국, 군사대국으로 등장한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핵심을 두고 있다.

둘째는 원활한 에너지와 천연자원의 공급이다. 인도에 있어 향후 수십년간 경제성장을 위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인도의 국가안보전략과 외교 정책과 국방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대한 고려 요소가 되고 있다.

셋째는 에너지의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해상 교통로의 안전 확보이다. 이미 오랫동안 인도 해군의 목표였던 해상 교통로의 보호는 대양 해군을 지향하고 있는 인도의 비전과 구체적인 투자계획인 ‘2004 인도 해양 독트린(2004.6.23 공개)’에서도 재차 확인되었다.

넷째는 다양한 비재래식 안보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인도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 대테러전 관련 정보를 폭넓게 교환하고 미국과 많은 합동 군사연습을 시행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도의 대주변국, 특히 강대국에 대한 외교 정책을 살펴보자. 인도의 대외 정책의 핵심, 즉 호의적 근린정책, 타국의 국익에 반하는 영토 진입 반대, 내정불간섭, 영토 보전과 주권의 존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은 변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인도가 세계의 강대국들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으려 하는 것은 어느 국가와도 동맹 관계를 맺지 않는 비동맹, 자주외교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도는 초강대국인 미국과 기술, 자본 면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할 것이고, 떠오르는 중국과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려는 러시아와도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에너지 확보와 무역 확대를 도모하려 할 것이다. 그렇지만 향후 세계 시장에서 미국, EU, 일본, 중국과 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가 어느 일방과 배타적인 협력체제를 맺을 것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전방위 외교와 예방 외교를 표방하고 지역 안보의 쟁점에 따라서 인도 나름의 중재자와 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하려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냉전 이후, 특히 9·11 테러 이후 인도의 국가안보 전략이 큰 변화를 겪으면서 인도는 전통적 중립외교노선, 비동맹주의, 평화주의 외교와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외교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다. 과거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이의를 달고 중국 및 러시



아와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인도가 이슬람 공화국인 파키스탄과 세계 경제 2위의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과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도는 21세기 중반까지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제3의 경제대국이 되겠다는 비전을 확정하고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국가안보 전략과 정책도 수립하고 있다. 이처럼 인도의 대외 정책 가운데 가장 먼저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 대해서 인도는 과거 냉전시대, 비동맹 중립주의 시대와는 달리 이념에 기초하기보다는 현실적 국익을 반영한 실용주의적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

인도의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 전략적 중요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커질 것이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능력이 향상되고 있는 21세기에서 서아시아, 특히 인도는 동남아를 통해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시아와 모든 분야에서 더욱 빈번한 교류와 협력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안보 환경의 대변환 상황에서 우리가 인도의 국가안보 전략과 대외 외교 정책, 특히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평화주의 외교를 잘 파악하고 이해한다면 아시아의 평화를 증진하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인도가 아시아 평화의 증진에 기여할 부분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인도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동방정책(Look-East Policy)’은 애초에 중국이 버마(현재 미얀마)에 눈독을 들이는 것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었지만, 그 후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넘어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인도가 경제성장과 함께 지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전략적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특히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도 더욱 밀접해질 것이다.

아시아 평화에 대한 인도의 기여는 아시아의 주요 지역 강대국들과

의 외교와 안보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첫째로 인도는 아·태 국가임을 자임하고 적극적인 관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중국이 인도양 연안 국가들(방글라데시, 이란, 미얀마,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태국)과 유대를 강화하려는 것을 견제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려 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경쟁과 협력,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자행되는 테러로부터의 국토 방호, 에너지 위기와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해상 교통로의 보호 등을 통해 인도는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연계전략(Af-Pak 전략)과 관련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테러와의 전쟁에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를 미국 측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둘째로 인도는 중국과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과거의 대결 구도를 종식하여 정치, 외교, 경제는 물론이고 군사 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력과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인도가 미국과 시행하고 있는 안보 대화나 군사 훈련 및 연습은 대부분 중국 견제(특히 인도양에서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인도는 ASEAN을 통한 중국과의 우호관계 구축에도 관심이 있다. 미국과의 안보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만으로는 국익을 극대화할 수 없으므로 제2의 강대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중국과의 관계(친디아, Chindia)를 증진하는데도 높은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인도는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경쟁하면서도 협력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고, 중국에 이어 인도가 새로운 아·태 지역의 강대국으로 등장하게 되면 지정학적 상황이 엄청난 변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인도는 미국 및 중국, 일본, 한국(통일한국)과 모두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맺으면서 아·태 지역의 신질서 구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아·태 지역에서 인도가 새로운 균형자 내지 안정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셋째로 인도는 일본과도 전 세계적 차원의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안보 분야의 협력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인도는 일본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쌍무협정을 체결하였고, 일본으로부터 첨단기술 교역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는 일본과 공개적이고 포괄적인 지역 안보구조(architecture)에 대해서도 협력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대화’라는 것을 신설하여 아프리카 대륙에서 진행 중인 양국의 개발 노력에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핵확산금지조약(NPT),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같은 국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채 일본과 민간 원자력 협력을 추진 중이다.

넷째로 인도는 재등장하고 있는 러시아와도 긴밀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와는 무역과 경제협력, 과학기술 교류, 에너지 공급, 첨단 무기의 수입 이외에도 테러 및 기타 비전통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구성된 상하이협력기구 차원에서 인도는 참관국으로 러시아는 회원국으로 다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양자 차원에서도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동 군사연습을 시행하고 있다.

다섯째로 인도는 중앙아시아 5개국에 대해서도 아프가니스탄의 재건과 안정화를 위하여 협의하고 지원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안보는 파키스탄의 안보이고 인도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도는 아프가니스탄의 주변 지역의 철도와 도로망 건설 사업에 참

여함으로써 인도 대륙과 중앙아시아, 더 나아가 중동과 유럽 대륙을 연결하는 거대한 교통망, 물류망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도 인도는 긴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을 벌이고 있다. 이는 인도의 안보 전략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인도는 아프가니스탄의 재건과 안정화에 참여함으로써 ‘안정, 독립, 번영의 아프가니스탄’을 지향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재건 사업에 대한 참여는 파키스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비군사적 차원의 지원만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이행하고 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과 인도는 SAARC의 회원국 자격으로 고도의 외교 회담을 벌이고 있으며, 인도는 이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재건 사업(사회간접자본, 전신 전화, 전력 발전, 교육, 건강 등)에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도는 다른 근린 국가인 이란과도 역사적, 문화적으로 많은 교류가 있었고, 현재에도 이란과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란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기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인도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의 대이란 정책 집행에 협력의 고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인도는 아시아에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강대국의 역할과 사명을 스스로 부여하면서 역내의 안정과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인도의 역할과 기여는 점차 확대되어 갈 것이다.

I
II
III
IV
V

라. 오세아니아

호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바탕으로 다른 국가들과 활발한 교류를 펼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아시아에 가깝게 위치하지만 역사적으로 유럽의 전통을 계승한 호주는 변동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미국과 유럽 강대국과 아시아 국가 사이를 연계하는 중진국적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자국과 지역, 나아가서 세계 안보와 경제성장을 위해 한편으로는 UN 등과 같은 다자 국제기구와 협력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강대국인 미국과 아시아 국가, 그리고 자국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미국을 포함한 모든 주체 간의 체계적인 협력 없이는 지역 내 평화체제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호주는 한국이 장기적으로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현실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에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 국가임이 틀림없다. 이를 염두에 두고 아시아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과 호주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단기적 과제: 경제협력을 통한 상호 신뢰 증진〉

단기적으로 한국이 신아시아 외교를 위해 호주와 협력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는 경제 분야이다. 구체적으로 G20 정상회의 및 지역협력기구 등에서 양국이 친밀한 공조를 통해 지역 내 경제 안정 및 군사적 안보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호주는 모두 아시아 지역 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자유무역 시장 체제 확산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건전한 글로벌 금융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양국은 이미 2008년부터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주축으로 부상한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경제 안정을 도모하며, 이를 위해 회

원국들의 상호 협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북미 및 유럽의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 철폐와 함께 세계 금융 규제 강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촉구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를 통한 양국의 이러한 주장은 자국뿐 아니라 선진국의 경제 여건에 의해 상당 부분 영향을 받고 있는 아시아 신흥국 및 개도국의 경제 안정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G20 정상회의는 아시아 국가들이 자신들이 직면한 경제 문제이지만 글로벌 차원의 해법이 요구되는 문제를 해결할 좋은 기회이다. 이런 점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은 사전 조율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의제화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서 G20 정상회의에서 선결 과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아시아 국가들은 APEC 정상회의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호 양국은 APEC 및 G20 회원국 중에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협력을 통해 균형 잡힌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제 성장을 위한 틀을 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서구 선진국들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들 국가에 비해 아시아 경제가 비교적 건강하게 운영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향후 1~2년이 아시아 국가들의 조율된 입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적기라고 예측되기 때문이다.

안보 분야에서는 호주가 제안한 APC 제안이 단기적인 성과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과거 1988년에 호주가 처음 APEC 창설 제안을 했을 때와 거의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가 처음으로 APEC 창설 제안을 했을 당시 ASEAN 국가들의 반발이 오늘날 그들의 APC 구상에 대한 반발의 이유와 거의 유사하다. 이러한 면에서 호주가 진정 APC 구상을 발전시킬 의도가 있다면 향후 장기적



인 계획에 따라 지역 내 국가들을 설득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더욱이 현재 APC 구상의 제안자인 케빈 러드 전 총리가 노동당의 총리에서 물러나 외교부 장관이 된 상황에서 노동당 최고 지도부가 앞으로 APC 구상을 어떻게 다룰지는 미지수이다.

실제 줄리아 길라드 신임 총리는 대외 정책에 대해 전문성과 관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평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케빈 러드 전 총리가 현 외교부를 이끌고 있고, 러드 정부 때의 인사들이 여전히 정부의 주요 요직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호주 정부가 앞으로도 아시아 지역 내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지속적인 제안을 함과 동시에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즉, 호주는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이 자국과 함께 아시아의 포괄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개입하기를 희망할 것이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아시아에서 전략적 동반자 국가인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긴밀히 협력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 호주와 함께 지역 내 중진국으로서 상호공동의 이익을 추진하기 위해 경쟁 구도가 아닌 협력 구도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중기적 과제: 인간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위의 APC 구상이 아시아 지역의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기구 설립에 관한 문제라면, 인간안보 문제는 지역 내 개도국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최근에 인간안보 문제는 지역 내 중요하고, 긴급하게 다뤄져야 할 현안 과제로 부상되었다. 일례로 2007년도에 호주 정부가 개최한 2007 시드니 APEC 정상회담에서 정

상들은 ‘인간안보가 경제 발전과 번영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 안보에 대한 도전을 해결하는데 협력을 강화하자’는 점을 성명서에서 언급했다. 이에 따라 APEC뿐 아니라 다른 지역 협의체, 나아가서 개별 회원국의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에서도 인간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즉, 개도국의 인간안보 문제 해결 없이 국가 내 및 지역 내 평화체제 구축은 어렵다는 것이다.

국제협력 하에 인간안보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한국과 호주는 2015년까지 국가의 ODA 자금을 현 수준보다 월등히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작년에 DAC 가입을 계기로 새로운 ODA 공여국이 되었다면, 호주는 이미 오랫동안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도국에게 ODA 프로그램과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빈곤이 개인의 삶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국가적 불안과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판단 하에 개발 원조의 최우선 목표를 빈곤 감소에 두고 있다. 그리고 현재 GNI의 약 0.3% 수준에 있는 ODA 예산을 2015년까지 0.5% 수준, 즉 약 80억 호주달러 규모로 증가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호주 ODA 총 예산의 대부분 금액이 국가 프로그램에 투입되고 있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원조 수여국의 굿 거버넌스 도입에 사용되고 있다. 호주는 세계은행과 아시아 개발은행의 원조 방식과 동일하게, 수여국이 자유시장 중심의 경제 거버넌스 도입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해 수여국 정부에 기술적 지원을 투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시장 중심 경제 거버넌스 확립 → 경제성장 → 빈곤 감소’라는 논리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호주는 9·11 테러 이후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의 ‘실패한’ 또는 ‘허약한’ 국가에 대한 원조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호주는 ‘실패한’ 또는 ‘허약한’ 국가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이웃 국가 중에



내전이나 분쟁으로 자국민 호수에 위협이 되는 국가들로 상당 부분 간주했다. 이들 국가들에는 대체로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아일랜드가 포함되고, 이들 국가에 호주의 ODA 예산이 가장 크게 사용되고 있다. 지역별로 봤을 때 파푸아뉴기니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 지역 예산(약 10억 9,000호주달러)과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 국가에 사용하는 예산(약 10억 7,000호주달러)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외 아프리카를 포함한 기타 지역에 약 5억 3,800만 호주달러를 사용하고 있다. 향후 5년 내에 호주 정부가 ODA 예산 규모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에 대한 ODA 지원예산 규모도 현 수준보다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과 호주, 그리고 일본과 같은 대규모의 원조 공여국들이 국제협력을 통해 아시아 지역 개도국의 빈곤 문제, 궁극적으로 인간안보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아직 원조 공여국으로서의 경험이 부족한 편이지만 과거 원조 수원국의 경험을 통해 터득한 원조 효과성 제고 방안과 원조 사업 내용 개발 등에 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점에서 아시아 지역 내 ODA와 인간안보,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호주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 교류와 협력이 요구된다.

〈장기적 과제: 실질적·포괄적 지역협력기구 설립〉

장기적인 협력방안은 앞서 단기, 중기에서 지적한 G20, APEC 정상회의 등을 활용한 경제협력,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지역협력기구 설립, 인간안보 등의 주요 사안들이 현실화되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호주가 제안한 APC나 대안적인 지

역협력기구가 만들어진다면, 이는 안보뿐 아니라 지역 내 경제, 인간안보, 평화 등 다양한 사안이 논의될 공론의 장이 될 것이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대다수가 현존하는 지역협력기구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일례로, 현재 미국이 EAS에 가입하기를 원하고 있고, ASEAN 국가들도 이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사실을 고려해 볼 때, 2020년까지 APC가 아니라 할지라도 EAS와 같은 현 지역협력기구 중심의 재편성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한국과 호주는 세계 기후 변화에 민감한 국가이기 때문에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서 양국 간의 각별한 협력이 장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호주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탄 연료의 주요 수출국이자 선진국 중에서 국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고로 높은 국가이다. 반면에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호주의 경제에서 1차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더욱이 인구 대부분이 해안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호주는 세계 기후 변화에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다. 호주가 기후 변화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1950년 이래 강수량의 변화가 급격하다.¹⁸³ 호주 북서 지역에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강수량이 10년마다 약 30mm 이상 증가했지만, 동쪽 해안 지역의 강수 감소량은 10년마다 약 50mm 이상이 넘었다. 가장 심각한 예로, 호주 동남 지역의 최대 강인 머레이 달링 바신(Murray Darling Basin)의 유입 수량이 계속 최저를 기록하고 있어 수온 상승과 오염 등으로 앞으로 100년, 즉 3~4세대 후에는 대보초(Great Barrier Reef)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함께 1950년

¹⁸³.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and Water, *Living with climate change: adapting to the climate change we cannot avoid*, <<http://www.climatechange.gov.au/~media/publications/adaptation/dl-living-with-cc-adaption-brochure-series.ashx>> (검색일: 2009.12.17).



이래 2008년까지 호주의 평균 기온이 약 0.7℃까지 상승했다. 또한, 1995년 이후, 세계 최고 기온을 기록한 해가 14년에 해당하는데, 그 중 13개가 호주에서 기록된 것이다. 이러한 온도 상승이 농업과 임업, 호주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명백하다. 호주의 과학자들은 호주 국민이 40년 전보다 70% 이상 탄소 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인간이 대기로 배출한 탄소성 오염 물질 때문에 호주의 기후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더욱이 호주는 기후 변화에 취약한 아시아 개도국과 교역을 하고, 기후 변화에 따라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세계 기후 변화 문제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호주는 2020년까지 자체적으로 탄소배출량을 2000년 대비 25%를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일례로, 호주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상용화 등을 통해서 탄소배출 감축의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와 전 세계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애초 예상대로 과감하게 탄소배출 감축 계획을 실행하기는 어렵지만, 호주 정부는 신재생 및 청정 에너지 개발 등에는 지속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이 국가 차원에서 탄소배출 감소 노력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비록 목표 감축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들 국가의 탄소배출량이 아시아 지역 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한다면 이는 반가운 소식이다.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도국이 탄소배출량 감소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이다. 이런 점에서 호주와 한국은 원조 공여국으로서 또한 청정에너지 개발국으로서 아시아 내 개도국의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재정적, 기술적인 협력 지원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세계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향후 글로벌 기후 변화 레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 호주는 현재 국제사회, 특히 개도국으로부터 교토의정서 이후 법 구조 정책 논의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 2009년 12월 코펜하겐 회의에서 선진국들에 책임을 묻는 교토의정서보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함께 서명해서 세계 기후 변화에 책임을 지는 완전히 새로운 협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미국의 의견을 호주가 지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호주의 입장은 아시아의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개도국 등으로부터 도전받음으로써 호주의 중진국 외교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기후, 환경 협력 분야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갈등이 좀처럼 해결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진국 외교를 표방하고 있는 한국과 호주 양국이 세계뿐 아니라 지역 내 환경 거버넌스체제 구축에 어떤 방향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에 관한 신중한 고민이 요구된다.

IV. 신아시아 외교와 한반도 평화 증진방안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I
: 신아시아 외교 추진을 통한 새로운 평화의 모색

한반도는 주지하다시피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분단 지역이며,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미국과 러시아 등 주요 핵무기 보유 국가들은 핵무기를 감축하는 한편,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레짐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의 핵 문제는 동북아 지역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 핵 비확산 분위기를 역행하는 국제사회의 관심사로 대두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선언하였으며, 한국은 2012년의 핵 정상회의를 주최하는 국가로서 핵무기 비확산의 선도적 입장에서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결심과 함께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공고히 하고 전 세계적으로 평화를 증진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아시아 외교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아시아의 평화를 증진하게 되고, 그 결과 한반도의 평화를 새로운 각도에서 모색하게 된다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신아시아 외교의 실현을 통해서 이룩하게 될 성과를 한반도의 평화 증진과 연계하는 방안을 분야별 및 지역별로 논의하고자 한다.

1. 분야별 추진방안

가. 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 증진방안

(1) 개발협력과 한반도 평화

한반도 평화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핵 개발에 따른 남북관계의 경색과 대결적 남북관계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장 근본적

인 해법은 북한의 핵 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 포기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또 핵 포기를 얻어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북한 핵 문제 해결과는 다른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은 한반도 평화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천안함 사태 이후 개성공단과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는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과 교류가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사과나 유감 표시가 있는 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북한에 대한 개발협력을 재개하는 일이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시급한 인프라를 개발하는 개발 원조를 제공하여 북한의 식량난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다자적 개발 원조를 제공할 동아시아 혹은 동북아 차원의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북한에 대한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제공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지원 등을 시행해야 한다.

(2) 자유무역협정과 한반도 평화

한반도 평화를 위한 FTA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는 한·중 또는 한·중·일 FTA를 통한 한국과 중국, 그리고 한국과 중국과의 통상적 상호의존을 심화하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무역과 투자를 통한 상호의존의 심화는 이미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못하게 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상호의존이 심화될 경우 한국의 안정과 평화, 즉 한반도의 평화가 중국의 이익과 직결되는 상황이 되므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중국이 긍정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중국과의 FTA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중·일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는 미국을 포함하는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해 경제적 상호이득을 기초로 갈등적 관계에 있는 북한과 미국, 중국과 미국, 중국과 일본 등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해야 한다. 둘째는 북한과의 교역을 늘이기 위해 개성공단과 같은 특별경제구역을 확대하여야 한다. 북한이 한국의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이 확대되면 결과적으로 북한은 한국의 FTA의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것이며 이것은 북한 경제의 활성화와 남북한 관계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금융협력과 한반도 평화

북한의 폐쇄적인 경제 체제로 북한과의 금융협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본격화될 경우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에 대한 자본주의 금융 및 통화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 경제의 개방과 국제금융체제로의 통합은 신아시아 외교를 통해 지역 및 국제기구 혹은 중국의 역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장기적 금융협력방안은 가칭 ‘아시아 평화은행’의 창설이다. 아시아 평화 기금은 아시아 개발은행과는 별도로 아시아의 분쟁 예방이나 인간안보적 위기 해결을 위한 기금으로서 특정 지역의 천재지변, 전염병 등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북한의 식량 위기와 수해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에 개발을 지원할 개발협력 기금의 창설을 통해 북한의 경제상황의 개선과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
II
III
IV
V

나. 에너지 및 기후 분야 협력과 한반도 평화 증진방안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 및 대외 관계를 고려해 보았을 때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전반적인 진행에서 북한 정부나 기업이 가지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북한 문제는 에너지 협력뿐만 아니라 동북아 협력의 전반적인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며, 특히 북한과 가장 많은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지니는 한국은 그 중요성이 증폭되어 작용한다. 북한이 계속해서 고립되어 있으면 한국은 마치 섬과 같이 대륙과 유리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의 에너지 협력의 추진은 장기적으로 한국 및 인접국들의 경제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특히 북핵 문제의 해결은 환경 및 에너지 협력에서 북한의 참여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한 변수가 된다. 북핵 문제 자체가 에너지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북핵 문제 해결의 방식에 따라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형태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정착이라는 차원에서 북한의 참여는 동북아 안보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북한이 포함된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는 북한으로 하여금 역내 국가들과 더불어 건설적이고 평화롭고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¹⁸⁴ 현재 북한과 관련된 에너지 이슈는 크게 핵 개발 문제, 경수로 건설 문제, 파이프라인 통과 문제, 그리고 에너지 부족에서 야기되는 경제위기 등을 들 수 있다.

¹⁸⁴ Selig S. Harrison, "Gas and Geopolitics in Northeast Asia: pipelines, regional stability, and the Korean nuclear crisis," *World Policy Journal*, Vol. 19, No. 4 (2002/2003).

〈단기적 과제: 에너지 관련 의제의 하위 정치적 설정〉

에너지협력은 비전통적 안보의 틀에서 남북한 대화를 건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유용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북한의 핵 개발 사업에 대한 의지를 낮추고, 경제를 활성화하여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동시에 북한의 에너지 인프라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에너지 수급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 및 대외 관계를 고려해 보았을 때 아시아 에너지 및 기후 변화 협력의 전반적인 진행에서 북한 정부나 기업이 가지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북한 문제가 가지는 변수는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라는 측면과 다른 안보 이슈와 관련된 긴장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에너지 협력의 활용, 그리고 에너지 부족에서 파급되는 인간안보적인 위기 상황을 방지 및 해결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북한 내 광물자원의 해외 유출이 국제 가격보다 현저하게 싼 가격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자원 개발과 관련된 남북한 협력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북한 관련 에너지협력 프로젝트의 진전에서 일차적인 단계에서 정치적 논리가 지나치게 부각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북한이 자력으로 에너지 수급 및 기후 변화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단기적인 북한 관련 에너지 및 기후 변화 전략은 지원(aid)의 형태를 주로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에너지 지원 및 협력은 남북관계가 경색된 현재 상황에서 신중을 요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제한된 규모의 민간 부문에의 에너지 지원은 한국 단독으로도 추진이 가능하지만, 이보다 큰 규모의 지원은 보다 다자적인 틀에서 추진을 모색할 수 있다. 6자회담을 포함한 아시아

I
II
III
IV
V

지역 차원의 다자 안보 논의기구에서 대북 에너지 지원 및 공급 문제를 하위 차원에서 논의함으로써 지속적인 의제 설정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로 제시될 수 있다.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도 단기적으로 대북 프로젝트를 진행할 여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 북한이 실제로 기후 변화 관련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본격적인 기후 변화 절감 및 대응 역량을 갖추는 데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 제반 산업 시설의 침체로 배출량 자체의 증가가 두드러지기보다는 낮은 에너지 효율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인프라 시설이 열악함에서 비롯되는 문제점들이 주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슈들 역시 다자적인 틀에서 의제로 설정되어 제반 공감대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중기적 과제: 지역 에너지협력과의 연계〉

에너지 및 기후 변화 분야 협력을 통한 중기적인 한반도 평화 구축에는 실질적인 에너지 및 기후 변화 프로젝트 추진, 성과 사업의 도출, 그리고 지역 에너지협력과의 연계가 주된 과제가 된다. 구체적인 에너지 및 기후 변화 프로젝트의 도입은 단기적인 고려와 마찬가지로 다른 안보적,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중기적으로 해결을 요하는 사안임을 고려할 때, 이들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북핵 문제의 보다 실질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구축의 주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중기 사업 과제로는 화력 발전소의 개선을 들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에너지 인프라를 고려할 때 석탄을 중심으로 한 화력 발전은 당분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발전 시설, 관리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전력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한국이 동분

야에서 보유한 여러 기술적인 자원이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화력 발전의 개선은 탄소배출을 비롯한 환경적 차원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 수력 발전소의 개선 작업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추진될 수 있다. 전력 부족에 따른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서, 전력 공급뿐만 아니라 열악한 배전망을 개선할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배전망에 대한 개선 없이 이루어지는 단순한 전력 지원은 북한의 에너지 개선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저탄소배출 발전 시설 건설 등도 이 시기에 시범적인 프로젝트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파이프라인가스(PNG) 사업은 남북한 일대일 사업을 떠나 전반적인 동북아 국제정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PNG 사업은 단순한 대북 에너지 지원이라는 차원보다는 남북 에너지 네트워크라는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성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기적으로는 북한을 지역 에너지 및 기후 변화 협력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진전은 북한으로 하여금 지역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며 북한의 핵 및 원자력 시설에 대한 관리를 군사안보 차원이 아닌 에너지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정치적 비용을 낮출 수 있게 한다. 또한, 이 시기에 북한의 에너지 인프라 및 절대적 생산량 증대의 과제는 북한의 대외 개방 여부와 연계시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과제: 한반도 에너지 네트워크 형성 고려〉

장기적으로 에너지 및 기후 변화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은 남북한을 하나의 에너지 및 생태 시스템으로 연계시키는 네트워크 형성을 바탕으로 하게 된다. 이 단계의 과제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북한의 상당 수준의 개방을 전제로 한 인프라 확충 및 가스 파이프라인, 전력

망 연계 등이 포함된다. 이는 대북 에너지 지원 차원을 넘어서 북한이 자력에 의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계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친환경적 개발 구조 및 낙후된 송전망 시설 개·보수를 통한 에너지 효율성 개선 사업 역시 에너지 및 기후 변화를 통한 평화 정착에 주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에너지 안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남북한 협력은 일차적으로 북한의 독자적인 에너지 수급 능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북한 내 재생에너지 개발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으며, 풍력 및 바이오 에너지 등이 분산적인 에너지 공급 능력 확대라는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를 장기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들어갈 비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조달하고, 또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특히 대규모의 장기 프로젝트 추진 시 한국의 독자적인 추진보다는 국제기구를 활용한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용하며, 이를 위한 다자외교적인 추진이 중요하다.

기후 변화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상에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산림 조성 및 관리를 통한 전반적인 역량 강화 역시 주요한 과제가 된다. 이는 한반도 생태공동체 및 나아가 동북아 생태공동체라는 측면에서 상호의존에 기반을 둔 공동의 환경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장기적인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다. 사회·문화 교류와 한반도 평화 증진방안

한반도의 평화구조 창출을 위한 아시아 외교의 사회·문화 분야 교류 협력은 가시적으로 크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이 단기, 중단기적으로는 더욱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사회·문화 교류의 전체

조건인 인적 교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더욱 어려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 창출을 위해 사회·문화 교류 및 인적 교류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교류, 협력은 이익에 기반을 둔 공동의 노력이며, 따라서 이익이 바뀌면 협력과 교류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문화, 인적 교류는 이익에 기반을 둔 교류가 아니며,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상호 이해가 증가하고, 그 과정에서 동일한 정체성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주변 상황 변화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지 않는 보다 항구적인 교류, 협력, 그리고 평화 증진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시아 국가와 신아시아 외교 하에서 사회·문화 교류를 촉진하는 것은 한국으로서는 좋은 경험이 되고 노하우를 축적하는 방법이 된다.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문화적 차이보다 더 큰 문화적 격차가 한반도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60여 년간의 분단의 시기 동안 남과 북은 서로 사회·문화적 교류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해왔다. 한민족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지만, 지난 60년간 사회·문화적 간극이 매우 크게 벌어진 것이 사실이다.

〈단기적 과제: 남북의 사회·문화적 격차와 차이 인식〉

단기적으로 사회·문화적 교류가 한반도의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그리 많지 않으리라고 보인다. 사회·문화적 교류는 인적 교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인적 교류가 원활하지 못한 남북관계, 한반도의 상황에서 단기간 내에 사회·문화적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중·장기적으로 사회·문화적, 인적 교류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과 나아가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할 필요는 있다.

I
II
III
IV
V

가장 손쉬운 첫 번째 접근은 남한과 북한 사이의 분단 기간 동안 사회·문화적 차이에 대해 인식을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난 분단 세월 동안 남북한이 어떻게 이질적인 문화를 발전시켜왔는가 현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어, 예술, 사회적 관습, 교육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의 측면에서 남과 북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조사하는 것이 첫 번째 작업이 될 것이다. 나아가 이런 작업을 바탕으로 해서 적어도 남한만이라도 남북 간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 즉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차이에 대한 인식은 차이를 강조하여 이질성을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확한 차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국내외 연구기관, 관련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연구, 자료 수집 결과를 공개하고 홍보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중기적 과제: 인적 교류의 확대와 신아시아 외교 경험의 적용〉

중기적으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전제로 하여 우선 남북한 간의 사회·문화 교류의 핵심은 인적 교류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는 역시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고 서로 간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있으며, 이해와 동질성 회복의 주체이자 매개체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개선을 전제로 하여 청소년층의 교류, 학자 교류, 문화예술인 교류 등의 폭이 점차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적 교류의 과정은 단순한 인적 교류를 넘어서 한국이 신아시아 외교의 사회·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서로 다른

문화들이 어떻게 어울리고 어떻게 서로 간의 이해를 도모하는지, 그리고 이로부터 어떻게 상호 간의 신뢰가 생기는지, 그리고 그 방법론적 접근법은 어떠한지에 관한 시행착오를 통해 얻은 경험을 적용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적 교류 과정에서 학자-연구자의 교류는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남북의 연구자들은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남한으로서는 남북의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 동일한 정체성을 만들어 내기 위한 중요한 방법론적 기여를 신아시아 외교의 사회·문화 교류 경험으로부터 끌어 내어 적용해야 한다.

반대로 중기적으로 한반도의 상황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이 제 한적이라도 개방을 하는 식의 보다 전향적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아시아 외교가 사회·문화적 교류를 통해 축적한 한국의 소프트파워(soft power)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 시키는데 일정 부분 공헌을 할 수 있다. 사회·문화 교류를 통한 한국의 소프트파워의 증진은 한국의 국력 신장을 의미하고,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세력의 증가를 의미한다. 반대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국가들의 증가는 북한에 대한 압박, 즉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개혁 개방을 촉구하는 압박으로 이어지는 방법으로 한반도 평화 문제에 공헌할 수 있다.

〈장기적 과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공통의 정체성 및 공감대 형성〉

단기와 중기에 걸쳐 사회·문화, 인적 교류 협력을 통해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목표는 통일한국에 대한 공통의 정체성 형성 또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목표이다. 한반도 상황의 급속한

I
II
III
IV
V

진전에 따른 인적, 사회·문화 교류의 확대, 그리고 남북한 간 통일 논의가 장기 시간 범주에서 진행된다면, 사회·문화 교류의 방향은 남북 간의 사회·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남북이 모두 하나의 통일한국의 구성원이라는 공통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사회·문화적 교류의 심화에 따라서 오랫동안 정체성은 자연스럽게 생겨날 가능성이 있고, 남북 간에는 한민족이라는 공통의 정체성을 구성할 근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사회·문화적 단절은 양쪽 모두로부터 통일한국이라는 사회는 어떠한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정체성, 국민 국가적 비전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유사한 생각을 갖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 간에 사회 지도급 인사와 명망가들을 망라한 통일한국 비전을 논의하고 제시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한반도 상황이 통일을 구상하는 단계에까지 가지는 못한다고 하면, 적어도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사회·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사회·문화적, 인적 교류의 확산, 그리고 이를 위한 의식적 노력은 남북 간의 지금과 같은 긴장 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서로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는 인식을 모두에게 심어줄 수 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남과 북이 교류하는 과정에서 한민족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이런 인식이 점차로 축적이 되면 자연스럽게 한반도의 통일까지는 어렵더라도 더 이상의 적대적 행위나 전쟁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평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별 추진방안

가. 동남아시아

아시아 지역의 평화 증진에 대한 신아시아 외교 차원의 기여는 아시아 국가들에 큰 도움이 되고, 한국과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며 나아가 아시아의 평화구조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신아시아 외교가 단순하게 아시아 국가들에 도움이 되고 아시아의 평화구조 창출을 넘어서 한반도 문제, 즉 한반도의 평화 증진에도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아시아 외교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게 주는 도움에 따른 아시아의 변화와 평화구조의 정책,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 또는 성과를 통해서 얻어지는 한국의 경험은 한반도의 평화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함의를 가지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아시아 외교를 통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교류 협력은 그대로 한반도로 피드백 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단기적 과제: 한국의 입장 지지 유도〉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 위협 요소의 단기적 예측, 혹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논의에 대한 단기적 예측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더욱 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 귀결점을 통일과 통일 직후의 상황으로 상정하고 한국의 신아시아 외교와 아시아 평화구조 정착이 한반도 문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I

II

III

IV

V

단기적으로 한반도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남과 북의 대치 상황에서 현상의 관리를 통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더욱 우호적인 남북관계를 만드는 데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남한의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입장,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ASEAN이 지속적으로 남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ASEAN 국가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일차적으로 중요해 보인다. 국제사회에서 많은 지지는 곧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담보할 수 있고, 북측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ASEAN 국가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남북한 간 주요 이슈에서 남한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지지해왔다. 또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명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지를 보내왔다. 신아시아 외교를 통한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지원은 이런 남북 문제에 대한 기존의 동남아 국가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또 더 나아가 우리가 추진하고 구상하고 있는 향후 남북관계의 발전 방안, 그리고 통일 이후의 비전에 대해서 동남아 국가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남북한 간의 교류가 경색 국면을 맞을 경우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남북한과 동시 수교 국가들이다. 또한, 몇몇 국가들은 북한과의 교류도 적지 않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남과 북이 직접 대화하기 어려운 경우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메신저로 이용하는 방안도 바람직해 보인다. 이미 몇 년 전 인도네시아 메가와티 대통령은 남한 정부의 입장을 북한에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한 바도 있다. 물론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국가들은 ASEAN 외에도 있을 수 있으나, 지금까지 ASEAN과 북한의 외교 관계, 그리고 ASEAN 국가들이 특별히 북한에 위협이

될 정도의 큰 국가들이 아닌 점, 그리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상호 간에 최소한의 신뢰관계가 있는 점 등은 ASEAN이 남북한 사이의 매신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들이라 판단된다.

즉, 단기의 차원에서는 한·ASEAN 관계의 발전을 통해서 ASEAN 국가들이 한반도 문제에서 지속적으로 남한의 입장을 지지하는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한반도 문제의 해결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1단계로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도 속에서 필요하다면 남북한 간 대화의 채널로 양쪽과 모두 대화가 가능한 ASEAN 국가들을 활용하는 것도 한반도 평화 정착의 방법론적 차원에서 고려해볼 만한 사항이다.

〈중기적 과제: 한국-ASEAN 개발협력 추진 경험의 북한 개발 적용〉

단기를 넘어서 중기의 한반도 평화에 관한 함의는 한·ASEAN 간 협력에서 얻어진 경험을 바탕으로 할 수 있다. 한국이 ASEAN의 개발 협력을 진행한 이후 이에서 얻어진 경험을 통해서 남한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중요한 함의를 얻을 수 있다. 신아시아 외교를 통해서 ASEAN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단기 신아시아 외교에서 추진하게 되면, 어떤 방식의 개발 지원, 어떤 부분에 대한 개발 지원이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지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얻어진 경험을 통해 비록 국가의 성격은 다르지만, 경제적으로 더 앞서 있는 남한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경제협력을 하여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은 단순히 북한을 위한 것이 아니라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 의해

I
II
III
IV
V

서 급작스럽게 붕괴하는 것은 남한의 입장에서도 통일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뿐만 아니라 붕괴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으로 인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의 통일이 더욱 바람직해 보인다. 그렇다면 통일에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북한 개발협력이라는 명제는 중요하며 여기에는 ASEAN과의 개발협력에서 얻은 경험이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향후 몇 년 안에 통일에 관한 논의가 급진전 되거나 주변 환경의 변화로 통일이 가시권에 들어올 때 통일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단계에서 많은 준비 사항이 필요해 보인다. 그 중 하나가 통일 자체와 통일한국의 미래 모습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이 될 것이다. 한국의 통일에 대한 노력, 그리고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에 대한 지지를 보내줄 수 있는 세력들이 필요하고, 개발협력과 아시아의 불안정 요소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 ASEAN은 이런 문제들에서 한국에 좋은 지원 세력이 될 것이다.

〈장기적 과제: 새로운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

장기적 관점에서 신아시아 외교가 한반도의 평화구조 창출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통일을 상정하고 논의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 통일한국이 해결해야 하는 난제들이 예상된다. 그 중 외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들이 통일 이후 국경과 국제법적 문제들일 것이다. 특히 국제법적 문제들에서 북한이 체결한 국제조약 등을 통일한국이 승계하거나 변경하는 문제들은 매우 복잡하고 어

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과 동남아 국가들 사이 국제조약의 승계 등에 관한 논의를 원활하게 하고, 또 대외적 협상에서 ASEAN 국가들을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포함하기 위해서 대ASEAN 관계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일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이 인간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했던 노력은 다시 한반도 상황에도 적용되어 북한이 안고 있는 다양한 인간안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과 북이 협력하는 상황에서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남북관계가 통일이나 아니면 실질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하였을 때 한국과 ASEAN이 지역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아시아에서 평화구조를 성공적으로 창출해낸 경험, 그리고 이런 과정에 대한 ASEAN의 지지가 북한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여 북한의 변화를 초래하는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 이미 장기적 시점에 들어가면 한국은 신아시아 외교를 통해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 발전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내 불안정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 평화 정착 혹은 평화 정착의 단초라는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인간안보 문제에 대해서 협력하게 된다. 이러한 한·ASEAN 협력을 통한 전반적인 평화 정착의 경험이 긍정적으로 비치게 된다면, 한국과 ASEAN 국가들은 공동으로 이 경험에 기초하여 북한에게 변화하라는 강력한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반적인 국제사회 역시 한·ASEAN 협력의 긍정적인 결과물을 북한에 하나의 좋은 모델로 제시하면서 변화를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ASEAN의 발전과 평화가 북한 및 한반도 긴장 상태의 변화된 미래 모습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I
II
III
IV
V

●그림 IV-1 한국의 대ASEAN 신아시아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 구조



결국, 한국과 ASEAN 간의 협력과 협력의 긍정적인 결과물은 ASEAN 국가들의 평화와 번영뿐만 아니라 이런 결과물이 다시 한반도에 피드백 되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한과 북한의 대화와 협력이 가능해지며,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구조를 정착시키는 하나의 모델로 작용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신아시아 외교를 통한 한·ASEAN 간 협력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나.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의 평화 증진에 대한 신아시아 외교의 기여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증진을 구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러시아의 한반도 전략에 대한 명확성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변 4강으로 남아 있지만, 해당국의 남북한에 대한 전략은 일관성이 없다고 분석되고 있다. 1995년 6월 한국을 방문한 러시아 알렉산더 파노프(Aleksandr N. Panov) 외무차관은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4국은 한반도 통일에 소극적이거나, 방관자이거나, 현상 유지론자이거나, 방해자이거나 네 가지 중 하나에 속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그에 대한 판단은 한국이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¹⁸⁵

강원식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은 적극적으로 정세 변화를 선도해 나가기보다는 서두르지 않으면서 느긋하게 기다리며 주변 정세의 변화를 주도면밀하게 관측한 후 최적의 대응책을 모색·추진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⁸⁶ 최성권은 러시아가 기본적으로 남북한 양국과 동시에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한반도 차원에서 러시아는 남북한에 대하여 적국이나 우방을 구분하지 않는 균형적인 관계로 군사적인 제재보다는 안정보장의 상호보장과 경제적 협력을 통해 관계를 증진한다는 실용주의적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¹⁸⁷ 이러한 러시아의 대한반도 전략은 우리에게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남북한 관계와 통일 방안을 러시아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다면, 세부적인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¹⁸⁸

이러한 점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유용한 협력 대상인데 한국은 이를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러시아의 비중이 작아 보인다는 것이다.¹⁸⁹ 이러한 인식으로 인

185. <<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3#>> (검색일: 2010.8.2).

186. 강원식, “러시아 푸틴 정권의 국제정세관과 한반도 정책,” 『북한연구학회보』, 제5집 2호 (북한연구학회, 2001), p. 324.

187. 최성권, “북핵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편승, 견제와 균형,” 『사회과학연구』, 제33권 2호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p. 106.

188. 최근에 천안함 사건에 대한 러시아의 자체적인 조사의 결과는 이러한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189.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9/08/01/200908010500001/200908010500001_1.html> (검색일: 2010.8.2).

해 우리가 자칫 러시아를 자극한다면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해당국이 방해자로 존재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국의 의중을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의 전략과 전술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즈베키스탄은 2004년 6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를 계기로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협정’ 그리고 2005년 11월에는 실질적인 동맹 관계인 ‘상호 군사보호 동맹 조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남북한과 관련된 양국 간의 정보 교류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구소련 연방공화국이었던 15개 국가 중에서 현재 북한 대사관이 존재하고 있는 곳은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단 두 곳에 불과하다. 북한은 1993년 우즈베키스탄에 대사관을 개설하였으며, 1998년 경제난 악화에 따른 외교망 정비 사업 일환으로 카자흐스탄주재 자국의 대사관을 폐쇄한 후 해당국을 독립국가연합(CIS) 내의 거점 공관으로 운영 중이다.¹⁹⁰

셋째, 북한 문제에 관여하는 상위 그룹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외에도 남북한과 동시에 소통하고 우리의 입장을 지지할 수 있는 하위 그룹의 국가로 친한(親韓) 성향이 강한 우즈베키스탄은 우리의 강력한 지지 세력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와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국제질서 및 지역 정치 문제를 논의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 루트를 확보할 수 있다.

¹⁹⁰ 외교통상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개황』 (서울: 외교통상부, 2005), p. 69.

다섯째,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 일부는 구소련 시기부터 현재까지 북한으로 왕래를 빈번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다. 특히 해당국에는 북한에서 정치적으로 망명하였거나 도주했던 한인들과 그 후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지 못했던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존재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창구 역할은 실질적으로 중국이 하고 있으며, 북한과 교류를 가장 활발히 하는 자들은 조선족이다. 그러나 중국 이외에 북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한반도 통일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러시아의 대북정책을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즈베키스탄과 해당국에 거주하는 고려인을 활용하는 것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단기적 과제: 긴밀한 의사소통 관계 확립〉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협력 방안은 고려해야만 한다.

첫째, 한국·우즈베키스탄 외교 포럼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외교통상부 주최로 3차례 개최된 ‘한국·중앙아시아 외교 포럼’을 ‘한국·우즈베키스탄 외교 포럼’으로 특화시키고 정례화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즈베키스탄을 다른 중앙아시아 4개국과 차별화해야 한다. 특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실효가 없다.¹⁹¹

¹⁹¹- 외교통상부 주최로 개최된 2007년 제1차 ‘세계 한인의 날’ 행사에서 제1차 ‘세계

둘째, 포럼 조직 기관을 단일화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중앙아시아와 관련된 행사나 포럼을 다양한 기관에서 별도로 조직하여 개최하기 때문에 질적인 발전이 없다. 따라서 외교 포럼은 외교통상부가, 경제인 포럼은 전경련이 각각 담당하여 조직하는 기관을 단일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의 상황이라면 고려인 정치인을 외교통상부가 주관하는 세계한인 정치인 포럼에서 제외하고 외교 포럼으로 차별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재미교포 정치인과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정치인과의 별도 포럼을 만들어 주는 것이 성과가 더 좋을 것이다.

셋째, 한국 정부가 고려인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해서 해당국 정부에 관심을 보인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정부는 한국 정부가 자국에 거주하는 고려인 정치인, 경제인에 대해 언급을 자주하고 관심을 보여주면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라도 그들의 지위를 보장해 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의 관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심은 해당국에서 향후 고려인 정치인, 경제인이 더 많이 배출되는데 영향을 줄 것이다.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 정치인이 지속적으로 나와야만 이들을 통해 직접적으로 그리고 거주국을 통해 남북문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넷째, 동등한 관계에서 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

한인정치인 포럼'이 열렸다. 그러나 이 포럼에서 주된 참가자와 인사들은 재미교포사회의 정치인들로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2009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비록 미국이라는 강대국은 아니지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서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고려인은 단지 객석을 채워주는 정도로 대접을 받았다. 이처럼 재미교포사회 정치인들에게 집중하는 행사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 마찬가지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도 이러한 경향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정치인과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해당국의 정치인이 정기적으로 만나는 정치인 포럼을 별도로 조직해야 한다.

처럼 한국 정부와 기업체들은 과거와 같은 접근 방식에서 탈피하여 고려인 정치인, 경제인을 동등한 관계에서 보아야 한다. 그들도 한국 정부나 기업체가 재미·재일교포들에게 우호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인식하고 포럼을 조직해야만 그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중기적 과제: 중앙아시아 체제 전환 경험의 북한 적용 고려>

중기의 한반도 평화 증진방안은 우리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수행한 협력을 경험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 전략과 모델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존에 중앙아시아에서 진행되었던 체제 전환 과정을 북한에 접목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자본주의로 체제를 전환하는 지구상의 마지막 국가로 예상되는 북한이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는 치명적일 수 있다. 중국식의 점진적 개방을 하기에는 북한 시장이 가지는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외국 투자가 중국처럼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처럼 선(先)자원개발-후(後)산업개발 모델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자원 개발을 통한 재정 확보를 바탕으로 산업을 발전시키는 전략이 북한의 산업구조를 고려하면 적합하다는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 중에서 우즈베키스탄이 북한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발하였다. 풍부한 지하자원과 2,000만 명의 인구를 바탕으로 자원 개발과 산업 개발을 추구하여 자체 재정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서구 자본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구조를 구축하였다는 점이 북한의 정치체제를 고려할 때 적합하다고 여겨진다. 이 외에도 북한 내부의 환경 문제, 수자원 문제 등을 지원하는데 중앙아시아에서 수행한 단기 전략 프로그램이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I
II
III
IV
V

〈장기적 과제: 통일한국의 다국경 문제에 대한 시사점 활용〉

남북한이 통일한다는 가정 하에서 한반도와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장기적인 전략으로 설정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시기는 우리가 ‘다국경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중국, 러시아와 다국경을 가지게 되는 한반도가 직면할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의 통일을 상정한다면, 한반도는 중앙아시아와 마찬가지로 3국의 국경 범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질서를 확립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문제의 핵심은 국경 문제이다. 양국과의 압록강, 두만강의 사용 문제, 백두산의 국경 문제 등이 대두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3국이 공동으로 이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다자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SCO가 중국이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과 국경 문제를 논의하는 데서 출발하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다국경 시대에 직면하면 3국의 민족 간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문제는 결국 국경 문제의 명확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압록강과 두만강이 국제 하천이기 때문에 오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협의할 기구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중앙아시아는 우리가 신아시아 외교를 통해 아시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미 우리가 이 지역에 구축해 놓은 우호적인 여건은 이를 달성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 지역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

과 협력을 통해 우리의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질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아시아 지역이 처하고 있는 상황(다국경)과 각국의 상황(체제 전환기)이 우리의 미래와 유사한 곳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판단된다.

다. 서남아시아

인도는 앞서 살펴본 바대로 국가 전략과 대외정책의 기초에 따라 동아시아에 대하여 일개국과 배타적인 협력 체제를 맺는 것이라든지 역내 국가들에 대하여 균형적인 관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에 대해서는 중국, 한국, 일본의 안정과 번영이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안정에 직결되어 있다는 판단 하에 안정자 내지 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인도의 대동북아 외교는 향후 역내의 경제 발전과 안정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인도의 강대국들에 대한 다양한 위험 분산 전략, 또는 양다리 전략, 즉 소위 ‘헷징(hedging) 전략’을 잘 분석하여 그로부터 한국에 주는 함의와 교훈을 지속적으로 도출할 필요가 있다. 가령,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인도를 통하여 중국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카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무역과 경제협력의 대상인 중국에 대하여 동시에 견제 또는 봉쇄하려는 미국의 안보 전략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자원의 수급로, 즉 인도양을 통한 해상 교통로를 확보하려는 인도의 안보 전략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21세기 전략동맹의 비전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위협력지침을 제시하기에 이른 한국으로서는 인도와 미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도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인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구체화 되어 나가는 과정이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에 주는 구체적인 함의는 무엇인가? 종교적, 정치적 이유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가 분리되어 나가는 것을 경험한 인도는 한반도에서 동족상쟁을 거치면서 아직도 정전 상태에 놓여 있는 한국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앞으로 한반도에서 평화 구조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인도가 주는 함의는 다양하며, 분단의 경험과 분단 관리라는 공통점 때문에 인도가 주는 함의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인도는 지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있다. 양국은 단순히 무역과 투자, 외교 차원을 넘어서, 사회, 문화적 차원 그리고 안보 군사적 차원까지 실로 광범위하게 협력할 수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협력이 축적되면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평화구조의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한 인도는 과거 어느 때보다 한반도 평화구조의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강국으로서 인도가 가지고 있는, 그렇지만 한국은 가지고 있지 못한 다양한 안보 대화 및 협력 채널을 이용하여 한반도에 평화 구조를 창출하는데 간접적인 지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핵 문제를 포함한 다양하고 복잡한 소위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향후 남북한 평화 공존과 통합과 통일의 과정에서 우리는 인도로부터 교훈과 협력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요컨대, 일찍이 인도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질서 구축에 기여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도 인도 정부는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을 보내왔다.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인도

가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한반도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음을 잘 인식하고 제대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과 인도는 다음과 같은 협력 방향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이행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인도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증진방향〉

향후 한국과 인도 양국 간 협력의 방향은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정치·안보 분야 협력, 경제·무역 분야 협력, 과학기술 분야 협력, 사회·문화 분야 협력, 그리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추진하되 다음 단계인 협력지침에 합의하고 그 후에 구체적인 협력방안의 로드맵을 작성해 나가는 것이 바른 방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우선순위와 주요 고려 요소를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한·미 전략동맹을 기반으로 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대인도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저변확대 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인도는 안보 역학상 미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대외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다. 동시에 분야별로 예시된 협력방안들이 미국과 양국의 관계를 저해하거나 방해하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비전에 입각한 구체적 협력지침과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한·인도 공동위원회와 같은 쌍무적 틀을 활용하여 상황별, 단계별로 전략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 정부 부처, 연구기관, 민간 전문인 집단이 참여하는 일종의 컨소시엄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I
II
III
IV
V

셋째로, 인도의 강대국 등장과 새로운 실용주의 외교노선을 고려하여 경제, 사회·문화, 외교 및 안보 차원의 협력과 평화구조 창출에 기여하는 차원의 양자 간 협력을 연계하면서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인도가 회원국인 SAARC, G20 정상회담 등 다양한 국제기구들을 매체로 활용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로, 중국의 강대국화와 패권 행사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인도를 활용하는 전략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러 국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인도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거나 고려 중인 점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인도를 활용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미국을 활용하여 중국을 견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향후 양국 간에 고려할 수 있는 협력의 구체적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

- ① 아시아 평화 정착, 아시아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북핵 문제를 포함한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인도의 잠재력 활용
- ② 북한의 비핵화와 인도의 핵무기 개발과의 관계, 미국과 인도 간의 민간 핵 협정, 한·인도 간의 정보 교환 및 구체적 협력 모색
- ③ 인도와 중국 관계의 역학을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에 활용
- ④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과 분쟁 관리 방안이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에 주는 교훈 및 제약점을 도출하여 교환 및 추가 발전
- ⑤ 한국의 경제 및 안보에 직결된 해상 교통로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 중동 및 인도양에서의 양자 및 다자 간 협력 추진
- ⑥ 인도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과 한국의

지방재건팀(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s: 이하 PRT) 운영
및 기타 PKO 활동 간의 연계성 발전

- ⑦ 유엔과 다자 회의에서의 인도의 지원 획득 방안, 특히 양국이 국제사회와 국제기구에서 공동이익 추구

마지막으로 시기적으로 협력방안들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앞서 제시한 분야별 협력방안들을 가능성이 있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사업들, 그리고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우선으로 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그동안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국가였던 인도와 협력의 습관을 키우고 전략적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방안들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인도의 유엔사 활동 유도와 북한 급변 시 대응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전쟁 당시 전투 부대는 아니었지만 의료지원 부대를 파견했던 인도의 새로운 역할 모색을 지원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과 한반도 유사시의 재활용 방안, 즉 유엔사의 활동 국가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 급변 시를 포함한 한반도 유사시 한·중 국경 관리에 필요한 교훈, 특히 대량 난민 유입 대처 등에 관한 교훈을 인도와 공유하고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65주년 경축사(2010.8.15)에서 제시한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공동체’, 포괄적인 남북한 교류 협력을 통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제의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 그리고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 한민족의 존엄과 자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면서 평화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비전을 구현하는 다양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세 개의 공동

체를 구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인도가 어떠한 구체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양국 간에 협의하고 인도의 지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구상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가운데 한·인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중요성이 점차로 부각되고 있다. 인도의 경제 성장과 근대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양국은, 경제·무역 분야, 정치·안보 외교 분야, 문화·종교 분야, 과학기술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중요성이 더해가는 인도라는 거대한 시장, 미지의 세계를 탐색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증진하는데 새로운 방식의 지원을 얻어낼 수 있다면, 그만큼 우리의 대외 정책, 평화 정책, 통일 정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보조능력(enabler)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긍정적 잠재력을 개발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도가 국제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동시에 다른 국가들과 인도의 관계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건의 사항으로는 첫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제시한 분야별 협력 방안을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존의 한·인도 공동위원회와 같은 쌍무적 틀을 활용하여 상황별, 단계별로 전략대화를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관련 정부 부처, 연구기관, 민간 전문인 집단이 참여하는 일종의 컨소시엄을 조직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 한·인도 공동위원회와 유사한 공동위원회를 양국의 관련 부처 간에 단계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둘째, 유엔사에 인도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유도함으로써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할 때까지 인도의 분단 관리 경험과 새로운 평화주의 외교노선을 충분히 활용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대국으로 부상 중인 인도의 대주변국 정책의 함의를 도출하

여 한반도 평화구조 창출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실행하자는 것이다.

라. 오세아니아

최근에 한국과 호주 양국 간의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졌고, 더욱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공고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국의 협력이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리라 예상된다. 먼저, 한·호 양국 간 안보협력은 당분간 2009년 3월 양국 정상 간에 체결한 안보협력 강화 공동성명에 기반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당시 논의되었던 사안은 ① 마약 유통, 돈세탁, 무기 밀거래 등 초국가 범죄에 대한 긴밀한 협력, ② 사이버 테러를 포함한 대테러 문제와 세계 핵테러 방지구상(GICNT) 진전을 위한 지역 및 다자 무대에서의 협력, ③ 유엔과 국제핵비확산·군축위원회(ICNND) 등을 통한 군축 및 대량 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비확산에 대한 협력 확대, ④ 군사비밀 보호에 관한 양자 간 협정 체결, ⑤ 공중 조기경보통제기에 대한 협력 모색을 포함해 양국 방위산업 간 협력 대폭 증대 등을 포함한다. 이 같은 합의는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기존 경제·통상 분야에서 안보 분야, 특히 인간안보 분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양국은 위 안보 사안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과 추진 체계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적으로는, 한·호 FTA가 이 시기 동안에 체결과 함께 추진방안과 체계가 구체적으로 논의되리라 기대한다. FTA가 체결되면, 양국 기업들은 상대국 기업의 인수 및 기업 내에서 높은 지분이나 경영권 확보 등이 용이해질 것이다. 여러 산업 분야 중에서도 한국은 호주 자원산업 분야의 주요 투자국으로 입지를 다지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은 장기적인 에너지 자원 공급을 확보하게 될 뿐 아니라, 호주 자원 분야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한국과 호주의 자원 분야에서의 협력은 향후 북한의 자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북한은 상당한 양의 잠재적인 지하자원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화해 단계에 접어들면, 한국은 그 기회를 활용해서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을 주도할 수 있다. 이때 한국과 호주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11년은 한·호 간에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로써 양국 정상은 내년을 ‘한·호 우정의 해’로 선포했다. 이 기간에 양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 협력을 증진할 발판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양국 간의 정치, 경제 지도자들의 교류뿐 아니라 학술, 연구, 교육, 시민사회 등의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아래로’의 방식과 ‘아래에서 위로’의 교류가 함께 2011년 ‘한·호 우정의 해’를 기점으로 이루어진다면 양국 간의 장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은 나아가서 한반도의 평화 증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과 호주 간 협력을 보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추진할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기적으로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호주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호주는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공헌을 하고 있다. 일례로, 호주는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와 남북 대화 촉진, 그리고 1953년의 휴전 협정을 대신할 영구적 평화 협정의 체결을 위한 강대국들의 움직임에 지지를 보냈었다. 호주는 2000년 5월에 과거 단절되었던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복원하였으며, KEDO에

2,190만 호주달러를 지원했다. 또한, 기술 원조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6,000만 호주달러를 북한에 제공한 바 있다. 2000년 11월에 평양을 방문했던 당시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은 북한의 백남순 외무상을 만나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호주의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반면에, 그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함으로써 북한의 군사 및 인간안보 문제의 해결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그러나 호주는 2002년 10월 북한이 그동안 고농축 우라늄 생산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는 사실을 시인한 후 북한과의 교류를 중단하였다. 이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양국 관계는 정상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피력했다. 하지만, 호주는 북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호주의 해외 원조 기관인 국제개발처(AusAID)가 2011년도 대북 지원금으로 750만 호주달러(약 83억 원)를 편성했다고 전해졌다. AusAID는 2009년 7월부터 1년간 500만 호주달러의 대북 지원금을 책정했으며, 2011년에는 150% 규모인 750만 호주달러를 대북 지원 예산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의 교류 중단 이후에도 호주가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호주의 지원은 중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이러한 호주의 지속적 인도주의적 지원이 향후 호주와 북한 간의 외교 관계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해외 원조와 관련해서, 2009년 12월에 한국의 외교부와 AusAID는 양국 간 개발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바 있다. 이에 양국은 양국 간 개발협력 양해각서 서명을 통해 고위급 회담 및 한·호주 개발협력 정책 대화 등을 통해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 달성, 원조 효과



성 제고, 인도적 지원 등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이러한 협의가 단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측한다면, 중기에는 그 협의를 바탕으로 구성된 협력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게 될 것이다. 이때 호주와 북한 간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한국은 호주와 함께 북한에 인도주의 차원뿐 아니라 북한의 실질적 빈곤 감소를 위한 원조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한편, 장기적 차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호주의 역할을 생각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후의 한반도 정세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신아시아 외교를 통한 한국과 호주 간의 협력 구도가 한반도의 평화 증진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으리라 예측하는 일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만약 앞서 언급한 한국과 호주의 경제, 외교, 안보 등의 협력이 단기, 중기를 거치며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장기에도 그 성과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신아시아 외교를 통해서 한국이 호주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는데 기여한다면, 이는 한반도의 평화 증진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이 미국과 중국, ASEAN 국가 등 역내 국가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면, 이는 북한을 지역 무대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에는 2020년 이후의 국제체제 변화를 예측하고, 그에 대응하는 10년 계획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한국과 호주는 2010년대 한·호 협력의 결과를 중심으로 미래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더욱 발전되고 심화된 한·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정책적 고려사항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I
: 신아시아 외교 추진을 통한 새로운 평화의 모색

아시아는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 다양한 인종과 종교,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의 정도 및 성장 속도, 민주화 정도 등의 차이가 매우 상이한 지역이다. 이는 아시아 지역이 그만큼 다양한 역내 불안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갈등 요인이 다양할수록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복잡하기 마련이다. 아시아 지역에서 다자협력체 구성이 지지부진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내에 상존하는 분쟁의 요소들을 적절히 통제하고 줄여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아시아 지역의 불안정은 결국 한반도는 물론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평화 모색’을 연구의 목적으로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의 안보와 경제적 안정을 지키고 나아가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의 평화가 중요한 전제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평화를 모색함에 있어 본 연구가 신아시아 외교에 천착한 것은 ‘신아시아 외교’가 기존의 4강 외교에만 역점을 두었던 과거 한국 외교 정책의 외연을 넓혀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더욱 적극적인 국제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역할이 제한적인 4강 외교에 비해 이들 지역에서는 한국이 국제관계의 주도권(initiative)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과 여지가 풍부하다. 즉, 경제 강국이자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교우위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신아시아 외교를 통해 새로운 아시아 평화를 모색하는 것은 한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한계에서 벗어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외교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을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신아시아 외교구상이 한국의 외교 지평을 확대하고 한반도

I
II
III
IV
V

의 평화와 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한국의 대아시아 외교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1부 “신아시아 외교의 내용분석과 추진방안”을 통해 먼저 신아시아 외교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신아시아 외교구상의 분야별·지역별 추진방안을 검토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신아시아 외교가 과거 4강 중심의 안보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던 외교방식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는 이를 다룬 기존의 다른 많은 연구들이 대신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제외한 분야와 지역들을 선정하여 추진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신아시아 외교의 대상이 되는 분야를 경제협력과 에너지 및 기후, 사회·문화 교류로 선정하였다. 오늘날 국제적 경쟁이 가장 치열하면서도 협력이 절실한 분야가 이들 세 분야이기 때문이다. 우선 분야별 현황과 추세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추진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신아시아 외교의 대상 지역으로는 기존 4강을 제외한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오세아니아로 나누어 각 지역의 의미와 한국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대한국 정책을 살펴보았다. 또한, 앞서 제시한 신아시아 외교의 대상 분야들에 대한 각 지역의 입장과 협력 현황 및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처럼 제1부가 신아시아 외교에 대한 각론적 검토를 시도했다면, 제2부 “신아시아 외교 추진을 통한 새로운 평화의 모색”에서는 신아시아 외교가 추구하는 평화의 내용과 그러한 평화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협력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것이 아시아의 평화는 물론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 추진방안에 대해 제1부의 신아시아 외교의 분야별·지역별 구분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평화의 모색을 위한 방법으로 아시아 다자협력

체제의 구축보다 아시아 평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구조(governance architecture)의 형성에 초점을 두었다. 평화 상태를 단순한 목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단이자 목표로서의 동시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존의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라는 이분법적 구분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준의 정치·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는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보편적 평화의 필요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어떤 나라에서는 경제 발전을 인간의 행복 추구를 위한 수단이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는 생존과 안정을 위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는 아시아 평화의 새로운 방향으로 인간안보를 제시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개인의 삶의 가치와 권리는 각각의 국가나 민족이 안고 있는 불안 요인의 종류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요인이나 상태의 제거 및 개선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한 국가 및 사회, 혹은 그 구성원의 인간안보 문제의 해결로 평화를 보장한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인간안보는 문제의 특성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수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인간안보가 평화의 방향일 뿐만 아니라 수단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간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은 새로운 협력 구조를 형성하는 훌륭한 동인(動因)이 된다. 즉, 인간안보의 해결이 아시아 평화를 위한 동기이자 동력, 그리고 목적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평화 협력구조 속에서 한국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신아시아 외교가 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바는 무엇인가? 4강 외교에서와 달리 아시아의 경제 강국인 한국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sustainable peace)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 중국과 일본보다

I
II
III
IV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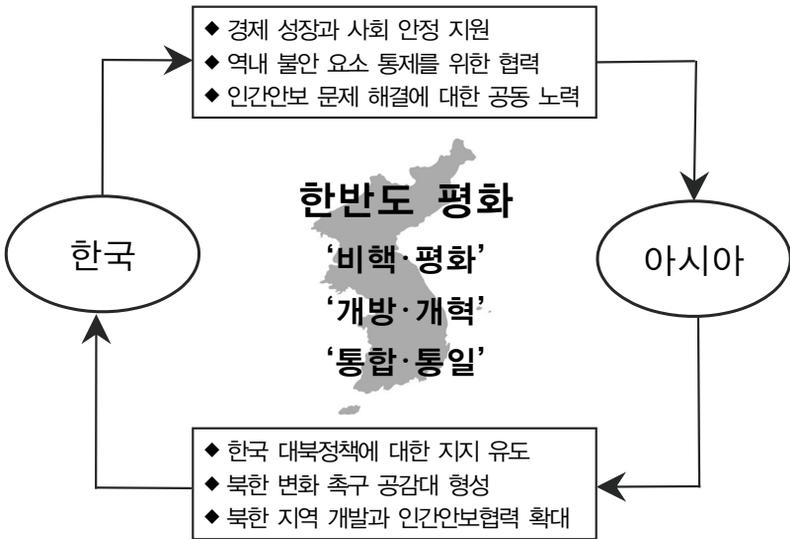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하고 있는 중견국가로서 아시아 국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outreach) 아시아 지역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를 창출할 수 있는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경제력(hard power)과 도덕적 우월성(soft power)을 적절히 활용하여 국제적 신뢰(international trust)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의 인간안보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이들 지역에 전일적 평화(holistic peace)를 구축하는 과정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외교 역량 강화는 4강 외교와 한반도 평화 구축에서 외부의 압력을 순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아시아 외교를 재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확고한 지지 세력의 확보는 4강과의 양자 혹은 다자 외교에서 한국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저해되는 외부 압력을 제어하고 순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아시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일체적이며 순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분단이 아시아 평화의 걸림돌이었던 만큼 한반도의 평화는 아시아의 평화를 앞당길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이다. 역으로 아시아의 평화 협력구조가 형성된다면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촉구하는 기제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아시아 지역의 저발전 국가들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을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의 통일 방안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아시아 지역 내 불안 요소를 통제하고 정치안보적 협력을 구축해 나아간다면 이것이 결국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압

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인간안보 문제에 대한 아시아 전체 차원의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동 인식과 문제 해결의 경험 축적은 이후 북한의 낙후된 인간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훌륭한 대처방안이 될 것이다.

●그림 V-1 신아시아 외교를 통한 한반도와 아시아 평화 증진 선순환 구조



한반도와 아시아 평화 증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한반도 평화 통일의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접근방안을 실천하는 한편, 예상치 못한 국제정세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대안의 마련과 이의 반영을 통한 세부적 조정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정책 대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일관되게 목표로 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의 증진과 궁극

I
II
III
IV
V

적 평화통일을 위한 대안 마련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아시아 평화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모색은 한반도 통일을 앞당기는 대안이 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포괄적 접근과 관련, ‘비핵·평화’, ‘개방·개혁’, ‘통합·통일’이라는 목표를 순차적으로 설정해서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¹⁹² 신아시아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제공할 ①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 지원, ② 역내 불안 요소 통제를 위한 협력, ③ 인간안보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 노력의 세 가지 아시아 평화 증진 정책에 부응하여,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한국의 노력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될 ① 한국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유도, ② 북한 변화 촉구 공감대 형성, ③ 북한 지역 개발과 인간안보협력 확대의 세 가지 한반도 평화 증진 노력이 결합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 노력에 대한 국제적 환경이 우호적으로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방안을 앞에서 제시한 새로운 평화의 지향점과 협력구조 및 추진 수단이라는 차원에서 행동적 실천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 지원이라는 우리가 아시아 지역에 제공할 평화 증진 정책이 한국의 통일 방안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로 표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견국가로서의 한국이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의 최적 결합인 한국형 스마트파워 구사를 통해 역내 강대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신아시아 대상 지역 국가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외교를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는 북한의 개방과 개혁이라는 한반도 통일의 단계적 목표의 달성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역내 불안 요소 통제를 위한 협력이라는 우리의 아시아 평화

¹⁹² 김규륜 외, 『상생·공영을 위한 신남북협력 추진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 46 참조.

증진 정책이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노력으로 연결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적 정체성과 규범의 확립을 강조하는 새로운 협력구조의 형성과 가동을 통해서 보다 선진적이며 평화지향적이고 인류 보편적인 협력 방식이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가 난제이며 지역의 평화에 걸림돌이라는 인식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에 바탕을 둔 것으로써, 한반도 문제의 해결 과정을 선진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 하에 선진적인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할 수 있다는 미래지향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인간안보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 의식 고양이라는 우리의 아시아 지역에 제공할 평화 증진 정책이 북한 지역의 개발과 인간안보 문제 해결에 대한 동참으로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간안보의 완성이라는 새로운 평화의 지향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이 궁극적으로는 인간안보의 구현을 통한 남북한 통합과 통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신아시아 외교를 추진하는 데 있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사회·문화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밀하고 세부적인 실천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실천 없는 구호만 남발하거나 책임 없는 주도권 확보 노력은 오히려 아시아 지역에서의 신뢰를 떨어트릴 뿐이다. 둘째, 신아시아 외교는 기존 외교 틀과의 정합성에 기반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미, 한·일, 한·중, 한·러 간 양자 관계와 한·미·일, 한·중·일 3국 협력체제를 긴밀히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신아시아 외교를 통해 구축될 평화 협력구조는

I
II
III
IV
V

갈등이 아닌 협력을 위한 개방성(open)을 추구해야 한다. 신아시아 외교는 G2 패권 경쟁에서 파생될 수 있는 갈등이나 우리가 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순화시킬 수 있는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 그 빛을 발하는 만큼 4강을 포함한 무한대적 개방성을 표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아시아 외교는 통일 우호적 국제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는 외교는 성공한 외교 정책이 될 수 없다.

결국, 한국이 신아시아 외교를 통해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아시아의 평화를 모색하는 것은 아시아 평화의 증진이나 평화구조 창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시 한반도의 평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신아시아 외교의 지향점 또한 4강 중심 외교의 외연을 확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평화를 선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구축 과정에서도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적극적 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규륜 외. 『상생·공영을 위한 신남북협력 추진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9.

김상배. 『소프트파워와 21세기 권력론: 네트워크 권력론의 모색』. 파주: 한올아카데미, 2009.

미국 국가정보보위위원회 지음. 『Global Trends 2025』. 서울: 예문, 2009.

삐에르 부르디외 지음. 최종철 옮김.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서울: 새물결, 2005.

엄태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한국의 선택』.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6.

외교통상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개황』. 서울: 외교통상부, 2005.

케일 랭커스터. 유지훈 옮김. 『왜 세계는 가난한 나라를 돕는가?』. 서울: 시공사, 2007.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편. 『동북아 전략균형 2009』. 서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9.

Acharya, Amitav. *Promoting Human Security: Ethnical, Normative and Educational Framework in South-East Asia*. Paris: UNESCO, 2007.

Armitage, Richard L. and Joseph Nye. *The U.S.-Japan Alliance: Getting Asia Right*. Washington, D.C.: CSIS, 2007.

_____. *CSIS Commission on Smart Power: A More Secure, Smarter America*. Washington, D.C.: CSIS, 2007.

- Bossel, Hartmut. *Indicato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ory, Method, Applications: A Report to the Balaton Group*. Winnipeg, Canad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999.
- Braun, J. von., S. Kumar Bouris and R. Pandya-Lorch. *Improving Food Security of the Poor: Concept, Policy, and Program*. Washington, D.C.: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1992.
- Chung, K., J. Ramakrishna Haddad and F. Riely. *Identifying the Food Insecure: The Approaches in India*. Washington, D.C.: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1997.
- Holbraad, Carsten. *Middle Powers in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4.
- Institute of Defence and Strategic Studies. *Anatomy of Religious Conflict in South and Southeast Asia*. Singapore: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2005.
- Kahler, Miles. *Networked Politics: Agency, Power, and Governan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9.
- Mearsheimer, John J.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orton, 2001.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Japan. *Diplomatic Bluebook 1999: Japan's Diplomacy with Leadership toward a New Century*. Tokyo: Urban Connections Inc., 1999.
- Nye, Joseph.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2004.
- Shambaugh, David. *Power Shift: China and Asia's New Dynamic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6.

UNESCAP. *A Future within Reach: Reshaping Institutions in a Region of Disparities to Meet the MDGs in Asia and the Pacific*. New York: UN, 2005.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USAID). *Religion, Conflict and Peacebuilding*. Washington, D.C.: USAID, September 2009.

_____. *Definition of Food Security Policy Determination PNAAV 468*. Washington, D.C.: USAID, 1992.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McGraw-Hill, 1979.

EU. *Wie die Europäer sich selbst sehen, Aktuelle Themen im Spiegel der öffentlichen Meinung*. Luxemburg: EU, 2001.

2. 논문

강성호.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통한 동아시아 빈곤퇴치 전략과 지역 협력 가능성.” 『오토피아(OUGHTOPIA)』. Vol. 21, No. 1(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06.

강원식. “러시아 푸틴 정권의 국제정세관과 한반도 정책.” 『북한연구학회보』. 제5집 2호(북한연구학회), 2001.

권용대. “21세기 동북아 식량안보문제와 지역 간 협력방안.” 『농업과학연구』. 제27권 2호(충남대학교 농업과학연구소), 2000.

김기석. “신 공동체 구상과 신아시아 외교” 『JPI 정책포럼』. 제33권(제주 평화연구원), 2010.

- 김성원. “국제법상 인간안보개념의 전개에 관한 일고찰.” 『법학논총』. 제24집 4호(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마이클 샌델 지음. 이창신 옮김.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충직 딜레마.” 『정의란 무엇인가』. 서울: 김영사, 2010.
- 변창구. “동남아시아 안보공동체로서의 ASEAN 전략과 과제.” 『정치·정보연구』. 제12권 1호(한국정치·정보학회), 2009.
- 손 열. “소프트파워를 다시 생각한다: 조지프 나이와의 대담.” 『미래전략』. Vol. 3(미래재단), 2006.
- _____. “소프트파워의 정치: 일본의 서로 다른 정체성.” 『일본연구논총』. 제29호(현대일본학회), 2009.
- 아미타브 아차랴. “인간안보: 동서양담론.” 『국제관계연구』. 제11권 2호(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6.
- 이상환. “전염병과 인간안보, 그리고 국가안보.” 『국제지역연구』. 제12권 3호(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2008.
- 이선진. “동남아에 대한 중국 전략: 현황과 대응.” 『JPI 정책포럼』. 제27권(제주평화연구원), 2010.
- 이원삼. “이슬람교의 평화관.” 『평화를 위한 이슬람과의 대화』. 한국 이슬람 중앙회와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주최 토론회 자료, 2003.11.29.
- 이정남. “조화세계(和諧世界)론을 통해서 본 중국의 동아시아 질서 구상: 중화질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0집 1호(한국국제정치학회), 2010.
- 임송수. “식량안보에 관한 쟁점 검토” 『농촌경제』. 제22권 1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 전재성. “북핵외교와 동아시아공동체를 위한 한국의 기여.” 손열 편.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을 위한 소프트파워 전략』. 서울: 동아역사재단, 2009.

- _____. “인간안보와 여성안보: 동아시아에서의 여성안보논의.” 『국제관계연구』. 제11권 2호(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6.
- 조성권. “초국가적 위협: 테러, 마약, 범죄조직의 상호연계와 새로운 대응시각.”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8집 1호(한국세계지역학회), 2010.
- 조영남. “중국외교의 새로운 시도: 소프트파워전략.” 김태호 외. 『중국외교의 새로운 영역』. 파주: 나남, 2008.
- 최성권. “북핵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편승, 견제와 균형.” 『사회과학연구』. 제33권 2호(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9.
- 최정운. “매력의 세계정치.” 김상배 외. 『매력국가 만들기: 소프트파워의 미래전략』. 서울: 동아일보 21세기평화재단·평화연구소, 2005.
- 폴 에반스. “인간안보와 동아시아: 그 시작에 즈음하여.” 『국제관계연구』. 제11권 2호(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6.
- 피터 월렌스틴·비르거 헬트. “인간안보, 분쟁예방 그리고 평화.” 『국제관계연구』. 제11권 2호(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6.
- 한승완. “동북아 시민사회와 ‘동북아 정체성’의 형성.” 사회와 철학 연구회 편. 『사회와 철학』. 제11호, 2006.
- 한 준. “문화자본과 소프트파워.” 김상배 편. 『소프트파워와 21세기 권력론: 네트워크 권력론의 모색』. 파주: 한울아카데미, 2009.
- Abu-Nimer, Mohammed. “Conflict Resolution, Culture, and Religion: Toward a Training Model of Interreligious Peace-building.”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8, No. 6, November 2001.

- Altman, Dennis. "HIV and Security." *International Relations*. Vol. 17, No. 4, 2003.
- Appleby, R. Scott. "Globalization, Religious Change and the Common Good." *Journal of Religion, Conflict and Peace*. Vol. 3, Issue. 1, Spring 2010.
- Bercovitch, Jacob. "The Structure and Diversity of Media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Jacob Bercovitch and Jeffrey Z. Rubin (eds.). *Media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2.
- Boyd, Rosalind. "Gender and human security issues: building a programme of action-research." *Development in Practice*. Vol. 15, No. 1, February 2005.
- Caballero-Anthony, Mely. "SARS in Asia: Crisis, Vulnerabilities, and Regional Responses." *Asian Survey*. Vol. 45, No. 3, May/June 2005.
- Chase, Robert., Emily Hill and Paul Kennedy. "Pivotal States and U.S. Strategy." *Foreign Affairs*. Vol. 75, No. 1, January/February 1996.
- Cossa, Ralph A. "U.S.-ROK.-Japan: Strengthen the Ties that Band." Tae-hyo Kim and Brad Glosserman (eds.). *The Future of U.S.-ROK-Japan Relations: Balancing Values and Interests*. Washington, D.C.: CSIS, 2004.
- Dabelko, Geoffrey D. and P. J. Simmons. "Environment and Security: Core Ideas and U.S. Government Initiative." *SAIS Review*. Vol. 17, No. 1, Winter/Spring 1997.
- Dalby, Simon. "Geopolitical Change and Contemporary Security Studies: Contextualizing the Human Security Agenda."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Working Paper. No. 30, April 2000.

Dasgupta, Sugata. "Peacelessness and Maldevelopment." IPRA Studies in Peace Research. Proceedings of the IPRA Second Conference, Vol. II, 1968.

Duffield, Mark. "Human security: linking development and security in an age of terror." Stephan Klingebiel (eds.). *New Interfaces between security and development: Changing concepts and approaches*. Bonn: Deutsches Institut für Entwicklungspolitik, 2006.

Dumbaugh, Kerry. "China-U.S. Relations: Current Issues and Implications for U.S. Policy." *CRS Report for Congress*. July 14th, 2006.

Emmers, Ralf. "The Securitization of Transnational Crime in ASEAN." *Institute of Defense and Strategic Studies, Singapore Working Paper*. No. 39, 2005.

FAO. "Food Security: Some Macroeconomic Dimensions." *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Rome: FAO, 1996.

Feigenblatt, Otto von. "ASEAN and Human Securit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Ritsumeikan Center for Asia Pacific Studies(RCAPS) Working Paper*. No. 2009-5, July 2009.

Frazier, Derrick V. and William J. Dixon. "Third-Party Intermediaries and Negotiated Settlements, 1946~2000."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32, Issue. 4, December 2006.

Fukuda-Parr, Sakiko. "Gender, Globalization and New Threats to Human Security." *Peace Review*. Vol. 16, No. 1, March 2004.

Fukushima, Akiko. "From Whence do Ideas Come in Japanese

- Foreign Policy? The Case of Human Security.”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 Security In East Asia*, International Conference Hall, Korea Press Center, Seoul, Korea, June 16~17, 2003.
- Galtung, J.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VI, No. 3, 1969.
- Gates, Robert. “A Balanced Strategy: Reprogramming the Pentagon for a New Age.” *Foreign Affairs*. Vol. 88, No. 1, January/February 2009.
- Grieco, Joseph M. “Systemic Source of Variation in Regional Institutionalization in Western Europe, East Asia and the Americas.” Edward D. Mansfield and Helen V. Milner (eds.).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 Guzzini, Stefano. “The Concept of Power: A Constructivist Analysis.” Felix Berenskoetter and M. Williams (eds.). *Power in World Politics*. London: Routledge, 2008.
- Hafner-Burton, Emilie M. and Alexander H. Montgomery. “Globalization and the Social Power Politics of International Economic Networks.” Miles Kahler. *Networked Politics: Agency, Power, and Governan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9.
- Hampson, Fen Osler. “A New Role for Middle Powers in Regional Conflict Resolution?” Brian L. Job (eds.). *The Insecurity Dilemma, National Security of Third World States*. London: Lynne Rienner, 1992.
- Harrison, Selig S. “Gas and Geopolitics in Northeast Asia: pipelines, regional stability, and the Korean nuclear crisis.” *World*

- Policy Journal*. Vol. 19, No. 4, 2002/2003.
- Hobsbawn, Eric. "War and peace in the 20th century." *London Review of Books*. Vol. 24, No. 4, February 2002.
- Hudson, Natalie Florea. "Securitizing 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 *Journal of Human Rights*. Vol. 8, No. 1, January 2009.
- Kim, Sung Won. "Human Security with an Asian Face?" *Indiana Journal of Global Legal Studies*. Vol. 17, Issue. 1, February 2010.
- King, Gary and Christopher J. L. Murraray. "Rethinking Human Security."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16, No. 4, Winter 2001 ~2002.
- Krippendorff, Ekkehart. "The State as a Focus of Peace Research." *Peace Research Society*. Vol. XI, The Rome Conference, 1970.
- Kydd, Andrew H. "Which Side Are You on? Bias, Credibility and Medi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47, No. 4, October 2003.
- Lawson, Stephanie. "Regional integration, development and social change in the Asia-Pacific: implications for human security and responsibility." *Global Change, Peace & Security*. Vol. 17, No. 2, 2005.
- Mansfield, Edward D. and Helen V. Milner. "The New Wave of Region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3, No. 3, Summer 1999.
- Maoz, Zeev. "Conflict Management and Conflict Resolution: A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ntroduction." Zeev Maoz et al. *Multiple Paths to Knowledge in International Relations: Methodology in the Study of Conflict Management and*

- Conflict Resolution*. Lanham: Lexington Books, 2004.
- McLeod, Anni., Nancy Morgan, Adam Prakash and Jan Hinrichs. "Economic and Social Impacts of Avian Influenza." *FAO Emergency Centre for Trans-boundary Animal Disease Operation(ECTAD) Report*. Rome: FAO, 2005.
- Medowcroft, James. "Planni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sights from the Literature of Political Science." *European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1, June 1997.
- Newman, Edward. "Critical human security studie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6, January 2010.
- Nishikawa, Yukiko. "Human Security in Southeast Asia: Viable Solution or Empty Slogan?" *Security Dialogue*. Vol. 40, No. 2, April 2009.
- Paris, Roland. "Human Security: Paradigm Shift or Hot Air?" *International Security*. Vol. 26, No. 2, Fall 2001.
- Prenzler, Tim. "The Human Side of Security." *Security Journal*. Vol. 20, Issue. 1, February 2007.
- Quinn, David., Jonathan Wilkenfeld, Kathleen Smarick and Victor Asal. "Power Play: Mediation in Symmetric and Asymmetric International Crises."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32, No. 4, December 2006.
- Satoh, Yukio. "The Evolution of Japan's Security Policy." *Adelphi Paper*. No. 178, 1982.
- Shambaugh, David. "China Engages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29, No. 3, Winter 2004/2005.
- Simon, Sheldon W. "Security, Economic Liberalism, and Democracy: Asian Elite Perceptions of Post Cold War Foreign Policy

Values.” *NBR Analysis*. Summer 1996.

Terris, Lesley G. “Credibility and Strategy in International Mediation.”
International Interactions. Vol. 32, No. 4, December 2006.

Winslow, D. J. “Human Security.” Alessandro Gobbi (eds.).
Globalization, Armed Conflicts and Security. Rome:
Centro Militare di Studi Strategici(CeMiSS), 2004.

河東哲夫. “対中央アジア政策の推移:シルクロード外交から『中央アジア+日本』へ.” 宇山智彦, 廣瀬徹也, クリストファーレン, 河東哲夫, 湯浅剛, ティムール・ダダバエル, 岩下明裕, エリカ・マラト, 嶋尾孔仁子, ニクラス・スワンストローム, 須田将. 『日本の中央アジア外交—試される地域戦略』. 北海道大学図書刊行会, 2009.

ノエル・M・モラダ. “地域秩序の制度化—規範と勢力均衡の間で.” 恒川潤 編. 『東アジアにおける地域秩序—アセアン・日本からの展望—』. 東京: 防衛省防衛研究所, 2008.

3. 기타

『가톨릭 뉴스』.

『공동번역』. 『야곰』.

『꾸란』.

『미국의 소리』.

『서울신문』.

『연합뉴스』.

『중앙일보』.

Asian Tribune.

BBC.

Daily Yomiurii.

International Crisis Group.

New York Times.

The Sunday Leader.

The Washington Post.

TIME.

『読売新聞』.

『論語』.

『孟子』.

『雜阿含經』.

『中阿含經』.

『Atharvaveda』.

『Yajurveda』.

문경희. “호주와 우리의 신아시아 외교.” 미발표 논문 참조.

Wu Dawei 외교부 아주담당 부부장(2006.6.13.) 및 Ma Zhaoxu 외교부 정책연구국장(2006.11.7.)과의 면담 내용.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자료(2007년 3월).

麻生太郎. 『自由と繁栄の弧』. 幻冬舎, 2007年 6月.

日本外務省. 『東南アジアにおける友好協力条約の説明書』. 平成

十六年三月.

김미경. “하토야마의 동아시아 공동체론과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http://blog.naver.com/jinmei121?Redirect=Log&logNo=60107455041>>.

이춘근. “미국을 향한 테러 공격과 이슬람의 전쟁론.” <<http://www.cfe.org/mboard/bbsDetail.asp?cid=mn20061223122511&pn=3&idx=574>>.

주한중국대사관 화교 좌담회. 『민족단결, 티베트의 어제와 오늘』.
<<http://www.chinaemb.or.kr/kor/sgxx/t663176.htm>>.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and Water.
Living with climate change: adapting to the climate change we cannot avoid. <<http://www.climatechange.gov.au/~media/publications/adaptation/dl-living-with-cc-adaptation-brochure-series.ashx>>.

Benetech Human Rights Data Analysis Group(HRDAG). “The Profile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imor-Leste, 1974~1999.”
<http://www.hrdag.org/resources/timor_chapter_graphs/timor_chapter_page_02.shtml>.

Brown, Mark Malloch. *Statement at Security Council Meeting.* January 10, 2000. <<http://www.un.org.vn/en/news-highlights/76-statement-by-mark-malloch-brown-administrator-united-nations-development-programme-and-chairman-of-the-committee-of-co-sponsoring-organizations-of-un-aids.html>>.

Cheppensook, Kasira. “The ASEAN Way on Human Security.”
<<http://humansecurityconf.polsci.chula.ac.th/Documents/Presentations/Kasira.pdf>>.

Clinton, Hillary. “Statement of Senator Hillary Clinton Nominee for Secretary of State.” <<http://foreign.senate.gov/testimony/2009/ClintonTestimony090113a.pdf>>.

_____. “The United States and Japan Collaborating to Address Global Concerns.” <<http://www.state.gov/secretary/rm/2009a/02/117349.htm>>.

_____. “U.S.-Asia Relations: Indispensable to Our Future.” <<http://www.state.gov/secretary/rm/2009a/02/117333.htm>>.

Economy and Environment Program for Southeast Asia(EEPSEA) and the World Wide Fund for Nature(WWF). “The Indonesian Fires and Haze of 1997: The Economic Toll.” <<http://www.idrc.ca/uploads/user-S/10536124150ACF62.pdf>>.

Rudd, Kevin. “It’s time to Build an Asia Pacific Community.” in Address to the Society Austral Asia Center, Sydney, June 4, 2008.

_____. Address to the Asia Pacific Community Conference, Sydney, December 2008.

Shimizu, Mika. *Managing Global Health Disaster Risks in Asia: Lessons from H1N1 Case in Japan*. <http://www.globalasia.org/V5N3_Fall_2010/Mika_Shimizu.html>.

Sperling, Elliot. “The Tibet-China Conflict: History and Polemics.” <<http://www.eastwestcenter.org/fileadmin/stored/pdfs/PS007.pdf>>.

The Research Unit for Political Economy. “Why the United States Promotes India’s Great-Power Ambitions.” <<http://monthlyreview.org/0306rupe2.htm>>.

Thompson, Eric C. and Chulanee Thianthai. *Attitudes and Awareness toward ASEAN: Findings of a Ten Nation Survey*. <<http://www.aseanfoundation.org/documents/Attitudes%20and%20Awareness%20Toward%20ASEAN.pdf>>.

UN Office on Drugs and Crime(UNODC). *World Drug Report 2009*. <http://www.unodc.org/documents/wdr/WDR_2009/WDR2009_eng_web.pdf>.

Woolcott, Richard. “An Asia Pacific Community: an idea whose time is coming.” <<http://www.eastasiaforum.org/2009/10/18/an-asia-pacific-community-an-idea-whose-time-is-coming/>>.

鳩山由紀夫. “鳩山総理によるアジア政策講演: アジアへの新しいコミットメント-東アジア共同体構想の実現に向けて-.” <<http://www.kantei.go.jp/jp/hatoyama/meibo/daijin/index.html>>.

<<http://apecsec.org.sg>>.

<<http://archive.ucanews.com>>.

<<http://en.wikipedia.org>>.

<<http://news.bbc.co.uk>>.

<<http://shindonga.donga.com>>.

<<http://wbk.in-berlin.de>>.

<<http://www.answering-islam.org>>.

<<http://www.apecsec.org.sg>>.

<<http://www.asiantribune.com>>.

<<http://www.buc.org.ph>>.

<<http://www.gender.go.jp>>.

<<http://www.gigabon.com>>.

<<http://www.nahnews.net>>.

<<http://www.peacemaking.co.kr>>.

<<http://www.scj.go.jp>>.

<<http://www.sisapress.com>>.

<<http://www.un-mongolia.mn>>.

연구총서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 방안 연구	김영운	8,000원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전병곤, 구기보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호 외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편	9,000원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곤 외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민 외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20,000원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의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I	김규륜 외	13,000원

학술회의총서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 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협동연구총서

2008-07-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 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제와 대북 활동	최춘흠 외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율 외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종무 외	8,000원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 (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7,500원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논문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1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2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2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2 (2010)		2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i>	이금순 외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i>	이금순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기타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8		15,000원
2009	The U.S.-ROK Alliance in the 21 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2010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010 독일통일백서		13,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 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2010	통일 환경 평가(통일대계 연구 2010-01)	박종철 외	18,000원
2010	통일비전 개발(통일대계 연구 2010-02)	조민 외	12,000원
2010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통일대계 연구 2010-03)	황병덕 외	16,000원
2010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통일-중국, 베트남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중심(통일대계 연구 2010-04)	황병덕 외	15,000원
2010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통일대계 연구 2010-05)	배정호 편저	11,000원
2010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통일대계 연구 2010-06)	최진욱 편저	11,000원
2010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통일대계 연구 2010-07)	최진욱 편저	13,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8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8~2009	6,000원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정영태,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스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야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2011-01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외
2011-02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배정호 외
2011-03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황병덕 외

KINU정책연구시리즈

비매출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2009-02(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2009-02(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한 검토	손기웅 외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외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 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적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출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2호	이금순, 김수암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2호 김국신,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월간 북한동향

비매출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실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6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Studies Series

비매출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m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Cheon Seong-Whun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Ryoon, Jang 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
-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wook, Lee Kyo-Duk, Cho Jeong-Ah, Lee Jin-Yeong, Cha Moon-Seok
-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기 타

비매품

-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Flyoon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Ⅱ

www.kinu.or.kr